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Ⅰ. 2026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1. 2026년도 예산안 개요 ····· 3

2. 2026년도 예산안 총평 ····· 38

Ⅱ. 재정총괄

1. 재정수입 ····· 73

2. 재정건전성 ····· 104

3. 지출구조조정 ····· 135

4. 포괄보조 사업 ····· 157

5. 정부조직개편 ····· 181

Ⅲ. 주요 정책과제 분석

1.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 197

2. 국가 R&D ····· 238

3. 정책펀드 ····· 286

4.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사업 ····· 334

5.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 362

6. K-컬처 확산 및 문화 향유 ····· 387

7. 지방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생활여건 개선 사업 ····· 408

8. 저출생·고령화 대응 ····· 427

9. 사회안전 기반 강화 ·····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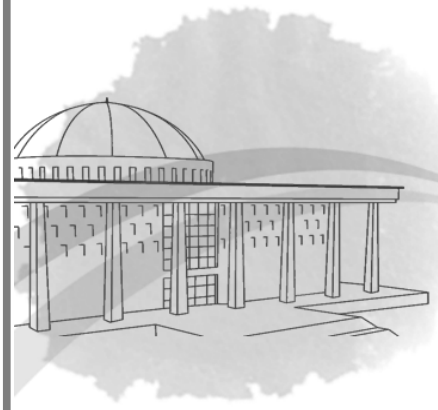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10.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사업 ····· 490

1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사업 ····· 522

12. 재난예방·대응 ····· 575

13.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 646

Ⅰ. 2026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1. 2026년도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1) 총수입

2026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2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6조원(3.5%) 증가하였음.

총수입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8조원(2.0%) 증가한 390.2조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원(2.9%) 증가한 37.4조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3.7조원(5.9%) 증가한 246.6조원임.

세입경정(△10.3조원)이 있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8.1조원(4.9%)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0.2조원(△0.5%) 감소하며, 기금수입은 13.8조원(5.9%) 증가함.

[2026년도 예산안 총수입 구성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C)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증감 (D=C-A)	증감률 (D/A)	증감 (E=C-B)	증감률 (E/B)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31.8	5.0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18.1	4.9
세외수입	36.3	37.6	37.4	1.1	2.9	△0.2	△0.5
기금수입	232.8	232.8	246.6	13.7	5.9	13.8	5.9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5년도 국세수입의 경우 2025년 9월 재추계 결과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의 결손이 발생한 369.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면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390.2조원은 전년 대비 20.3조원(5.5%) 증가한 규모에 해당함.

문의 : 양창석 예산결산총괄팀장 ycs82@assembly.go.kr (02-6788-5684)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전년대비		추경대비	
		예산(B)	2차 추경(C)	전망(D)	(D-A)	증감률	(D-C)	증감률
○ 총 국 세	336.5	382.4	372.1	369.9	33.4	9.9	△2.2	△0.6
-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8.2	32.1	9.8	△3.2	△0.9
(소득세)	117.4	126.8	126.8	128.4	10.9	9.3	1.5	1.2
(법인세)	62.5	88.3	83.6	83.6	21.1	33.8	0.1	0.1
(부가세)	82.2	87.6	83.3	80.9	△1.3	△1.6	△2.4	△2.9
- 특별회계	10.4	10.6	10.6	11.7	1.3	13.0	1.1	10.1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 기간 중 총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연평균 증가율 4.6%보다 낮은 것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각각 △0.3%p, △3.6%p 감소하여 과거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중장기 세입을 전망하고 있고, 기금 수입의 경우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0.3%p 증가한 4.2%로 전망됨.

[2025~2029년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제2회 추경					
총수입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4.3
국세수입	382.4	372.1	390.2	412.1	434.1	457.1	4.6
세외수입	36.3	37.6	37.4	36.7	37.0	39.1	1.9
기금수입	232.8	232.8	246.6	256.2	262.6	274.9	4.2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2) 총지출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7조원(8.1%) 증가하였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1조원(7.6%) 증가한 481.5조원이고, 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6조원(9.1%) 증가한 246.5조원임.

한편 2025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총지출은 제2회 추경 대비 24.7조원(3.5%), 예산은 14.2조원(3.0%), 기금은 10.6조원(4.5%) 각각 증가함.

[2025~2026년도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 (C)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증감 (D=C-A)	증감률 (D/A)	증감 (E=C-B)	증감률 (E/B)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24.7	3.5
○ 예 산	447.4	467.3	481.5	34.1	7.6	14.2	3.0
○ 기 금	225.9	235.9	246.5	20.6	9.1	10.6	4.5

주) 2022~2025년도는 본예산 기준. 2026년도는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1%는 2025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2.5%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과거 2023~2025년간 2.5~5.1%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임. 이는 최근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2022~2026년도 총지출 변동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본예산	제2회 추경	
□ 총지출	607.7	638.7	656.6	673.3	703.3	728.0
(증가율)	(8.9)	(5.1)	(2.8)	(2.5)	(7.1)	(8.1)
○ 예 산	413.0	441.1	438.3	447.4	467.3	481.5
○ 기 금	194.6	197.7	218.4	225.9	235.9	246.5

주) 2022~2025년도는 본예산 기준. 2026년도는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 기간 중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 3.6%에 비해 1.9%p 증가한 수치임.

[2025~2029년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제2회 추경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증가율)	(2.5)	(7.1)	(8.1)	(5.0)	(5.0)	(4.0)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됨.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를 의미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온 4대 사회보장성기금[1]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2.0%인 53.8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p 악화된 수치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인 109.0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p 악화된 수치임.

1)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2026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액 (B-A)
	본예산(A)	제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21.7	△60.8	△53.8	△32.1
(GDP 대비)	(△0.8)	(△2.3)	(△2.0)	(△1.1)
□ 관리재정수지	△73.9	△111.6	△109.0	△35.1
(GDP 대비)	(△2.8)	(△4.2)	(△4.0)	(△1.2)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본예산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2.8%를 기록하고, 이후 2026년 △4.0%에서 2028년 △4.4%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나, 2029년부터는 △4.1%로 예측하고 있음.

[중기 관리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예산	제2회 추경				
□ 관리재정수지	△73.9	△111.6	△109.0	△115.4	△128.9	△124.9
(GDP 대비 비율)	(△2.8)	(△4.2)	(△4.0)	(△4.1)	(△4.4)	(△4.1)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가채무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인 1,415.2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1.8조원(GDP 대비 3.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37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국고채가 1,27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9.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임. 차입금의 경우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한 1.3조원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2026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B-A)
		예산(A)	제2회 추경	전망		
□ 국가채무(A+B)	1,175.0	1,273.3	1,301.9	1,303.6	1,415.2	141.8
(GDP대비)	(46.0)	(48.1)	(49.1)	(49.1)	(51.6)	(3.5)
ㅇ 중앙정부 채무(A)	1,141.2	1,238.7	1,267.2	1,267.2	1,378.5	139.8
■ 국 채	1,139.8	1,237.0	1,265.5	1,265.5	1,377.1	140.0
- 국고채	1,047.9	1,127.9	1,161.2	1,161.2	1,276.9	149.1
- 국민주택채	79.1	77.6	74.5	74.5	69.8	△7.8
- 외평채	12.8	31.5	29.9	29.9	30.4	△1.2
■ 차입금	1.2	1.5	1.6	1.6	1.3	△0.2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1	-
ㅇ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4.7	34.7	36.4	36.7	2.0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는 150.0조원 증가한 1,029.5조원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가 157.0조원 증가하나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의 6.9조원 감소가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도 69.1%에서 72.7%로 증가할 전망임.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0.1조원)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서민주거 안정용 등 채무가 8.3조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8.2조원 감소한 385.7조원으로 전망됨.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B-A)
		예산(A)	제2회 추경	전망		
□ 국가채무	1,175.0	1,273.3	1,301.9	1,303.6	1,415.2	141.8
○ 적자성 채무	815.2	879.5	924.8	926.5	1,029.5	150.0
(비중)	(69.4)	(69.1)	(71.0)	(71.1)	(72.7)	(3.7)
■ 일반회계 적자보전	756.7	824.6	871.7	871.7	981.6	157.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58.5	54.8	53.1	54.8	47.9	△6.9
○ 금융성 채무	359.8	393.9	377.1	377.1	385.7	△8.2
(비중)	(30.6)	(30.9)	(29.0)	(28.9)	(27.3)	(△3.7)
■ 외환시장 안정용	210.3	238.2	232.5	232.5	238.2	0.1
■ 서민주거 안정용 등	149.5	155.7	144.6	144.6	147.4	△8.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 49.1%에서 2029년 5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당시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과 차이가 있는바,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2025~2029년 중기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가채무	1,303.6	1,415.2	1,532.5	1,664.3	1,788.9
(GDP대비)	(49.1)	(51.6)	(53.8)	(56.2)	(58.0)

자료: 기획재정부

다.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 규모는 624.8조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50.0조원(8.7%) 증가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가 507.4조원으로 전년 대비 33.8조원(7.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17.3조원으로 전년 대비 16.2조원(16.0%) 증가하였음.

2025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는 24.8조원(4.1%)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4조원(2.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4.2조원(13.8%) 증가하였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B-A)	
	본예산(A)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예산안 총계	574.8	600.0	624.8	50.0	8.7
○ 일반회계	473.7	497.0	507.4	33.8	7.1
○ 특별회계	101.1	103.1	117.3	16.2	16.0

자료: 기획재정부

특별회계는 16개 기타특별회계와 5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기타특별회계는 2026년도 예산안이 101조 6,67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조 5,208억원(19.4%)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2026년도 예산안이 15조 6,4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3억원(△2.0%) 감소하였음.

2025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기타특별회계는 14조 5,808억원(16.7%)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3,143억원(△2.0%) 감소하였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회계별 구성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전년 대비(B-A)	
	본예산(A)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예산 총계	5,747,696	6,000,162	6,247,634	499,938	8.7
○ 일반회계	4,736,594	4,969,658	5,074,468	337,873	7.1
○ 특별회계	1,011,102	1,030,503	1,173,167	162,065	16.0
- 기타특별회계	851,471	870,872	1,016,679	165,208	19.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0,173	155,512	173,707	23,534	15.7
· 교통시설특별회계	155,572	156,297	164,044	8,472	5.4
· 등기특별회계	2,786	2,786	2,885	99	3.6
· 교도작업특별회계	1,237	1,237	1,303	66	5.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058	61,459	62,838	△220	△0.3
·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	77,242	71,476	△1,992	△2.7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3	22,843	24,310	1,467	6.4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	11,059	9,994	△1,065	△9.6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	5,721	3,583	△2,139	△37.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회계	2,205	2,205	2,888	683	31.0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3	15,003	5,304	△9,699	△64.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	2,049	1,625	△425	△20.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01	1,211	1,021	△180	△15.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440	162,159	226,306	78,866	53.5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	31,020	-	△31,020	순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6	163,068	173,163	6,527	3.9
·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	92,233	순증
- 기업특별회계	159,631	159,631	156,487	△3,143	△2.0
· 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	27,925	26,117	△1,808	△6.5
· 조달특별회계	7,377	7,377	7,783	406	5.5
·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4	53,784	54,107	324	0.6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8	57,868	55,567	△2,301	△4.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77	12,677	12,913	236	1.9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 예산안

세입예산안의 성질별 구성 내역을 보면 국세수입이 390.2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조원(2.0%)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7.4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조원(2.9%)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은 197.1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1조원(26.4%) 증가하였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성질별 구성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전년 대비(B-A)	
	본예산(A)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세입예산안 총계	574.8	600.0	624.8	50.0	8.7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 세외수입	36.3	37.6	37.4	1.1	2.9
○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	156.0	190.4	197.1	41.1	26.4

자료: 기획재정부

(3) 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환지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예비비 및 기타(74.1%), 전출금 등(21.7%) 순으로 크게 나타남.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성질별 구성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전년 대비(B-A)	
	본예산(A)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세출예산안 총계	574.8	600.0	624.8	50.0	8.7
○ 인건비	49.5	49.4	51.7	2.2	4.3
○ 물건비	29.7	29.9	30.4	0.7	2.3
○ 이전지출	326.3	341.8	352.4	26.2	8.0
○ 자산취득 및 운용	41.7	44.7	44.0	2.3	5.5
○ 상환지출	31.9	32.3	28.5	△3.3	△10.5
○ 전출금 등	93.3	98.1	113.5	20.2	21.7
○ 예비비 및 기타	2.4	3.8	4.2	1.8	74.1

자료: 기획재정부

라.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97.1조원(총계 기준)으로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42.1조원(4.4%) 증가한 규모임.

수입계획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당초 계획 대비 차입금이 28.1조원(11.8%), 자체수입이 14.8조원(6.0%), 정부내부수입이 1.6조원(0.8%)씩 각각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회수 등은 2.4조원(△0.9%) 감소하였음.

지출계획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221.4조원으로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16.0조원(7.8%) 증가하였음. 이 중 사회보험성기금 사업비는 9.6조원(8.4%) 증가하였고 사업성기금 사업비는 6.1조원(8.0%) 증가하였으며 금융성·계정성 기금 사업비는 0.3조원(1.8%) 증가하였음.

기금운영비는 2.8조원으로 전년도 당초 계획보다 0.1조원(4.0%) 증가하였고, 정부내부지출은 27.5조원(11.6%) 증가한 265.3조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4.9조원(△2.3%) 감소한 206.3조원, 여유자금 운용은 3.3조원(1.1%) 증가한 301.3조원으로 각각 계획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당초 대비		수정 대비	
		당초	수정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수입	○ 자체수입	247.0	247.0	261.8	14.8	6.0	14.8	6.0
	○ 정부내부수입	208.0	213.4	209.6	1.6	0.8	△3.8	△1.8
	○ 차입금	237.7	269.0	265.8	28.1	11.8	△3.2	△1.2
	○ 여유자금회수 등	262.2	263.8	259.8	△2.4	△0.9	△4.0	△1.5
합 계		955.0	993.2	997.1	42.1	4.4	3.9	0.4
지출	○ 사업비	205.4	215.2	221.4	16.0	7.8	6.2	2.9
	- 사회보험성	114.9	116.4	124.6	9.6	8.4	8.2	7.0
	- 사업성	76.2	83.3	82.3	6.1	8.0	△1.0	△1.2
	- 금융성·계정성	14.2	15.5	14.5	0.3	1.8	△1.0	△6.6
	○ 기금운영비	2.7	2.8	2.8	0.1	4.0	0.0	0.4
	○ 정부내부지출	237.8	271.5	265.3	27.5	11.6	△6.2	△2.3
	○ 차입금 원리금 상환	211.2	211.8	206.3	△4.9	△2.3	△5.5	△2.6
	○ 여유자금 운용	298.0	291.9	301.3	3.3	1.1	9.4	3.2

주) 2025년 수정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기금별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34.9조원으로 기금 전체 운용규모의 3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국민연금기금이 184.8조원(18.5%), 외국환평형기금이 135.1조원(13.5%)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안 (C)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B)		당초 대비 (C-A)	수정대비 (C-B)
사회보험성 (6)	고용보험기금	276,955	276,955	276,108	△847	△847
	공무원연금기금	337,737	337,737	351,619	13,882	13,882
	국민연금기금	1,775,695	1,775,695	1,847,657	71,963	71,963
	군인연금기금	46,052	46,052	50,997	4,945	4,9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7,133	137,133	142,391	5,258	5,25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4,181	234,181	209,002	△25,179	△25,179
	소 계	2,807,752	2,807,752	2,877,773	70,021	70,021
계정성 (5)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300	3,397,263	3,348,530	300,230	△48,733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	64,384	74,206	9,822	9,822
	복권기금	88,685	88,685	95,863	7,178	7,178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	5,509	3,890	△1,619	△1,619
	외국환평형기금	1,402,894	1,372,894	1,351,347	△51,547	△21,547
	소 계	4,609,772	4,928,735	4,873,835	264,063	△54,900
금융성 (8)	기술보증기금	33,080	33,780	38,526	5,446	4,74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651	22,651	22,249	△402	△40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11	511	465	△46	△46
	무역보험기금	57,807	60,807	63,030	5,223	2,22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	8,019	7,763	△256	△256
	신용보증기금	115,125	116,125	99,435	△15,690	△16,69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496	47,496	48,867	1,371	1,37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092	48,092	48,700	608	608
	소 계	332,782	337,482	329,035	△3,746	△8,446
사업성 (48)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	1,986	1,230	△756	△756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2	17,142	18,399	1,258	1,258
	국가유산보호기금	1,690	1,690	2,026	336	336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	45,485	48,624	3,219	3,139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2	30,382	34,590	4,218	4,208
	국유재산관리기금	34,820	34,824	36,685	1,865	1,861
	국제교류기금	1,059	1,059	1,358	299	299
	군인복지기금	10,118	10,118	9,833	△285	△285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	5,928	5,419	△242	△509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	1,908	2,042	134	134
	기후대응기금	26,217	25,997	29,057	2,840	3,06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6	2,376	2,663	287	287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안 (C)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B)		당초 대비 (C-A)	수정대비 (C-B)
남북협력기금	14,438	11,238	14,278	△161	3,0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8	27,255	30,481	4,503	3,22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9	4,059	5,139	1,081	1,08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045	31,045	31,124	80	80
농지관리기금	23,289	23,289	27,802	4,513	4,513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	22,727	23,797	270	1,070
문화예술진흥기금	5,777	5,777	6,152	376	37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	104,062	110,131	6,069	6,069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8,805	9,986	1,282	1,18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9	1,449	1,451	3	3
보훈기금	6,962	6,962	5,522	△1,440	△1,44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3	3,903	5,722	1,820	1,820
사학진흥기금	5,650	5,650	4,098	△1,552	△1,55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352	2,352	1,971	△382	△382
석면피해구제기금	623	623	656	33	3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0,860	113,858	66,982	△3,877	△46,876
수산발전기금	8,204	8,204	11,600	3,397	3,39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491	1,491	1,513	22	22
양성평등기금	8,410	8,410	8,748	338	338
언론진흥기금	508	508	545	37	3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97	1,697	1,803	105	105
영화발전기금	937	1,189	1,346	409	157
원자력기금	6,432	6,432	7,160	728	728
응급의료기금	6,401	6,401	4,950	△1,451	△1,451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	9,142	8,969	△174	△17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2	2,592	2,533	△58	△5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	5,053	5,298	472	24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829	21,829	25,121	3,291	3,291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2	38,793	45,137	6,385	6,344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	10,893	11,030	1,020	137
주택도시기금	1,033,915	1,039,975	1,080,512	46,597	40,53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5,595	125,945	118,435	2,841	△7,509
지역신문발전기금	100	100	150	49	49
청소년육성기금	1,714	1,714	1,494	△220	△220
축산발전기금	10,254	10,254	11,215	961	961
한강수계관리기금	5,626	5,626	5,375	△250	△250
소 계	1,799,866	1,858,194	1,890,150	90,284	31,956
합 계	9,550,172	9,932,163	9,970,794	420,622	38,631

주) 2025년 수정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수입계획안

2026년도 67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가 507조 8,794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50.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7조 3,919억원(22.8%), 사회보장기여금 102조 401억원(10.2%), 재산수입 54조 254억원(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6년도 기금수입 성질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안 (C)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B)		당초 대비 (C-A)	수정 대비 (C-B)
■ 사회보장기여금	964,956	964,956	1,020,401	55,445	55,445
■ 재산수입	486,394	486,544	540,254	53,860	53,710
- 관유물대여료	8,979	8,979	8,919	△60	△60
- 정부출자수입	9,909	9,909	4,560	△5,349	△5,349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67,506	467,656	526,775	59,269	59,119
■ 경상이전수입	478,380	478,632	505,465	27,084	26,833
- 연금수입	211,958	211,958	220,102	8,144	8,144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78	78	49	△29	△29
- 변상금및위약금	632	632	544	△89	△89
- 가산금	195	195	177	△19	△19
- 기타경상이전수입	265,516	265,768	284,594	19,078	18,82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4,486	134,486	141,926	7,440	7,440
■ 수입대체경비수입	70	70	59	△11	△11
■ 관유물매각대	35,376	35,376	47,921	12,545	12,545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70,829	370,115	362,057	△8,773	△8,059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807,577	5,136,304	5,078,794	271,217	△57,5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72,103	2,325,679	2,273,919	1,815	△51,760
합 계	9,550,172	9,932,163	9,970,794	420,622	38,631

주) 2025년 수정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지출계획안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산취득이 536.9조원으로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4.2조원(6.8%) 증가하여 전체의 53.8%를 차지함. 다음으로 상환지출이 283.0조원으로 5.7조원(△2.0%) 감소하여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이전지출은 156.5조원으로 12.7조원(8.8%) 증가하여 전체의 15.7%를 차지함.

[2026년도 기금지출 성질별 내역]

(단위: 억원, %)

성질별	2025년도 계획		2026년도 계획안		전년대비 증감	
	당초 (A)	수정 (B)	금액 (C)	비중	당초 대비 (C-A)	수정 대비 (C-B)
인건비 (100)	18,033	18,188	19,133	0.2	1,100	945
물건비 (200)	20,347	21,479	21,405	0.2	1,058	△74
이전지출 (300)	1,438,460	1,495,341	1,565,394	15.7	126,933	70,053
자산취득 (400)	5,026,399	5,347,888	5,368,777	53.8	342,378	20,889
상환지출 (500)	2,887,376	2,893,933	2,830,497	28.4	△56,879	△63,436
전출금등 (600)	82,400	77,815	91,187	0.9	8,787	13,372
예비비 및 기타 (700)	77,156	77,519	74,401	0.7	△2,755	△3,118
합 계	9,550,172	9,932,163	9,970,794	100.0	420,622	38,631

주) 2025년 수정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계획안은 기금 전체의 28.8%인 287.8조원이며, 이 중 여유자금운용이 154.6조원(53.7%), 사업비가 124.6조원(43.3%)임.

계정성 기금 지출계획안은 기금 전체의 48.9%인 487.4조원이며, 이 중 정부내부지출이 233.4조원(47.9%),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67.2조원(34.3%), 여유자금 운용이 80.7조원(16.6%)임.

금융성 기금 지출계획안은 기금 전체의 3.3%인 32.9조원이며, 이 중 여유자금운용이 18.8조원(57.0%), 사업비가 8.4조원(25.7%), 정부내부지출이 4.8조원(14.6%)임.

사업성 기금 지출계획안은 기금 전체의 19.0%인 189.0조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82.3조원(43.6%), 여유자금운용이 47.2조원(25.0%),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39.1조원(20.7%)임.

[2026년도 기금별 지출 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사업비 (A)	기금 운영비	정부 내부지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여유 자금운용	합 계 (B)	사업비 비율 (A/B)
사회보험성 (6)	고용보험기금	183,603	1,186	21,394	-	69,925	276,108	66.5
	공무원연금기금	299,837	674	1,201	2	49,904	351,619	85.3
	국민연금기금	548,562	5,801	-	-	1,293,295	1,847,657	29.7
	군인연금기금	47,095	4	-	-	3,898	50,997	9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6,807	316	360	-	74,907	142,391	46.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9,811	4,695	50,500	-	53,996	209,002	47.8
	소 계	1,245,715	12,675	73,456	2	1,545,925	2,877,773	43.3
계정성 (5)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69	1,841,172	1,506,180	109	3,348,53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	0	73,526	-	680	74,206	-
	복권기금	59,410	5	25,756	932	9,760	95,863	62.0
	양곡증권정리기금	-	-	3,085	-	804	3,890	-
	외국환평형기금	-	14	390,486	164,908	795,938	1,351,347	-
	소 계	60,410	88	2,334,026	1,672,020	807,291	4,873,835	1.2
금융성 (8)	기술보증기금	18,773	2,389	-	-	17,364	38,526	48.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807	579	-	-	16,863	22,249	2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56	0	-	-	9	465	98.0
	무역보험기금	4,880	1,259	-	-	56,891	63,030	7.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66	90	-	-	7,007	7,763	8.6
	신용보증기금	40,008	3,888	-	-	55,539	99,435	40.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7	31	48,000	-	809	48,867	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876	636	-	-	33,188	48,700	30.5
	소 계	84,493	8,872	48,000	-	187,670	329,035	25.7
사업성 (48)	과학기술진흥기금	884	7	18	-	321	1,230	71.8
	관광진흥개발기금	11,953	6	1,490	-	4,950	18,399	65.0
	국가유산보호기금	1,648	1	223	-	154	2,026	81.3
	국민건강증진기금	36,314	1	9,571	-	2,738	48,624	74.7
	국민체육진흥기금	16,590	317	7,869	-	9,815	34,590	48.0
	국유재산관리기금	12,961	29	14,500	-	9,194	36,685	35.3
	국제교류기금	376	151	616	-	215	1,358	27.7
	군인복지기금	5,728	-	112	1,200	2,793	9,833	58.3
	근로복지진흥기금	1,849	162	1,264	-	2,144	5,419	34.1
	금강수계관리기금	1,140	27	-	-	874	2,042	55.9
	기후대응기금	25,581	34	484	-	2,959	29,057	88.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98	40	-	-	524	2,663	78.8
	남북협력기금	10,003	22	3,746	-	507	14,278	70.1

(단위: 억원, %)

구 분		사업비 (A)	기금 운영비	정부 내부지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여유 자금운용	합 계 (B)	사업비 비율 (A/B)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584	627	201	-	5,068	30,481	80.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0	6	-	-	4,633	5,139	9.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0,121	2	-	-	1,001	31,124	96.8
	농지관리기금	25,968	653	69	-	1,111	27,802	93.4
	대외경제협력기금	19,477	281	3,548	-	492	23,797	81.8
	문화예술진흥기금	5,197	209	226	-	520	6,152	84.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824	14	45,163	-	63,130	110,131	1.7
	방송통신발전기금	5,887	41	1,002	-	3,056	9,986	59.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25	1	-	-	426	1,451	70.6
	보훈기금	1,207	8	608	-	3,699	5,522	21.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739	0	300	-	3,682	5,722	30.4
	사학진흥기금	2,492	82	1,249	-	275	4,098	60.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189	12	298	-	472	1,971	60.3
	석면피해구제기금	460	19	-	-	177	656	70.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4,611	657	11,715	-	-	66,982	81.5
	수산발전기금	11,421	7	45	-	127	11,600	9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19	1	-	-	493	1,513	67.4
	양성평등기금	8,053	0	373	-	322	8,748	92.1
	언론진흥기금	170	2	112	-	262	545	31.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90	18	-	-	894	1,803	49.4
	영화발전기금	851	133	0	-	362	1,346	63.2
	원자력기금	4,178	20	-	-	2,961	7,160	58.4
	응급의료기금	4,619	2	53	-	275	4,950	93.3
	임금채권보장기금	8,292	189	26	-	462	8,969	92.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41	3	1,500	-	489	2,533	21.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873	17	7	-	2,402	5,298	54.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9,151	891	8,000	-	7,079	25,121	36.4
	전력산업기반기금	25,675	78	15,091	-	4,293	45,137	56.9
	정보통신진흥기금	6,847	233	925	2,609	417	11,030	62.1
	주택도시기금	364,627	3	66,841	326,175	322,866	1,080,512	33.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6,190	1,517	-	60,728	-	118,435	47.4
	지역신문발전기금	118	6	-	-	27	150	78.5
	청소년육성기금	1,291	0	94	-	109	1,494	86.4
	축산발전기금	8,524	18	431	-	2,242	11,215	76.0
	한강수계관리기금	4,434	91	-	-	850	5,375	82.5
	소 계	823,169	6,640	197,771	390,712	471,860	1,890,150	43.6
합 계		2,213,786	28,276	2,653,252	2,062,734	3,012,746	9,970,794	22.2

자료: 기획재정부

마. 재원배분 현황

(1) 분야별 재원배분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본예산 대비 20.4조원(8.2%) 증가한 269.1조원(37.0%)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어서 일반·지방행정분야 121.1조원, 교육분야 99.8조원, 국방 분야 66.3조원 순으로 규모가 큼.

전년 대비 증가율은 R&D(19.3%, 5.7조원 증),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7%, 4.1조원 증), 일반·지방행정(9.4%, 10.4조원 증)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0.7조원(△9.1%) 감소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예산안(B)		전년 대비	
	본예산(A)		제2회 추경		금액	비중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보건·복지·고용	248.7	36.9	251.7	35.8	269.1	37.0	20.4	8.2
2. 교 육	98.5	14.6	96.2	13.7	99.8	13.7	1.4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	10.7	70.3	10.0	71.7	9.8	△0.6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26.2	3.9	25.9	3.7	28.2	3.9	2.0	7.5
3. 문화·체육·관광	8.8	1.3	8.9	1.3	9.6	1.3	0.8	8.8
4. 환 경	13.0	1.9	12.9	1.8	14.0	1.9	1.0	7.7
5. R&D	29.6	4.4	29.7	4.2	35.3	4.8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4.2	35.3	5.0	32.3	4.4	4.1	14.7
7. SOC	25.4	3.8	26.0	3.7	27.5	3.8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3.8	27.0	3.8	27.9	3.8	2.0	7.7
9. 국 방	61.2	9.1	61.3	8.7	66.3	9.1	5.0	8.2
10. 외교·통일	7.7	1.1	7.3	1.0	7.0	1.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3.7	25.8	3.7	27.2	3.7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6.4	127.2	18.1	121.1	16.6	10.4	9.4
지방교부세	67.0	10.0	67.0	9.5	69.3	9.5	2.3	3.4
지방교부세 제외	43.6	6.5	60.1	8.5	51.7	7.1	8.1	18.6
합계	673.3	100.0	703.3	100.0	728.0	100.0	54.7	8.1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4년에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025년에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감률 변화를 살펴보면, 외교・통일 분야(1.9%→0.1%)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상향 조정 되었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R&D(8.8%), 산업・중소기업・에너지(6.9%), 일반・지방행정(6.4%), 보건・복지・고용(6.0%) 등의 순으로 높음.

[12대 분야별 중기 투자계획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24~'28계획	237.6	249.0	261.0	273.5	286.3		4.8
	'25~'29계획		248.7	269.1	285.5	300.6	313.5	6.0
2. 교육	'24~'28계획	95.2	98.5	102.1	105.5	108.9		3.7
	'25~'29계획		98.5	99.8	106.0	110.5	115.1	4.0
3. 문화·체육·관광	'24~'28계획	8.7	8.8	8.9	9.0	9.1		1.0
	'25~'29계획		8.8	9.6	10.0	10.5	10.8	5.2
4. 환경	'24~'28계획	12.5	13.0	13.1	13.3	13.4		1.7
	'25~'29계획		13.0	14.0	14.5	14.9	15.3	4.2
5. R&D	'24~'28계획	26.5	29.7	30.0	30.3	30.5		3.5
	'25~'29계획		29.6	35.3	37.3	39.4	41.4	8.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4~'28계획	28.0	28.3	28.6	29.0	29.3		1.1
	'25~'29계획		28.2	32.3	34.0	35.6	36.8	6.9
7. SOC	'24~'28계획	26.4	25.5	26.0	26.4	26.9		0.4
	'25~'29계획		25.4	27.5	28.6	29.7	30.1	4.3
8. 농림·수산·식품	'24~'28계획	25.4	25.9	26.3	26.6	26.8		1.4
	'25~'29계획		25.9	27.9	28.9	29.9	30.5	4.2
9. 국방	'24~'28계획	59.4	61.6	63.4	65.4	67.1		3.1
	'25~'29계획		61.2	66.3	69.7	73.2	76.2	5.6
10. 외교·통일	'24~'28계획	7.5	7.8	7.9	8.0	8.1		1.9
	'25~'29계획		7.7	7.0	7.3	7.5	7.7	0.1
11. 공공질서·안전	'24~'28계획	24.4	25.1	25.7	26.3	26.8		2.3
	'25~'29계획		25.0	27.2	28.0	28.8	29.5	4.2
12. 일반·지방행정	'24~'28계획	110.5	111.3	118.9	125.4	131.9		4.5
	'25~'29계획		110.7	121.1	126.7	135.1	141.9	6.4

자료: 기획재정부

(2) 성질별 재원배분

2026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이 250.0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 민간이전(157.0조원), 인건비(52.9조원), 융자금(45.5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은 지분취득비(523.8%), 출자금(116.9%), 예비비및기타(63.4%), 정보보안비(53.0%) 순이고, 감소율이 높은 항목은 특수활동비(△67.0%), 건설보상비(△11.3%), 해외이전(△6.6%) 순으로 나타났음.

이 중 지분취득비의 증가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관계로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83억 6,500만원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출자금의 증가는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출자'가 4조 9,226억 6,700만원(순증),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가 1조원(순증),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7,000억원(순증) 신규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예비비및기타의 증가는 예비비가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75.0%)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참고로 특수활동비는 전년 대비 656억원(△67.0%) 감액 편성되었으나, 과거 특수활동비목에서 분리된 안보비[2]는 전년 대비 315억원(3.4%) 증액된 9,605억원이 편성되었고, 정보보안비[3]는 전년 대비 842억원(53.0%) 증액된 2,4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성질별(목별) 규모]

(단위: 억원, %)

구분(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 총지출	6,733,016	7,032,531	7,280,059	547,044	8.1
○ 인건비(110목)	506,614	505,811	528,816	22,202	4.4
○ 물건비	312,244	313,812	320,265	8,022	2.6
- 운영비(210목)	256,612	257,491	256,515	△97	△0.0
- 여비(220목)	7,172	7,188	7,291	118	1.7
- 특수활동비(230목)	978	1,083	322	△656	△67.0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국민 안전 등 분야의 정보자산 취득, 운용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정보 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단위: 억원, %)

구분(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 업무추진비(240목)	1,973	1,978	1,976	2	0.1
- 직무수행경비(250목)	10,315	10,867	10,859	545	5.3
- 연구용역비(260목)	24,315	24,327	31,267	6,952	28.6
- 안보비(270목)	9,290	9,290	9,605	315	3.4
- 정보보안비(280목)	1,588	1,588	2,430	842	53.0
○ 이전지출	4,696,300	4,906,890	5,085,638	389,339	8.3
- 보전금(310목)	300,227	304,800	320,338	20,112	6.7
- 민간이전(320목)	1,448,860	1,499,401	1,569,556	120,696	8.3
- 자치단체이전(330목)	2,365,423	2,489,426	2,500,420	134,997	5.7
- 해외이전(340목)	28,332	28,054	26,473	△1,860	△6.6
- 일반출연금(350목)	280,931	311,468	343,329	62,398	22.2
- 연구개발출연금(360목)	272,526	273,741	325,522	52,995	19.4
○ 자산취득및운용	895,575	965,093	962,910	67,335	7.5
- 건설보상비(410목)	22,657	23,408	20,093	△2,564	△11.3
- 건설비(420목)	166,552	175,054	166,297	△254	△0.2
- 유형자산(430목)	166,009	168,042	183,393	17,383	10.5
- 무형자산(440목)	450	450	691	241	53.4
- 융자금(450목)	476,784	93,296	455,257	△21,528	△4.5
- 출자금(460목)	63,062	504,782	136,800	73,739	116.9
- 지분취득비(490목)	61	61	379	318	523.8
○ 상환지출(510목)	293,961	298,272	336,157	42,196	14.4
○ 예비비및기타(710목)	28,323	42,653	46,273	17,950	63.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규모가 큰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2.5조원(1.7%) 증가한 144.9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어서 연금지급금(94.0조원), 자치단체경상보조(84.5조원), 보수(48.2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6년도 예산안 규모 상위 10개 세목]

(단위: 억원, %)

구분(세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자치단체교부금(330-02목)	1,424,252	1,404,270	1,449,075	24,823	1.7
연금지급금(320-03목)	854,748	854,748	939,565	84,816	9.9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758,723	891,182	845,140	86,417	11.4
보수(110-01목)	462,688	461,865	482,316	19,628	4.2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	470,808	486,806	447,852	△22,956	△4.9
차입금이자(510-03목)	286,530	290,842	328,881	42,351	14.8
사업출연금(350-02목)	250,527	276,359	306,301	55,774	22.3
기타보전금(310-04목)	285,001	289,575	305,013	20,012	7.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목)	218,962	220,177	267,174	48,211	22.0
보험금(320-04목)	248,644	261,684	257,206	8,562	3.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주요 세목을 살펴 보면, 자치단체융자금이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900.0%)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였고, 이어 지분취득비 523.8%(+318억원), 금융성기금출연금 121.0%(+5,232억원), 일반출자금 116.9%(7조 3,739억원), 예비비 75.0%(+1조 8,000억원)의 순으로 증가율이 컸음.

[2026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가율 상위 10개 세목]

(단위: 억원, %)

구분(세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추경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목)	100	12,100	1,000	900	900.0
지분취득비(490-00목)	61	61	379	318	523.8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	4,323	9,023	9,555	5,232	121.0
일반출자금(460-01목)	63,062	93,296	136,800	73,739	116.9
예비비(710-01목)	24,001	38,001	42,001	18,000	75.0
무형자산(440-00목)	450	450	691	241	53.4
정보보안비(280-00목)	1,588	1,588	2,430	842	53.0
일반연구비(260-01목)	23,380	23,391	30,394	7,013	30.0
일・숙직비(210-06목)	1,034	1,034	1,321	286	27.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소율이 높은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해외자본이전과 국내차입금상환은 2025년 예산에 각각 4억원과 5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이어 특수활동비(△67.0%), 민간기금출연금(△25.0%), 건설보상비(△11.3%) 순으로 감소율이 컸음.

[2026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감소율 상위 10개 세목]

(단위: 억원, %)

구분(세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해외자본이전(340-03목)	4	4	-	△4	순감
국내차입금상환(510-01목)	51	51	-	△51	순감
특수활동비(230-03목)	978	1,083	322	△656	△67.0
민간기금출연금(350-04목)	5	5	4	△1	△25.0
건설보상비(410-00목)	22,657	23,408	20,093	△2,564	△11.3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5,417	5,271	4,837	△580	△10.7
국제부담금(340-02목)	24,921	24,642	22,515	△2,406	△9.7
일용임금(110-04목)	2,639	2,637	2,440	△199	△7.6
임차료(210-07목)	36,038	36,193	33,326	△2,713	△7.5
배상금(310-02목)	4,333	4,333	4,029	△305	△7.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388.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9조원(6.3%) 증가하였고, 재량지출은 34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1.8조원(10.3%) 증가하였음.

그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으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고,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의무지출	365.0	364.8	388.0	22.9	6.3
(비 중)	(54.2)	(51.9)	(53.3)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1.8	10.3
(비 중)	(45.8)	(48.1)	(46.7)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5~2029년)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3%에 이르러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이 2025년 54.2%에서 2029년 55.8%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4.6% 수준으로 총지출 중 재량지출의 비중은 2025년 45.8%에서 2029년 44.2%로 감소할 전망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중기 계획]

(단위: 조원,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673.3	728.0	764.4	802.6	834.7	5.5
(증가율)	(2.5)	(8.1)	(5.0)	(5.0)	(4.0)	
ㅇ 의무지출	365.0	388.0	415.1	441.3	465.7	6.3
(비중)	(54.2)	(53.3)	(54.3)	(55.0)	(55.8)	
ㅇ 재량지출	308.3	340.0	349.3	361.3	369.0	4.6
(비중)	(45.8)	(46.7)	(45.7)	(45.0)	(44.2)	

자료: 기획재정부

재량지출의 경우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4~2028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1% 증가하고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7.1%에서 2028년 42.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더 확대된 재량지출 증가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주요 신규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 중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7,446억원),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7,000억원) 등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사업내용
기획재정부	일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산기반기금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BTL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BTL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기후기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R&D)	501	‘분광수소 유동환원로’와 ‘전기용융로’의 연속공정 실증 및 ‘수소환원철/냉선’의 전기로 활용 실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2,012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의 공공부문 선도적 추진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
교육부	영유특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 실현	4,703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반도체·네트워크·생활 등)	600	다양한 분야의 AI 융합 신서비스·디바이스 발굴 및 신속 상용화를 위해 AX전환 및 AI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지원
	고특	AI·SW 중심대학	1,180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재 및 디지털 전 산업에 가치를 창출할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중심대학 사업 ※ (SW중심대학)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내역사업에서 AI·SW중심대학 내역사업으로 이관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사업내용
	정진기금	AI통합바우처	898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활용기반(고성능컴퓨팅자원·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국방부	일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방)	600	군, 공공 및 민간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군수품을 AI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국가 농업 AX플랫폼	705	스마트농기계・스마트팜 등 민・관 협력 스마트 농업 사업 추진
	지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	인구감소지역 군 중 공모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부	일반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500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통플랫폼 육성 및 플랫폼 내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촉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1,575	단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AI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K-온디바이스AI 반도체기술개발(R&D)	1,851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수요기업 중심 국내 팹리스와 AI반도체 풀스택 공동개발
	전력기금	AI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1,196	계통 포화 지역(호남) 배전망 ESS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특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	500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금융위원회	일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1,000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 보증상품인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에 대한 재정 지원
		청년미래적금	7,446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00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지원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우주항공청	일반	뉴스페이스투자지원	1,000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회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자료: 기획재정부

바. 2026년도 예산총칙안

예산총칙은「국가재정법」제19조[4]에 따른 예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사항을 법조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임.

「국가재정법」제20조[5]는 ①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②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③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④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목적예비비의 규모, 기업특별회계 전입·전출금, 원자력 손해배상보상 계약금액의 한도액 등을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총칙안은 전년과 동일한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예산총칙안 주요내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제2회 추경			(B-A)/A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5,747,696	6,000,162	6,247,634	499,938	8.7
- 일반회계	4,736,594	4,969,658	5,074,468	337,873	7.1
- 특별회계	1,011,102	1,030,503	1,173,167	162,065	16.0
제3조 계속비					
- 총 액	-	-	-	-	-
- 연부액	-	-	-	-	-
제5조 명시이월비	-	-	-	-	-
제6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4)「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5)「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국고금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제2회 추경			(B-A)/A
-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제7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15,000	-	-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연 도 중 최고한도액					
- 통합계정	400,000	400,000	400,000	-	-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20,0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80,000	100,000	20,000	25.0
-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2,000	-	-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 (액면가 기준)					
- 주택도시기금	190,000	190,000	190,0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993,000	2,329,000	2,337,000	344,000	17.3
- 외국환평형기금(십만 달러)	12,000	35,000	14,000	2,000	16.7
- 외국환평형기금(원화)	200,000	136,650	136,650	△63,350	△31.7
제12조 목적예비비	16,000	26,000	34,000	18,000	112.5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11,056	11,056	10,553	△503	△4.5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850	850	900	50	5.9
- 조달특별회계 → 일반회계	1,377	1,377	1,093	△284	△20.6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일반회계	1,026	1,026	531	△495	△48.2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
- 일반회계 → 양곡관리특별회계	22,715	22,715	18,560	△4,155	△18.3
- 일반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258	3,258	3,696	438	13.4
- 일반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153	153	160	7	4.6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5,060	5,060	5,212	152	3.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11,056	11,056	10,553	△503	△4.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923	923	944	21	2.3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합계 한도액	33,199	33,199	33,818	619	1.9

자료: 기획재정부

사.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념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6)]

민간투자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됨. 먼저 수익형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시설을 구축한 후 이에 대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의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시설 수익금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7)]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임.

[수익형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간 비교]

구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및 성격	최종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적용사업	고속도로, 항만, 경전철, 지하철, 하수처리장, 환경시설 등	학교, 군인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일반철도 등
투자비 회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사용료 책정	총사업비 기준으로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 별도 반영	총민간투자비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 후 균등 분할하여 지급
시설구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건설분담금과 토지보상비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6)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추진방식', 공공투자관리센터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BTL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이 약정된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 부담으로 투자비가 회수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이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학교·병원·기숙사·병영시설 등 수익성이 낮아 사용료 징수를 통한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의 경우 BTL 방식을 활용하게 되며, 건설 이후에는 통상 20년에 걸쳐 임대료·운영비에 대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발생함.

따라서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민간투자법」제7조의2제1항[8]은 정부가 매년 다음연도에 실시할 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분석

사업이 민간투자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방식이 기존의 공공조달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BTL 타당성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지 계량적 가치 평가를 수행함.

타당성분석(타당성 및 적격성 판단)은 준거사업을 설정한 후 1단계(타당성 판단) → 2단계(민자적격성 판단) → 3단계(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순으로 진행됨.

1단계 타당성 판단은 ①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② 정책적 타당성 판단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함. 다만, 학교시설·군주거시설 등의 사업군은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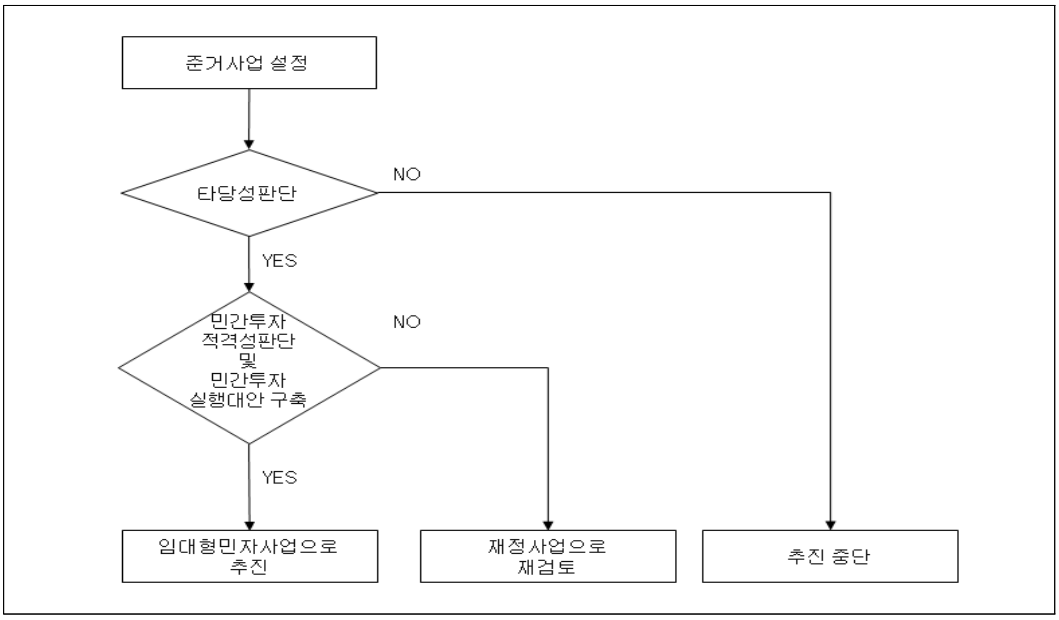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에서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사업 전체 기간의 총 생애주기비용(LCC)을 추정하여 각 대안의 정부부담액을 비교하고 PFI의 정부부담액이 PSC의 정부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민자적격성(VfM)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에서는 2단계에서의 PFI 비용을 기초로 사업시행조건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을 제시함.

---

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BTL 타당성분석의 수행절차]



자료: KD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세부내역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의미함.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6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3,830억원(23.3%) 증가한 2조 26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625억원(325.2%) 증가한 1조 3,892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6,978억원(△56.4%) 감소한 5,404억원이 편성되었음.[9)]

그 밖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한도액 합계의 20% 이내)은 전년 대비 183억원(23.4%) 증가한 965억원이 편성되었음.

9)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서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의 경우 '지자체별 BTL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음.('24년 1,297억원, '25년 12,382억원, '26년(안) 5,404억원)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A)	2026년안(B)	증감(B-A)	증감률(B-A)/A
국가사업	3,267	13,892	10,625	325.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382	5,404	△6,978	△56.4
예비한도액	782	965	183	23.4
총한도액	16,431	20,261	3,830	23.3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시설별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음.

이를 시설 유형별 및 규모별로 살펴보면 철도시설 1조 1,209억원, 하수관로시설 2,919억원, 완충저류시설 2,485억원, 대학시설 2,190억원, 공공청사시설 493억원 등의 규모 순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구분	시설유형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별 한도액	사업수	한도액 합계
국가사업	대학시설	교육부	국립대	충남대	425	6개	2,190
				강릉원주대	329		
				군산대	270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	수도권	459		
				충청권	358		
				경상권	349		
	철도시설	국토교통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11,209	1개	11,209
	공공청사시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및 직원숙소		493	1개	493
소 계						8개	13,892
국고 보조 지자체사업	하수관로시설	기후에너지 환경부	대구시 달서천(5구역)			1개	2,919
	완충저류시설	기후에너지 환경부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1개	2,485
소 계						2개	5,404
예비한도액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965
합 계						10개	20,261

자료: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바탕으로 재구성

(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서

「국가재정법」 제9조의2[10]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11]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작성된 「2025~203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살펴보면, 2025년부터 예상되는 BTL 정부지급금 추계액(명목 가격 기준)은 25조 7,044억원임.

이 중 임대료는 국가사업이 17조 874억원(66.5%), 국고보조사업이 4조 3,549억원(16.9%)이고, 나머지 4조 2,622억원(16.6%)은 국가사업 운영비임.

[2025~203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종료일
합 계	257,044	19,283	20,164	21,098	21,222	21,032	20,458	19,177	16,674	14,063	12,138	71,735
국가사업	213,496	15,250	15,907	16,657	16,768	16,605	16,451	15,893	14,002	11,898	10,723	63,342
임대료	170,874	12,641	13,167	13,703	13,717	13,437	13,248	12,709	11,082	9,264	8,302	49,604
운영비	42,622	2,609	2,740	2,954	3,051	3,168	3,203	3,184	2,920	2,633	2,421	13,739
국고보조	43,549	4,033	4,257	4,441	4,453	4,427	4,007	3,284	2,672	2,166	1,415	8,392
임대료	43,549	4,033	4,257	4,441	4,453	4,427	4,007	3,284	2,672	2,166	1,415	8,392
운영비	-	-	-	-	-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10)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 · 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 부처별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8조 6,222억원으로 가장 큰 지급금이 예상되고, 이어 국방부(7조 7,536억원), 교육부(3조 5,997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3조 261억원) 순으로 지급금 추계액이 컸음.

[2025~203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내역]

(단위 : 억원)

부처	구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종료일
국토부	합 계	86,222	4,792	4,698	5,195	5,221	5,248	5,277	5,306	4,894	4,387	4,389	36,814
	국가사업	86,222	4,792	4,698	5,195	5,221	5,248	5,277	5,306	4,894	4,387	4,389	36,814
	임대료	69,192	4,135	4,042	4,424	4,421	4,418	4,416	4,413	4,005	3,508	3,480	27,929
	운영비	17,030	657	656	772	800	830	861	893	890	878	909	8,885
국방부	합 계	77,536	7,146	7,468	7,625	7,755	7,805	7,803	7,342	6,027	4,604	3,885	10,074
	국가사업	77,536	7,146	7,468	7,625	7,755	7,805	7,803	7,342	6,027	4,604	3,885	10,074
	임대료	62,778	5,903	6,131	6,238	6,309	6,306	6,255	5,812	4,698	3,496	2,865	8,764
	운영비	14,758	1,243	1,337	1,387	1,446	1,499	1,548	1,530	1,329	1,108	1,020	1,310
교육부	합 계	35,997	1,390	1,930	2,196	2,192	1,924	1,875	1,868	1,873	1,878	1,883	16,988
	국가사업	26,204	1,223	1,639	1,718	1,700	1,432	1,383	1,376	1,381	1,386	1,391	11,575
	임대료	22,848	1,164	1,531	1,585	1,563	1,291	1,237	1,226	1,226	1,226	1,226	9,573
	운영비	3,356	59	108	133	137	141	146	150	155	160	165	2,002
	국고보조	9,793	167	291	478	492	492	492	492	492	492	492	5,413
	임대료	9,793	167	291	478	492	492	492	492	492	492	492	5,413
	운영비	-	-	-	-	-	-	-	-	-	-	-	-
기후부	합 계	30,261	3,570	3,642	3,638	3,636	3,610	3,216	2,515	1,936	1,458	759	2,281
	국고보조	30,261	3,570	3,642	3,638	3,636	3,610	3,216	2,515	1,936	1,458	759	2,281
	임대료	30,261	3,570	3,642	3,638	3,636	3,610	3,216	2,515	1,936	1,458	759	2,281
	운영비	-	-	-	-	-	-	-	-	-	-	-	-
과기부	합 계	10,675	1,138	1,115	1,120	1,129	1,147	988	849	855	857	485	993
	국가사업	10,272	1,084	1,060	1,065	1,074	1,092	949	819	826	834	476	993
	임대료	6,938	728	726	721	719	717	636	554	552	551	317	716
	운영비	3,334	356	334	344	355	375	313	264	274	283	160	277
	국고보조	403	54	55	55	55	55	39	31	29	23	8	-
	임대료	403	54	55	55	55	55	39	31	29	23	8	-
	운영비	-	-	-	-	-	-	-	-	-	-	-	-

(단위 : 억원)

부처	구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종료일
노동부	합 계	5,736	455	465	466	424	430	436	441	367	284	221	1,747
	국가사업	5,736	455	465	466	424	430	436	441	367	284	221	1,747
	임대료	3,664	312	316	313	282	282	282	282	235	180	139	1,041
	운영비	2,072	143	149	153	142	148	154	159	132	104	82	706
경찰청	합 계	4,319	218	245	247	249	249	250	253	254	255	255	1,844
	국가사업	4,319	218	245	247	249	249	250	253	254	255	255	1,844
	임대료	3,340	176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373
	운영비	979	42	46	48	50	50	51	54	55	56	56	471
복지부	합 계	2,910	230	257	259	260	260	250	237	206	184	148	619
	국가사업	549	42	42	43	43	44	44	44	45	45	46	112
	임대료	421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82
	운영비	129	8	9	9	9	10	10	10	11	11	12	30
	국고보조	2,360	188	215	216	216	216	206	193	161	139	102	507
	임대료	2,360	188	215	216	216	216	206	193	161	139	102	507
	운영비	-	-	-	-	-		-	-	-	-	-	-
해수부	합 계	1,187	152	152	159	161	164	166	169	64	-	-	-
	국가사업	1,187	152	152	159	161	164	166	169	64	-	-	-
	임대료	673	90	90	92	92	92	91	91	35	-	-	-
	운영비	514	62	62	67	69	72	75	78	29	-	-	-
질병청	합 계	768	57	57	57	58	58	59	59	59	60	60	184
	국가사업	768	57	57	57	58	58	59	59	59	60	60	184
	임대료	546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126
	운영비	222	15	15	15	16	16	17	17	17	18	18	58
산업부	합 계	731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91
	국고보조	731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91
	임대료	731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91
	운영비	-	-	-	-	-	-	-	-	-	-	-	-
성평등부	합 계	703	80	81	81	82	83	84	84	85	43	-	-
	국가사업	703	80	81	81	82	83	84	84	85	43	-	-
	임대료	474	56	56	56	56	56	56	56	56	28	-	-
	운영비	228	24	25	26	26	27	28	28	29	15	-	-

주) 사업종류 및 추계액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2. 2026년도 예산안 총평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②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고(高)성과 부문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며, ③ 저(低)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정책과제'로 나누어 검토하겠음.

가. 재정총량 검토

(1) 개관

정부는 경제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 아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8.1%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다소 악화되고, 국가채무 또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총수입의 경우 전년 본예산 대비 3.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증가율로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세수오차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총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이는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이는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성하였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임.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3.6	7.1	9.5	9.1	8.9	8.9	5.1	2.8	3.2	8.1

주) 본예산 기준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32.1조원 악화된 △53.8조원(GDP 대비 비율은 △0.8%→△2.0%), 관리재정수지는 35.1조원 악화된 △109.0조원(GDP 대비 비율은 △2.8%→△4.0%)으로 전망됨.

다만, 2026년도 예산안의 재정수지를 2025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7.0조원(GDP 대비 0.3%p)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는 2.6조원(GDP 대비 0.2%p) 개선된 수치임.[12)]

또한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1.8조원 증가한 1,415.2조원(GDP 대비 비율은 48.1% → 51.6%)으로 전망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하면 111.6조원(GDP 대비 2.5%p) 증가한 수치임.

(2) 총수입

(가) 국세수입

최근 대미 관세 무역협상 및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세수입 추계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 수출·입 증가율,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이 국세수입 전망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2025년은 경상성장률 3.2%, 실질성장률 0.9%, 민간소비증가율 1.3% 및 환율 1,428(원/$) 등을 전제로 하였고,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1.7%, 민간소비증가율 1.6% 및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13)]

12)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세입경정(△10.3조원)과 총지출 확대(본예산 대비 30.0조원)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3%,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구 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경상성장률(%)	3.2	3.8
실질성장률(%)	0.9	1.7
GDP 디플레이터	2.3	2.1
민간소비증가율(%)	1.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취업자증감(만명)	19.7	17.3
명목임금 상승률(%)	3.2	2.5
수출 증가율(%)	0.2	△0.5
수입 증가율(%)	△0.6	0.5
환율(원/$)	1,428	1,380

주) 정부 전망(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월) 및 KDI 경제전망(2025.8월) 반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실질성장률의 경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2026년 전망치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 전망치보다 0.1%p 낮게 예상하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NABO), OECD 및 IMF는 정부 전망보다 0.1%p에서 0.5%p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구 분	정부 (2025.9)	NABO (2025.9)	한국은행 (2025.8)	KDI (2025.8)	OECD (2025.9)	IMF (2025.10)	ADB (2025.9)
2025	0.9%	1.0%	0.9%	0.8%	1.0%	0.9%	0.8%
2026	1.7%	1.9%	1.6%	1.6%	2.2%	1.8%	1.6%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이며, 정부전망치는 2026년도 예산안 기준임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내외 주요 기관의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JP Morgan Chase, Citigroup, Wells Fargo 등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도 전망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3)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다만 이러한 전망과는 별개로, 환율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지표이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국내외 주요 기관의 분기별 원/달러 환율전망]

구 분	국내				국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JP Morgan Chase	Citigroup	Wells Fargo	ING Financial Mar.
2025.4Q	1,385	1,385	1,410	1,395	1,380	1,406	1,385	1,350
2026.1Q	1,365	1,370	1,420	-	1,320	1,413	1,380	1,325
2026.2Q	1,360	1,370	1,400	-	1,317	1,395	1,380	1,312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10월 월간 환율전망」, 2025.10.10.

정부가 예산안 국세수입 추계 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치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 수립 시 전제한 전망치가 달라 양자 간 정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정부가 국세수입을 추계할 때 전제한 2026년 경상 및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전망치보다 각각 0.1%p 낮은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 시 당해년도 6~7월에 발표하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전망치를 국세수입 추계에 그대로 사용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음.

[정부의 각 시점별 2026년 성장률 전망치]

구 분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6년도 예산안, 2025.9.)	3.8	1.7
2026년 경제전망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3.9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경제전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026년 세입예산 편성 시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정부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기관의 거시경제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서는 여전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22.)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계획 수립의 전제로 사용되고 있어, 2026년 예산안과 상기 계획들 간의 정합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도 예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예정인바,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국세수입은 세수 재추계 결과 369.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3.3%), 제2회 추경(372.1조원) 대비 △2.2조원(△0.6%)이 부족한 수준인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를 합치면 약 △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법인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14]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세수오차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오차율도 2023~2025년 각각 △14.1%, △8.4%, △3.3%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조세지출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지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이후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 및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각각 1.5%p 초과한 15.8%, 16.1%를 기록하였고, 2025년은 법정한도를 0.5%p 초과한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026년의 국세감면 규모는 80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6.1%를 기록할 전망이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전년 보다 1.0%p 증가함에 따라 법정한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확대가 필수적인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2023~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A)	2026년 전망(B)	증감 (B-A)
○ 국세감면액	697,664	705,171	764,719	805,277	40,558
○ 국세수입 총액[1] (B)	3,703,803	3,656,829	4,003,076[3]	4,195,673	192,597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6.1	0.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3	14.6	15.5	16.5	1.0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NXC 물납주식의 매각대금 및 통신사·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향후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한 세입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6,803억 5,700만원(△71.6%)이 감액된 1조 63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15] 주식 매각대금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3.7조원, 1.0조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나 올해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이며, 연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감안하면 2025년에 매각이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2026년 예산안에 1.0조원만 반영되어 있는 ㈜NXC 주식 매각 수입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당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과징금 수납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KT, 롯데카드 등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NXC(NeXon Corporation), 2022년 넥슨그룹 회장 별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중 4.7조원을 주식으로 물납하였음(2023.5).

2024년 결산 시 100억원 이상의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으나 수납률이 50.0% 미만인 세입 과목이 총 48개에 달하며 해당 과목들의 수납률은 8.8%에 불과한바,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자의 미반납금을 조속히 반납받는 한편 개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 징수결정한 예산 및 기금수입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0.0% 미만인 세입 과목은 21개 부처 총 48개로, 정부는 총 46조 1,319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4조 421억 1,800만원만 수납되어 8.8%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미반납액을 조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력부족,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총지출

(가) 총지출 규모

총지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26년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 및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건전재정을 표방한 최근 3년간의 총지출 증가율(2023년 5.2%, 2024년 2.8%, 2025년 3.2%)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임.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재정투입을 마중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집중 투자하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인 바, 관련 사업들이 초혁신경제 및 기술주도 성장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의무지출·재량지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재량지출의 비중이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의무지출 비중이 53.3%, 재량지출 비중이 46.7%로 전년도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0.9%p 감소하고 재량지출 비중이 0.9%p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AI 등 초혁신경제 지원을 위한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전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2%에서 2026년 53.3%로 하락한 이후 2029년 55.8%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재량지출 비중은 2025년 45.8%에서 2026년 46.7%로 증가한 후 2029년 44.2%까지 감소할 전망임.

[2025~2029년 중기 의무지출·재정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 의무지출	365.0	364.8	388.0	415.1	441.3	465.7	6.3
(비중)	(54.2)	(51.9)	(53.3)	(54.3)	(55.0)	(55.8)	-
○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49.3	361.3	369.0	4.6
(비중)	(45.8)	(48.1)	(46.7)	(45.7)	(45.0)	(44.2)	-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의무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의무지출의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고채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수준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은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임.

정부는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은 전년 대비 34.4조원 증가한 총 233.7조원 규모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6년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안은 총 34.4조원으로, 이 중 28.2조원은 과거 확정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만, 6.2조원은 신규 발행분에 대한 이자로서 2026년 신규 발행금리에 따라 국고채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정부는 해당 금리를 3.0%로 전망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2023년 3.57%, 2024년 3.22%, 2025년 8월 기준 2.55%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4년 9월 3.011%~2.83% 수준에서 2025년 8월 2.838%~2.263%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음.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고채 금리를 3년물은 2.4%, 10년물은 2.8%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 이후 네 차례 인하(3.50% → 2.50%)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9월 연 4.25%~4.50%였던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p 인하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계획안은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의 추이를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지출 구조조정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종료된 사업, 총사업비의 감액 조정 없이 연도별 예산을 차년도로 이연한 사업, 사업 간 이관 및 조정으로 실제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어 보임.

정부는 고(高)성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저(低)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을 절감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지출 구조조정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여 확보한 재정여력을 보다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분배하려는 취지인바, 이를 감안하면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인 사업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2026년에 재분배가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그리고 지출구조조정 대상 중 SOC, R&D, ODA 등 다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경우, 총사업비를 감축하지 않고 해당연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결국 지출 시기를 차년도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물가 상승 영향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또한 일부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타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내역 간 조정되어 감액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바, 이를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측면이 있는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예산이 축소되는 분야의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큼.

정부가 이와 같은 반발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지출 구조조정은 당해년도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투자 방향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마) 포괄보조사업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역자율계정 이관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는바, 이관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및 유사 사업의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6조 8,067억원(181.2%) 증가한 10조 5,6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은 2025년 51개에서 2026년 123개로 대폭 확대되었음.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중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과 기능 조정이 요구되거나 사업 간 유사 중복으로 인해 통합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존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된 일부 사업들의 실집행이 저조한 측면을 고려하면, 포괄보조금 확대로 인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책임성 제고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기존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된 일부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거나 실집행률이 양호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보조금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독려할 수단이 부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할 경우 실집행 부진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포괄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별 및 부문별 사업 시행계획 및 기존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자율적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의 일부만 이관되어 동일한 목적의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처 간 관할 중첩으로 정책 추진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이관이 발생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 세입사업은 총 34개, 예산액은 19조 7,436억원이며, 세출사업은 총 150개, 예산은 4조 1,466억원임.

다만 이 중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 전체가 대상 부처로 이관되지 않고 일부만 이관됨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지닌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 편성되어 집행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조직개편의 취지와 달리 기관 간 관할 중첩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 정책의 추진체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며, 향후 관련 예산안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완전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1월 2일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 내용 및 소요비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소요비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 개편 시 인력의 증·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변동, 청사 이전·확충에 따른 임차료 및 공사비 등의 변동, 정보시스템 등의 신설·통합에 따른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등의 변동, 기관 명칭 변경 홍보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등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예정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상기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진행 중인 조직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역할 분담 및 인력 배치 계획 등도 구체화되지 않아 비용 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비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의 내용 및 관련 비용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4) 재정건전성

(가) 재정수지

정부는 2026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GDP 대비 △4.0%로 전망하면서 향후 이를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확장재정 및 의무지출 확대 등의 여건 하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폭넓게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이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4% 초반대로 관리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만 정부가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3%)이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보다 폭넓은 세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무지출을 확대하는 제도 신설·변경 시에는 대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가채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외 공공부문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7년 34.1%에서 2026년 51.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대응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채무 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10년간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89.6조원에서 981.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3.9%에서 2026년 69.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의 증가는 제약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GDP 대비 비중이 2019년 55.5%에서 2023년 69.5%까지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395.8조원에서 545.4조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전이될 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5%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세입여건의 악화 및 복지분야 지출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16]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이며 GDP 대비 비율은 50.5%인 바, 일본(249.7%), 이탈리아(134.6%), 미국(118.7%), 프랑스(109.9%) 등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3년 50.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6)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 시 통용되는 지표임.

또한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세수입의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30년 64.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보증채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이어 첨단전략산업기금까지 신설됨에 따라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2025년 16.7조원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이는 향후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1년 35.1조원에서 2023년 10.5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 이후 11.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신설로 16.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25년 16.7조원 규모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25~2029년 기간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4.2조원에서 21.4조원으로 증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1.5조원에서 43.5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함.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9.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두 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은 동일함.

이 채권들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17]를 받아야 하므로, 국가보증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는 있음.

그러나 일반 재정사업과는 달리 국가재정 외의 기금이므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지 않으나 국가가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분야별 재원배분 검토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R&D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②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예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액되었으며, ③ 외교·통일 분야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R&D 분야의 예산은 2024년 R&D 구조조정을 이유로 26.5조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29.6조원으로 증가하고, 2026년에는 35.3조원으로 다시 증가하여 12대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19.3%)을 보이고 있음.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025년에는 28.3조원으로 2024년 28.0조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32.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여 R&D 분야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6년도 예산안은 269.1조원으로 모든 분야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4조원이 증가함으로써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임. 이 분야 예산은 4대 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0.7조원(△9.1%)이 감소된 7.0조원으로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를 정상화하고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R&D 분야는 기술주도 성장 및 연구생태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되었는바, 증액된 예산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조속한 과제 선정, 주기적인 평가 및 점검, 참여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5년 8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첨단기술 기반 성장동력 강화 및 실질적인 경제 가치 창출 기여를 위한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초과학, 중소·벤처,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연구생태계 전환을 위한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이라는 2가지 중점투자 목표를 제시하였음.

2026년도 R&D 예산안은 이와 같은 중점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 대비 5조 5,916억원(19.3%) 증가하여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으로 첨단기술, 민간연계, 인재, 연구기반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였음.

글로벌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려는 정부의 R&D 투자방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단기간 내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R&D 분야의 경우 연구 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해당 연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 공유 및 기술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 준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연구기관들이 국가 대형 임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방안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를 통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PBS는 즉시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정부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우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비 등이 증액되어, 2025년(5,454억원) 대비 1,622억원(29.7%) 증가한 7,076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직할기관에 대한 전략연구사업 예산 4,514억 7,9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다만 이와 관련해, PBS가 폐지된 이후 개별 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정부는 PBS 폐지를 통해 기존 정부수탁사업으로 지원되던 인건비를 각 기관의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려는바, 전략연구사업의 평가·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PBS 단계별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계별 폐지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24개 직할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및 폐지방안 구체화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한 번 수혜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지닌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심의가 필요함.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24.0조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97.0조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23.4조원) 등 주로 대규모 의무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복지예산은 그 성격상 제도개선을 통해 한 번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 이후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추계상의 작은 오류에도 재정운용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설계 및 변경에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으로 54.5조원을 편성하였는데, ①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5~2029)」(2025.4.)에는 56.7조원으로 전망했다는 점, ② 최근 3년 연속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점(2022년 3.5조원, 2023년 2.9조원, 2024년 0.5조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그동안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마지막으로 외교·통일 분야의 경우 최근 급증한 ODA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ODA 사업들이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7조원(△9.1%)이 감소된 7.0조원으로, 이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ODA 예산이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액된 것에 기인함.

다만, 2025년도에도 현지정세 불안, 사업준비 미흡,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ODA 사업들이 있으므로, 2026년 ODA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ODA 추진 시에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국익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ODA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 정책과제 검토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총 12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안하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를 위해, AI 3강을 위한 대전환(10.1조원), 신산업·R&D 혁신(44.3조원),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4.3조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7.9조원),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5.7조원)이라는 5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를 위해, 지방거점성장(29.2조원), 저출생·고령화 대응(70.4조원), 촘촘한 사회안전매트(32.1조원), 민생·사회연대경제(26.2조원),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17.6조원)라는 5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를 위해, 재난 예측·예방·대응(5.8조원),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3.8조원)라는 2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투자 분야 및 12가지 핵심과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72조원)	■ AI 3강을 위한 대전환 ■ 신산업·R&D 혁신 ■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75조원)	■ 지방거점성장 ■ 저출생·고령화 대응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30조원)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8.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51→72조원, +41%)

① AI 3강을 위한 대전환 (3.3→10.1조)

- 신규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5조
- 신규AX-Sprint 300(생활밀접형) 0.9조
- 국내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 등 0.6조
- GPU 1.5만장 구매 2.1조

② 신산업·R&D 혁신 (36.4→44.3조)

- R&D 역대 최대 증가(+19.3%) 35.3조
  * A·B·C·D·E·F 첨단기술 고도화(10.6조)
- 신규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1.0조
-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1.0→2.0조

③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1.6→4.3조)

-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1조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0.2조

④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6.0→7.9조)

- 신규RE100 산단, 신규분산형 전력망 0.3조
- 신재생에너지 보조·융자 확대 0.5→0.9조
- 신규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 0.2조

⑤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4.2→5.7조)

- 한류연계 붐업 3.2조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5조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44→175조원, +22%)

① 지방거점성장 (19.0→29.2조)

-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9조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0.5조
- 신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개 군) 0.2조
-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1.1조

②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

- 아동수당 연령 상향(+1세) 및 지방 우대 2.5조
- 신규청년미래적금(납입금 6/12% 매칭) 0.7조
- 신규비수도권 취업청년 우대 0.9조
- 신규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0.1조

③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29.2→32.1조)

- 기초생활보장 확대 22.5조
- 장애인 돌봄·일자리 확대 4.6조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상담 지원 등 0.1조

④ 민생·사회연대경제 (17.6→26.2조)

-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1.2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 0.6조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0.1조

⑤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16.0→17.6조)

- 산업재해 예방 필수설비·인력 지원 0.3조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7조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5→30조원, +18%)

① 재난 예측·예방·대응(3.9→5.8조)

- 풍수해정비 등 재난 대응 2.6 → 3.3조
- 신규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등 276억

②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1.2→23.8조)

-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 3.2조
- 남북협력기금 확대 0.8 → 1.0조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8.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정부는 우리나라가 AI·신산업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주도함으로써 초혁신 경제를 이룩하고, K-컬처 확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7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혁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AI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전세계적인 K-컬처 유행을 바탕으로 한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 화장품, 푸드 분야 등을 연계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임.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미 관세 무역협상, 희토류 등 핵심광물 및 전략품목 수출 제한 등의 통상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가) AI 3강을 위한 대전환(3.3조원 → 10.1조원)

정부는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고 하드웨어 및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인바, AI 사업의 분류기준이 불분명해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보안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AI 사업 예산안과 개별 부처가 인식하는 AI 사업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AI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처별 자체 판단 및 상위기관의 분류상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복수의 부처에서 다양한 AI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참여자들의 기술 수준 및 특화 분야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 철저한 사업관리 등 AI 전문인력을 차질없이 양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임.

AI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구축 예정인 GPU의 활용계획 수립, 데이터 통합 관리에 따른 보안 방안 마련, 데이터 개방을 전제로 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사전 기획 필요 등 AI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및 그 활용방안과 향후 보안 위협 대처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다부처 사업인 ‘AX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은 일부 부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조사와 과제발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나) 신산업·R&D 혁신(36.4조원 → 44.3조원)

정부는 2026년도 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면서 첨단기술, 민간연계, 인재 및 연구기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실시할 계획인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기관 간 긴밀한 협의, 지원대상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연계 지원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첨단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참여 기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준비함으로써 조속하게 투자 확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정확히 추계하는 한편, 민간으로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우수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각종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대폭 확대된 개인 기초연구 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신설, 중소기업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626억원(110.9%) 증액하였는바, 국민성장펀드와 타 정책펀드 간 차별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출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신설에 따라 펀드 간 민간재원 구축(crowding out)을 미연에 방지하고 펀드 간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및 요건 등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펀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조정을 시도하고, 정책출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설정된 일부 모태펀드는 민간출자 비중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존 정책펀드의 자펀드 결성 실적 및 투자여력, 자펀드 청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회수재원의 재출자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적정 출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1.6조원 → 4.3조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총 4조 3,12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미 투자 금융패키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총 1조 9,000억원의 출연·출자사업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된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의 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설계가 필요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수요 및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국가재정 외 기금과 관련해 기금채권 국가 보증에 더해 정부재정 투입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라) 에너지 전환·탄소중립(6.0조원 → 7.9조원)

정부는 기존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 중립 목표 실현 등을 위해 총 7조 8,946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는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재원확보 및 지출구조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시 대상 사업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타 회계·기금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회계·기금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 특성상 온실가스의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마)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4.2조원 → 5.7조원)

정부는 K-컬처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문화 분야에 5조 6,695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체계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속히 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 집행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컬쳐 확산을 위한 사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집행, 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일부 사업은 시범사업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소요 예산을 재추계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로 보조사업비가 교부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근거 미비으로 인한 예산 미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등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75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3특[18]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방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지역투자 촉진 및 지방 재정지원 다양화와 지역 재도약을 위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안전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임.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금융·교통·주거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가) 지방 성장거점 구축(19.0조원 → 29.2조원)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29조 1,92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5극3특 전략은 최근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체 구성이 속속 추진되는 등 초광역 성장거점 집중 육성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나, 구체적인 권역별 성장거점이나 전략산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집행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임.

5극3특의 지역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 지방비가 매칭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을 권역별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간 갈등조정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권역별 핵심기반인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18)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함. 5극3특 전략은 초광역 권역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되, 특히, 권역별 성장거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성장거점에 대해 재정·R&D·규제완화·펀드·인재양성 지원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함.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과도한 지자체 부담분 보완, 일시적 거주자에 대한 제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차등 지원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62.6조원 → 70.4조원)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및 무상교육 지급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인바,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 증가에 대해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 중 일부는 사업 내용 또는 지원 대상이 저출생 또는 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 사업의 판단 기준과 선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생 · 고령화 대응 재정지출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 감축 여력이 제한적인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저출생 · 고령화 대응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저출생 ·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 촘촘한 사회안전매트(29.2조원 → 32.1조원)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안전 기반 강화사업에 총 32조 57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와 관련해 효과 및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복지정책 설계 및 사업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 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해 신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증가 시 기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탈수급 유인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일부 사업에서 법령상 기준과 예산상 기준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라) 민생·사회연대경제(17.6조원 → 26.2조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26조 1,72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햇살론 사업의 정부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시 사회적 가치평가 등급 요건 설정이 필요함.

민생회복 분야에 대해서는 햇살론 사업의 개편으로 인해 복권기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정부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정액패스 도입으로 기존 K-패스에서 이동하는 가입자 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획안 확정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시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 등급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마)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16.0조원 → 17.6조원)

정부는 산재예방 및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도모할 예정으로 17조 5,78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처 및 사업별로 추진 중인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내 산재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재예방사업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들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가 분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과 사업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업종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과 급여 지급액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율 산정 시 업종별 수지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없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고, 장해급여 지급 시 연령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복지를 강화하여 직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부는 재난의 선제적인 예측 및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군 자긍심 고취 및 첨단 군대 육성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정부는 AI·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할 계획임.

그리고 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병복지를 확대하고 보훈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전투기·AI 등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가) 재난 예측·예방·대응(3.9조원 → 5.8조원)

정부는 재해·재난에 대해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것에 투자할 목적으로 5조 7,931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정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재해대책비 일부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재해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흡하였거나 측정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선하여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난안전 예산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해당 사업의 성과가 적정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 포함 70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정보시스템에 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상 ‘범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민생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등 일부 유형의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민생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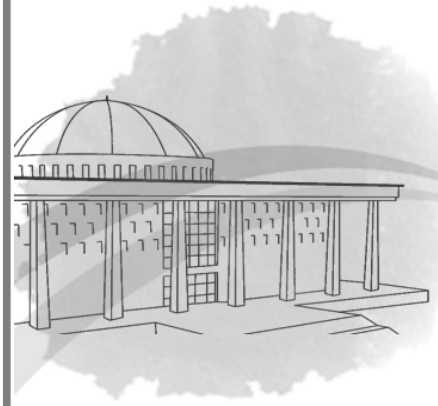
(나)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21.2조원 → 23.8조원)

정부는 군 장병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및 전투기・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총 18조 2,776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장병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일정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장병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 간부 내일준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원훈련·일반훈련 사업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을 살펴보아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함.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 추진일정 변경, 평가·판정 획득 여부의 불확실성, 계약 후 낙찰차액 및 정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재정총괄



1. 재정수입

가. 개 요

(1) 총수입

2026년도 총수입[1]은 전년 대비 22.6조원(3.5%) 증가한 674.2조원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8조원(2.0%) 증가한 390.2조원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원(2.9%) 증가한 37.4조원,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3.7조원(5.9%) 증가한 246.6조원으로 전망됨.

[2026년도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본예산(A)	2회 추경		증감(C=B-A)	증감률(C/A)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세외수입	36.3	37.6	37.4	1.1	2.9
기금수입	232.8	232.8	246.6	13.7	5.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바탕으로 재작성

(2) 중기 재정수입 전망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보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총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으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 4.6%보다 0.3%p 낮은 수준임.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

1) 총수입은 예산 및 기금의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거래),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및 금융활동으로 분류되는 9개 기금(외국환 평형기금 및 8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함.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는 2025~2029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4.7%, 국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각각 5.3%, 1.0%, 4.2% 증가할 전망임.

[2025~2029년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2]
	본예산	2회추경					
▣ 재정수입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4.3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412.1	434.1	457.1	4.6
(증가율)	(4.1)	(1.3)	(2.0[2])	(5.6)	(5.4)	(5.3)	-
○ 세외수입	36.3	37.6	37.4	36.7	37.0	39.1	1.9
(증가율)	(28.8)	(33.2)	(2.9[2])	(△1.7)	(0.9)	(5.6)	-
○ 기금수입	232.8	232.8	246.6	256.2	262.6	274.9	4.2
(증가율)	(7.4)	(7.4)	(5.9[2])	(3.9)	(2.5)	(4.7)	-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2025년 본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2025년 반도체, 조선 등 주요업종 실적 개선과 함께 2026년 이후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기반 확충 등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가 중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6% 수준으로 전망됨.

세외수입의 경우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은 1.9% 수준으로 예상됨. 다만 2027년에는 일회성 소요[2]가 종료되면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기금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확대와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확대 및 임금상승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2) 정부는 4.7조원 규모의 ㈜NXC 물납주식 매각대금을 2025년에 3.7조원, 2026년에 1.0조원 나누어 편성함.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보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4.9%로 예상하고, 전체 재정수입 증가율도 4.6%로 전망하였으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수위축 등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국세수입 및 재정수입 증가율이 각각 전 계획 대비 0.3%p씩 감소한 4.6%, 4.3%로 전망하고 있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24~'28 계획	◇ 총 수 입	612.2	651.8	-	677.7	706.4	731.5	-	4.6
	- 국세수입	367.3	382.4	-	400.4	421.4	444.3	-	4.9
	- 세외수입	28.2	36.6	-	34.5	33.7	34.9	-	5.5
	- 기금수입	216.7	232.8	-	242.7	251.2	252.3	-	3.9
'25~'29 계획	◇ 총 수 입	-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4.3
	- 국세수입	-	382.4	372.1	390.2	412.1	434.1	457.1	4.6
	- 세외수입	-	36.3	37.6	37.4	36.7	37.0	39.1	1.9
	- 기금수입	-	232.8	232.8	246.6	256.2	262.6	274.9	4.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9.

나. 국세수입

(1) 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 18.2조원(4.9%) 증가한 390.2조원이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8.6조원, 특별회계 11.6조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실적	2025년 2회 추경(A)	2026년 예산안(B)	전년 예산대비 (B-A)	비율
○ 총 국 세	3,365,324	3,720,850	3,902,454	181,605	4.9
- 일반회계	3,261,793	3,614,604	3,786,015	171,412	4.7
(소득세)	1,174,180	1,268,192	1,321,175	52,983	4.2
(법인세)	625,113	835,671	865,474	29,803	3.6
(부가세)	822,358	833,292	865,750	32,457	3.9
- 특별회계	103,531	106,246	116,439	10,193	9.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기업실적 개선 추세가 2025년까지 유지되어 법인세도 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내수 및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와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 5조 2,983억원(4.2%)이 증가한 132조 1,175억원이 편성되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 2조 9,803억원(3.6%) 증가한 86조 5,47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3조 2,457억원(3.9%)이 증가한 86조 5,750억원이 편성되었음.

대부분의 세목이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자소득세(△3,003억원), 배당소득세(△334억원), 인지세(△1,103억원), 관세(△1조 1,879억원) 및 주세(△642억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6년도 세목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2024년 실적	2025년 2회 추경예산	2026년 예산안	2025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365,324	3,720,850	3,902,454	181,605	4.9
○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321,175	52,983	4.2
· 종합소득세	195,265	220,582	226,270	5,688	2.6
· 양도소득세	166,852	194,116	205,245	11,129	5.7
· 이자소득세	71,958	63,121	60,118	△3,003	△4.8
· 배당소득세	42,680	46,757	46,423	△334	△0.7
· 근로소득세	610,491	647,310	684,511	37,201	5.7
○ 법 인 세	625,113	835,671	865,474	29,803	3.6
○ 상 속 증 여 세	152,981	154,437	170,163	15,726	10.2
○ 부 가 가 치 세	822,358	833,292	865,750	32,457	3.9
○ 개 별 소 비 세	86,566	87,479	93,786	6,307	7.2
○ 증 권 거 래 세	47,602	38,454	53,753	15,299	39.8
○ 인 지 세	8,460	8,836	7,734	△1,103	△12.5
○ 과 년 도 수 입	65,334	65,156	61,178	△3,979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40,012	164,122	24,110	17.2
○ 관 세	69,723	84,093	72,214	△11,879	△14.1
○ 교 육 세	53,738	57,765	64,433	6,668	11.5
○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6,233	5,018	12.2
○ 주 세	33,282	32,093	31,451	△642	△2.0
○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84,988	10,835	14.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2)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3]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 5,277억원으로, 2025년 국세감면액 76조 4,719억원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24~2026년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A)	705,171	100.0	764,719	100.0	805,277	100.0
• 조특법상 조세지출	366,782	52.0	402,762	52.7	421,999	52.4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36,173	47.7	359,766	47.0	380,934	47.3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2,215	0.3	2,192	0.3	2,344	0.3
○ 국세수입총액[1] (B)	3,656,829		4,003,076[3]		4,195,673	
○ 국세감면율 [A/(A+B)]	16.1		16.0		16.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6		15.5		16.5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5년 세법개정안 현황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②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① 경제강국 도약 지원, ②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있음.

[2025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추진전략	세부내용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조세탈루 방지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위한 개정대상 법률은 총 13개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내국세 관련 12개 법률[4]과 「관세법」임.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5]를 8조 1,67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026~2030년 기간 중 2,29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법인세는 4조 5,81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는 각각 1,862억원, 66억원, 2조 3,345억원 증가할 전망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81,672**	**26,134**	**56,271**	**△687**	**△22**	**△24**
소득세	△2,296	546	△2,192	△604	△22	△24
법인세	45,815	2,227	43,588	-	-	-
부가가치세	1,862	1,251	611	-	-	-
상속·증여세	66	33	33	-	-	-
증권거래세	23,345	21,400	1,945	-	-	-
기타	12,880	677	12,286	Δ83	-	-

주) 전년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

한편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은 1,024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684억원이 증가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1조 5,936억원, 4조 1,676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 타[2]	합 계
△1,024	684	15,936	41,676	24,400	81,672

주 1)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

4) 내국세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5) (증가요인) 법인세 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
(감소요인) 국가전략기술 확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4) 검토의견

(가) 국세수입 오차 최소화 및 정부 국세수입 추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첫째,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본예산 대비 △12.5조원이 감소한 369.9조원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며, 그 규모를 합치면 지난 3년간 약 △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5년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본예산(382.4조원) 대비 12.5조원(△3.3%) 제2회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0.6%)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6]

정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7]

[2025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전년대비		추경대비	
		예산(B)	2차 추경(C)	전망(D)	(D-A)	비율	(D-C)	비율
○ 총 국 세	336.5	382.4	372.1	369.9	33.4	9.9	△2.2	△0.6
-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8.2	32.1	9.8	△3.2	△0.9
(소득세)	117.4	126.8	126.8	128.4	10.9	9.3	1.5	1.2
(법인세)	62.5	88.3	83.6	83.6	21.1	33.8	0.1	0.1
(부가세)	82.2	87.6	83.3	80.9	△1.3	△1.6	△2.4	△2.9
- 특별회계	10.4	10.6	10.6	11.7	1.3	13.0	1.1	10.1

자료: 기획재정부

6) 기획재정부, 「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보도자료, 2025.9.25.

7) 평균환율(원/달러) : (2025.1~5) 1,439 → (2025.6~8) 1,379 <△4.2%>
휘발유 △10%, 경유·부탄 △15% 탄력세율 인하(~2025.10.31)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결산 오차를 살펴보면, 2021년 61.3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결손, 2022년 52.6조원의 초과세수, 2024년 △30.8조원의 세수결손 순임.

[2015~2024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8	14.3	25.4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의 경우 국세수입은 세수재추계 결과 369.9조원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3.3%)의 결손을 나타낼 전망인데, 이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규모를 합치면 지난 3년간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8]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등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최근 3년간 세수오차 규모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2.5조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오차율도 2023~2025년 각각 △14.1%, △8.4%, △3.3%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10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둘째,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및 수출·수입 증가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2025년은 경상성장률 3.2%, 실질성장률 0.9%, 민간소비증가율 1.3% 및 환율 1,428(원/$) 등을 전제로 하였고,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1.7%, 민간소비증가율 1.6% 및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9)]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구 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경상성장률(%)	3.2	3.8
실질성장률(%)	0.9	1.7
GDP 디플레이터	2.3	2.1
민간소비증가율(%)	1.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취업자증감(만명)	19.7	17.3
명목임금 상승률(%)	3.2	2.5
수출 증가율(%)	0.2	△0.5
수입 증가율(%)	△0.6	0.5
환율(원/$)	1,428	1,380

주) 정부 전망(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월) 및 KDI 경제전망(2025.8월) 반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9)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0.9%·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6% 등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전제하는 0.9%, 1.7%에 비해 한국은행은 2026년도 전망치를 0.1%p 낮게 전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2026년 모두 0.1%p 낮게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1.9%, OECD는 1.0%·2.2%, IMF는 0.9%·1.8%로 전망하고 있어, 2025년은 정부 전제보다 같거나 0.1%p 높게 전망하고, 2026년은 정부 전제보다 0.1%p~0.5%p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구 분	정부 (2025.8)	NABO (2025.9)	한국은행 (2025.8)	KDI (2025.8)	OECD (2025.9)	IMF (2025.10)	ADB (2025.9)
2025	0.9%	1.0%	0.9%	0.8%	1.0%	0.9%	0.8%
2026	1.7%	1.9%	1.6%	1.6%	2.2%	1.8%	1.6%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가 국세수입 추계 시 전제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경상·실질 모두 0.1%p 낮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정부가 각 연도 6~7월 중 발표하는 정부 전망치를 국세수입 추계에 사용하여 온 것과는 차이가 있음.

[정부의 각 시점별 2026년 성장률 전망치]

구 분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6년도 예산안, 2025.9.)	3.8	1.7
2026년 경제전망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3.9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경제전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026년 세입예산 편성시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정부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기관의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22.)에서 제시한 경제전망 수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서 계획 수립의 전제로 사용되고 있어,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 및 조세지출의 역진성 완화 노력 필요

첫째, 국세감면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6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므로,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지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높을수록 법정한도가 높아지는 현행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0]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세수입총액[11]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국세감면 규모는 80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세수입 총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이 더욱 큰 비율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6.1%를 기록할 전망임.

---

10)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국세수입 총액: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023년 및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각각 1.5%p씩 초과한 15.8%, 16.1%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은 법정한도를 0.5%p 초과한 1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등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2023~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A)	2026년 전망(B)	증감 (B-A)
○ 국세감면액	697,664	705,171	764,719	805,277	40,558
○ 국세수입 총액[1] (B)	3,703,803	3,656,829	4,003,076[3]	4,195,673	192,597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6.1	0.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3	14.6	15.5	16.5	1.0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6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6.5%보다 0.4%p 낮은 16.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26년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4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세감면율도 전년 대비 0.1%p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이유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전년 대비 큰 폭(1.0%p)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당해연도 법정한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높을수록 법정한도 또한 연동되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임.

또한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법정한도는 그보다 0.5%p 높게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도 점차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8년 13.0%였던 국세감면율은 2026년 16.1%까지 증가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도 2018년 14.0%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8년 이후 연도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단위: %)

구 분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전망	2026 전망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1	16.0	16.1
법정한도	14.0	13.3	13.6	14.3	14.6	14.3	14.6	15.5	1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국가에서 수용 가능한 국세수입 총액 대비 국세감면 한도라는 점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세수입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어려운 국세수입 여건 속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현황을 보면, 2026년에도 고소득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귀착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조세지출 정책이 역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내외 경제상황·재정여건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2026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12조 5,08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는 18조 369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1.7%에서 2026년 35.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2)]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13)]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조 3,476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는 4조 7,073억원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14)]

12)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13)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4조원(GDP의 0.5%) 이상인 기업

14)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2022~2026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1]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269,883	68.3	291,472	67.7	310,396	67.5	318,590	65.2	333,560	64.9
	고소득자	125,080	31.7	139,076	32.3	149,625	32.5	170,003	34.8	180,369	35.1
	계 (총계 대비)	394,963	100.0 (62.2)	430,547	100.0 (61.7)	460,022	100.0 (65.2)	488,593	100.0 (63.9)	513,929	100.0 (63.8)
기업	중소기업	160,895	68.1	180,546	68.8	180,614	75.1	194,015	71.9	202,456	71.1
	중견기업	9,378	4.0	10,194	3.9	9,852	4.1	10,698	4.0	11,315	4.0
	상호출자 제한기업	38,878	16.5	43,804	16.7	23,476	9.8	42,387	15.7	47,073	16.5
	기타기업	27,159	11.5	27,872	10.6	26,649	11.1	22,650	8.4	23,870	8.4
	계 (총계 대비)	236,311	100.0 (37.2)	262,417	100.0 (37.6)	240,591	100.0 (34.1)	269,751	100.0 (35.3)	284,713	35.4
구분곤란[2]			4,210		4,700		4,558		6,375		6,634
총 계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주 1) 2022~2024년은 실적치, 2025년 및 2026년은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임
2)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작성하고 있는 취지는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외 경제상황·재정여건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및 면제요건 구체화 필요

첫째, 정부는 2021~2025년 매년 1~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고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어 불합리한 조세특례의 도입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은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

그러나 정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총 8건의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중 1건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4년의 경우 8건 중 2건만 실시하였으며, 2025년은 8월까지 4건 중 1건만 실시하고 있는 등 2021~2025년 기간 중 연간 1~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A)	4	8	7	8	4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1	1	2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B)	3	7	6	6	3
면제비율(B/A)	75.0	87.5	85.7	75.0	75.0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2021~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결과를 보면, 총 6건 중 3건은 ‘타당성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1건은 ‘신중 검토’로 평가되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실시는 조세특례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법률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과제별 평가결과]

연도	과제명	수행기관	평가결과
2021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입 타당
2022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낮음
2023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낮음
2024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중 검토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1안: 기본공제액 확대, 2안: 추가공제 신설, 3안: 경단 요건 완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안 정책성측면 타당성 인정 (1·2안 부적절)
2025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타당성 낮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제1호는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①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1호),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제2호), ③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3호) 등임.

이 중 제1호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건은 모두 제1호 사유로 면제되었음.

[202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조세특례 항목	내용	면제 사유
1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자녀당 25만원씩(최대 50만원) 상향	저출산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녀 양육부담 완화 필요 (조특법 §142⑤1)
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15%~45%)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급격한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 (조특법 §142⑤1)
3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저출산 극복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근로자의 부담완화 필요 (조특법 §142⑤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다. 국세외수입

(1) 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세외수입[16]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조 8,075억원(5.5%) 증가한 283조 9,400억원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34억원(△0.6%) 감소한 18조 6,0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조 1,637억원(6.6%) 증가한 18조 7,709억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3조 7,471억원(5.9%) 증가한 246조 5,608억원임.

[2025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 (B-A)	비율
□ 국세외수입	2,578,034	2,691,325	2,839,400	148,075	5.5
○ 예 산	296,220	363,189	373,792	10,603	2.9
- 일반회계	121,247	187,117	186,083	△1,034	△0.6
- 특별회계	174,973	176,072	187,709	11,637	6.6
○ 기 금	2,281,814	2,328,137	2,465,608	137,471	5.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예산수입(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항목별 편성근거를 보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을 반영한 잉여금 증가 등으로 재산수입이 전년 대비 2조 7,728억원 증가하였고, 국가철도공단에 유보된 출연금 반납 등을 반영하여 경상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1조 4,290억원 증가하였으며, 국세 물납주식 매각 계획 감소 등을 반영하여 관유물 매각대가 전년 대비 3조 4,347억원 감소하였음.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년 대비 10조 5,933억원 증가하였고, 주택도시기금은 융자지원 상환 예상금액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36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652억원 증가하였음.

1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입을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구분하고 있고, 「예산안」에서는 예산수입(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하여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예산안」의 기준에 따라 서술함.

[2026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내역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2025년 대비 증감
◇ 국세외수입 합계	2,449,007	2,691,325	2,839,400	148,075
□ 예산수입	281,959	363,189	373,792	10,603
ㅇ 일반회계	111,947	187,117	186,083	△1,034
■ 재산수입	28,827	55,542	82,202	26,660
■ 경상이전수입	69,133	80,624	78,728	△1,89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418	10,543	10,948	405
■ 수입대체경비수입	2,270	2,131	2,373	242
■ 관유물매각대	1,295	38,188	11,379	△26,80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	4	3	△1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85	450	365
ㅇ 특별회계	170,012	176,072	187,709	11,637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0,736	80,772	82,474	1,702
■ 재산수입	8,506	7,712	8,780	1,068
■ 경상이전수입	46,039	46,337	62,523	16,18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055	17,918	17,364	△554
■ 수입대체경비수입	112	94	239	144
■ 관유물매각대	7,974	14,820	7,283	△7,537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590	8,419	9,048	628
□ 기금수입	2,167,048	2,328,137	2,465,608	137,471
ㅇ 사회보장성	1,237,930	1,356,288	1,462,079	105,791
■ 국민연금기금	878,979	957,922	1,063,855	105,933
■ 고용보험기금	184,245	213,068	218,403	5,335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7,381	111,858	115,062	3,20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7,325	73,440	64,758	△8,682
ㅇ 사회보장성 外	929,118	971,849	1,003,529	31,681
■ 주택도시기금	235,078	259,014	248,652	△10,362
■ 공무원연금기금	219,841	231,365	239,017	7,652
■ 복권기금	73,630	77,645	83,313	5,667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49,790	54,867	54,529	△339
■ 공적자금상환기금	42,810	38,198	48,000	9,802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2,763	37,347	40,594	3,247
■ 전력산업기반기금	35,301	30,625	31,164	53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2) 검토의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4.0%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세수입과 함께 국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① 최근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안을 과소편성한 사례, ②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한 사례, ③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한 사례, ④ 최근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되었는바, 향후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세외수입에 대한 부처별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세외수입 관련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계획안)	주요 지적사항
기재부	일반회계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1,063,783	㈜NXC 주식 매각 대금의 증액 조정 검토 필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1,450,094	2025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한 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일반회계	한국은행 잉여금	6,419,092	10월까지의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기후대응기금	기타재산이자외 수입	765,123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문체부	일반회계	입장료수입	8,253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유료화 방안 검토 필요
법무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47,919	교육 참여자 증가 추이를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91,146	법정 전입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에 대한 정산방안 마련 필요
대법원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민간 출연금	284,740	법원보관금 출연금의 면밀한 산정 필요
금융위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99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추가증액 조정 검토 필요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계획안)	주요 지적사항
개보위	일반회계	과징금	49,9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중기부	중진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30,685	경륜·경정수익금의 출연금에 상응하는 사업 수행 필요
식약처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3,148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계상 필요
질병청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0,180	편성 기준 변경을 통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기타재산이자수입	659	
인혁처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1,586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금의 반환액을 세입예산에 적정 반영할 필요
기후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3,660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면허 및 수수료	1,436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기상청	일반회계	기타잡수입	5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과기부	일반회계	과태료	1,644	법률 제·개정을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11,612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350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성평등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9,665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 필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729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2,057	
농식품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375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집행 수탁자금 약 2조원을 일반 보통예금에만 단순 예치함으로써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기대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금을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반영하도록 개선 필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7,325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694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115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	입장료수입	128,826	수입증대 방안 검토 필요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	기타잡수입	381,753	관리위탁 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필요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계획안)	주요 지적사항
병무청	일반회계	건물대여료	118	사용요율 상향 조정 검토 필요 등
방사청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8,678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액 증액 조정 검토 필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415,450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액 증액 조정 검토 필요 등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5.11.

(가)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 조정 검토 필요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4.7조원 규모의 ㈜NXC 물납주식의 매각이 2025년 중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026년에도 적극적으로 매각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3.7조원의 매각대금을 다시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6,803억 5,700만원(△71.6%)이 감액된 1조 63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17] 주식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3.7조원, 1.0조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2025.9월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BK투자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시장에서의 매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2025년 내에 ㈜NXC 물납주식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5년 중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26년에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2025년 최종적으로 ㈜NXC 물납주식의 매각에 실패하는 경우, 2026년에도 매각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1.0조원만 반영되어 있는 ㈜NXC 주식 매각 수입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NXC(NeXon Corporation), 2022년 넥슨그룹 회장 별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중 4.7조원을 주식으로 물납하였음(2023.5).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과장금’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최근 통신사·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과징금 예산액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과징금 수납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과징금 규모를 산출하였으나,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하여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18] 참고로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최대규모임.

또한 2025년 9월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고객의 개인정보(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소액결제 피해 및 서버 침해 정황 등을 발표하였고,[19] 2025년 10월 경찰 수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등이 진행 중으로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025년 9월 18일 롯데카드는 297만명의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연계정보(CI)·주민등록번호·CVC·가상결제코드·내부식별번호·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 정보 유출용량은 200기가바이트로 SK텔레콤(9.82기가바이트)의 20배가 넘는 수준임.

---

18)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4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SK 텔레콤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19) KT는 18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KT는 지난 11일 1차 브리핑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 2267만 건을 전수 조사했다.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결합해 특정 시간대에 결제가 몰리거나, 오류 응답 로그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 유형을 집중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기지국 ID가 검출됐으며, 기존 2개 외에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로그 상 확인된 ID일 뿐 실제 하드웨어 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당초 1만9000여명에서 2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도 추가 확인됐다. 기존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2억 4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상품권 결제가 중심이던 피해 유형에 교통카드 등 다른 결제 피해 사례가 추가됐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도 넓어졌다. 당초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만 털린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KT는 유출 대상과 범위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불법 펨토셀 접속자 1만 9000명 중 5561명의 IMSI가 유출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2만 명 전체가 IMSI·IMEI·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뉴시스, “KT 소액경제 해킹 폰번호·IMEI도 털렸다... ARS결제는 여전히 미스테리”, 2025.9.18.)

2025년 10월 23일 LG유플러스는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참고로 해외 보안 전문 매체에서 해커 집단이 LG 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정보, 42,256개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7월 이와 같은 유출 의혹을 LG 유플러스에 전달하였으나, LG 유플러스는 자체점검을 벌인 후 8월 사어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바 있었음.[20)]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통신사 및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밝혀진 상황에서, 앞으로 통신사·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액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은행 잉여금'은 2025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나타낸 2024년의 월별 당기순이익을 이미 4월부터 추월하였고, 9월말 기준으로는 2024년 당기순이익을 7,795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월별 한은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나타낸 2024년의 당기순이익을 이미 4월부터 추월하였고, 9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8조 5,984억원으로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을 7,795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2020~2025년 월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누적)]

(단위: 억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1)]	△844	10,372	22,165	23,390	35,228	46,679	57,166	66,940	75,921	85,602	95,559	73,659
2021[2)]	5,594	15,729	22,098	27,762	32,153	39,945	48,901	54,800	61,988	65,657	72,618	78,638
2022	2,682	1,019	5,524	10,856	12,139	15,126	16,502	18,714	13,124	7,379	4,480	25,452
2023	236	3,363	3,262	5,406	7,895	8,808	11,468	13,792	13,293	12,102	12,928	13,622
2024	3,714	9,555	14,138	20,128	26,066	36,244	36,375	42,494	46,950	58,373	64,189	78,189
2025	4,182	6,069	13,874	20,986	28,418	45,851	57,119	66,573	85,984	-	-	-

주 1) 2020년 1~11월까지 공고내역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세전 당기순이익이며, 12월은 발생주의에 기초한 세후 당기순이익
2) 2021년 공고내역부터는 매월 발생주의에 기초한 세후 당기순이익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각 연도 월별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연합뉴스, "LG 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신고... 통신 3사 모두 뚫렸다", 2025.10.23.

이러한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2025년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올해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한은 잉여금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세입(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첫째,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소관 '입장료수입'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나 정회원 계급별 요금 차등화 등을 통한 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은 군인복지기금의 수입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입장료수입은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의 주요 수입원이므로, 장병 격려 사업, 체력단련기구 보급 관련 사업, 장학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국방부는 2026년도에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전동승용카트 도입, 안전펜스 설치 등을 위해 75억 2,300만원을 군인복지지금 복지계정에서 투자할 계획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지원사업 목록(2026년도 계획안 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내역	2025년	2026년	2027년	총사업비
계룡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90	1,396	-	1,486
무열대 체력단련장 전동승용카트 도입	50	2,389	-	2,439
청주·충주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158	2,202	-	2,360
육군 체력단련장 전산시스템 개선	95	442	3,675	4,212
충무대 체력단련장 안전망 교체	-	594	-	594
국방대 체력단련장 안전펜스 설치 공사	-	500	-	500
합 계	393	7,523	3,675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경우 제한된 일부 인원의 복지에 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더 많은 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1)]

또한, 국방부는 2024년 5월 요금인상 이후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이용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이용요금을 조정(인상)하는 방안[22)]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병에게 모두 동일한 이용요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급별 요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입장료수입'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적정인원 수용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 및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상설전시 유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8월말까지의 관람객이 445만 2,960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현재 추세라면 연내 500만명을 넘어 600만명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관객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및 관람환경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23)]

---

21)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을 2024. 5월 부로 30% 대폭 인상(정회원 기준)하였으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인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2026년 수입증대를 위해 이용요금 인상 대신 할인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이용요금 인상은 2026년에 재검토).
 * 할인혜택(20%) 대상 축소: 정회원 동반자 할인대상 중 가족 외에 일반인은 제외
 * 연간 수입증대 효과(4.7%): 60억원(24만명 × 25,000원)

22) 국방부는 최근 결산수치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수입계획액을 산정하고 있음.

23) [광화문]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가 정답인가(머니투데이, '25.7.29.),
"주차 대기만 1시간" …북적이는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유료화를 보는 엇갈린 시선(데일리안, '25.8.10.),
'케데헌' 열풍에 오픈런 부른 국립중앙박물관의 과제(동아일보, '25.9.2.),
"입장료 올릴까 말까" 이분법에 갇힌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논쟁(더스쿠프, '25.9.16.)

국립중앙박물관은 2009년 12월부터 서민 가계부담 경감과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설전시는 무료로 운영중이고, 특별전시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화로 인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 제고 필요성, 유료화를 통한 사립박물관·미술관과의 상생, 가격 지불에 따른 관람태도 개선 등의 이유로 상설전시를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애니메이션(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과 박물관 문화상품(뮷즈)의 인기에 따른 관람객 급증으로, 편의시설 부족·대기시간 장기화·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적정인원 수용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유료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최근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특별전시 입장료 수입이 평균 19억 6,700만원에 그쳤음에 비해[24] 2026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을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71억원으로 차이가 매우 큰 점, 그리고 주요국 국립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수납실적이 저조한 국세외수입의 수납실적 제고 필요

2024년 결산 기준 국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100억원 이상) 대비 수납률이 50.0% 미만인 사업은 총 48개이며, 수납률은 8.8%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자의 미반납금을 조속히 반납받는 한편, 개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 징수결정한 예산 및 기금수입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0.0% 미만인 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 정부는 46조 1,319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4조 421억 1,800만원이 수납되어 8.8%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24) 2022년 20억 8,000만원, 2023년 29억 5,700만원, 2024년 8억 6,300만원

[2024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0% 이하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	세목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경찰청	일반회계	가산금	36,110	270,936	36,309	13.4
고용부	일반회계	과태료	47,482	120,521	46,677	38.7
		과징금	2,275	50,549	2,385	4.7
	고용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27,511	452,199	183,710	40.6
	근로복지진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0,923	140,098	8,683	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가산금	7,288	19,102	7,676	40.2
		기타경상이전수입	116,258	430,077	105,585	24.6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98,797	4,087,706	162,587	4.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4,467	82,760	27,188	32.9
공정위	일반회계	과징금	445,557	735,182	169,627	23.1
		가산금	473	10,184	274	2.7
과기부	우편사업특별회계	변상금	275	16,779	247	1.5
관세청	일반회계	과태료	8,892	87,678	12,156	13.9
		가산금	1,319	633,708	△2,763	△0.4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243	15,068	1,176	7.8
국방부	일반회계	변상금	3,244	13,033	1,793	13.8
		징계부과금	16	13,270	88	0.7
국세청	일반회계	가산금	243,567	4,323,685	241,413	5.6
		과태료	34,692	153,960	33,034	21.5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과태료	23,003	84,149	20,368	24.2
		가산금	921	34,754	837	2.4
	일반회계	위약금	516	15,750	326	2.1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0,574	314,045	27,425	8.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277,767	1,418,483	344,644	24.3
		가산금	3,944	62,241	3,849	6.2
금융위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71,802	2,506,216	86,062	3.4
	신용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761,325	13,247,072	899,261	6.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32,498	100,803	37,343	37.0
		기타경상이전수입	192,993	3,375,018	201,359	6.0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77,239	174,545	-	-
	국유재산관리기금	건물대여료	7,603	14,684	7,062	48.1
		변상금	57,565	326,989	35,445	10.8
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	재고자산매각대	23,499	58,536	21,439	36.6
		기타민간이자수입	46,208	150,282	42,722	28.4
		법정부담금	1,057,730	1,796,444	745,271	41.5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기타잡수입	7	19,014	2,720	14.3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	세목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방통위	일반회계	벌금및과료	6	13,311	39	0.3
		가산금	141	30,606	197	0.6
		과태료	4,022	40,328	3,321	8.2
방사청	일반회계	위약금	164,655	412,314	△28,789	△7.0
복지부	일반회계	기타민간이자수입	-	10,905	40	0.4
		과징금	26,129	56,765	10,106	1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	21,290	10,367	48.7
산림청	일반회계	변상금	2,284	16,112	2,124	13.2
산업부	무역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02,534	3,115,974	274,830	8.8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71,456	7,010,807	249,382	3.6
질병청	일반회계	기타잡수입	612	10,763	417	3.9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2,560	37,247	6,106	16.4
합계			4,870,982	46,131,942	4,042,118	8.8

주 1) 징수결정액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0.0% 미만 사업
2) 수납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환급액이 발생한 것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세목은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가산금,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미반납액을 조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등에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건전성

가. 개 요

(1) 총수입·총지출[1)]

2026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6조원(3.5%) 증가한 674.2조원으로,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8조원(2.0%) 증가한 390.2조원이며, 국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8조원(5.5%) 증가한 283.9조원임.

2026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7조원(8.1%) 증가한 728.0조원으로,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34.1조원(7.6%) 증가한 481.5조원이며, 기금 지출은 전년 대비 20.6조원(9.1%) 증가한 246.5조원임.

[2026년도 총수입·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2회 추경			증감률
◇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 국세외수입	269.1	270.3	283.9	14.8	5.5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 예산	447.4	467.3	481.5	34.1	7.6
· 기금	225.9	235.9	246.5	20.6	9.1

자료: 대한민국정부,「2026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2025.9.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보면, 총수입은 2025년 651.6조원에서 2029년 771.1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며, 총지출은 673.3조원에서 834.7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1.2%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중기 총수입·총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2]
	본예산	2회추경					
◇ 총수입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4.3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본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2)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됨.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온 4대 사회보장성기금[2]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32.1조원이 악화된 △53.8조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1.1%p 감소한 △2.0%를 기록할 전망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5.1조원 악화된 △109.0조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한 △4.0%로 전망됨.

2026년도 재정수지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0조원(GDP 대비 0.3%p)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6조원(GDP 대비 0.2%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3]

[2026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제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1.7 (△0.8)	△60.8 (△2.3)	△53.8 (△2.0)	△32.1 (△1.1)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73.9 (△2.8)	△111.6 (△4.2)	△109.0 (△4.0)	△35.1 (△1.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2025.9.

2)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3)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세입경정(△10.3)과 총지출 확대(본예산 대비 30.0조원)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3%,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5년 본예산 기준 △0.8%에서 2029년 △2.1%로 악화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8%에서 2029년 △4.1%로 악화될 전망임.

한편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25년 △2.3%에서 2029년 △2.1%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2%에서 2029년 △4.1%로 2025~2029년 계획기간 중 △4%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예산	2회추경				
▣ 총수입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 통합재정수지	△21.7	△60.8	△53.8	△59.4	△68.9	△63.6
(GDP대비)	(△0.8)	(△2.3)	(△2.0)	(△2.1)	(△2.3)	(△2.1)
▣ 관리재정수지	△73.9	△111.6	△109.0	△115.4	△128.9	△124.9
(GDP대비)	(△2.8)	(△4.2)	(△4.0)	(△4.1)	(△4.4)	(△4.1)
▣ 경상GDP[2]	2,646.5	2,654.0	2,741.6	2,848.6	2,962.5	3,084.0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2025년은 국회 확정시 기준, 2026년 이후는 2025.8월 전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3) 의무지출

「국가재정법」 제7조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의함.[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의무지출을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 공적연금, 보훈수당 등), ②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등), ③ 이자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등), ④ 기타 의무지출(공익기능증진직불금 등)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2026년도 총지출 728.0조원 중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2.9조원(6.3%) 증가한 388.0조원이며,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31.8조원(10.3%) 증가한 340.0조원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에서 53.3%로 0.9%p 감소하였고, 재량지출 비중은 45.8%에서 46.7%로 0.9%p 증가하였음.[5)]

[2026년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전년 대비	
	본예산(A)	2회추경		증감(C=B-A)	증감률(C/A)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 의무지출	365.0	364.8	388.0	22.9	6.3
(비 중)	(54.2)	(51.9)	(53.3)	(△0.9)	-
○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1.8	10.3
(비 중)	(45.8)	(48.1)	(46.7)	(0.9)	-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2026년 의무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재량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AI 등 초혁신경제 지원을 위한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2026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전년 대비 14.7조원(8.1%) 증가한 196.5조원으로 전체 의무지출에서 50.6%를 차지할 전망임.

지방이전재원은 전년 대비 2.5조원(1.8%) 증가한 144.9조원이고,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4.2조원(14.3%) 증가한 33.6조원이며, 기타의무지출은 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14.0%) 증가할 전망임.

2026년도 의무지출 유형 중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복지분야 법정지출로 전년 대비 14.7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다음으로는 이자지출 4.2조원, 지방이전재원 2.5조원, 기타의무지출 1.6조원 순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의무지출 유형은 이자지출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할 전망이며, 다음으로는 기타의무지출 14.0%, 복지분야 법정지출 8.1%, 지방이전재원 1.8% 순임.

[2026년도 의무지출 유형별 내역]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전년 대비	
	본예산(A)	2회추경		증감 (C=B-A)	증감률 (C/A)
□ 의무지출 합계	365.0	364.8	388.0	22.9	6.3
○ 복지분야 법정지출	181.8	183.1	196.5	14.7	8.1
(비중)	(49.8)	(50.2)	(50.6)	(0.8)	-
○ 지방이전재원	142.4	140.4	144.9	2.5	1.8
(비중)	(39.0)	(38.5)	(37.3)	(△1.7)	-
○ 이자지출	29.4	29.8	33.6	4.2	14.3
(비중)	(8.1)	(8.2)	(8.7)	(0.6)	-
○ 기타의무지출	11.4	11.5	13.0	1.6	14.0
(비중)	(3.1)	(3.2)	(3.4)	(0.3)	-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총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하고, 의무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2%에서 2026년 53.3%로 하락한 이후 2029년 55.8%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임.

재량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5년 45.8%에서 2026년 46.7%로 증가한 후 2029년 44.2%까지 감소할 전망임.

[중기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 의무지출	365.0	364.8	388.0	415.1	441.3	465.7	6.3
(비중)	(54.2)	(51.9)	(53.3)	(54.3)	(55.0)	(55.8)	-
○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49.3	361.3	369.0	4.6
(비중)	(45.8)	(48.1)	(46.7)	(45.7)	(45.0)	(44.2)	-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4) 국가채무[6]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④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함.[7]

다만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정부는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산출함.

[부채의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규모('23년)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26.8조원 (46.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217.3조원 (50.5%)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673.3조원 (69.5%)	D2 + 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7)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인 1,415.2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1.8조원(GDP 대비 3.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37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고채가 1,27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9.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6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B-A)
		본예산(A)	전망		
□ 국가채무(A+B)	1,175.0	1,273.3	1,303.6	1,415.2	141.8
(GDP대비)	(46.0)	(48.1)	(49.1)	(51.6)	(3.5)
○ 중앙정부 채무(A)	1,141.2	1,238.7	1,267.2	1,378.5	139.8
■ 국 채	1,139.8	1,237.0	1,265.5	1,377.1	140.0
- 국고채	1,047.9	1,127.9	1,161.2	1,276.9	149.1
- 국민주택채	79.1	77.6	74.5	69.8	△7.8
- 외평채	12.8	31.5	29.9	30.4	△1.2
■ 차입금	1.2	1.5	1.6	1.3	△0.2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0
○ 지방정부 순채무(B)주)	33.9	34.7	36.4	36.7	2.0

주)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아니나 정부 전체의 채무규모 파악을 위해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관리함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는 전년 대비 150.0조원 증가한 1,029.5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1%에서 72.7%로 3.7%p 증가할 전망임. 특히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채무가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하는 반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전년 대비 157.0조원 증가하여 전체 적자성 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임.

금융성 채무는 전년 대비 8.2조원 감소한 385.7조원으로 전망되며,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30.9%에서 2026년 27.3%로 3.7%p 감소할 전망임.[8)]

8)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임.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함.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B-A)
		예산(A)	전망		
□ 국가채무	1,175.0	1,273.3	1,303.6	1,415.2	141.8
○ 적자성 채무	815.2	879.5	926.5	1,029.5	150.0
(비중)	(69.4)	(69.1)	(71.1)	(72.7)	(3.7)
■ 일반회계 적자보전	756.7	824.6	871.7	981.6	157.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58.5	54.8	54.8	47.9	△6.9
○ 금융성 채무	359.8	393.9	377.1	385.7	△8.2
(비중)	(30.6)	(30.9)	(28.9)	(27.3)	(△3.7)
■ 외환시장 안정용	210.3	238.2	232.5	238.2	0.1
■ 서민주거 안정용 등	149.5	155.7	144.6	147.4	△8.3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301.9조원으로 GDP 대비 49.1%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를 기록한 후 2029년 58.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기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예산	2회추경				
▣ 국가채무	1,273.3	1,301.9	1,415.2	1,532.5	1,664.3	1,788.9
(GDP 대비)	(48.1)	(49.1)	(51.6)	(53.8)	(56.2)	(58.0)
▣ 경상GDP[2]	2,646.5	2,654.0	2,741.6	2,848.6	2,962.5	3,084.0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2025년은 국회 확정시 기준, 2026년 이후는 2025.8월 전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5)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9)]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 시에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채무	35.1	32.8	33.0	29.2	26.4	24.2	21.1	17.0	14.8	12.5	10.9	10.6	10.5	11.0
(GDP 대비)	(2.6)	(2.4)	(2.3)	(1.9)	(1.7)	(1.5)	(1.2)	(1.0)	(0.8)	(0.6)	(0.5)	(0.5)	(0.5)	(0.4)

자료: 각 연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및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 등으로 2011년 35.1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각 보증채무의 상환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2023년 10.5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24년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신규 발행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한 11.0조원을 기록하였고, 2025년말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6.7조원(60.9%) 증가한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0)]

---

9)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연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여부에 따라 보증채무잔액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2025년도 국가보증채무 발행 및 상환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2024년말 실적(A)	2025년말 전망				전년대비 (B-A)
		한도	발행	상환	잔액(B)	
▣ 보증채무	11.0	12.5	8.7	3.1	16.7	6.7
(GDP 대비, %)	(0.4)	-	-	-	(0.6)	-
- 장학재단채권	10.4	2.5	2.2	1.6	11.0	0.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0.4	10.0	5.0	1.3	4.2	3.8
- 첨단산업전략기금채권	-	-	1.5	-	1.5	1.5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	-	-	0.2	-	△0.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9.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전망을 보면, 2025년 16.7조원에서 2026년에 39.0조원(133.5%)으로 증가한 후 2029년 80.5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11]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은 2025년 0.6%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에는 2.6%를 기록할 전망임.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9.

11) 2025~2029년 기간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4.2조원에서 21.4조원으로 17.2조원 증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1.5조원에서 43.5조원으로 42.0조원 증가하는 것에 주로 기인함.

나. 검토의견

(1)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재정수입의 증가는 제약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세입기반의 확충, 조세지출의 정비 및 의무지출의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12]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실시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부터 2065년까지 40년을 전망기간으로 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개발연구원의 거시경제 전망을 전제로 하여 현행 제도와 정책이 4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주요 재정지표를 추계하였음.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2023.12.)에 근거한 인구 전망을 보면, 인구추계 중위에 따른 총인구는 2025년 5,168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2년에 3,622만명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5년 3,591만명(총인구 대비 69.5%)에서 2072년 1,658만명(45.8%)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51만명(총인구 대비 20.3%)에서 2072년 1,727만명(47.7%)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인구 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총인구	저위	5,150	5,051	4,774	4,333	3,742	3,017
	중위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고위	5,188	5,215	5,244	5,095	4,740	4,282
생산연령인구	저위	3,578	3,376	2,814	2,276	1,813	1,334
	중위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고위	3,604	3,457	2,993	2,623	2,338	2,007
고령인구	저위	1,048	1,280	1,657	1,784	1,723	1,543
	중위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고위	1,055	1,314	1,770	1,992	2,008	1,9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1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계한 장기재정전망의 총수입 · 총지출 전망을 보면, 총수입은 GDP 대비 비율이 2025년 24.2%에서 2035년 26.5%로 증가한 후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65년 24.1%로 감소할 전망이며, 총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2025년 26.5%에서 2065년 34.7%까지 증가할 전망임.

[2025~2065년 총수입·총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2025	2035	2045	2055	2065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기준)
◇ 총수입	**24.2**	**26.5**	**26.4**	**25.7**	**24.1**	**2.7**
■ 국세수입	14.0	14.7	14.6	14.5	14.4	2.8
■ 사회보장기여금	4.4	5.5	5.6	5.6	5.7	3.4
■ 기타수입	5.8	6.3	6.2	5.5	4.0	1.8
◇ 총지출	**26.5**	**28.0**	**30.6**	**32.7**	**34.7**	**3.4**
■ 의무지출	13.7	16.5	19.1	21.2	23.3	4.1
■ 재량지출	12.8	11.5	11.5	11.5	11.5	2.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9.

다음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의 하락으로 총수입의 증가는 제약되는 반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로 총지출은 대폭 증가하게 되어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4.2% 적자에서 2065년 △5.9% 적자로 악화되고, 통합재정수지는 △2.3% 적자에서 △10.6%까지 악화될 전망임.

이러한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가채무로 누적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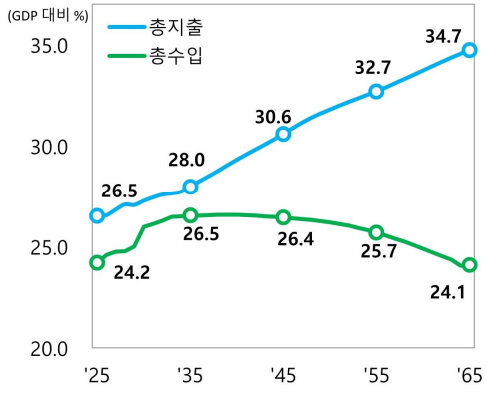
[2025~2065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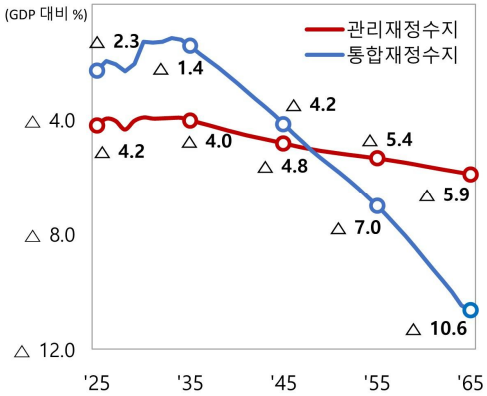
	2025	2035	2045	2055	2065
◇ 관리재정수지	△4.2	△4.0	△4.8	△5.4	△5.9
◇ 통합재정수지	△2.3	△1.4	△4.2	△7.0	△10.6
◇ 국가채무비율	49.1	71.5	97.4	126.3	156.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9.

[총지출 및 총수입 추이]



[재정수지 추이]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9.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 1.9%에서 2028년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IMF는 2025년 2.0%, 2030년 1.9%로, OECD는 2025년 1.9%, 2026년 1.9%로 전망하여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13)]

살펴본 바와 같이 총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로 국세외수입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사회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의 개편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경제」, 2025.7.

(2)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첫째,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분야 법정지출,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낮은 4.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새로운 의무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의무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로 전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2%에서 2026년 53.3%로 하락한 이후 2029년 55.8%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재량지출 비중은 2025년 45.8%에서 2026년 46.7%로 증가한 후 2029년 44.2%까지 감소할 전망임.

2026년 의무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고, 재량지출 비중이 0.9%p 증가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AI 등 초혁신경제 지원을 위한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중기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총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ㅇ 의무지출	365.0	364.8	388.0	415.1	441.3	465.7	6.3
(비중)	(54.2)	(51.9)	(53.3)	(54.3)	(55.0)	(55.8)	-
ㅇ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49.3	361.3	369.0	4.6
(비중)	(45.8)	(48.1)	(46.7)	(45.7)	(45.0)	(44.2)	-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의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4대 공적연금·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의무지출의 유형별 전망을 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25년 181.8조원에서 2029년 237.0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같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5.5% 및 의무지출 증가율 6.3%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자지출의 경우 2025년 29.4조원이었으나, 2026년 33.6조원으로 증가한 후 2029년 41.6조원까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4가지 의무지출 유형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

	2025년[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의무지출	365.0	364.8	388.0	415.1	441.3	465.7	6.3
■ 복지분야 법정지출	181.8	183.1	196.5	211.2	224.1	237.0	6.8
■ 지방이전재원	142.4	140.4	144.9	154.5	164.5	173.3	5.0
■ 이자지출	29.4	29.8	33.6	36.0	38.8	41.6	9.1
■ 기타 의무지출	11.4	11.5	13.0	13.4	13.9	13.8	5.0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주요 사업별 전망을 보면, 기초연금은 2025년 21.8조원에서 2029년 28.2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계급여는 2025년 8.5조원에서 2029년 10.7조원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2025년 48.4조원에서 2029년 68.3조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할 전망이고, 공무원연금은 2025년 26.9조원에서 2029년 36.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전망임.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아동수당 지급'으로 연평균 11.4% 증가할 전망이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9.0%, 공무원연금 8.2% 순임.[14]

14) 고용·노동부문의 '기타' 제외함.

[복지분야 법정지출 주요 사업별 전망]

(단위: 억원,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법정지출]	1,818,110	1,964,735	2,111,749	2,241,368	2,369,669	6.8
ㅇ기초생보	204,268	224,665	237,003	255,488	262,690	6.5
- 생계급여	84,900	91,727	95,373	104,621	107,421	6.1
- 의료급여	86,882	98,400	105,002	112,010	115,694	7.4
- 주거급여	30,368	32,309	34,363	36,553	37,233	5.2
- 교육・해산장제	2,118	2,229	2,265	2,304	2,342	2.5
ㅇ 건강보험	136,287	137,911	145,133	151,185	155,858	3.4
- 가입자지원(일반)	106,211	107,820	114,278	119,766	123,787	3.9
- 가입자지원(기금)	19,882	19,351	19,470	19,488	19,710	△0.2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	10,194	10,740	11,385	11,931	12,361	4.9
ㅇ 4대 연금	854,414	939,334	1,028,057	1,091,940	1,179,891	8.4
- 국민연금	484,133	545,085	600,273	628,663	683,068	9.0
- 공무원연금	268,616	286,455	313,517	342,027	368,320	8.2
- 사학연금	57,847	60,699	65,265	69,901	74,709	6.6
- 군인연금	43,819	47,095	49,003	51,349	53,793	5.3
ㅇ 노인부문	243,376	259,476	276,764	297,814	309,610	6.2
- 기초연금	218,146	233,627	250,399	270,921	282,229	6.7
- 노인장기요양보험	25,230	25,849	26,366	26,893	27,381	2.1
ㅇ 아동・보육부문	40,941	48,547	50,391	52,860	54,667	7.5
- 아동수당 지급	19,588	24,822	26,633	29,217	30,151	11.4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353	23,726	23,758	23,643	24,516	3.5
ㅇ 고용・노동부문	241,186	252,152	265,951	278,170	290,672	4.8
- 구직급여	109,171	115,376	120,006	124,806	129,797	4.4
-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5	40,728	41,542	42,374	43,221	1.8
- 산재보험급여	80,043	81,463	88,348	94,335	100,360	5.8
- 기타	11,747	14,585	16,054	16,656	17,294	10.2
ㅇ 보훈부문	54,529	56,264	56,399	57,252	58,110	1.6
- 보상금	35,628	37,175	37,547	38,298	39,064	2.3
- 참전명예수당 등 수당	11,177	10,511	10,289	10,270	10,251	△2.1
- 보훈・위탁병원 진료 등	7,724	8,578	8,563	8,685	8,795	3.3
ㅇ 기타	43,109	46,385	52,051	56,658	58,171	7.8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지출 전망을 보면, 총 이자지출은 2025년 29.4조원에서 2029년에는 41.6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9.1%의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특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로 2025년 25.0조원에서 2029년 37.1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자지출 전망]

(단위: 억원,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293,821	336,108	359,887	387,549	415,765	9.1
- 공공자금관리기금	249,644	291,639	317,303	343,425	371,037	10.4
- 주택도시기금	16,887	16,867	14,780	16,318	16,879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673	18,673	18,673	18,673	18,673	-
- 기 타	8,617	8,929	9,131	9,133	9,177	1.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9.

이처럼 복지분야 법정지출,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재량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낮은 4.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새로운 의무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수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는 3,926억 6,200만원이 제2회 추경 재원으로 감액되는 등 매년 상당한 여유 재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14,031	175,473	16,289,504	-	△106,478	92,859	16,275,885	16,275,264	-	621
2023	18,530,432	-	18,530,432	-	△9,786	-	18,520,646	18,190,029	35	330,582
2024	20,201,456	-	20,201,456	35	△202,486	-	19,999,005	19,608,485	80	390,441
2025.8.	21,814,577	△392,662	21,421,915	80	-	-	21,421,995	16,837,462	-	-

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15]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사람 중 소득하위 '70% 수준'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기준인 70%에 맞춰 수급대상자 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률은 2022년 67.4%, 2023년 67.0%, 2024년 6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사업대상자 수 및 실제 수급률 비교]

(단위: 만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대상자 수	예산편성인원	598	628	665	701	736
	실제 지급인원	597	624	651	676	집계중
수급률	예산편성기준	70	70	70	70	70
	실제 수급률	67.6	67.4	67.0	66.0	집계중

주) 2025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903천명(수급률 65.8%)
자료: 보건복지부

15)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있어 법령상 기준에 따른 수급대상 노인 수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수급률이 예산 편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액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실제 수급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이·전용 및 불용액 규모를 줄임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소관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되었으나 국고채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수준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적정 이자상환 규모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2025.9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2023년 평균 조달금리는 3.57%였으나, 2024년은 3.22%로 하락하였고,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9월 기준 2.61%의 평균 조달금리를 보이고 있음.

[2023~2025.9월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23	'24	12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발행잔액	998.0	1,047.1	1,047.1	1,154.3	1,064.9	1,085.7	1,079.7	1,100.1	1,118.6	1,117.7	1,136.5	1,154.3	1,152.6
□ 발행액	165.7	157.7	1.4	166.0	18.3	21.3	20.7	20.9	19.0	23.6	21.2	21.0	21.5
□ 평균 조달금리	**3.57**	**3.22**	**2.59**	**2.61**	**2.71**	**2.69**	**2.65**	**2.56**	**2.47**	**2.64**	**2.60**	**2.55**	**2.61**
□ 평균 응찰률	271	321	288	266	286	305	252	274	257	251	251	259	264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2025.10.

그리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4년 10월 2.844%~3.07% 수준에서 2025년 9월 2.28%~2.849%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024년 10월 2.911%에서 2025년 9월 2.464%까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10년물의 경우 3.07%에서 2.849%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2024/10	2024/11	2024/12	2025/01	2025/02	2025/03	2025/04	2025/05	2025/06	2025/07	2025/08	2025/09
국고채(1년)	2.857	2.861	2.709	2.637	2.654	2.612	2.482	2.306	2.29	2.308	2.263	2.28
국고채(2년)	2.93	2.901	2.694	2.669	2.683	2.67	2.45	2.343	2.435	2.426	2.365	2.42
국고채(3년)	2.911	2.858	2.59	2.571	2.611	2.59	2.395	2.331	2.441	2.465	2.427	2.464
국고채(5년)	2.974	2.909	2.683	2.694	2.71	2.665	2.492	2.469	2.601	2.622	2.584	2.615
국고채(10년)	3.07	3.006	2.771	2.821	2.83	2.795	2.658	2.71	2.842	2.84	2.815	2.849
국고채(20년)	2.962	2.939	2.708	2.745	2.746	2.688	2.6	2.678	2.826	2.835	2.838	2.844
국고채(30년)	2.921	2.865	2.635	2.696	2.669	2.581	2.507	2.584	2.737	2.738	2.74	2.754
국고채(50년)	2.844	2.785	2.537	2.587	2.56	2.451	2.363	2.447	2.637	2.634	2.623	2.635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16] 인하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9월 연 4.25%~4.50%였던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p 인하하였음.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아 보임.[1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계획안은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자상환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2024년 10월 11일: 3.50% → 3.25% (0.25%p 인하)
2024년 11월 28일: 3.25% → 3.00% (0.25%p 인하)
2025년 2월 25일: 3.00% → 2.75% (0.25%p 인하)
2025년 5월 29일: 2.75% → 2.50% (0.25%p 인하)

1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10.23.

(3)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의 증가속도 완화 필요

국가채무 중에서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므로,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 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을 위해 발생한 채무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함.

[2017~2026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예산안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7	1,126.7	1,175.2	1,303.6	1,415.2
(GDP 대비 %)	(34.1)	(33.9)	(35.4)	(41.1)	(43.7)	(45.9)	(46.9)	(46.1)	(49.1)	(51.6)
적자성 채무	374.8	379.2	407.6	512.7	597.5	676.3	726.4	815.4	926.5	1,029.5
(비중)	(56.8)	(55.7)	(56.4)	(60.6)	(61.6)	(63.3)	(64.5)	(69.4)	(71.1)	(72.7)
일반회계 적자보전	289.6	300.4	334.7	437.5	523.1	605.8	660.1	756.7	871.7	981.6
(비중)	(43.9)	(44.1)	(46.3)	(51.7)	(53.9)	(56.7)	(58.6)	(64.4)	(66.9)	(69.4)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85.1	78.8	72.9	75.2	74.4	70.5	66.3	58.7	54.8	47.9
(비중)	(12.9)	(11.6)	(10.1)	(8.9)	(7.7)	(6.6)	(5.9)	(5.0)	(4.2)	(3.4)
금융성 채무	285.4	301.3	315.6	333.9	373.2	391.3	400.3	359.8	377.1	385.7
(비중)	(43.2)	(44.3)	(43.6)	(39.4)	(38.4)	(36.6)	(35.5)	(30.6)	(28.9)	(27.3)
외환시장 안정	222.3	234.9	247.2	256.4	263.8	265.7	251.0	210.3	232.5	238.2
(비중)	(33.7)	(34.5)	(34.2)	(30.3)	(27.2)	(24.9)	(22.3)	(17.9)	(17.8)	(16.8)
서민주거 안정 등	63.1	66.4	68.5	77.5	109.3	125.6	149.4	149.5	144.6	147.4
(비중)	(9.6)	(9.8)	(9.5)	(9.2)	(11.3)	(11.8)	(13.3)	(12.7)	(11.1)	(10.4)

주) 2017~2024년은 결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17~2026년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2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는 1,415.2조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4.1%에서 2026년에는 51.6%로 최초로 50%를 넘어설 예정임.

2017~2026년 국가채무의 성질별 변동 현황을 보면,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17년 43.2%에서 2026년 27.3%로 15.9%p 감소할 전망인 반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6.8%에서 72.7%로 15.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017년 289.6조원에서 2026년 981.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43.9%에서 69.4%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2026년 1,415.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는 2029년 1,788.9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6년 72.7%에서 2029년 76.2%까지 증가할 전망인 반면, 금융성 채무는 27.3%에서 23.8%로 감소할 전망임.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추경	전망				
□ 국가채무	1,175.0	1,301.9	1,303.6	1,415.2	1,532.5	1,664.3	1,788.9
○ 적자성 채무	815.2	924.8	926.5	1,029.5	1,133.0	1,248.1	1,362.5
(비중, %)	(69.4)	(71.0)	(71.1)	(72.7)	(73.9)	(75.0)	(76.2)
○ 금융성 채무	359.8	377.1	377.1	385.7	399.5	416.2	426.4
(비중, %)	(30.6)	(29.0)	(28.9)	(27.3)	(26.1)	(25.0)	(23.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9.

이처럼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왔고 향후에도 다른 국가채무 유형보다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까지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

첫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5%로 일본(249.7%), 이탈리아(134.6%), 미국(118.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세입여건의 악화 및 복지분야 지출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50.5%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39.7%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를 기록하여 4년 동안 11.0%p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주요 국가의 2019~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46.7	57.0	55.4	50.3	49.0
캐나다	90.2	118.2	113.5	107.4	107.5
핀란드	65.2	75.3	73.1	73.9	77.0
프랑스	97.6	114.6	112.6	111.1	109.9
독일	58.6	67.9	67.9	64.8	62.7
이탈리아	133.6	154.1	145.5	138.1	134.6
일본	236.4	258.4	253.7	256.3	249.7
한국	**39.7**	**45.9**	**48.0**	**49.8**	**50.5**
포르투갈	116.6	134.9	124.5	112.4	99.1
스페인	97.6	119.2	115.6	109.4	105.0
스웨덴	35.7	40.3	36.8	33.8	36.4
영국	85.7	105.8	105.1	99.6	100.0
미국	108.0	131.8	124.5	118.6	118.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50.5%)은 일본(249.7%), 이탈리아(134.6%), 미국(118.7%), 프랑스(109.9%),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3년 50.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세수입의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한편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30년 64.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의 2023~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전망치]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스웨덴	31.8	33.0	34.2	35.6	35.8	35.3	34.5	33.5
미국	119.8	122.3	125.1	128.7	132.7	136.6	140.1	143.4
독일	62.4	63.5	64.4	66.0	67.8	69.7	71.6	73.6
이탈리아	134.6	135.3	136.8	138.3	138.5	137.9	137.3	137.0
한국	**50.5**	**49.8**	**53.4**	**56.7**	**58.9**	**60.9**	**62.7**	**64.3**
캐나다	107.7	111.3	113.9	113.0	111.8	110.7	109.7	107.9
프랑스	109.6	113.1	116.5	119.6	122.1	124.6	127.0	129.4
일본	240.5	236.1	229.6	226.8	224.5	222.9	222.2	222.2
영국	100.4	101.2	103.4	104.8	105.4	105.8	105.9	105.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둘째,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23년 GDP 대비 비율이 69.5%까지 높아지므로 국가채무(D1)가 포괄하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외의 공공기관의 부채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가채무(D1)는 1,126.8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6.9%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50.5%임.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3조원(GDP 대비 69.5%)으로, 국가채무(D1) 대비 546.5조원 크고, GDP 대비 비율은 22.6%p 높은 수준임.

[공공부문 부채(D3) 연도별 추이 및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1,132.6	55.5	1,280.0	62.2	1,427.3	64.2	1,588.7	68.4	1,673.3	69.5
■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5
■ 비금융공기업	395.8	19.4	408.1	19.8	439.7	19.8	517.4	22.3	545.4	22.7
■ 내부거래	△73.9	△3.6	△73.3	△3.6	△78.6	△3.5	△85.9	△3.7	△89.5	△3.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2019년 395.8조원에서 2023년 545.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율도 19.4%에서 22.7%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므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위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18]

18)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공공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굵은 글씨는 자본잠식기관)
공기업 (21개)	손실보전규정有 (4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손실보전규정無 (1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14개)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규정無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4.9.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 국가보증채무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국가의 재정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기금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서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2025년 16.7조원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가보증채무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 채무로서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됨. 이에 「국가재정법」[19]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재정 관련 자료의 하나로서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1년 35.1조원에서 2023년 10.5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 이후 11.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로 16.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채무	35.1	32.8	33.0	29.2	26.4	24.2	21.1	17.0	14.8	12.5	10.9	10.6	10.5	11.0	16.7
(GDP 대비)	(2.6)	(2.4)	(2.3)	(1.9)	(1.7)	(1.5)	(1.2)	(1.0)	(0.8)	(0.6)	(0.5)	(0.5)	(0.5)	(0.4)	(0.6)

자료: 각 연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9)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25년 16.7조원 규모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25~2029년 기간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4.2조원에서 21.4조원으로 17.2조원 증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1.5조원에서 43.5조원으로 42.0조원 증가하는 것에 주로 기인함.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9.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024.6.27.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이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2025.12.10. 시행)으로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비교]

구분	공급망안정화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법적근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한국산업은행법」
목적	공급망 위험 피해 최소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재원	공급망기금채권 발행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 등
관리・운용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지원분야 (대상)	-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안정화 관련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 공급망안정화 관련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두 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은 동일함. 이 채권들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대한민국헌법」제58조 및「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20]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각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안정화 및 첨단전략산업 지원 사업에 낮은 이율로 대출하는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함.

다만 이 채권들은 국가보증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과는 달리 국가재정 외의 기금이므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지 않으며, 민간의 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뿐 국가의 재정지출과 효과가 다르지 않음에도 국가가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채무로 집계되지 않음.

그러나 국가보증채권은 언제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25년 16.7조원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각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지출구조조정

가. 개 요

(1) 현 황

지출 구조조정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배분하는 재정활동임.

정부는 ‘2025 ~ 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1]으로 복지 지출의 증가 등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혁신의 필요성이 포함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고,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 의무지출에서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025. 3.)’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재량지출 외에도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에 대한 지출 관리를 검토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약 27조원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지출 구조조정 실적인 2022년 △12.8조원, 2023년 △24.1조원, 2024년 △22.7조원 및 2025년 △23.9조원 중 가장 높은 실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정부는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 감액을 벗어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향하고, 연례적 행사·홍보비용 등 경상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는 입장임.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우리나라는 UN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지출 구조조정 주요 내용 및 실적: 2022년도 ~ 2026년도 예산안]

구분	주요 내용	특징	실적
2022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시지출 정상화로 절감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재구조화 추진	・코로나 위기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 ・보조・출연금 정비	△12.8조원
2023년도 예산안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역량 활용+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전략적 접근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	△24.1조원
2024년도 예산안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 ・예산 금액 조정 외에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 개선 노력	・관행적 R&D 지원은 성과 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 재정비	△22.7조원
2025년도 예산안	・관행적・집중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효과성 재검검 추진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23.9조원
2026년도 예산안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제안 반영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비 구조조정 ・의무지출 제도개선 병행	△27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예산안 홍보자료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경상비와 의무지출을 함께 절감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부가 공개한 55개 부처의[2]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대비 23조 2,46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4,146개 사업에[3]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4]

[부처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사업 수
감사원	6,455	4,155	△2,300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355	7,462	△11,893	17
경찰청	419,906	299,434	△120,472	143
고용노동부	21,759,268	22,314,464	△955,190	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65	523	△242	5
공정거래위원회	17,935	14,276	△3,659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55,209	2,693,173	△1,262,036	264
관세청	95,239	80,272	△14,967	38
교육부	13,257,605	10,765,944	△2,491,661	119
국가교육위원회	2,150	1,650	△500	3
국가보훈부	1,264,212	1,175,087	△89,125	64
국가유산청	792,011	685,518	△106,493	102
국가인권위원회	4,173	3,013	△1,160	42
국가데이터처	69,507	64,356	△5,151	13

2) 보안 등의 사유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62개 중앙관서 중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6개 부처(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이며, 이로 인해 정부 발표 지출 구조조정 총액(27조원)과 부처별 합계액 간에 차이가 있음.

3) 각 부처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이 세부사업 뿐 아니라 내역사업 단위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일 세부사업이더라도 내역사업별로 각각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내역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집계하여 총 사업 수 4,146개가 산출된 것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역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통합하여 집계할 경우의 지출 구조조정 사업 수는 2,299개임.

4) 2026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시행) 이전의 부처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행 부처 소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사업 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99,217	72,181	△27,036	251
국민권익위원회	15,201	11,852	△3,349	20
국세청	136,557	111,993	△24,564	19
국토교통부	20,292,563	13,558,447	△6,734,116	155
국회	59,627	38,279	△21,348	45
금융위원회	1,305,652	126,276	△1,179,376	17
기상청	94,088	68,002	△26,086	43
기획재정부	2,223,856	1,027,396	△1,196,460	256
기후에너지환경부	3,482,449	2,403,676	△1,078,773	153
농림축산식품부	8,661,646	7,339,746	△1,321,900	164
농촌진흥청	242,843	170,071	△72,772	61
대법원	239,319	224,525	△48,880	44
문화체육관광부	1,764,258	1,211,995	△552,263	4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613	6,962	△1,651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754	10,377	△1,377	15
법무부	281,191	159,477	121,714	62
법제처	4,373	2,818	△1,555	14
병무청	30,899	24,392	△6,507	19
보건복지부	1,132,192	688,283	△443,909	216
산림청	383,718	172,659	△211,059	59
산업통상부	2,486,920	1,396,873	△1,090,047	216
새만금개발청	24,984	12,973	△12,011	11
성평등가족부	639,008	637,826	△37,836	52
소방청	50,431	32,870	△17,561	20
식품의약품안전처	163,108	106,923	△56,185	65
외교부	1,927,650	1,261,081	△666,569	157
우주항공청	433,628	304,506	△129,122	24
원자력안전위원회	35,744	24,676	△11,068	5
인사혁신처	954,661	807,607	△147,054	20
재외동포청	17,325	7,156	△10,169	8
조달청	19,915	14,343	△5,572	11
중소벤처기업부	3,722,653	1,841,782	△1,880,871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438	6,362	△2,076	18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사업 수
지식재산처	125,189	89,818	△35,371	31
질병관리청	410,630	285,164	△125,466	68
통일부	41,049	24,919	△16,130	16
해양경찰청	206,238	154,402	△51,836	33
해양수산부	1,094,890	439,567	△655,323	108
행복청	46,222	27,768	△18,454	9
행정안전부	580,699	443,513	△137,473	235
헌법재판소	4,825	3,651	△1,174	19
합계	95,128,013	73,462,514	△23,246,912	4,14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출 구조조정 실적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6조 7,34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두 번째가 교육부로 2조 4,917억원, 그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1조 8,80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 3,21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2,620억원 등의 순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규모 상위 10개 부처]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국토교통부	20,292,563	13,558,447	△6,734,116
교육부	13,257,605	10,765,944	△2,491,661
중소벤처기업부	3,722,653	18,471,782	△1,880,871
농림축산식품부	8,661,646	7,339,746	△1,321,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55,209	2,693,173	△1,262,036
기획재정부	2,223,856	1,027,396	△1,196,460
금융위원회	1,305,652	126,276	△1,179,376
산업통상부	2,486,920	1,396,873	△1,090,047
기후에너지환경부	3,482,449	2,403,676	△1,078,773
고용노동부	21,759,268	22,314,464	△955,190
합 계	81,147,821	80,097,777	△19,190,43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체 구조조정 규모의 27.6%에 해당하는 6조 4,14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에 해당하는 5조 9,035억원이, 49개 기금에서 47.0%에 해당하는 10조 9,28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5)]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 여력 확보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재배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지출 사업이 특정 영역으로 제한되는 특별회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의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673.3조원 중 일반회계가 365.3조원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기금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기금간 전입·전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회계·기금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구조조정 실적	비율
일반회계	△6,414,671	27.6
특별회계(23개)	△5,903,468	25.4
기금(49개)	△10,928,773	47.0
합 계	△23,246,912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구조조정의 대부분은 사업성 지출 감액(22조 2,983억원, 95.9%)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12조 7,412억원을 감액한 것이 가장 큰 비중(54.8%)을 차지했고, 이어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감액(4조 2,286억원, 18.2%)과 제도개선(3조 8,190억원, 16.4%) 등을 통한 정비가 뒤를 이었음.

경상비성 지출에서는 총 9,486억원(4.1%)이 구조조정되었는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4,038억원, 1.7%), 기관운영 여건 변화(2,522억원, 1.1%) 및 관행적 경상비 지원 축소(2,497억원, 1.1%) 등이 주요 항목이었음.

5) 회계·기금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결과를 인용한 것임.

[유형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실적]

(단위: 백만원, %, 개)

구조조정 유형		구조조정 실적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성 지출	사업 우선순위 조정	△12,741,245 (54.8)	1,639 (39.5)
	집행부진	△4,228,601 (18.2)	360 (8.7)
	외부지적 등 기타	△1,077,281 (4.6)	210 (5.1)
	유사중복	△296,801 (1.3)	115 (2.8)
	제도개선	△3,819,027 (16.4)	221 (5.3)
	민간·지자체 재원 분담구조 개편	△135,351 (0.6)	38 (0.9)
	소계	△22,298,306 (95.9)	2,583 (62.3)
경상비성 지출	관행적 경상비 지원 축소	△249,700 (1.1)	140 (3.4)
	연례적 행사 및 홍보성 경비 절감	△42,909 (0.2)	188 (4.5)
	기관운영 여건 변화	△252,179 (1.1)	162 (3.9)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403,818 (1.7)	1,073 (25.9)
	소계	△948,606 (4.1)	1,653 (37.7)
합 계		△23,246,912 (100.0)	4,146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큰 상위 10개 사업의 총 감액 규모는 7조 7,972억원으로 전체 구조조정 실적인 23조 2,469억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큰 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조 7,556억원(△26.7%) 감액되었음. 이어 국토교통부의 '분양주택(융자)' 사업(△1조 447억원), 기획재정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5,021억원),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5,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4개 사업 모두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교육세 전입금)' 사업(△4,103억원)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2,634억원)은 제도개선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융자)(일시적경영애로자금)' 사업(△3,000억원)과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2,750억원)은 집행부진을 이유로 감액 조정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구조조정 규모 상위 10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구조조정 유형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4,057,200	10,301,581	△3,755,619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국토교통부	분양주택(융자)	1,471,639	426,978	△1,044,661	사업 우선순위 조정
기획재정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775,215	273,066	△502,149	사업 우선순위 조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	△500,0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교육부	보통교부금(교육세 전입금)	2,169,013	1,758,696	△410,317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혁신성장지원(고신용자중심)]	690,750	290,750	△400,0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외교부	인도적지원(ODA)	677,503	331,503	△346,000	외부지적 등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일시적경영애로자금)	350,000	50,000	△300,000	집행부진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25	688,979	△275,046	집행부진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102,013	2,838,620	△263,393	제도개선
합 계		24,757,358	16,960,173	△7,797,18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유형별 검토

(가) 2025년 종료 사업 예산 감액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시킨 경우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에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 예산 감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2026년도에 편성되지 않을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출 구조조정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종료 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지출 소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의 감액 조정은 신규 재원 확보 효과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될 경우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 예산 감액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애기본연구’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신규과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과제만 지원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 457억원이 전액 감액된 것이나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특히 이 사업은 2026년부터 ‘핵심연구’ 사업에 기본연구과제 유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른 내내역사업의 과제 유형으로 재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 사업도 유형 1, 2과제 예산이 2,552억원 감액되어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계속과제 중 일부가 종료되면서 지원액이 감소한 것이며, ‘중견연구’ 사업을 ‘핵심연구’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신규과제 유형이 A, B, C로 개편된 것이지 지원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2025년 종료사업: 개인기초연구(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구조조정 실적 (B-A)
	신규	계속	합계(A)	신규	계속	합계(B)	
생애기본연구	-	457	457	'핵심연구' 신규과제로 지원	-	-	△457
중견연구 (유형 1, 2)	1,974	8,376	10,350		7,798	7,798	△2,552
합 계	1,974	8,833	10,807	-	7,798	7,798	△3,00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에서 감액된 2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2023년 ~ 2025년 3개년 사업으로 2026년부터 폐지가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이 편성된 상황이므로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2025년 종료사업: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구조조정 유형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표준개발)	1,520	-	△1,520	외부지적 등 기타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표준화 기반 구축)	400	-	△400	외부지적 등 기타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기평비)	80	-	△80	외부지적 등 기타
합 계	2,000		△2,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주항공청의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사업’ 등 12개 사업도 원래 사업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감액한 것으로서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2025년 종료사업: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사업 등 (우주항공청)]

(단위: 백만원)

분류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종료 시점 도래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5,600	2,500	△3,100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6,510	-	△6,510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428	-	△428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	-	△200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7,300	2,770	△4,530
	민간항공기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개발(R&D)	3,869	-	△3,869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기반)(R&D)	2,880	-	△2,880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2,794	-	△2,794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사업단 운영비)	550	-	△550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6,250	-	△6,250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R&D)	2,402	-	△2,402
	433MHz기반 드론 응용통신 기술개발(R&D)	2,300	-	△2,300
	합 계			**△35,813**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 없이 2026년 예산만 감액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정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출 총액의 변화 없이 단순히 지출 시기만 이연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이나 사업 폐지 등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 연장 및 연부액 조정 등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만 전년 대비 감액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러한 예산 감액은 지출 시기만 이연될 뿐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 지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신규 재원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오히려 지출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6년 예산만 감액되었으나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우주항공청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등 5개 사업은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총 893억 7,600만원 감액되어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2026년 단년도 투입 예산만 감액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움.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6년 예산을 감액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우주항공청 사례]

(단위: 백만원)

분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 (총사업비 조정 없음)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발사체 중점기술개발 사업)	8,202	7,852	△35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사업단운영비)	3,610	2,490	△1,12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위성 중점기술개발 사업)	14,574	6,850	△7,72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민간발사장 구축)	2,600	100	△2,500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600	2,700	△900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00	6,420	△3,580

(단위: 백만원)

분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200	2,348	△852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35,043	17,580	△17,463
	차세대발사체개발(R&D)	150,816	120,429	△30,387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147,800	123,300	△24,500
	합 계	379,445	290,069	△89,376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 사업 중에서도 집행부진을 사유로 2026년 계획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어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었으나 총사업비 감액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함.

특히 이러한 청사 등 시설물 건립 사업은 집행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집행부진으로 인한 감액이 일시적인 지출 축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소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일례로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광주세무서 청사 신축),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및 부산통합관사 신축 사업의 경우 2025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026년 계획액이 감액 조정되었고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집행부진을 사유로 감액 조정된 바 없고 일부는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 조정이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지출 절감 및 재원 확보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6년 예산을 감액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세무관서 건립사업 집행부진 사유 및 지출 구조조정(감액) 규모(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8월말 기준			집행부진 사유	2026 계획안	감액 규모
	당초 계획	이월 예상	불용 예상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광주세무서 청사 신축)	6,936	3,586	-	시공사 선금 제외 이월	1,766	△5,170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493	311	-	설계 차년 완료 예정	37	△456
부산통합관사 신축	1,415	-	1,415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지연	692	△72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사업의 이관·조정으로 인해 실제 지출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경우

사업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해당 예산이 실제로는 타 사업으로 이관·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지출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문제가 있음.

사업 내용 중 일부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예산이 감액된 경우 이를 지출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축소 또는 폐지된 사업이 타 사업으로 이관·조정되어 사실상의 후속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일부 부처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의 이관·조정에 해당함에도 기존 사업 예산의 감액 규모를 모두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시킨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될 우려가 있음.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 연계, 시장 분석 및 개척자금 지원, 해외투자유치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은 220억원이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에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킨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32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은 시장성 및 혁신성을 갖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을 선발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기술보증 특별보증을 연계하며 생산 지원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갖춘 후속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은 폐지되었다기 보다는 후속 사업 성격의 ‘유니콘 브릿지 사업’으로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 예산 220억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기유니콘 사업 및 유니콘 브릿지 사업 비교]

구분	아기유니콘 육성	유니콘 브릿지
예산(안)	220억원 (2025년)	320억원 (2026년 안)
지원목적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딥테크 분야 중심 지원)
지원대상	창업기업 (시리즈 A 이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시리즈 A 이상)
지원요건	민간 투자 유치를 받은 창업기업 * 선발요건 : 누적투자 20~100억원	시장성 및 혁신성을 갖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 선발요건 : 누적투자 50억원 이상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50개사 내외
지원금액	① 국비 최대 3억원 ② 기보 특별보증 최대 50억원	① 국비 최대 6억원 ② 기보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
지원내용	① 신시장(국내 및 국외) 조사, 분석, 협력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지원 ②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보증 연계 ③ 해외 투자 매칭 지원	① 생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 해외 법인 설치 등 지원 ②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 연계 ③ 글로벌 VC 멤버쉽을 통해 글로벌 IR, 글로벌 전시회 등 참여 지원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② 기술평가・보증심사 ③ 최종평가(발표)	① 서면평가 ② 보증심사(현장) ③ 최종평가(발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6개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사업 규모나 내용 변경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Education) 사업에 편입되어 수행될 계획임.

결국 이는 예산 감액 없이 지출 총량이 유지되고, 사업 내용의 변화도 없는 단순한 사업 이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들 사업의 2025년 예산 총 2,705억 9,900만원을 제도개선 및 기관운영 여건 변화 등의 명목으로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산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세부사업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이관된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비고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관리운영비)	198,451 (2,550)	-	△198,451 (△2,550)	사업기간: ~ 2028. 2.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관리운영비)	24,605 (1,195)	-	△24,605 (△1,195)	사업기간: ~ 2028. 2.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관리운영비)	14,000 (200)	-	△14,000 (△200)	사업기간: ~ 2027. 2.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관리운영비)	13,440 (560)	-	△13,440 (△560)	사업기간: ~ 2030. 5.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전문대학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관리운영비)	9,120 (480)	-	△9,120 (△480)	사업기간: ~ 2027. 2.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대학 창업교육체계 구축 (관리운영비)	5,750 (248)	-	△5,750 (△248)	사업기간: ~ 2028. 2. (RISE 사업체계 내 사업 진행)
합 계	270,599		△270,599	

자료: 교육부

(라)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보기에 미흡한 경우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의무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운영비만 감액한 사례 등이 존재함.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항목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의무지출의 효율성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 실적은 총 1조 8,278억원으로, 전체 구조조정 실적의 7.9% 수준에 머물고 있음.[6] 이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92.1%)의 지출 구조조정이 재량지출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바,

2026년도 총지출 728조원 중 의무지출이 388조원으로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 비추어 의무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또한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전제로 기금운용계획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출 축소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의무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개선 없이 재량지출 성격의 연구용역비만 감액한 사례 등이 존재함.

먼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사업은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강화하는 등 실업인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구직급여 평균 수급일이 기존 114.3일에서 112일로 △2.3일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계획액을 당초 소요 대비 2,352억 7,400만원 감액하고 이를 지출 구조조정 성과에 포함시켰음.

이러한 제도개선은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수급 요건을 강화하여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가 실제 얼마나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평균 수급일 감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등은 불확실한 상황임.

결국 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다는 전제

6)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결과를 인용한 것임.

하에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지출 절감 가능 여부 및 그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보임.

[2026년도 구직급여 지출 구조조정 내역]

구분	제도개선 전	제도개선(지출 구조조정) 후
제도개선 전후 비교	○ 60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취업특강, 자원봉사 횟수 제한 없음)으로 선택 가능	○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 개선 추진
제도개선 전후 지출소요 추계 비교	〈 보험금(320-04): 11조 7,728억 8,5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1조 7,693억 4,700만원 · (근로자) 1,620,000명×63,142원×**114.3일** **= 11조 6,921억 100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 293억 300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 479억 4,300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억 7,000만원 · 1,133명×56,120원×53일 = 33억 7,000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68백만원 · 23명×60,000원×122일 = 1억 6,800만원	〈 보험금(320-04): 11조 5,376억 1,1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1,534,072백만원 · (근로자) 1,620,048명× 63,142원×**112일** **=11조 4,568억 2,400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 293억 300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 479억 4,300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억 7,000만원 · 1,133명×56,120원×53일 = 33억 7,000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억 6,800만원 · 23명×60,000원×122일 = 1억 6,800만원
	제도개선 전 소요 합계: 11조 7,728억 8,500만원	제도개선(지출 구조조정) 후 합계: 11조 5,376억 1,100만원 (제도개선 전 대비 △2,352억 7,4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대표적인 복지 분야 법정의무지출인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사업 등 5개 의무지출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사업의 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의무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인바,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주요 내용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연구비)	137	170	-	△170	소관 부서의 단일사업으로 연구비를 통합하여 이관 편성
의료급여 [사업운영비(연구비)]	343	468	-	△468	소관 부서의 단일사업으로 연구비를 통합하여 이관 편성
기초연금 지급 [제도운영비(경상경비)]	855	1,437	1,175	△262	연구용역비 등 운영비를 연금정책 사업관리 사업으로 조정 통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비(연구비)]	7	90	-	△90	소관 부서의 단일사업으로 연구비를 통합하여 이관 편성
부모급여 지원 [사업운영비(연구비)]	135	135	-	△135	소관 부서의 단일사업으로 연구비를 통합하여 이관 편성

자료: 보건복지부

(마)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서 실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 편성이 되었으나 실제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행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감액 편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투자지원' 사업(기후대응기금)은 외부 지적사항(재정사업자율평가, 기재위 2024 결산, 예결위·기재위 2025 추경 등)을 반영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되어 2026년 계획액은 130억원임.

이 사업은 협력국의 승인 지연으로 2024년도 예산이 이월·미집행된 가운데, 향후 확정되지 않은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227억 3,300만원의 지원금만 필요할 예정이나, 2025년 계획현액과 2026년도 계획안은 총 383억 5,100만원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 2025년 투자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투자지원	2024	33,000	29,629	-	29,629	4,278	25,351	-	14.4
	2025	22,000	-	25,351	25,351	-	(연말 집계)		-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 개선방안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진행 경과, 대상 사업의 특징, 실제 지출구조조정 내역 및 감액 규모 등을 살펴본 결과,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일률적으로 재량지출의 10% 이상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성격, 정책 우선순위 및 긴급성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료 사업 예산의 실적 반영이나 총사업비 조정 없는 단순 집행 시기 조정 등으로 감액 할당 규모를 맞추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으로 나타나는 등 정량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각 부처별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액이란 일률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25년 종료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거나, 총사업비 총량 변화 없이 2026년 예산만 감액하여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일부 있었음.

이와 같이 부처별로 일률적인 감액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단기적인 구조조정 목표액 달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각 부처별 사업 특성, 정책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중장기적 재정전략이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의 재원배분 우선순위 설정과 연계되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인건비·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성격의 재량지출을 제외한 순수 사업성 재량지출 비중이 낮은 부처들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재량지출 총액의 10%를 감액할 경우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재정 여력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각 부처별 재량지출의 10%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업 유형별 차등화된 성과평가 등을 병행하는 등 보다 성과 지향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장기적인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단년도 지출 총액에 대하여만 감액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출 구조조정 이행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책임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성과관리, 유사·중복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중점 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현재 지출 구조조정 절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의 목표가 포함된 기준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전년도 집행률, 성과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 사업을 선별하여 구조조정안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단년도 지출 총액을 중심으로 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시로 인하여 연간 실적 중심의 감액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별 중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 목표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닌 일시적 감액에 그치는 등 중장기적인 지출 절감의 효과가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적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임.

따라서 단년도 지출 총액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별 중기재정운용계획(5년 단위)과 지출 구조조정 이행 계획을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각 부처가 1월말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각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방향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단년도 예산안 편성 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사업 성과 및 의무지출 제도개선 계획 등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단년도 지출 총액을 중심으로 한 지출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수행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포괄보조 사업

가. 개 요

(1) 2026년도 예산안 현황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6조 7,903억원(176.4%) 증가한 10조 6,407억원이 편성되었음.[2)]

지특회계 내 지역자율계정[3)](이하 “자율계정”)의 포괄보조 사업은 전년 대비 6조 7,903억원(176.4%) 증가한 10조 6,407억원이고, 제주계정은 2,532억원(91.0%) 증가한 5,314억원이며, 세종계정은 262억원(81.6%) 증가한 583억원임.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38,504	106,407	67,903	176.4
	자율계정	35,401	100,510	65,109	183.9
	제주계정	2,782	5,314	2,532	91.0
	세종계정	321	583	262	81.6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6개 사업)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2026년도 자율계정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총 16개 부처, 1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대상 사업이 2025년 51개에서 123개로 대폭 확대되었음.

이관 현황을 보면, 지역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 32개, 일반회계 11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개, 환경개선특별회계 8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개, 청소년육성기금 1개 등 총 72개 사업이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가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1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개, 문화체육관광부 7개가 증가함.

예산안 규모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조 9,041억원, 보건복지부 2조 8,243억원, 국토교통부 1조 3,15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9,715억원, 산림청 4,704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전년 대비 증가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조 3,621억원, 보건복지부 2조 2,299억원, 국토교통부 5,485억원, 해양수산부 3,211억원으로 나타남.

[지특회계 자율계정 등 포괄보조 사업 확대 현황]

(단위: 억원, 개)

부처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지원계정·타 회계 → 자율계정 이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	**7**	**5,420**	**17**	**29,041**	**10**	**23,621**	**지원 +1, 농특 +1, 환특 +8**
보건복지부	**6**	**5,944**	**9**	**28,243**	**3**	**22,299**	**지원 +1, 일반 +2,**
국토교통부	**7**	**7,671**	**13**	**13,156**	**6**	**5,485**	**지원 +5, 일반 +1**
농림축산식품부	**7**	**7,108**	**17**	**9,715**	**10[1)]**	**2,607**	**지원 +2, 농특 +8**
산림청	**5**	**1,771**	**10**	**4,704**	**5**	**2,933**	**일반 +3, 농특 +2,**
해양수산부	**1**	**693**	**12**	**3,904**	**11**	**3,211**	**지원 +3, 일반 +2, 농특 +5, 에너지 +1**
문화체육관광부	7	876	14	3,537	7	2,661	지원 +6, 일반 +1
행정안전부	4	2,529	6	2,816	2[2)]	287	지원 +1, 일반 +1
중소벤처기업부	3	1,551	4	1,642	1	91	지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130	10	1,586	9	456	지원 +9
농촌진흥청	1	585	3	695	2	110	지원 +1, 일반 +1,
산업통상부	-	-	3	614	3	614	지원 +1, 에특 +3
고용노동부	-	-	1	600	1	600	지원 +1
성평등가족부	1	40	2	87	1	47	기금 +1

(단위: 억원, 개)

부처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지원계정·타 회계 → 자율계정 이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교육부	1	83	1	85	-	2	
국가유산청	-	-	1	85	1	85	일반 +1
지역자율계정 소계(A)	**51**	**35,401**	**123**	**100,510**	**72**	**65,109**	
제주계정(B)	**57**	**2,782**	**97**	**5,314**	**40**	**2,532**	**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 사무 포함**
세종계정(C)	**27**	**321**	**54**	**583**	**27**	**262**	
지특회계 전체 포괄보조사업(A+B+C)	**-**	**38,504**	**-**	**106,407**	**-**	**67,903**	

주 1) 자율계정으로 11개가 이관되었으나, 기존 사업과의 통폐합 감안 시 10개임
2) 자율계정으로 3개가 이관되었으나, 기존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의 타부처 이전 감안 시 2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2) 포괄보조 사업의 구조와 특징

포괄보조 사업이 편성되는 자율계정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특회계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편성됨.

이 계정의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지출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부 내역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되었음.

[지특회계 계정/편성방식별 분류]

구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		부처직접편성
	시·도	시·군·구	
지역자율계정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역지원계정	-	-	⑥ 부처 직접편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계정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⑦ 부처 직접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⑧ 부처 직접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5.4)」재구성

포괄보조 사업은 자율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그리고 제주·세종 계정의 일부 사업[4]에 적용되는데, 시·도의 경우 해당 포괄보조 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시·군·구의 경우 성장촉진지역 등 6개 기반구축사업[5]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신규 소요는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선정됨.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국가재정법」의 예외로 최대 2회계연도까지 이월 집행이 가능하고, ② 사업 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포괄보조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되어 있음.[6]

또한 ③「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편성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는 각 시·도의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되, 금액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7]

(3) 포괄보조 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율계정 포괄보조 사업의 편성절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4월에 시·도별 기본한도(지출한도)를 통보하면, 시·도는 한도 내 예산안을 마련해 4월 30일까지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함.

---

4)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제주계정의 시·군·구 사업은 3개,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 사무는 25개이며, 세종계정의 시·군·구 사업은 2개임.

5) 6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개발·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와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기초로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7월말~8월초에 추가한도를 시·도에 부여하고 추가 예산요구를 검토한 후 예산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됨.

자율계정은 부처가 주도하는 지원계정 사업과 달리, 시·도지사가 신청한도 내에서 포괄보조 사업(2026년 123개) 중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포괄보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예산편성절차]

①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월)**
↓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을 마련하여 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신청서 제출(4.30)
↓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5.31)
- 지자체의 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 작성
-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
④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방위 하위평가 사업은 조정 원칙**
-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원칙
- 사업내역 조정시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

↓
⑤ (기획재정부)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7월말~8월초)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이관사업 신규·조정 포함)**
-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기획재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회계연도 120일전)

자료: 기획재정부「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5.4)」

나. 검토의견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 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자율계정 이관 대상이 올해 4월 10개[8] 사업에서, 8월에 72개[9]로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법 규정과 계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관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사업은 이관 이전부터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어 왔으며, 기존 자율계정 사업들에서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이관된 사업들의 포괄보조 사업 적합성 검토 필요

지특회계 자율계정의 포괄보조 사업 확대가 8월에 결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편성지침에 따른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단계에서는 이관된 사업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10]에서 규정한 자율계정 세출사업에

---

8) 기획재정부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5.4)」
국토부(버스공영차고지지원), 농림부(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환경부(야생동물피해예방관리 중 내역사업인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운영 중 내역사업인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 업사이클센터설치), 과기부(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활성화 중 내역사업인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디지털배움터 중 내역사업인 디지털배움터운영), 여성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중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산업부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중 내역사업인 마을단위지원) 등 10개 사업

9) “지방재정 확충 방안 1호 포괄보조금” (내일신문, 2025.8.18.)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지와 계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에 지특회계 지원계정을 포함해 타 회계로부터 자율계정으로 이관될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확정하고 편성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8월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포괄보조 사업 확대 결정으로 인해 당초보다 7.2배 많은 72개 사업이 이관되었음.

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관된 사업들이 이러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관광개발[11] 사업(2026년 예산안 1,794억 6,800만원)은 남부권·충청유교문화권·서부내륙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어 관광벨트와 광역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광역권 단위의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이 사업은 여러 개의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권 사업으로 국가의 체계적인 관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11) <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2017~2026년 (10년간)	6,167억원 (국비 2,626억원, 지방비 3,456억원, 민자 85억원)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충청권 유교문화의 특성에 따라 4개 광역클러스터와 8개 관광클러스터 거점·연계·루트사업	2019~2028년 (10년간)	7,947억원 (국비 3,547억원, 지방비 4,40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4개 권역, 10개 관광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	2023~2033년주) (11년간)	3조 64억원 (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주) 2023년도 선도사업 예산 반영으로, 전체사업기간이 11년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권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볼 때 각 시·도별로 자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2026년 예산안 961억 1,800만원)은 월 최대 110만원(최대 3년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이 사업은 시·도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청년농 지원규모가 상이하여 지역 간 청년농 육성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청년농으로 선정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후계농 육성 정책자금(非포괄보조 사업)[12]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후계농 육성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과 기능 조정이 요청되는 사업으로 보임.

③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26년 예산안 84억 9,400만원)은 매장유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전 유존지역 파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 자율계정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이 사업은 202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유존지역이 확인되면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이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지역 반발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3]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군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자율편성 사업으로 이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이 외에도 사업 기준과 집행 방법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결론적으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은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에 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 1,193억 600만원이 편성됨.(산출내역: 2026년 추정 평잔 4,767,686백만원 × 이차율(2.47~3.47%))
* 후계농 육성자금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에게 창업기반 조성비용 등을 연 2%로 지원하는 정책자금(농협은행·지역농축협 취급)으로, 20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배정 평가 방식으로 지원

13) "인천시군수구청장協 11건 논의 - 매장유산 유존지 정보 고도화, 주민 의견 필수" (경인일보, 2025.10.13.)

(2)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72개 사업의 실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타 계정·회계에서 집행되었을 당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특히 예산액과 미집행액이 각각 100억원 이상이고 실집행률이 2년 연속 70% 미만인 사업이 9개에 달하는바, 이월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율편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이월규모와 집행률이 2022년 5,313억원(48.2%), 2023년 4,561억원(55.4%), 2024년 3,602억원(56.2%)에 달하고 있으므로, 2026년 예산안 3,575억원(제주계정 164억원 포함)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4]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사업(5개 벤처캠퍼스 조성 등)도 실집행율이 10%대로 2023년에 54억원, 2024년에 181억원이 이월 등 미집행되었는데, 2026년 예산안으로 201억원이 편성되었음.[15]

③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에 228억원, 2024년에 501억원이 이월 등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실집행률은 각각 43.3%, 53.7%에 그쳤으나, 2026년 예산안에 1,969억원이 편성되었음.[16]

---

14) 집행부진 사유(자료: 국토교통부)
- 복수연도(3~7년)에 걸쳐 추진하는 소규모 SOC사업으로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착·준공 시기 등에 따라 집행시기가 차년도로 순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사업 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해 집행이 지연됨.

15) 집행부진 사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2)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필수행정절차 수행 및 지방의회 추경 편성 일정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2023) 평창 건축설계 제안공모 유찰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계약 지연 및 익산 캠퍼스 총사업비 심의 등 행정절차 추가, (2024) 포항 캠퍼스 연약지반 발견으로 건설기술 재심의가 필요하여 설계기간 연장 및 분석시스템 장비 구축 중 계약 유찰.

16) 집행부진 사유(자료: 해양수산부)
- 각종 심의·심사, 예산(지방비) 확보 등 다양한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사업 중 예산액 및 미집행규모가 100억원 초과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명)	연도	부처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준					비고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미집 행액	집행률 (D/C)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2022**	**723,013**	**642,325**	**383,449**	**1,025,774**	**494,506**	**531,268**	**48.2**	
	2023	**508,151**	**480,142**	**542,062**	**1,022,204**	**566,122**	**456,082**	**55.4**	
	2024	**390,965**	**388,865**	**434,056**	**822,921**	**462,680**	**360,241**	**56.2**	
해안및내륙권 발전사업지원 (국토교통부)	2022	20,004	20,004	4,467	24,471	14,355	10,116	58.7	
	2023	39,591	39,591	10,116	49,707	24,597	25,110	49.5	
	2024	26,955	26,955	25,110	52,065	36,333	15,732	69.8	
스마트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38,361	17,313	16,964	34,278	19,833	14,445	57.9	
	2023	48,836	11,841	14,445	26,286	13,817	12,468	52.6	
	2024	11,032	13,946	8,802	22,748	6,179	16,569	27.2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22**	**700**	**700**	**-**	**700**	**-**	**700**	**-**	**내역 사업 기준**
	2023	**5,488**	**5,488**	**700**	**6,188**	**831**	**5,357**	**13.4**	
	2024	**14,807**	**14,807**	**5,357**	**20,164**	**2,053**	**18,111**	**10.2**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22	5,667	5,544	892	6,559	1,727	4,832	26.3	내역 사업 기준
	2023	8,577	8,577	2,527	11,104	2,343	8,761	21.1	
	2024	13,062	12,982	5,781	18,843	3,746	15,356	19.9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084	12,084	3,419	15,503	6,036	9,467	38.9	내역 사업 기준
	2023	11,300	11,300	9,467	20,767	5,494	15,273	26.5	
	2024	7,300	5,550	15,273	20,823	10,142	10,681	48.7	
해양레저관광기반 (해양수산부)	2022	36,340	36,340	17,717	54,057	31,900	22,157	59.0	
	2023	46,189	40,333	17,394	57,727	31,561	26,166	54.7	
	2024	32,066	31,061	36,899	67,960	35,345	32,615	52.0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해양수산부)	2022	12,134	8,234	459	8,693	447	8,246	5.1	
	2023	14,000	14,000	8,098	22,098	241	21,859	1.1	
	2024	15,098	15,098	20,930	36,028	20,916	15,112	58.1	
어촌신활력증진 (해양수산부)	**2022**	**-**	**-**	**-**	**-**	**-**	**-**	**-**	
	2023	**41,975**	**40,163**	**-**	**40,163**	**17,409**	**22,754**	**43.3**	
	2024	**92,035**	**86,733**	**26,266**	**112,999**	**60,727**	**50,124**	**53.7**	

주) 예산액과 미집행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2년연속 70% 미만인 사업만을 기재함.
자료: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④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17]을 보면, 2023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 55억원이 전액 교부되지 않고 불용된 것에 이어, 2024년에는 본예산 277억 7,800만원 중 214억 1,40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그 중 실집행액이 81억 8,100만원(실집행률 38.2%)에 그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626억 6,400만원(79.5%) 증액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 - 광역권 관광개발의 내역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5,500	-	5,500	-	-	-	-	-	-	-
2024년	27,778	21,414	6,364	21,414	-	21,414	8,181	13,233	-	38.2
2025.8	78,824	61,032	-	61,032	13,233	74,265	16,857	-	-	2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론적으로, 포괄보조 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동시에 집행률 관리와 성과 점검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월·재이월을 반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존 자율계정에 편성된 51개 사업의 2024년까지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미집행규모가 100억원이상이면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70% 미만인 사업이 14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포괄보조금 특례 규정 적용 예외를 두는 등 재정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4년 결산 결과, 자율계정에 편성된 51개 사업 중 33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기준 실집행률이 70%미만이었고, 이월 등 미집행규모가 100억원이상이면서 2년 연속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4개에 달하였는데, 대표적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17) 문화체육관광부 광역권 관광개발(4153-317)의 내역사업

①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18] 개발 사업의 이월 등 미집행액 규모와 실집행률을 보면 2022년 1,386억원(58.2%), 2023년 1,672억원(52.7%), 2024년 1,871억원(48.5%)으로, 이월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집행률이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군·구별로 실집행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2026년 예산안 1,948억원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19]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20]은 실집행률이 3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고, 이월 등 미집행규모가 2022년 128억원, 2023년 176억원, 2024년 242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2026년 예산안 136억원의 집행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21]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산업센터 사업[22]은 실집행률이 20222년 56.8%, 2023년 50.5%, 2024년 43.9%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월규모도 2022년 449억원, 2023년 834억원, 2024년 825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948억 1,700만원의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3]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11개의 경우에는 2023년 교부액을 2023년 및 2024년에도 실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25년으로 실집행단계에서 재재이월되었으며, 2024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27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14개 지역이 실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現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09년 이후 5년 단위로 전국 시·군 중(특수상황지역 제외)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추진('09.6월 최초 지정, '14.9월/ '19.9월/ '24.11월 재지정)

19) 집행부진 사유(자료: 국토교통부)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부지확보(토지보상)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20)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

21) 집행부진 사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비 확보, 사업계획 확정, 설계 및 공사발주 등 사전 행정절차에 상당 시일 소요

22)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추진현황: 총 70개 센터(완료 23, 건립 중 47 / 2026년 신규 5)
* 세종·제주 계정 제외

23) 집행부진 사유(자료: 행정안전부)
- 특수상황지역의 특성상 군부대 작전성 검토 (접경지역),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 (섬지역) 등 설계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에 타 지역보다 추가적인 기간(3~6개월) 소요 → 특히, 섬지역의 경우 예상치 못한 해상기상 악화, 조업 및 태풍시기 공사 불가 등으로 사업 지연 발생

④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실집행률이 2022년 50.5%에서 2023년 55.1%, 2024년 65.0%로 나아지고 있으나, 이월 등 미집행규모가 2022년 1,676억원, 2023년 1,700억원, 2024년 1,304억원으로 과다하여 시도별 지출한도('26년 예산안 1,994억원)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4]

[기존 자율계정 사업 중 예산액 및 미집행규모가 100억원 초과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처명)	연도	부처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준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미집행액	실집행률 (D/C)
성장촉진지역개발 (국토교통부)	**2022**	**207,679**	**207,679**	**123,748**	**331,427**	**192,791**	**138,636**	**58.2**
	2023	**222,402**	**222,402**	**131,272**	**353,674**	**186,499**	**167,175**	**52.7**
	2024	**206,381**	**206,381**	**156,667**	**363,048**	**175,934**	**187,114**	**48.5**
혼잡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2022	97,126	97,126	31,640	128,766	66,613	62,153	51.7
	2023	103,862	77,879	57,681	135,560	50,684	84,876	37.4
	2024	134,360	134,360	60,403	194,763	108,022	86,741	55.5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토교통부)	2022	69,000	50,720	49,286	100,005	49,384	50,621	49.4
	2023	56,200	56,200	33,734	89,934	41,880	48,054	46.6
	2024	74,704	74,704	54,682	129,386	59,274	70,112	45.9
수소도시지원 (국토교통부)	2022	24,000	24,000	3,302	27,302	21,147	3,155	77.5
	2023	5,250	5,250	3,155	8,405	3,345	5,059	39.8
	2024	29,700	29,700	2,849	32,549	16,947	15,602	52.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122,165	122,164	53,050	175,214	91,539	83,675	52.2
	2023	37,621	35,408	10,220	45,628	21,678	23,950	47.5
	2024	46,326	46,326	23,031	69,357	38,393	30,964	55.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2**	**12,023**	**8,623**	**12,074**	**20,697**	**7,863**	**12,834**	**38.0**
	2023	**23,531**	**18,211**	**9,528**	**27,739**	**10,121**	**17,618**	**36.5**
	2024	**31,315**	**16,423**	**21,198**	**37,621**	**13,456**	**24,165**	**35.8**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보건복지부)	2022	20,210	12,890	4,547	17,437	7,445	9,992	42.7
	2023	10,997	10,997	4,460	15,457	6,639	8,818	43.0
	2024	7,776	7,776	5,988	13,764	8,508	5,256	61.8

24) 집행부진 사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초기 행정절차, 설계공모 등으로 사업지연 및 시공시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 저조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처명)	연도	부처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준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미집행액	실집행률 (D/C)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공영주차장 건립) (중소벤처기업부)	2023	65,575	65,044	-	65,044	15,166	49,878	23.3
	2024	59,140	59,140	49,878	109,018	66,813	42,205	61.3
지식산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2022**	**61,154**	**61,154**	**42,842**	**103,996**	**59,051**	**44,945**	**56.8**
	2023	**123,408**	**123,408**	**44,945**	**168,353**	**84,985**	**83,368**	**50.5**
	2024	**63,770**	**63,770**	**83,368**	**147,138**	**64,651**	**82,487**	**43.9**
해양및수자원관리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2022	40,110	40,110	24,844	64,954	35,271	29,683	54.3
	2023	38,351	38,351	27,783	66,134	30,727	35,407	46.5
	2024	42,802	42,802	33,977	76,779	44,295	32,484	57.7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2022**	**205,045**	**220,598**	**118,032**	**338,631**	**171,017**	**167,614**	**50.5**
	2023	**216,488**	**216,488**	**162,013**	**378,501**	**208,505**	**169,996**	**55.1**
	2024	**210.498**	**210,498**	**162,335**	**372,833**	**242,401**	**130,432**	**65.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농촌진흥청)	2022	63,342	63,342	22,920	88,813	54,658	34,155	61.5
	2023	53,696	53,696	32,755	86,451	44,313	42,138	51.3
	2024	67,585	67,585	40,689	108,274	50,161	58,113	46.3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023	31,000	31,000	9,229	40,229	9,367	30,862	23.3
	2024	39,189	39,189	22,457	61,646	35,609	26,037	57.8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산림청)	2022	1,500	1,500	-	1,500	547	953	36.5
	2023	9,700	9,700	953	10,653	3,362	7,291	31.6
	2024	15,050	14,900	7,291	22,191	10,094	12,097	45.5

주) 예산액과 미집행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2년연속 70% 미만인 사업만을 기재함.
자료: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이월 등 미집행 규모가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도의 자율편성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1조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25]

2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90조에서는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 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동일 계정의 포괄보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26]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율계정 내 사업으로서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계에서 미집행 유보액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소요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 공사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미집행 유보액[27]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 집행률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는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수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2023년 말 기준 8,004억원, 2024년말 기준 8,427억원이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기준					
	예산액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D)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2년	572,859	493,637	182,353	675,990	**472,361**	197,567	6,062	**69.9**
2023년	547,918	553,867	197,567	751,434	**485,256**	255,110	11,068	**64.6**
2024년	565,350	517,360	255,110	772,470	**540,732**	222,258	9,480	**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수탁기관 유보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농식품부 → 지자체 보조예산		지자체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한국농어촌공사 유보액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말 유보액(이월)	2024년말 유보액(이월)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포함)	553,867	517,360	629,682	750,345	800,308	842,663

주) 유보액(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후 남은 미집행잔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또한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집행률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 공사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집행 유보액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13,986	13,986	12,826	12,826	3,184	16,445	859	13,261	582	**15,586**	-	**4.2**
(유형2)	27,907	27,907	26,927	26,927	15,793	43,308	14,920	27,515	7,155	**26,363**	2,025	**25.6**
(유형3)	39,835	39,835	39,312	39,312	4,970	44,282	16,051	39,312	10,095	**28,231**	-	**25.3**
합계	81,728	81,728	79,065	79,065	23,947	104,035	31,830	80,088	17,832	**70,180**	2,025	**21.8**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탁기관 유보액]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23	10	26,483	4,541	21,941	-	2	5	3	19	23,849	12,275	11,574	-	9	2	8
유형1	2	11,112	666	10,445	-	-	-	2	3	7,076	306	6,770	-	-	-	3
유형2	1	720	3	717	-	-	-	1	5	2,084	-	2,084	-	-	-	5
유형3	7	14,652	3,872	10,779	-	2	5	-	11	14,689	11,969	2,720	-	9	2	-
2024	3	3,604	666	2,938	-	-	-	3	10	10,215	1,008	9,207	-	-	8	2
유형1	1	2,104	-	2,104	-	-	-	1	2	4,450	-	4,450	-	-	-	2
유형2	-	-	-	-	-	-	-	-	-	-	-	-	-	-	-	-
유형3	2	1,500	666	834	-	-	-	2	8	5,765	1,008	4,757	-	-	8	-
합계 (비율)	13	30,087	5,208 (17.3%)	**24,879 (82.7%)**	-	2	5	6	29	34,064	13,283 (38.9%)	**20,784 (61.1%)**	0	9	10	10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이러한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자체 매칭자금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설치[28] 등을 공단에 위탁) 및 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시설 공사[29] 등을 공사에 위탁)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공공기관의 미집행 유보액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소요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30]

28)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등

29)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노후상수도정비 등

30) 2026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을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자율),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자율), 하수처리장 설치(자율·제주·세종),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자율·제주·세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지율·제주·세종) 10개 사업이 환특회계 등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됨.

(3) 자율계정 내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및 세부/내역사업 축소 필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 목적을 감안할 때, 123개에 달하는 자율계정 세부사업과 340개의 내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자율편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지특회계 자율계정 예산안의 123개 세부사업과 340개 내역사업 중 일부는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지특회계 자율계정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현황]

(단위: 개)

부처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세부사업수	내역사업수	세부사업수	내역사업수
기후에너지환경부	7	8	17	21
농림축산식품부	7	11	17	38
문화체육관광부	7	11	14	26
국토교통부	7	89	13	139
해양수산부	1	2	1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10	13
산림청	5	18	10	37
보건복지부	6	10	9	16
행정안전부	4	4	6	8
중소벤처기업부	3	4	4	5
산업통상부	-	-	3	3
농촌진흥청	1	1	3	4
성평등가족부	1	1	2	2
교육부	1	1	1	1
고용노동부	-	-	1	1
국가유산청	-	-	1	1
지역자율계정 합계	**51**	**162**	**123**	**340**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포괄보조 사업의 자율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123개 포괄보조 사업의 내역사업 수와 전체 대상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통합·축소해 나가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31] 사업의 경우, 전자는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정된 도시만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문화 선도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은 목적이 서로 유사하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군·구 6개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32], 특수상황지역[33], 일반농산어촌지역[34] 등 기초생활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부처간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특히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25년 신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은 어촌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시·군·구 6개 자율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부처명)	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사업내용
성장촉진지역개발 (**국토교통부**)	-	194,777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

31) 2026년 예산안 1,794억 6,8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32) 70개 시·군 및 186개 도서

33) 15개 접경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나머지 도서

34) 121개 시·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부처명)	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사업내용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36,546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26,504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빈집철거지원	15,000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정비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201,206	농촌중심지(읍·면 소재지 중심)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기초생활거점조성	226,886	농촌중심지(하위 거점)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시군역량강화	23,897	지역사회 역량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권역단위거점개발	41,764	어촌지역 중심지(법정어항 배후지 등)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20,048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농어촌빈집정비 지원사업	10,332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어촌신활력증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196,923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국가어항·지방어항 등)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개발사업	127,452	남북분단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섬지역 개발사업	71,997	섬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계		1,293,33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4) 국가 승인·지정이 선행되는 사업의 포괄보조 사업화에 따른 점검 필요

포괄보조 사업은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앙부처의 승인이나 지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일정과 계획을 충분히 공유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사업[35]을 농특회계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36]'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의 지정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이전 단계에서 해당 사업을 자율계정에 편성·신청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례는 포괄보조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 취지가 국가승인·지정형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또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처럼 포괄보조 사업은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승인·지정 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일정·공모 계획을 충분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보조 사업으로 편성 시 사업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활성화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6억 5,100만원임.

3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5) 자율계정 사업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첫째, 정부는 2026년 자율계정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는데, 더 나아가 예산편성의 객관성, 재원배분의 합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출한도(기본한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도 및 시·군·구는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주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며,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구조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음 연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비공개로 설정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5조 제1항[37]에 따르면 지특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지방시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38]에서는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시·군·구의 발전 정도 및 예산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만 공개할 뿐 지방자치단체별 지출한도는 공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출한도 등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임.

포괄보조 사업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체계적·공정하게 재원을 배분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예산편중과 이에 따른 지역갈등을 이유로 산정기준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포괄보조금제도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됨.[39]

특히 자율계정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는 예산 규모 조정 권한 없이 의견 제시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결정이 자율계정 운영과 사업 집행의 실질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출한도 배분방식]

□ 배분모형 및 재정지원의 안정성 등에 따라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 배분모형은 재정수요와 낙후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재정수요(가중치 25%) : 인구, 면적
낙후도 요소(가중치 75%) : 지방소득세,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지수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

$$\log(y_i) = \beta_0 + \beta_1 \log(\text{인구}_i) + \beta_2 \log(\text{면적}_i) + \beta_3 \log(\text{지방소득세}_i)$$
$$+ \beta_4 \text{노령인구비율}_i + \beta_5 \text{재정력지수}_i + \epsilon_i$$

* 각 변수는 최근 3년 값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더욱이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및 시·군·구별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0]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예산 배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별 지출한도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는 이해가 되나, 지특회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객관적·합리적인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포괄보조 사업에 대한 지역별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9) 지방행정연구원(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8-32.

40) 기획재정부,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p.33, p.36

둘째, 확대된 포괄보조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종합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타 회계 및 기금사업 중 균형발전과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지특회계로 편입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41]

2026년도 예산안에서 포괄보조사업이 대폭 확대된 만큼, 지특회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관된 사업들이 균형발전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포괄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시·도별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자율적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확대된 재정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타 회계나 기금사업 중 균형발전과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을 지특회계로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그에 따른 세입재원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봄.

---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부조직개편

가. 개 요

(1)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정부조직개편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신설·폐지, 통합·분리, 승격,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 효율화, 행정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실시되었음.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개편의 기조로 하여,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며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개편의 기조로 하여, 여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며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노무현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한 최소화된 조직개편을 기조로 하여,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명박 정부는 대부처주의에 따른 부처 통합을 개편의 기조로 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와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개편의 기조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을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기조로 하여,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음.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조직개편 주요 내용		정부조직 구성
김영삼 정부	신설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2원 14부 5처 14청
	통합·폐지	공업진흥청, 해운항만청, 수산청 폐지 문화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 상공부+동력자원부→상공자원부, 재무부+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건설부+교통부→건설교통부	
	변경	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 체신부→정보통신부, 환경처→환경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농림부	
김대중 정부	신설	여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8부 4처 16청
	통합·분리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예산청, 내무부+총무처→행정자치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변경	외무부→외교통상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통일원→통일부, 공보처→국정홍보처	
노무현 정부	신설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18부 4처 18청
	통합·폐지	철도청 폐지	
	변경	여성부→여성가족부	
이명박 정부	통합·폐지	정보통신부 폐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연구개발)→지식경제부, 농림부+해양수산부(수산 사무)→농림수산식품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 사무)→국토해양부	15부 2처 18청
	변경	노동부→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새만금개발청	17부 5처 16청
	폐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폐지	
	변경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외교통상부→외교부,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조직개편 주요 내용		정부조직 구성
문재인 정부	신설	소방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18부 4처 18청
	통합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변경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윤석열 정부	신설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19부 3처 20청
	변경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주) 각 정부 말 기준
자료:「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25. 7. 14.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5년 9월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5. 9. 7. 정부조직을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세제 기능과 예산·기획 기능을 각각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②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후 에너지정책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③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며, ④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무총리 직속 차관급 기관인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며, ⑥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2025. 9. 7.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舊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거시경제·세제)와 기획예산처(예산·기획)로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舊환경부 사무 및 舊산업통상자원부 사무 중 에너지정책 사무 담당
산업통상부	舊환경부에 일부 사무 이관 및 명칭 변경
공소청	舊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관련 사무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6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검찰청	관련 사무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후 폐지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직속 차관급 기관으로, 舊통계청의 통계·조사 사무 담당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직속 차관급 기관으로, 舊특허청의 특허·지식재산권 사무 담당
성평등가족부	舊여성가족부 사무 및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정책 사무 담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 사무를 성평등가족부에 이관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자료:「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2025. 9. 7.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후 상기한 주요 내용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7)이 2025. 9. 2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0. 1. 일부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이 공포되었음.

(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관

2025년 10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이관이 발생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 세입과목은 총 34개, 예산액은 19조 7,436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를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2개 과목의 6,600만원이, ②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32개 과목의 19조 7,435억원이 이관될 예정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과목 이관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명	이관과목 수	이관 예산액
이관 전	이관 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2	66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반회계	4	60,1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	4,156,595
		전력산업기반기금	11	4,513,65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	11,013,137
계			**34**	**19,743,576**

주 1) 이관과목 수는 이관 후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내 세입과목 수를 기준으로 집계
2) 2025. 10. 16. 제출자료 기준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이관이 발생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 세출사업은 총 150개, 예산액은 4조 1,466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를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①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4개 사업 및 130억원의 예산액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3개 사업 및 34억원의 예산액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11개 사업 및 393억원의 예산액이, ④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132개 사업 및 4조 909억원의 예산액이 이관될 예정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출사업 이관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명(이관 전→이관 후)	이관사업 수	이관 예산액
이관 전	이관 후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일반회계	2	1,159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11,792
		성평등가족부 소계	4	12,9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3	3,3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7	20,943
		방송통신발전기금	4	18,39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계	11	39,335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19	46,9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	1,266,0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	18,895
		전력산업기반기금	61	2,575,25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4	183,81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계	132	4,090,918
계			**150**	**4,146,589**

주 1) 이관사업 수는 이관 후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내 사업 수를 기준으로 집계
2) 2025. 10. 16. 제출자료 기준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일부만 이관된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의 일부만 이관되어 동일한 목적의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처 간 관할 중첩으로 정책 추진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이관이 발생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 세출 세부사업 중, 사업의 일부만 이관될 예정인 사업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은 총 13개로 나타났음.

세부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세출예산 분류 체계의 최하위 단위로, 각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세부사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만 이관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이관 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안	소관 (이관 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안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2,276→ 1,374	성평등가족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90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21,166→ 21,105	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6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기술개발 (R&D)	17,007→ 7,24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 기술개발(R&D) (미디어지능화제작 핵심기술개발)	5,567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 기술개발(R&D) (마이미디어플랫폼 핵심기술개발)	4,2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재난관리 (정보화)	4,123→ 3,81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3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구축 (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1,367→ 437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구축(정보화)	93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2,009→ 1,839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정보화)	170
산업통상부	행정능률향상및 능력개발	1,732→ 1,509	기후에너지 환경부	행정능률향상및 능력개발	223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2,034→ 1,776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258
산업통상부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R&D)	3,666→ 3,149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R&D)	517
산업통상부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	3,381→ 256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	3,125
산업통상부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2,559→ 1,735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824
산업통상부	에너지바우처	517,167→ 23,140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바우처	494,027
산업통상부	에너지자원정책연구	261→ 37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자원정책연구	224
산업통상부	AX실증밸리조성(R&D)	7,033→ 2,110	기후에너지 환경부	AX실증밸리조성(R&D)	4,923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1,407→ 1,140	기후에너지 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267

주 1) 2025. 10. 16. 제출자료 기준
2)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사업은 제외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세부사업의 목적을 공유함.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나누어 편성되는 경우, 조직개편의 취지와 달리 기관 간 관할 중첩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정책의 추진체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예산안의 중복 편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을 이관하는 경우, 기관 간 관할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마다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은 이관 기준 및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이관 내용이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상담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를 지원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13억 7,400만원)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9억 200만원)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사업은 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②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은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등을 통한 자율적 고용개선을 내용으로 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개 내역사업 중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 및 지청을 통해 직접 수행 중이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간접수행 중이므로 성평등가족부가 수행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만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고,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잔류할 예정임.

2025년 10월 이후 여성 고용정책에 관한 사무는 성평등가족부의 소관이지만, 기존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또한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청 및 지청 등 하부조직 및 인력 또한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수행 역량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 청 및 지청을 통해 직접 수행 중인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잔류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기존 사업수행 역량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여성 고용정책에 관한 사업수행기관

의 이원화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여성 고용정책의 주무기관은 성평등가족부지만 정책집행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활용은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정책결정의 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나아가 여성 고용정책의 추진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및 피해자 권리 구제를 비롯한 이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주무기관인 성평등가족부와 하부조직의 관리 및 운영주체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양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의 여성 고용정책사업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관련 사업을 성평등가족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바우처 사용안내 및 연탄사용 취약가구의 보일러 전환 유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바우처’(4,888억 4,400만원), ‘연탄쿠폰’(231억 4,000만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33억 1,100만원) 및 ‘사업운영비’(18억 7,200만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구입 비용 및 연탄쿠폰 지원 가구가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 시 연탄쿠폰에 준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연탄쿠폰 사업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바우처 수급자가 신청 여부 미인지 및 거동불편 등으로 바우처를 미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방문 사용안내 및 연탄사용 취약가구의 보일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사업운영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담센터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임.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의 4개 내역사업 중 연탄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에너지재단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별 보조사업자 및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예산안
에너지바우처(신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488,844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공장, 연탄수송업자 등	23,140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신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	3,311
사업운영비	한국에너지공단	-	1,872

주) 하절기·동절기바우처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에너지바우처(신규)로 통합 및 내역사업 신규 편성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개 내역사업 중 에너지정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탄쿠폰 사업만이 산업통상부에 잔류하고,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사업운영비에는 연탄사용 취약가구의 보일러 전환 및 상담센터, 정책 홍보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탄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됨.

따라서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연탄 구입 비용 지원 및 보일러 전환, 상담업무 및 정책 홍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탄쿠폰 내역사업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주요 유치국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컨설팅 지원사업’(7억 9,500만원), ‘국제기구 협력사업’(11억 1,000만원),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6억 5,400만원)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ODA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인 사업은 ‘스리랑카 에어컨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지원’(2026년도 예산안: 2억원), ‘케냐·세네갈 포용적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에너지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 지원’(2026년도 예산안: 6억 2,400만원) 등 2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산업통상부에 잔류할 예정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의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속	양자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활성화플랜 수립	2021~2025	1,13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마스터플랜 수립	2021~2025	1,230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관리자 양성교육센터 건립	2021~2025	1,100
		페루	페루 건물분야 수요관리 정책 및 시스템 도입 지원	2021~2025	1,300
		스리랑카	**스리랑카 에어컨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지원**	**2022~2026**	**1,800**
	다자성 양자	ADB	동남아시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2021~2025	1,124
		UNIDO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	2021~2025	950
		IEA	**케냐·세네갈 포용적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에너지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 지원**	**2025~2029**	**3,120**
신규	양자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역량강화	2026~2029	2,530
		페루	태양광 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시험운영	2026~2028	1,270
		인도네시아	영농형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이륜차 충전 시스템 구축	2026~2028	1,084
	다자성 양자	UNIDO	필리핀·라오스 산업 부문의 녹색 구조 전환 지원	2026~2030	2,430

주 1) 2025년 또는 2026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2) 볼드처리된 사업은 2026년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인 사업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의 취지 및 기존 사업추진체계 등을 고려하면 ODA의 일부 이관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향후 이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의 사무 중 에너지정책 사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이관 이후에도 태양광 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시험운영 사업(페루), 영농형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이륜차 충전 시스템 구축 사업(인도네시아)과 같이 에너지정책 관련 ODA가 여전히 산업통상부 소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관 기준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1)]

둘째, 기존 사업추진체계에 따르면 양자성 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다자성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였는데, 이번 이관 대상 사업의 범위에는 양자

1)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는 정부조직개편 이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무공해차 보급'(1633-3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무공해차 안심 보험'(1633-314) 등의 사업을 이미 수행하여 왔으므로, 무공해차 관련 사업이 산업통상부의 독자적 소관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성 사업과 다자성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관 기준이 기존 사업추진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2)]

위와 같이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관 간 관할 중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정책 추진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는 이관 기준이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조직개편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을 신속히 추계하여 개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여전히 조직개편에 따라 소요될 예정인 비용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차질 없이 속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임차료 등과 같이 개편 직후 곧바로 소요가 발생할 예정인 비용을 사전에 신속히 추계하여 그 내용을 예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개편은 인력의 증·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변동, 청사 이전·확충에 따른 임차료 및 공사비 등의 변동, 정보시스템 등의 신설·통합에 따른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등의 변동, 기관 명칭 변경 홍보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등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음.

상기한 비용은 사업 추진 이후 비로소 소요되는 사업비와 달리 조직 개편 직후 즉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편 이후 원활한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전에 관련 비용을 신속히 추계하여 예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조직개편 대상인 각 중앙행정기관별 개편 관련 비용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개편에 따른 인력 관련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홍보 비용 등을 추계한 상황이나,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여전히 조직개편에 따라 소요될 예정인 비용을 추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세부사업의 목적 및 향후 국제감축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명백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판단되는 에너지효율 및 IEA와의 협력사업을 이관대상으로 협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인력 관련 비용 추계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이관 후 기준)	증원 예상 규모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분	감원 예상 규모	감원에 따른 비용 감소 예상분
기후에너지 환경부	226명 (정무직 1, 고공 6, 3급 4, 4급 38, 5급 104, 6급 50, 7급 20, 8급 2, 9급 1)	21,212	-	-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51명 (고공 1, 3·4급 1, 4급 2, 4·5급 2, 5급 15, 6급 12, 7급 2, 8급 2, 공무직 3, 전문직위수당 3, 중요직무급수당 8)	3,934	4명 (차관급 2, 6급 1, 8급 1)	448
고용노동부	28명 (차관급 1, 고공 2, 4급 3, 5급 7, 6급 6, 7급 8, 9급 1)	2,472	4명 (4급 1, 5급 1, 7급 2)	324
중소벤처기업부	21명 (정무직 1, 4·5급 1, 5급 7, 6급 8, 7급 2, 공무직 2)	1,792	-	-
지식재산처	17명 (고공 1, 4급 4, 5급 9, 6급 2, 7급 1)	1,744	2명 (4·5급 2)	244
성평등가족부	17명 (고공 2, 4급 3, 5급 7, 6급 2, 7급 3)	1,432	-	-
국가데이터처	10명 (3급 2, 4급 2, 5급 이하 6)	1,158	-	-

주 1)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상 비용 포함
2) 기관 간 인력 이동에 따른 증·감원의 경우 증원에 대해서만 작성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기타 비용 추계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이관 후 기준)	세부 내용	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및 기후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비 811,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비용 순증분 427(증 1,302, 감 875), 증원에 따른 추가 SW 등 구입비 600, 시스템 증가에 따른 방화벽 및 통합관제솔루션 구매 8,561	10,399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연구 등 비용 3,000,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350	3,350
국가데이터처	시스템 신축 비용 1,700, 홍보 관련 비용 200, 신설국 기본경비 49	1,94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개편 관련 정책홍보 관련 비용 310,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등 증액분 404	714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확충에 따른 임차료 55, 시설장비유지비 22, 자산취득비 21, 차관 관사 임차보증금 380, 차관 전용차량 임차료 20, 국내여비 72, 업무추진비 52, 직책수행경비 16, 특근매식비 19, 기타운영비 15	67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홍보 관련 비용 360, 비상임위원 회의 관련 수당 170, 주거지 이사비용 지원 60, 역량강화교육 7	597
성평등가족부	정부청사별관 이용에 따른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41, 홍보 관련 비용 240, 고용평등정책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125	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원에 따른 기본경비 △291	△291
산업통상부	감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79, 공공요금 및 제세 △46, 임차료 △85, 시설장비유지비 △15, 현판 및 사무실 개편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5, 일반수용비 4	△186

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상 비용 포함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비용을 예비비가 아닌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나, 현재 행정안전부와 진행 중인 조직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간 역할 분담 및 인력 배치 계획 등도 구체화되지 않아 비용 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2025. 10. 1. 출범)이 「정부조직법」의 유예기간 1년 동안 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 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준비 중에 있는데,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임.

향후 각 중앙행정기관은 조직개편이 차질 없이 속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임차료 등과 같이 개편 직후 곧바로 소요가 발생할 예정인 비용을 사전에 신속히 추계하여 그 내용을 예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정책과제 분석



1.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가. 개 요

(1) 인공지능의 정의 및 인공지능 지원 사업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 법률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하고,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1)]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토록 규정하였고,[2)] 제13조제1항각호 및 제2항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생략)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에는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음.

정부는 현재 「인공지능(AI) 기본계획(2026~2030)」을 2025년 11월 중 수립할 예정으로, 이는 국가 차원의 AI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및 산업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임. 2025년 10월 현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향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주요 정책방향 중 일부 사업(초거대 AI 인프라 확충, 학습용 데이터 고도화, AI 전문인력 양성 및 GPU 등 인프라 구축 등)이 반영되어 있음.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

법률 조항		내용
제13조 제1항	제1호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제2호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 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제3호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 ·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제5호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 ·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제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제3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제5호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 ·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6호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제7호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 동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임
자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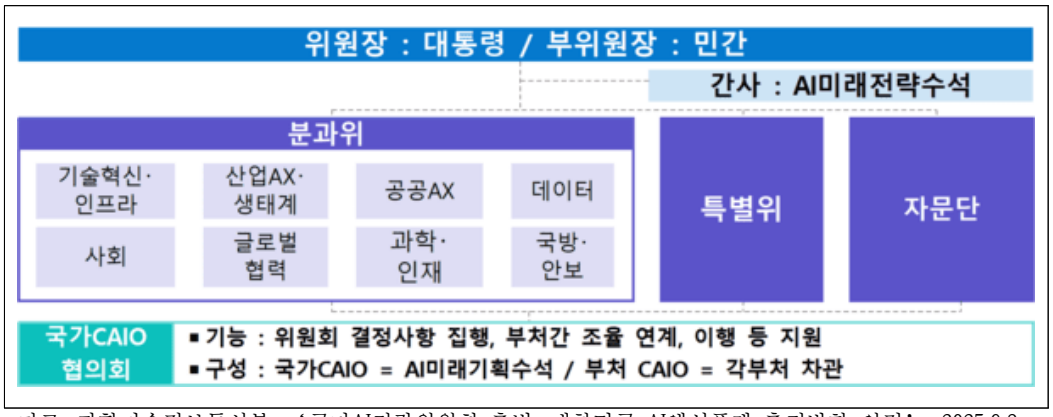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조정과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 관련 위원회를 구성 및 재편하게 되었음.

2024년 9월 26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25년 9월 4일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과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로 재편하였음. 참고로 AI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3)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의결', 2025.9.8.

AI전략위원회는 2025년 9월 8일 공식 출범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34명 및 52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었음.

---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둔다.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비 AI 전략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중장기 전략,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등 심의·의결 범위가 확대되었고, 위원 및 부위원장이 증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명하는 등 산하 협의회가 신설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현황]

구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024.9.~2025.9.)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5.9.~)
역할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등	※ 심의·의결 범위에 아래 사항 추가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 관리
구성	·위원 45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0명, 부위원장 3명으로 확대 ·민간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
산하 협의회 신설	-	·위원회 참여 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명 ·인공지능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 기사 참조하여 재가공

2025년 9월 11일 AI전략위원회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 ②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③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및 ④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논의하였음.

우선, 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며,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기여하려는 3대 정책축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AI전략위원회는 3대 정책축 달성을 위한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하여 각 부처의 세부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2025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



자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의결', 2025.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그리고 '②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공지능 생태계 지원기반 마련과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다만, 대규모 인공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므로,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고, 민간 지분율 확대(49%→70%), 매수 청구권 삭제, 국산 AI 반도체 의무조건 제거 등 공모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1만 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까지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컴퓨팅 및 네트워크 등 AI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인공지능 고속도로)할 계획임.

다음, '③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및 ④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5]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마련 중에 있음.

5)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

이와 같은 AI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기본계획(2026~2030)」은 2025년 11월 중 수립될 예정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및 합목적성 등을 심사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개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생활·공공 전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과 인공지능 활용의 토대가 되는 GPU 등 하드웨어 조성 및 AI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성 관련 총 10조 1,398억원을 편성하였음.[6)]

우선 산업 측면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스마트팩토리 등 중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AX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혁신을 촉진하고자 하였고,

다음 생활 측면에서는 10개 부처 소관 사업으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선정하여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AX-Sprint 300’ 사업이 편성되었고, 공공 측면에서는 공공 AX 프로젝트를 1,000억원 편성하고 복지·고용·납세 등 공공부문에 AI를 도입 및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기반조성 측면에서는, 고성능 GPU 구매, 인공지능 전주기(데이터·GPU·클라우드) 바우처 지급,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등 인프라 조성과 함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맞춤형 교육 등 전국민 AI 확산(Boom-up)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AI 3강을 위한 전환과 관련하여 41개 부처, 702개 사업으로 총 10조 1,398억 400만원이 편성됨.

사업 수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개, 산업통상부 70개, 국토교통부 41개, 해양수산부 35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조 940억 2,500만원, 산업통상부 1조 8,799억 6,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9,818억 1,100만원, 고용노동부 2,560억 6,500만원, 국토교통부 2,417억 3,300만원 순임.

6)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처별 AI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기획재정부	10	33,88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5,094,025
3	교육부	13	140,788
4	외교부	1	13,962
5	법무부	6	16,517
6	국방부	13	134,899
7	행정안전부	16	78,816
8	문화체육관광부	17	68,139
9	농림축산식품부	14	182,698
10	산업통상부(舊 산업통상자원부)	70	1,879,960
11	보건복지부	26	206,507
12	기후에너지환경부(舊 환경부)	21	167,761
13	고용노동부	19	256,065
14	국토교통부	41	241,733
15	해양수산부	35	143,990
16	중소벤처기업부	21	981,811
17	대통령경호처	1	1,800
18	금융위원회	3	200,562
19	국민권익위원회	1	449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14,540
21	국세청	3	4,761
22	관세청	1	836
23	조달청	1	552
24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7	2,635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25	우주항공청	5	8,712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舊 방송통신위원회)	4	1,059
27	대법원	3	11,047
28	법제처	1	2,684
29	방위사업청	1	627
30	병무청	1	523
31	인사혁신처	2	5,336
32	경찰청	16	54,211
33	소방청	3	4,922
34	국가유산청	3	4,420
35	농촌진흥청	17	46,133
36	산림청	15	39,050
37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1	1,750
38	식품의약품안전처	7	37,249
39	질병관리청	6	37,176
40	기상청	5	17,753
41	해양경찰청	10	19,917
합 계		702	10,139,804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AI 전환 사업 분류의 적정성 검토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조사한 AI 사업 예산 규모와 기획재정부 및 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예산 규모 간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AI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처별 자체 판단 및 상위기관의 분류상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에서 판단하고 있는 AI 사업 현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개별 부처 기준으로는 44개 부처 555개 사업에 대하여 총 7조 7,551억 500만원이 AI 사업으로 조사되었음.[7)]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한 AI 사업 예산안 10조 1,398억 400만원에 비해 2조 3,846억 9,900만원이 적은 규모이고, 개별 부처에서는 AI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부처는 국회,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통일부 및 국가보훈부 등 총 5개임.

또한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및 조달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AI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류하였으나, 소관 부처에서는 수행하는 AI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2026년도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분류 AI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명	각 부처 제출		AI전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세부사업수	2026년 예산안	세부사업수	2026년 예산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	4,389,764	256	5,094,025
2	산업통상부	43	1,222,468	70	1,879,960
3	중소벤처기업부	11	291,990	21	981,811
4	고용노동부	14	275,367	19	256,065
5	문화체육관광부	25	183,868	17	68,139
6	농림축산식품부	7	151,860	14	182,698
7	보건복지부	30	142,459	26	206,507
8	교육부	19	129,031	13	140,788
9	국방부	4	110,502	13	134,899
10	국토교통부	16	98,530	41	241,733

7)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총 61개 부처를 대상으로 ① AI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AI 산업(AI+X) 지원 사업 및 ②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AI 활용산업(X+AI)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명	각 부처 제출		AI전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세부사업수	2026년 예산안	세부사업수	2026년 예산안
11	행정안전부	11	91,142	16	78,816
12	법무부	5	81,403	6	16,517
13	경찰청	36	75,178	16	54,211
14	해양수산부	16	73,150	35	143,990
15	기후에너지환경부	15	72,579	21	167,761
16	방위사업청	3	69,852	1	627
17	농촌진흥청	22	52,496	17	46,133
18	산림청	11	42,074	15	39,050
1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39,972	7	37,249
20	해양경찰청	8	22,364	10	19,917
21	기획재정부	7	21,899	10	33,886
22	국회	8	18,227	-	-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17,206	6	14,540
24	성평등가족부	1	15,248	-	-
25	외교부	1	10,741	1	13,962
26	인사혁신처	3	8,249	2	5,336
27	기상청	1	6,353	5	17,753
28	국세청	3	4,761	3	4,761
29	국가유산청	2	4,250	3	4,420
30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	4,178	-	-
31	질병관리청	1	4,152	6	37,176
32	지식재산처	2	3,608	1	1,750
33	국민권익위원회	1	3,406	1	449
34	법제처	1	3,344	1	2,684
35	통일부	1	2,785	-	-
36	국무조정실	2	2,558	-	-
37	국가데이터처	6	1,694	7	2,635
38	소방청	1	1,393	3	4,922
39	금융위원회	4	1,320	3	200,562
40	우주항공청	7	1,176	5	8,712
4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1,059	4	1,059
42	관세청	1	836	1	836
43	병무청	1	523	1	523
44	국가보훈부	1	90	-	-
45	대법원	-	-	3	11,047
46	대통령경호처	-	-	1	1,800
47	조달청	-	-	1	552
합계		555	7,755,105	702	10,139,804

주)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한편, 소관 부처에서는 AI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약 10조원에 포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사업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사업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 중 '기계채널 표적 혁신진통제 개발단', '노화면역 정밀 제어 혁신치료제 개발단', '신경질환 리밸런싱 혁신기술 개발단' 등 11개 과제는 AI 사업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연구개발(R&D) 과제로서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AI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8)]

또한 소관 부처에서도 AI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던 교육부의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9)] 국방부의 '국방조직정원체계 고도화 사업 BPR/ISP' 사업,[10)]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1)]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12)] 및 환경부의 '환경문제 생물종 연구' 및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사업[13)]도 실제로 AI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AI 사업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음.

8) 이 차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R&D 사업이 AI와 전문영역(바이오, 반도체 등)의 융복합 성격을 지님에 따라 부처는 바이오, 반도체로 분류하여 AI 사업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실제로는 AI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AI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AI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제기준,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빠진 사업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9) 이는 해외한국유학 홍보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임.

10) 이는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응용체계 개발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것임.

11) 이는 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및 메가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12) 이는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분야(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현장활용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13) '환경문제 생물종 연구' 사업은 외래종 퇴치 및 수입 대체 실험생물 발굴 등을 위해 자생생물종을 탐색하고 자생 생물 유래 독성물질의 정보 확보 및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것이고,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사업은 국립생태원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기획재정부 분류에만 포함된 일부 AI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기계채널 표적 혁신진통제 개발단	4,370
		노화면역 정밀 제어 혁신치료제 개발단	4,734
		신경질환 리밸런싱 혁신기술 개발단	6,555
		저출산 극복 난임 해결기술 개발단	4,435
		한반도탄소위기극복기술개발단	3,642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K-위스키전략개발단	2,913
		식품공정전자동화전략개발단	4,224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기술개발 및 실증	4,312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가속화플랫폼기반항생제내성균대응치료제개발 사업(사업비)	4,734
		자율 실험 시스템 기반 첨단 소재 신속 Scale-up 개발 사업	5,098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지원 (R&D)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전략개발단	2,039
교육부	학생교육 교류 지원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610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유지 (정보화)	국방조직정원체계 고도화 사업 BPR/ISP	411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	200,000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 연구개발(R&D)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500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환경문제 생물종 연구	513
	국립생태원 출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4,69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처럼 부처별로 AI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AI 기술의 직접적인 개발·활용과 관련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AI 사업으로 포함되거나, 실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개별 부처는 이를 AI 사업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14)]

14) 대법원의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내역사업 42억 3,900만원,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 65억 7,800만원 및 ‘등기정보(권리)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ISP’ 내역사업 2억 3,000만원과 대통령경호처의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 사업 18억원 및 조달청의 ‘시스템 구축(AI기반 공사원가검증시스템 구축 ISP)’ 사업 5억 5,200만원의 경우, 실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개별 부처에서는 이를 AI 관련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이러한 부처 간 인식 차이와 분류상의 불일치는 정부 전체의 AI 예산 관리 및 전략 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AI 투자 규모나 추진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 예산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AI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별 자체 판단 및 상위기관의 분류상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AX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AX 스프린트) 사업

정부는 AI 융합산업 중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산업통상부 등 10개 부처에 ‘AX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9,34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까지 총 사업비는 1조 1,570억 8,300만원임.

‘Type 1’은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 및 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으로 1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가능한 품목을 의미하고, ‘Type 2’는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 융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될 예정임.

이 사업의 총괄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시제품 개발·검증하는 단계(TRL 5 이상)부터[15]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TRL 5보다 낮은 단계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유형
  - Type 1(145개社): 1년 내 즉시 개발이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 Type 2(155개社):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2년 지원)
- 사업기간/유형: 2026~2027년 / 출연 또는 보조(민간매칭 10~20%)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 산업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 10개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산업부	65개	2,625	2,100	농림부	30개	1,125	90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해수부	25개	937.5	75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자료:「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15)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를 의미하고, 이는 어떤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단계별로 평가하는 척도임.

(가) 부처 간 지원대상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중복투자 및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공고나 공동심사 등을 통해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제조, 농 · 축 · 어업, 바이오 · 헬스 · 환경, 보안 · 방산, 국토 · 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지원될 계획이나, 이러한 분류는 정부 부처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것이므로 부처 간 중복투자 및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각 부처가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공통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AI 분야 IT 기술에는 BT(생명), NT(나노소재), CT(문화), 건축, 자동차 등이 결합된 융합기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법률(법무부), 문화콘텐츠(게임 · 영화 등, 문체부), 금융(기재부, 금융위) 등 어느 분야에도 포함되지 않는 AI 기술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사업구조]



따라서 정부는 통합공고 또는 공동심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대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사업수행 이전에 지원대상 제품 선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AI 상용화를 고려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현재 부처별 성과지표가 단기적·정량적 성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기술 상용화의 지속성·산업 현장 활용도·서비스 신뢰성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중장기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분기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화 진행단계 등 실적을 관리하되 사업화 성공률,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각 분야별 상용화 지원 건수로 관리할 계획임.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과는 국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AI 응용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소비자 확대에 기여하는 등 AI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단기적·정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거나, 과제선정 후 과제비 지급만 이루어지면 달성 가능한 성격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부는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이 사업의 환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제품 실제 활용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자산구축 성과 및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 등 미래지향적이고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관리 필요

일부 부처의 AX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정부는 신속히 검토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예산안이 편성된 부처 중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8월「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동법 제38조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6)]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16)「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신속한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 구체화 필요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신속히 수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에서는 9월 이후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을 진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경우 10월 현재 1~2년 이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1~2년 이내에 성과 도출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비지원 규모를 80% 이내로 예정하고 있어 과제별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 매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 확인 등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17]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년 내와 2년 내 상용화를 구분하는 기준, AI를 응용하는 대상 및 기술성숙도(TRL) 수준이 추상적으로만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17)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0월 1일~ 24일에 걸쳐 다양한 업계 수요를 발굴하고, 11월 ~ 12월 과제 기획위원회를 통해 유망 후보 과제 군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임.

(3) 지역 특화산업 간 연계한 AI 전환 사업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18]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 조성 및 대규모 AX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에 2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350억원이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가)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첫째,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은 일상생활 및 지역 특화산업(모빌리티, 에너지)의 AX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과 AX 실증지원 인프라인 AX 실증 밸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억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19] 다만 2025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18)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등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함.

19)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은 5년간 국비 3,600억원, 지방비 1,473억원, 민간자금 927억원으로 총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169억 6,700만원이 편성되고,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7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래사회 기반 선도와 사회 전반의 AX를 촉진하는 AI 기술 확보 및 개방형 AI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AX R&D·실증의 핵심 거점 조성 ・(기간) 5년(2026~2030) ・(사업비) 6,000억원 * 국비 3,600억원(과기부 2,545억원, 산자부 1,055억원), 지방비 1,473억원, 민자 927억원 ・(사업내용) ① 광주형 ‘모두의 AI’ 구현 (과기정통부/총사업비 1,010억원) - 시민참여·시니어케어·공공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실증, 도시·생활 AX(대중교통노선 최적화, 비침습 임산부 건강관리 등) ② 자율주행 AX (과기정통부-산업부/총사업비 1,597억원) -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스스로 학습·판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유연생산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기반 차량 제조 공정 최적화(산업부) ③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안전 (산업부/총사업비 1,069억원) -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전력망 공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전력망 자율운영 기술 및 ESS 화재 예방 기술 개발 ④ AX 인프라 조성 (과기정통부/총사업비 2,234억원) - AI 개발부터 실증·사업화 One-Stop 지원센터(AI InnoSpace) 및 AI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동법 제38조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0)]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에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RFP) 작성,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별도로 지방비 확보도 필요하므로 향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 중 일부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함께 진행하는 다부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내 과제수행 기간을 각각 달리 편성하였으므로, 다부처 사업 관련 예산안 편성 시 부처간 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자율주행 AX’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과제와 산업통상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과제가 함께 진행되는 다부처 사업임.

산업통상부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9개월분으로 계획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 및 과제 공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4.5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안만 편성하였음.

그러나 산업통상부도 2025년 4분기 또는 2026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과제 수행 시점 일치 여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다부처 사업 예산안 편성 시에는 사업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처 간에 과제 추진절차 및 일정에 대해 면밀히 협의함으로써 다부처 사업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국비로 AI 인프라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한 AI 인력양성, AI 솔루션 등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AI 연수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AI 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AI 인프라 구축 예산 350억원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AI사업단을 갖추어 AI 인력 양성, AI 솔루션 개발·보급, 산학연 연계, 학습 데이터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AI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게 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수행하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및 제주 5개 지역의 경우 AI 인력양성과 AI 솔루션 도입·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AI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사전준비 및 기획 정도에 따라

AI 인력양성 및 AI 솔루션 도입·활용 관련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AI 인력양성 및 AI 솔루션 도입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내 제조AI 데이터셋 및 AI 솔루션 실증사례 등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4) 공공부문의 AI 전환 사업

정부는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공 AX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국민안전·재난대응,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 및 국내 NPU 수요 창출 등을 도모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 1,000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에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 공공 AX 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2026년도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과제선정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실제 과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도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및 AI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0억원(566.7%)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치고 2026년 3월부터 신규 과제 수행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 경우 2026년도(1차년도) 3월 ~ 12월의 과업수행 기간(10개월) 및 2026년도(2차년도) 과업수행 기간(12개월)의 비율을 고려하면 1차년도 예산은 총 과제비의 45%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2025년 신규 선정과제에 대하여 약 2개월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평가를 진행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평가대상이 되는 과업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유효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과업의 질적 완성도나 과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유효한

21) 이는 2025년에 선정된 기존과제의 계속지원을 위한 예산 450억원과 신규과제 25개 선정을 위한 550억원으로 구성됨.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다부처 참여 유형을 신설할 계획인데, 기존 과제(2년간 30억원)에 비하여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제기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참여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의체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처 간 역할 및 이견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간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의 데이터와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는 다부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나, 2025년 10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기획이나 수요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의 전제가 되는 대표 공정도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사업 간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은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는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개발완료된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여 공정 분석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고, 제조현장 진단 및 후속 R&D가 진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대표 공정도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정정보에 해당함.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개 전문연구기관이 각각 20개의 대표공정을 분석하여 총 80종의 대표 공정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2025년 9월 현재에는 77종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2025년 말 80종이 모두 구축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계획 수립 이전까지 해당 사업의 전제가 되는 국가표준연구 사업의 사업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가표준연구 및 차년도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의 사업계획을 연계하여 사업 준비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의 수요기관 선정 시 추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은 현재 관제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AI 반도체는 외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 분야의 국산 NPU 수요 창출을 위하여 공공 CCTV의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및 신규 구축·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사업은 추론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 학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AI CCTV용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함.[23]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기관 선정 시 국산 NPU에 학습 및 추론 관련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2) 일반회계-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2033-416)(정보통신정책관)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CCTV 전문 업체로부터 학습이 완료된 AI CCTV용 AI 모델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 학습하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학습이 완료된 AI CCTV 솔루션을 납품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임.

(5) AI 인력양성 사업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확대하여 국내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청년인재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하고,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자격제도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 붐업(Boom-up)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① ‘AI 전사양성’ 사업으로 103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AI 중심대학’ 사업으로 2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으로 1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④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으로 5,213억 1,3000만원과 ⑥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기초역량 훈련’ 사업 2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⑦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으로 41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⑧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 23억원, ⑨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 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⑩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으로 1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 AI 전사양성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사양성 사업을 통한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4대 과학기술원에 AI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학사과정에서부터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 및 학과 커리큘럼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AI 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임교원

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국내 AI 전임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025년 9월 말 기준 각 과학기술원의 AI 전임교원 수는 2026년에 필요한 AI 전임교원 수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고, 해외 인재 초빙을 병행하는 등 양질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AI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과학기술원은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존 전산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수업과 차별화되는 신규 강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나) AI 중심대학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중심대학 사업을 통하여 기존 SW중심대학 일부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인데, 전환 대상 대학 선정을 위한 공고가 2025년 12월 이후에야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SW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되는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AI중심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신규 선정 예정인 10개의 AI중심대학 중 7개는 기존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원 중인 SW중심대학 중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인바,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월부터 전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 경 AI중심대학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에 SW중심대학 중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할 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공고 및 선정평가 절차는 2025년 12월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 SW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2026년도 1학기부터 AI중심대학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24)]

24) [AI중심대학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
~2025.10월	AI중심대학 추진방안(안) 관련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2025.12월	2026년도 AI중심대학 추진계획 수립
2025.12월~2026.5월	AI중심대학 전환 및 신규대학 선정 공고 및 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AI과정과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에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특별훈련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훈련기관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훈련기관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보임. 2025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훈련기관 318곳 중 수도권에 245개 기관(77.0%)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참여인원 2만 8,682명 중 2만 6,652명(92.9%)이 수도권 소재 훈련기관에 참여하였음.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특별훈련수당을 더 지급하려는 계획인데,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비수도권에 기초적인 훈련 인프라와 훈련기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수요에 상응하는 훈련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 구축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음.

(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기초역량훈련 사업(고용노동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에서 정량성과 미흡을 사유로 '감액' 등급을 부여받았으므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부담률 인상 등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결과에서 정량적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감액 등급을 부여 받았으나,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AI 대전환 등 최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I 리터러시 등 AI 분야의 기초 훈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 대응을 위해 감액 없이 전년 수준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의 예산편성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를 실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훈련비 자부담액을 적절히 인상하라는 내용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25]을 참고하여 자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훈련비 자부담액을 적절히 인상하여 훈련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임.

(마)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행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선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 및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의 선행사업인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아직 참가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2026년 10월이 되어서야 수상팀에 대한 후속연구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선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으로 추진된 선행사업과 달리 2026년도 후속사업을 비 R&D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담기관을 달리 지정할 계획이므로 전담기관 간 성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행사업인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R&D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담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지정한 것과 달리, 2026년도 후속사업인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계획임.

전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선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후속사업에 반영하거나 선행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연계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 간 성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은 모든 참여자에게 기초교육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교육 참여자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대학 학과의 4학년 전공 과정을 10개월의 집중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26]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를 중심으로 인턴십 및 스타트업 연계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설계됨.

---

26) 구체적으로는, IT기초·인공지능 초급교육(2개월) → 특화기초교육(1개월) → 인턴십 / 특화심화교육(4개월) →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2개월) → 채용매칭 및 창업연계(1개월)으로 진행됨.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참여자의 IT 활용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IT 기초교육부터 진행하여 일부 참여자의 경우 비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IT 활용역량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인턴십 및 실습 프로젝트가 인공지능과 관련성이 있는 4대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 산업군별로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연계산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은 2025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AI 교육과정 로드맵을 적기에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2026년 AI 교육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2억 3,000만원)을 통해 분야별 현장맞춤 실습형 신규과정을 13개 개발하고, 직무별로 AI 이해-적용-내재화의 단계별 AI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중소기업 AI 교육과정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임.

또한 AI 활용 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수도권의 AI 인력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6개 연수원(안산, 태백,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안산, 천안, 광주, 전주, 경산, 창원)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중심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별 AI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첫째, 소상공인이 AI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AI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의 1단계 기초 교육의 경우, AI 입문자를 위해 업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공통교육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활동에 즉시 활용가능한 실습 중심의 업종별 특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AI 공통교육 및 특화교육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아직 AI 교육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운영기관별 편차 발생 및 낮은 교육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권역별 운영기관 및 AI 전담멘토에 따라 교육내용 및 성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협의 및 선정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 추진시 2026년 1월 민간 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수출 전문성과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한 우수 운영기관을 지정하되,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역별 참여 주관기관·기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원 및 산업계 지원시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산업통상부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적합한 기관으로 보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AI 툴을 가르치는 기초교육 외에도, 업종(서비스·제조) 및 경영 분야별로 AI를 활용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운영기관의 AI 및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관련 전문성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 5개 신규 선정과제 중 1개 과제만 해외인재 채용이 완료되어 과제 수행 중이므로, 과제별 해외인재 채용 시점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6월 WBL(World Best LLM) 참가팀 공모와 연계하여 공모를 진행하여 2025년 8월 1개 팀을 선정하였고, 이후 재공고를 통하여 총 5개 팀을 선정하였음.

이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되고, 2026년 예산안에는 계속과제 5개에 대하여 12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을 채용하여 지원 중인 과제는 5개 과제 중 1개 과제밖에 없고 나머지 과제는 해외인재 채용을 진행 중인 상황임. 해외인재에 대한 인건비, 체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상 해외인재가 채용되고 연구개발을 수행한 시점부터 과제비가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인재 채용시점을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현지 인력에 대해 한국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인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은, 현재 전 산업군에 걸친 인공지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임.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구인난에 시달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인력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현지 대학 재학생에게 한국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취업을 연계하려는 사업임.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전 산업군에 걸친 인공지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한국어 교육까지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언어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에게 단기간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국내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참고로 2024년 사업은 교육생 200명 중 취업자 수는 107명에 불과하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교육생 122명 중 취업자 수는 61명으로, 교육생 중 절반 정도만 실제 국내 기업 취업연계에 성공하여 사업성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6) AI 인프라 구축 사업

정부는 최신 고성능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등 AI 인프라와 관련된 전주기 바우처를 지급하며,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GPU 서버 확충’ 사업에 1조 3,999억원이 편성되어 GPU 서버 1,875대(GPU 총 15,000장)를 구축할 계획이고, GPU 서버 확충에 따른 대규모 클러스터 비용을 지원하는 등 통합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 6,8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성능컴퓨팅자원·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AI 통합바우처’ 사업 898억원이 반영되었음.

또한 데이터 공유·유통 환경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 120억원이 편성되었고, 공공부문 대규모 정보시스템(공공 의료기관 등) 대상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AI클라우드서비스개발지원’ 사업 150억원이 반영됨.

GPU 등 AI 컴퓨팅 관련 인프라 외에도 AI 기반의 분산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및 ESS 구축 지원 예산도 반영되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으로 1,176억원과 ‘AI 기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72억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AI 산업의 확대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I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부하가 지역 전력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전력공급 안정화 대책도 필수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27)]

---

27)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출처: TV조선, AI 기술 경쟁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2030년엔 현재의 4배”, 2025.4.10.)
“AI와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기신문, AI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분산전원・초전도・SMR로 대응, 2025.8.25.)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돌려야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오픈AI의 챗GPT는 학습을 위해 수천, 수만 대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 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도 크다. 챗GPT에 한 번만 검색해도 일반 웹보다 약 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경 ESG,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빅테크, 재생에너지 확보 총력전, 2025.9.3.)

(가)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6년 중 구축 예정인 GPU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26년 사업자 선정 시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GPU의 구축·관리나 운영비용 등의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고, 이를 통해 GPU 서버 1,875대(GPU 총 15,000장)를 구축할 계획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조원을 투입하여 13,136장 규모의 GPU를 구축하고, 그 중 10,456장의 GPU 서버는 정부활용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GPU를 활용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나 국내 산학연에 대한 공급방안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

[GPU 서버 확충 계획 수량]

(단위: 대, 백만원)

서버	구성	수량	구매 단가	통합운영환경 구축 단가	총 구축 비용
DGX B200	B200 8장 (총 15,000장)	1,875	746.6	364.4	2,083,125

주) 단가 산정 시 환율은 $1=1,450원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는 AI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정부구매 GPU 활용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또한 2025~2026년 단기간에 대규모 GPU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GPU 서버 구축 역량 부족 또는 운영비용의 과다 산정 등의 문제로 2025년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사업자가 2026년에 다시 선정되면서 GPU 구축 조건이 기존보다 악화될 우려도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6년 중 구축 예정인 GPU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26년 사업자 선정 시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GPU의 구축·관리나 운영비용 등의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공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데이터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면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보안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SI(System Integration) 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SaaS형은 기존 SI형에 초기 도입 비용이 낮고 확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간 데이터 연동 가능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병원의 특수한 수요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연계됨에 따라 기존 내부망을 활용하는 SI 방식에 비하여 정보 보안에 취약해지는 단점도 존재함.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정보시스템을 SaaS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여러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에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기존 SI 구축형에 비하여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참여 기업의 데이터 보안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S&T 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별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GPU 자원 확보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초미세 반도체, 우주 탐사, 양자 컴퓨팅, 차세대 이차전지, 친환경 신기술, 미래 에너지 등 6개 분야의 AI+S&T[28]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S&T 특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AI+S&T 전용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AI+S&T 특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및 '국가 플래그십 초고

28) AI+S&T는 AI를 S&T(Science & Technology)에 접목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장기 실험이 필요한 고난이도 연구에 AI 모델을 개발·적용하여 원천기술 R&D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것임.

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GPU 자원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AI+S&T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GPU 자원 확보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데이터 스페이스 중 의료분야의 경우 이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데이터 개방(무료)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목적 간에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기획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6개 분야(의료, 재난·안전, 제조, 법률, 미디어 등)에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특히, 데이터 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의료 분야의 경우 기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사업은 데이터 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 이 경우 데이터를 수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 사업과 기존의 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책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개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개선될수록, 이 사업의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라)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최근의 ESS 단가 하락 추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PCS·EMS·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계획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를 고려하여 5억 6,000만원/MWh의 단가로 1,196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그러나 과거 사업 예산편성 당시 ESS 평균 단가를 살펴보면, 2017년 9.9억원/MWh에서 2018년 8.12억원/MWh, 2019년 6.95억원/MWh으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5.15억원/MWh까지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4.25억원/MWh을 단가로 설정하여 편성되었음. 또한 ESS의 단가는 규모,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크고 원자재가 저렴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년도 예산편성 당시 계획한 ESS 단가는 ESS 배터리[29] 뿐만 아니라 PCS[30], EMS, 공사비 등 합한 단가이며, 나라장터 ESS 평균 단가도 12~15억원/MWh 수준이므로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임.

따라서 이 사업 예산안 규모는 ① 최근 ESS 단가 하락 추세, ESS 규모 및 배터리의 종류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되, ② 향후 진행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③ ESS 배터리와 PCS, EMS,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단순히 동일한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지의 재정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농공단지, 대학캠퍼스에 분산 자원을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7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캠퍼스에 구축되는 설비(태양광, ESS, 플랫폼 등)가 유사하고, 산단 입주기업 및 캠퍼스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율을 70%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농공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캠퍼스에 비해 민간 매칭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형별 재정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SS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하이며, 비중을 고려할 때 ESS 전체 단가는 MWh 당 5억원 이상이라는 입장임.

30)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변환장치)란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외부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할 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란 ESS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임.

(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은 민간참여자 범위에 지자체·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고,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1,600억원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부의존적 구조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 민간출자 최소 조성비율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민간참여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 사업은 2030년까지 민·관 공동 출자로 총 2,900억원(정부출자 1,4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 예산안은 국가 농업 AX 플랫폼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출자금 700억원과 운영지원금 5억원으로 구성됨.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 개요]

ㅇ **(2026년도 예산안)**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출자금 700억원 - 플랫폼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원 ㅇ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026년~2030년, 총 2,900억원(정부출자 1,4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ㅇ **(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 선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컨소시엄은 농업경영체, 농식품·농산업 기업, 민간 금융기관, 해외 유통채널, 지자체 등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해외유통채널, 민간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외에 지자체와 도시공사까지 민간참여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민간자본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시장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기관을 민간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필요 시 정책금융기관 대출 1,6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자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 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존재함.

따라서 민간출자 최소 조성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재원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해 보임.

(7) AI 연구기반 조성 사업

정부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31] 준비 프로젝트, 피지컬 AI[32] 선도기술 및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①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7대 도메인(A·B·C·D·E·F·G)[33] 관련 버티컬 AI[34]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에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 AGI 준비 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에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국가 AGI 연구소의 형태나 설립 방안에 대한 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AGI 준비 프로젝트사업은 해외 국가AI 연구소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AGI 연구소 모델(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 민·관 협력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출자하는 사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 연구를 2026년도 상반기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획 연구 결과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한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예산 200억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인바,

조속히 기획 연구를 마무리하여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31)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범용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직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AI를 AGI로 평가할 수 있음.

32) 피지컬AI란 공간, 환경 등 ①물리세계를 인식하고 ②학습·판단하여 ③물리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정형 환경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의미하며, 예기치 못한 환경이나 복잡·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여 운전(자율주행), 조립(제조), 운반(물류)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33) A(Quantum Base AI), B(AI+Bio), C(AI+Culture), D(AI+Defence), E(AI+Energy+Material), F(AI+Factory+Mobility), G(AI+Green Intelligent Marine Technology)

34) 버티컬 AI(Vertical AI)란 도메인 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도메인에 전문화된 AI를 의미함.

(나)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공모 없이 기업과 대학 등을 결집한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데, 민간 중심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하는 사례가 처음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연계·활용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조건과 성과공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별도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AI전략위원회를 통해 산·학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기본적으로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정책지정 사례가 많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사업과 같이 민간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 사업의 경우 2년간 12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지정에 앞서 민간기업 참여 조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 성과물을 민간·학계·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주체가 민간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구개발성과 활용·연계를 위한 사전협의도 필요함.

(다)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5년간 국비 2,179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Vertical AI 국가특임연구원을 결집하여 AX 대전환에 필수적인 SOTA[35] Vertical AI 개발·지원을 위해 연구지원센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설기관으로 신설·운영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비 400억원을 지원하여 46명의 인력채용, 업무공간

35) SOTA(State Of The Art): 특정 도메인에서 학습 속도, 의사결정 능력 등이 논문·실험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명된 모델

임대 등을 진행하고 향후 2030년까지 152명 규모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최소 2,179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임. 이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

둘째,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은 신규 인력 4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가 모두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력 채용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그러나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획 중인 부설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인력채용, 시설·장비 임차 등 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절차 준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36] 실제 사업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구축·운영을 위하여 2025년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부설기관 설치·운영 규정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 중 센터장 선임, 청사 임차, GPU 임차 등 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주요 과학기술 도메인별(바이오, 에너지 등) 버티컬AI 모델 개발에 착수할 계획임.

2. 국가 R&D

가. 개 요

(1) 현황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은 35조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6,981억원(19.3%) 증가하였음.

[2026년도 국가 R&D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R&D	295,968	297,033	352,949	56,981	19.3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3%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5% 내외의 증가율로 계획되어 있음.

[2022~2029년 국가 R&D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2027(안)	2028(안)	2029(안)
R&D분야 (A)	29.8 (8.8)	31.1 (4.3)	26.5 (△14.8)	29.6 (11.5)	35.3 (19.3)	37.3 (5.8)	39.4 (5.5)	41.4 (5.1)
정부총지출 (B)	607.7 (8.9)	638.7 (5.1)	656.6 (2.8)	673.3 (2.5)	728.0 (8.1)	764.4 (5.0)	802.6 (5.0)	834.7 (4.0)
비중(A/B)	4.9	4.9	4.0	4.4	4.8	4.9	4.9	5.0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국가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1] 및 동법 시행령[2]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됨.

주요 R&D 사업은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 ⑤ 다부처 R&D 등이 포함되며,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됨.

참고로, 주요 R&D에 속하는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일반 R&D 사업은 주요 R&D 사업이 아닌 R&D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안을 편성함.

2026년도 주요 R&D 예산안은 30조 98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R&D 예산안의 85.3%를 차지함. 일반 R&D 예산안은 5조 1,96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R&D 예산의 14.7%를 차지함.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R&D 및 일반 R&D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주요 R&D(A)	224,894	242,363	249,392	219,319	247,944	249,009	300,982	6.0
일반 R&D	49,112	55,407	61,386	46,050	48,024	48,024	51,967	1.1
(이관 후)*	(36,165)	(41,735)	(43,770)					
전체 R&D(B)	274,005	297,770	310,778	265,369	295,968	297,033	352,949	5.2
(이관 후)*	(261,058)	(284,099)	(293,163)					
비율(A/B)	82.1	81.4	80.2	82.6	83.8	83.8	85.3	

주) 2024년 R&D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비R&D로 이관한 사업을 제외하여 작성하였으며, 이관 후 남은 금액은 괄호로 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R&D 예산안이 편성된 부·처·청·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조 6,120억원), 방위사업청(5조 8,381억원), 산업통상부(5조 1,958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부처의 R&D 예산안의 합계는 22조 6,459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안의 64.2%를 차지함.

증감액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대비 1조 9,712억원(20.4%)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방위사업청이 2025년 대비 9,487억원(19.4%) 증가하여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이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R&D 예산이 순증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에 R&D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R&D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R&D 예산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R&D 예산안의 소관별·회계별 분류]

(단위: 억원, %)

부처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과기부	일반회계	73,880	89,556	15,676	21.2
	에특회계	4,207	4,648	441	10.5
	소특회계	4,158	4,635	477	11.5
	지특회계	4,542	7,560	3,018	66.4
	우특회계	4	8	4	100.0
	고특회계	1,092	1,413	321	29.4
	과진기금	549	581	32	5.8
	원기금	1,922	2,316	394	20.5
	방발기금	3,153	2,771	△382	△12.1
	정진기금	2,901	2,632	△269	△9.3
	소계	**96,408**	**116,120**	**19,712**	**20.4**
방사청	일반회계	48,894	58,381	9,487	19.4
	소계	**48,894**	**58,381**	**9,487**	**19.4**
산업부	일반회계	24,172	30,433	6,261	25.9
	소특회계	18,158	19,445	1,287	7.1
	에특회계	320	328	8	2.5
	지특회계	1,403	1,521	118	8.4
	산촉기금	155	232	77	49.7
	소계	**44,208**	**51,958**	**7,750**	**17.5**
중기부	일반회계	13,442	19,999	6,556	48.8
	소특회계	357	106	△251	△70.3
	지특회계	1,370	1,851	480	35.1
	소계	**15,170**	**21,955**	**6,786**	**44.7**
교육부	고특회계	13,796	14,306	510	3.7
	소계	**13,796**	**14,306**	**510**	**3.7**
복지부	일반회계	9,672	10,993	1,321	13.7
	지특회계	-	51	51	순증
	책특회계	112	113	1	0.9
	건증기금	74	74	-	-
	소계	**9,858**	**11,231**	**1,373**	**13.9**
우주항공청	일반회계	9,085	9,455	370	4.1
	소계	**9,085**	**9,455**	**370**	**4.1**

(단위: 억원, %)

부처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해수부	일반회계	6,235	7,392	1,157	18.6
	농특회계	356	415	59	16.6
	교특회계	895	578	△317	△35.4
	지특회계	2	20	18	900.0
	소계	**7,488**	**8,405**	**917**	**12.2**
농진청	일반회계	7,059	7,596	537	7.6
	농특회계	6	-	△6	순감
	지특회계	82	160	78	95.1
	소계	**7,147**	**7,756**	**609**	**8.5**
기재부	일반회계	10	14	4	44.1
	기후기금	6392	7958	1566	24.5
	소계	**6402**	**7972**	**1570**	**24.5**
국조실	일반회계	5,330	6,822	1,491	28.0
	에특회계	124	255	131	106.0
	소계	**5,454**	**7,076**	**1,622**	**29.7**
국토부	일반회계	3,022	3,351	329	10.9
	교특회계	1,807	1,935	128	7.1
	지특회계	50	50	-	-
	소계	**4,879**	**5,336**	**457**	**9.4**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169	422	253	149.7
	환특회계	3,026	3,710	684	22.6
	에특회계	2,716	2,819	103	3.8
	지특회계	-	49	49	순증
	전력기금	5,439	6,314	875	16.1
	방폐기금	400	383	△17	△4.3
	소계	**11,750**	**13,697**	**1,947**	**16.6**
질병청	일반회계	2,513	2,641	128	4.5
	책특회계	2	2	-	-
	소계	**2,514**	**2,642**	**128**	**4.5**
농림부	일반회계	500	533	33	6.7
	농특회계	1,767	2,063	296	16.8
	지특회계	-	16	16	순증
	소계	**2,267**	**2,612**	**345**	**15.2**

(단위: 억원, %)

부처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식약처	일반회계	1,620	1,719	100	6.2
	소계	**1,620**	**1,719**	**100**	**6.2**
산림청	일반회계	1,275	1,379	104	8.1
	농특회계	44	141	97	222.9
	소계	**1,319**	**1,520**	**201**	**15.2**
행안부	일반회계	1,047	1,058	11	1.1
	지특회계	56	84	28	46.4
	소계	**1,103**	**1,142**	**39**	**3.5**
기상청	일반회계	1,448	2,286	838	57.8
	소계	**1,448**	**2,286**	**838**	**57.8**
문체부	일반회계	1,042	1,412	370	35.5
	관광기금	12	38	26	223.3
	체육기금	8	65	57	715.6
	소계	**1,062**	**1,515**	**453**	**42.7**
원안위	일반회계	1,017	702	△314	△30.9
	원기금	-	488	488	100.0
	소계	**1,017**	**1,191**	**174**	**17.1**
국방부	일반회계	716	749	33	4.6
	소계	**716**	**749**	**33**	**4.6**
지식재산처	책특회계	648	682	34	5.3
	소계	**648**	**682**	**34**	**5.3**
경찰청	일반회계	640	682	42	6.5
	소계	**640**	**682**	**42**	**6.5**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325	345	20	6.2
	국보기금	300	349	49	16.3
	소계	**625**	**694**	**69**	**11.0**
해경청	일반회계	489	762	273	55.8
	소계	**489**	**762**	**273**	**55.8**
소방청	일반회계	305	503	198	64.9
	소계	**305**	**503**	**198**	**64.9**
방미통위	일반회계	30	138	108	360.0
	소계	**30**	**138**	**108**	**360.0**
개보위	일반회계	87	133	46	52.9
	소계	**87**	**133**	**46**	**52.9**

(단위: 억원, %)

부처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법무부	일반회계	44	52	8	18.2
	소계	**44**	**52**	**8**	**18.2**
고용노동부	산재기금	-	16	16	순증
	소계	**-**	**16**	**16**	**순증**
관세청	일반회계	38	49	11	28.9
	소계	**38**	**49**	**11**	**28.9**
조달청	조특회계	30	100	70	236.9
	소계	**30**	**100**	**70**	**236.9**
대통령경호처	일반회계	30	33	3	10
	소계	**30**	**33**	**3**	**10**

주)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취합

2026년도 R&D 예산안이 편성된 회계·기금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25조 9,59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2조 4,186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조 5,719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증감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대비 4조 5,454억원(21.2%)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25년 대비 3,857억원(51.4%) 증가하여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6년도 R&D 예산안의 회계·기금별 분류]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214,136	259,590	45,454	21.2
소특회계	22,673	24,186	1,513	6.7
고특회계	14,888	15,719	831	5.6
지특회계	7,505	11,362	3,857	51.4
에특회계	7,367	8,050	683	9.3
기후기금	6,392	7,958	1,566	24.5
전력기금	5,439	6,314	875	16.1
환특회계	3,026	3,710	684	22.6
원자력기금	1,922	2,804	882	45.9
방발기금	3,153	2,771	△382	△12.1
정진기금	2,901	2,632	△269	△9.3
농특회계	2,173	2,619	446	20.5
교특회계	2,702	2,513	△189	△7.0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책특회계	762	797	35	4.6
과진기금	549	581	32	5.8
방폐기금	400	383	△17	△4.3
국보기금	300	349	49	16.3
산촉기금	155	232	77	49.7
조특회계	30	100	70	233.3
건증기금	74	74	-	-
체육기금	8	65	57	712.5
관광기금	12	38	26	216.7
산재기금	-	16	16	순증
우특회계	4	8	4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취합

(2) 주요 특징

정부는 2025년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R&D에 대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주요 R&D에 대한 2가지 중점투자 분야 및 이에 대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의 중점투자 분야는 ①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②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등 2가지로 요약됨.

①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은 첨단기술 기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미래 실질적인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전략기술·방산·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2025년 15.3조원에서 2026년 20.7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②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기초과학, 중소·벤처,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연구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인력양성·출연기관·지역성장·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2025년 10.1조원에서 2026년 12.2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2026년도 주요 R&D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①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 * ('25년) 1.1조원 → ('26년(안)) 2.3조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 ('25년) 2.2조원 → ('26년(안)) 2.6조원 -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 * ('25년) 6.5조원 → ('26년(안)) 8.5조원 - 국방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 * ('25년) 3.1조원 → ('26년(안)) 3.9조원 -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 * ('25년) 2.4조원 → ('26년(안)) 3.4조원 ②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 * ('25년) 2.9조원 → ('26년(안)) 3.4조원 -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는 인재강국 실현 * ('25년) 1.0조원 → ('26년(안)) 1.3조원 -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출연기관 혁신 * ('25년) 3.4조원 → ('26년(안)) 4.0조원 -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25년) 0.7조원 → ('26년(안)) 1.1조원 -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 * ('25년) 2.1조원 → ('26년(안)) 2.4조원

자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한편, 정부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홍보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조 6,981억원(19.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첨단기술, 민간연계, 인재, 연구기반에 대한 투자를 2026년 R&D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A(AI)·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 사업으로 AI 분야의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 바이오 분야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콘텐츠 분야의 AI 콘텐츠 제작기술개발 사업, 방산 분야의 보라매(KF21)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개발 사업, 에너지 분야의 SiC반도체, 태양광유리 등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제조 분야의 특수탄소강 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 방향(첨단기술)]

• (A, AI)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1.1→2.2조원)
• (B, 바이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실증(1.3→1.6조원)
• (C, 콘텐츠) AI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IP기획 창작기술 개발(0.1→0.2조원)
• (D, 방산) 보라매(KF21), L-SAM-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3.1→3.9조원)
• (E, 에너지) SiC반도체, 태양광유리, LNG 화물창 등 핵심기술 개발・상용화(2.2→2.6조원)
• (F, 제조) 특수탄소강 기술개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0.4→0.5조원)

자료: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② 민간연계 지원을 위한 투자는 TIPS, 사업화보증 등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R&D 사업화 보증 사업을 신규 추진(0.3조원)하고, TIPS 지원 금액(일반 5→8억원, 스케일업 12→30억원) 및 지원 수(846→1,240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 방향(민간연계)]

• (TIPS) 지원 금액(일반 5→8억원, 스케일업 12→30억원) 및 기업(846→1,240개) 대폭 확대
• (사업화보증) 유망기업 대상 프로젝트 기반 신규R&D 사업화 보증(0.3조원 공급)

자료: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③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는 첨단인력 3.3만명 확보를 위하여 국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및 우수인력 유출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확대(2.7만명 → 3.1만명)하고 해외인재를 유치(640명, 5년간 2,000명)하며, 집단・개인연구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박사우수 장학금 도입 등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 방향(인재)]

• (국내인재 양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2.7→3.1만명), 산학공동연구 강화
• (해외인재 유치)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640명, 5년간 2,000명)
• (우수인력 유출방지) 집단・개인연구 확대(과기원・일반대 700명, 신진연구 7→27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월 80/110만원), 신규박사우수 장학금(연 750만원) 등

자료: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④ 연구기반에 대한 투자는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연구를 신설하는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개인 기초연구 사업의 과제 신설(1억원 미만 과제 2,000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주요 검토사항

(1) R&D 중점투자 방향 관련 검토

(가) 첨단기술

2026년도 예산안에 첨단기술 투자 확대를 위하여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사업 목표 달성이 저조한 사례, 사업 추진 시 참여대상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 사업 준비가 필요한 사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례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은 공간, 환경 등 물리 세계를 인식,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실제 세계의 환경상태와 물리법칙을 유사하게 제공하는 월드모델 개발과 이에 기반한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학습 등 선도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공모 없이 기업과 대학 등을 결집한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나 민간 중심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하는 사례가 처음이고, 월드모델 등 성과물을 민간·학계·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참여 조건과 성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사업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2년간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한 사례]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2025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1개, 90억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4	AI기반 개방형 5G-A 융합 서비스 데스트베드 구축운영 (1개, 20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1개, 14.1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구축운영 (1개, 90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은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혈액・소변 등)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및 공공데이터 등을 통합・개방하기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2,600만원(26.1%) 증액된 42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사업 시작 연도인 2024년 신규과제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저조로 인하여 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기로 약속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였음.

이후 2025년 2월 특정평가를 거쳐 모집실적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는데,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는 환자 1인당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참여자의 경우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며, 중증 환자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를 모집한 모집기관에 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됨.

그러나 희귀・중증 질환자의 모집 실적이 일반 참여자 모집실적에 비해 더욱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개선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병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참여자 모집 계획 및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	모집실적	2026	2027	2028	합계
희귀	8,800	2,354	7,200	8,000	8,000	32,000
중증	36,000	3,547	34,800	34,000	34,000	138,800
일반	161,200	68,714	150,000	135,000	135,000	581,200
합계	206,000	74,615	192,000	177,000	177,000	752,000

주) 모집실적은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보라매(R&D) 사업(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의 ‘보라매(R&D)’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용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KF-21)를 국제공동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680억 6,900만원(1,069.6%) 증액된 8,398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의 재원은 한국 정부가 60%, 공동참여국 정부가 20%, 업체가 20%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참여국 정부가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당초 분담액 1조 6,245억원보다 적은 6,000억원만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비용분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용분담 지연 시 대체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공동참여국 분담금 납부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계	2026	계
기존	500	1,841	1,987	1,907	2,081	1,994	1,734	1,300	1,300	800	15,444	801	16,245
납부	500	452	-	1,320	-	-	94	417	1,061	1,113	4,957	1,043	6,000
미납액 (누적)		△1,389	△3,376	△3,963	△6,044	△8,038	△9,678	△10,561	△10,800	△10,487	△10,487	△10,245	△10,245

주) 2026년 수치는 납부 예정 분담금을 나타낸 것임
자료: 방위사업청

(나) 민간연계

2026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성과를 민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부 사업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사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R&D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은 R&D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보증, R&D기술 유동화 보증, IP 유동화 보증, 중소기업 기술거래기반조성 등을 수행하는 R&D 사업화 계정을 기술보증기금 내 설치하고 보증재원 및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과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별도의 보증상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수익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 내 '(가칭)기술혁신 사업화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②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 사업은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하거나 융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22억 3,100만원(161.5%) 증액된 4,57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및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대상 및

기업당 지원액이 모두 대폭 확대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의 체계에 맞추어 단계별로 상위 30%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3)]

또한 지원액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팁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팁스 단계별 연구개발 과제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③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은 국가R&D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분야 기술창업기업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2026년)는 유망 기술발굴 및 사업모델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2단계(2027년)는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 실증 및 최적화 등을 진행함. 우주항공청은 1단계 수행과제의 25%만 선발하여 2단계를 지원할 계획임.

이 사업의 목적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연구자는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창업을 하게 됨.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가 시작되는 2단계를 지원하기 전에 1단계 사업모델 수립 및 가능성 검증 단계에서 기술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의 기술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④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기상청)

기상청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천리안위성 5호 개발로

3)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장한 대로, 일반 팁스 지원대상 수 확대에 맞추어 스케일업 팁스 지원대상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일반 팁스가 종료된 이후에 스케일업 팁스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고품질의 기상·우주기상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민간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5억 5,800만원(469.5%) 증액된 1,11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나, 2025년 4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의 기술이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이전할 기술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는 등 아직 기술이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4자 협의체 회의 상황]

회의차수	년월	내용
-	2025. 4.	민간기업 선정
1차회의	2025. 5.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 간 연락담당자 지정
2차회의	2025. 6.	민간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기술이전 22건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
3차회의	2025.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견

자료: 기상청

(다) 인재

2026년도 예산안에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반영된 일부 사업에서 해외인재 유치가 예상보다 지연된 사례, 참여기관 모집 실적이 저조한 사례, 사업 추진 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억 1,700만원(38.4%) 증액된 53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5년 총 120개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예산 12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 과제 선정을 위하여 2025년 1차 공고를 2월부터 진행하여 총 117개 과제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2차 공고는 5월부터 진행하여 7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2025년 신규과제 선정 현황]

(단위: 개, 원)

구분	유형	과제수	2025년 수행기간	수행 개월 수	평균 과제 단가[1]	지원액[2]
1차 공고 (2025년 2월)	BP	11	2025.8~12.	5	166,116,873	5,176,995,000
		18	2025.9~12.	4	221,732,500	
		29	2025.10~12.	3	183,528,138	
		42	2025.11~12.	2	209,731,000	
		12	2025.12.	1	286,535,000	
	BP(기관)	2	2025.7~12.	6	900,000,000	900,000,000
	BP+	1	2025.8~12.	5	600,000,000	600,000,000
		1	2025.9~12.	4		
		1	2025.10~12.	3		
2차 공고 (2025년 5월)	BP	-	-	-	-	
	BP(기관)	7	2025.9~12.	4	878,571,429	2,050,000,001
	BP+	-	-	-	-	
합계	-	124	-	363	-	8,726,995,001

주 1) 평균과제단가는 당해연도 협약된 신규과제 지원액을 12개월로 추정한 값임
2) 지원액 = 과제수 × 수행 개월 수 × 평균과제단가/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각 연구개발과제 별로 해외인재 유치 시점이 당초 계획(2025년 7월 경)보다 늦어짐에 따라 신규과제의 평균 수행 기간(2.9개월)이 예산편성 기간(6개월)보다 짧게 나타났음.

②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100%)이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6개월분 예산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25년 6월 WBL(World Best LLM) 참가팀 공모와 연계하여 공모를 진행하여 2025년 8월 1개 팀을 선정하였고, 이후 재공고를 통하여 2025년 9월 4개 팀을 선정하였음.

그런데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을 채용하여 지원 중인 과제는 5개 과제 중 1개 과제밖에 없고 나머지 과제는 해외인재 채용을 진행 중으로, 해외인재 채용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과제별 인재채용 현황 및 계획]

과제명	협약체결일	인재채용일정	2025년 실제 과제 수행 기간
정예 연구진 결집을 통한 초거대 LLM/VLM 고도화 및 아세안 언어 확장 기술 개발	25. 8.27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AI 신약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	25. 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멀티 에이전트형 AI 기반 기업정보 및 지식보호 통합 플랫폼	25. 9.29	25.10월 채용	3개월
산업 제조 설비의 자율 제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Physics-Aware Physical AI	25. 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실세계 조작과 보행을 위한 멀티모달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25. 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은 해외 Top-tier 연구자를 국내에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인건비 및 프로젝트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국고 70%, 민자 25~30%), 중견기업 기준 국고 6억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2억 5,700만원 수준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유사 사업(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구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 수준이 실제 인재 유치 및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이 사업은 연간 2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떨어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참여 주체의 특성과 부담 수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은 대학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운용 관리체계 구축 및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억 4,300만원(38.4%) 증액된 83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5년 상반기 공고를 4월부터 진행하여 총 29개 대학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선정 공고는 6월부터 진행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6개의 대학이 선정되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에 15개의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이 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나,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미 참여대학 중 연구개발기관단위 지정 완료

대학은 총 7개, 지정검토 중인 대학은 총 10개('25.11월 중 확정 예정)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2025년 11월 지정 결과 및 대학의 2026년 연구개발기관단위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선정 가능한 대학은 상반기에 모집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초연구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이공계 우수한 학부, 석·박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억 8,500만원(21.8%) 증액된 69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박사장학생을 신규 선발할 계획으로,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생의 학업 성적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선정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석사 우수장학금의 경우 대학원 과정 학생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우수성, 학업 및 연구계획,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 수준, 성적 등을 대학(원)별 실정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사 우수장학금 선발 시에도 유사하게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논문 수나 연구개발과제 참여도 등의 연구실적은 연구 분야별 특성 차이로 인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학 내에서 추천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선정 조건이 특정 연구분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등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이 사업은 정부 내 사업 분류상 비 R&D사업에 해당하나, 「2026년도 예산안 홍보자료」의 R&D 예산 중점투자 방향 중 인재분야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어 있어, R&D 총괄 검토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라) 연구기반

2026년도 예산안에 연구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목적으로 개인기초연구(R&D) 사업에 2,000개의 신규과제가 추가되면서 이 사업의 2026년 신규 과제 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과제 선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을 통하여 총 15,311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 이 중 기본연구 A·B 유형 2,000개, 우수신진(씨앗) 유형 1,000개 등 총 6,874개는 2026년에 신규과제로 선정할 계획임.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321개, 2024년 3,296개, 2025년 3,643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2026년 선정 예정 신규과제 수 6,874개의 48~53% 수준임.

[개인기초연구 사업 과제 현황]

(단위: 개)

연도	2023	2024	2025	2026
신규과제	3,321	3,296	3,643	6,874
계속·종료 과제	11,178	9,784	8,186	8,437
총 과제수	14,499	13,080	11,829	15,3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평가 소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점을 분산하고 평가위원 POOL을 확충하는 등 과제 선정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 폐지

(가) 개요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는 R&D 재정지원 체계를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전환하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여 예산과 과제를 편성하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되었음.

PBS 도입 전에 정부 지원은 현재와 같이 기관출연금과 정부수탁사업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기관출연금 지원이 출연연이 수행 중인 연구내용과 무관하게 총지출액과 예상 수입 간 차액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관출연금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지원되며 과제수탁 확대 시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였음.

이로 인하여 경쟁 부족으로 인한 출연연 경쟁력 저하, 연구생산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PBS를 도입함으로써 기관출연금으로 정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정부수탁과제의 과제비에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PBS 도입 이후 출연연은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기관의 고유 임무와 무관한 정부수탁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개개인이 파편화된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출연연 내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집단연구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를 통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PBS는 즉시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정부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우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후 2025년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2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4개의 직할기관에 대한 PBS의 단계적 폐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5)]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비 등이 증액되어, 2025년(5,454억원) 대비 1,622억원(29.7%) 증가한 7,076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직할기관에 대한 전략연구사업 예산 4,514억 7,9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

5)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4쪽을 참고함.

[2026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C/A)	비고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등
경상비	56,132	72,020	15,888	28.3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사업비	149,748	166,987	17,239	11.5	
기관고유사업	56,232	56,632	400	0.7	
일반사업	89,840	107,756	17,916	19.9	정부지원과제(229억원) 지출구조조정 감액 등
ODA	3,676	2,799	△877	△23.9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이월금 자체수입 대체
계	545,392	707,638	162,246	29.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연구사업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기관명	전략연구사업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1,6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6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1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8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9,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5,5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8,6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2,8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9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9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7,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김치연구소	4,9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4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19,6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6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연구원	12,8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23,5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5,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16,8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재료연구원	11,4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278
합계		**363,55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개 직할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지원사업 전략연구사업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기관명	전략연구사업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5,3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4,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4,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종합기술원	4,8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뇌연구원	4,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6,3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5,959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761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4,822
해양수산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027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5,157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고등과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영재학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산업통상부	한국세라믹기술원	-
합계		**87,9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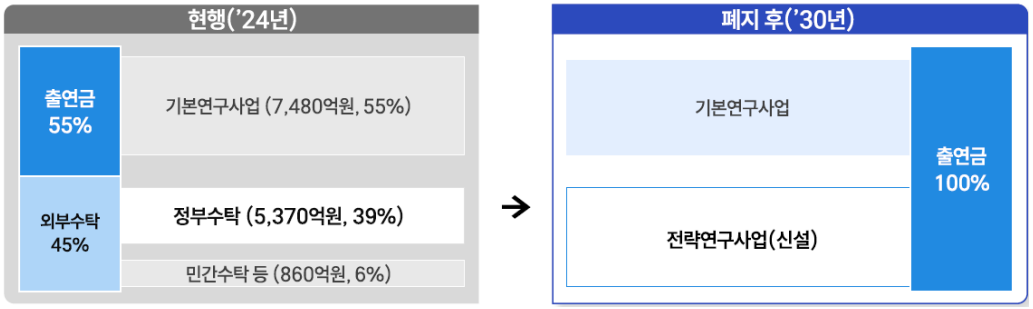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존 자체수입을 통해 충당하던 인건비·경상비가 출연금으로 전환되고, 정부가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연구사업비도 특수사업비 내 정부지원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2026년부터 PBS제도가 전면 폐지될 예정임.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4개 직할기관의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PBS를 폐지할 계획인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10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발표하였음.

동 자료에는 PBS 단계적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2026~2029년까지 전략연구사업 신설·확대로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정부수탁 규모는 축소하되 인건비 미충족 기관(수탁규모 종료에 따른 인건비 > 신규 기관출연금 인건비)은 종전과 같이 수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30년부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할 계획으로, 전략연구사업에 포함된 인건비, 경상비를 분리하여 기관운영비로 관리하고 사업비는 각 과제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과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하되, 수탁하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수입구조 변화]



주) 전체 2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념도로 각 기관별 비중은 상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PBS가 폐지되고 인건비·경상비 전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개별 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간 평가 및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 제고 유인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PBS는 연구자의 외부 연구 과제 수주 몰입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 과제 수탁 성과에 따라 인건비·경상비를 지원받는 유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연구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지니고 있었음.

PBS의 폐지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고유연구사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으나, 더 이상 외부 연구 과제의 수주에 따른 인건비·경상비 지원의 유인을 느끼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수요를 비롯한 외부의 연구 수요가 기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인건비·경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부 등의 연구 수요가 기관에 충분히 반영되고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먼저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현행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대상자 간 차등화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 및 정부정책 수요 대응력 강화 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연구기관 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기관 평가 등급 수는 총 5개(S~D)이지만 2022~2024년 평가 결과가 A~B에 집중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고,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 연구자의 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음.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재 PBS 폐지와 함께 기관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중심 통합평가체계 도입과 그에 연동한 인센티브 신설 등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별 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우수연구자 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우수등급(A)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기관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지 않고 성과에 따라 평가 등급의 차등화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6)]

둘째, PBS 폐지는 기존 정부수탁사업으로 지원되던 인건비를 각 기관의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려는 것인데,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대행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관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전략연구사업은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부재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직할기관에 대한 PBS의 단계적 폐지를 위하여, 각 기관이 기존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 확보하던 인건비를 기관에 대한 직접 출연으로 지원되는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그런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과제의 선정·평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전략연구사업은 각 연구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직접 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과제 평가와 중복성 검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부처가 직접 감독할 필요가 있음.[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기존의 전문기관 역할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2026년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에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각 직할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을 대

---

6) 관련사업: 일반회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 · 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할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부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직할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연구개발과제 및 전략연구사업(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교]

구분	연구개발과제	전략연구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주체	부처 및 전문기관(대행)	부처,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적용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평가체계	- 선정·단계·최종 평가 등 진행도에 따른 평가 진행(**전문기관**) - 특이사항 발생 시 특별평가 가능(**전문기관**)	- 선정·단계·최종 평가 등 진행도에 따른 평가 진행(**연구회**) - 특이사항 발생 시 중간점검 가능(**연구회**)
평가결과 환류	- (우수) 다른 과제 참여 시 우대 - (미흡) 연구중단, 환수 조치 등	- (우수) 우수성과 실용화 지원, 다른 과제 선정 시 우대 등 - (미흡) 연구중단, 환수 조치 등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 검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자체점검 및 **재정당국** 검증

주) 직할기관은 기관별로 체계가 상이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셋째, 단계적 PBS 폐지 대상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24개의 직할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PBS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폐지 계획 구체화를 위한 논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할기관에 대하여도 PBS 폐지 관련 의견수렴 및 방안 구체화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는 202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PBS를 전면 폐지하였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4개 직할기관은 2030년까지 단계적 PBS 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관리 체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적으로 PBS 폐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폐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24개 직할기관은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양하고, 직할기관 별로 기능이나 형태에 차이가 있어 PBS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PBS 폐지 계획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 상황을 고려한 폐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직할기관에 포함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분야 관련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전략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PBS 단계적 폐지 계획을 동 기관들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PBS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폐지 계획 구체화를 위한 논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4개 직할기관에 대한 PBS 폐지 관련 의견수렴 및 기관별 PBS 폐지 방안 구체화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8)]

8)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할기관 소관부처와 직할기관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PBS 개편을 추진하면 이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2026년도 R&D 예산안 편성 절차 관련 검토

2026년도 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거나, 장비구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장비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인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하거나,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기획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중소기업의 대표 공정도를 기반으로 공정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핵심성과지표를 제고하고 제조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개 전문연구기관이 각각 20개의 대표공정을 분석하여 총 80종의 대표 공정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2025년 9월 현재에는 77종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2025년 말 80종이 모두 구축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임.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 사업은 전년도 국가표준연구 사업의 사업성과에 의존하게 되는데, 만일 국가표준연구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사업계획 수립 이전까지 사업의 전제가 되는 대표 업종 공정표준 80종을 완비하기 위해 국가표준연구 사업의 사업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가표준연구 및 차년도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의 사업계획을 연계하여 사업 준비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② 국토교통부 소관 일부 R&D 신규 사업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은 24개 세부사업으로 59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5개 사업 397억 9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9개 사업 193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됨.

신규사업의 기획보고서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예산편성지침에서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는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2026년 국토교통부 소관 일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한 준수를 위해 사전기획 연구 도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전기획 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사례가 있었음.

[2026년도 신규 R&D 사업 중 사전준비 미흡 우려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코드)	2026년도 예산안 (B)	사전기획 기간	비고
지역단위 재난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R&D) (일반회계 - 4141-330)	2,000	2024.12. ~2025.10. (10개월)	**사전기획 이전 보고서 제출**
공동주택건설 생산성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R&D) (일반회계 - 4156-376)	2,009	2024.12. ~2025.12. (12개월)	**사전기획 이전 보고서 제출**
항공기이탈방지용긴급제동활주로시스템(EMAS)개발(R&D) (교통시설특별회계 - 4161-357)	1,965	2025.1. ~2025.3. **(3개월)**	**사전기획 연구기간 촉박**
공항 조류 탐지 및 한국형 조류관리 핵심기술 개발 (R&D) (교통시설특별회계 - 4161-358)	1,500	2025.1. ~2025.2. **(3개월)**	**사전기획 연구기간 촉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26년도 예산안의 일부 R&D 사업이 대규모 장비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구축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AI Agent 개발) 및 기초과학·AI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3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상반기 협약체결 후 상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나,

상시심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과 같이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거쳐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② 산업통상부 소관 일부 R&D 사업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R&D 사업 중 지침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본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장비는 총 53개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762억 6,800만원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6년 상반기 협약 체결 후 상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본심의를

거치도록 지침에서 규정한 취지는 고가 및 대형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연구현장 및 산업계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며, 우선순위에 맞는 장비 도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6년 도입 예정이 구체화된 이하 장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거쳐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임.

(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인 사례

2026년도 예산안의 일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인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8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R&D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7개의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9)]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R&D 사업 목록]

(단위: 억원)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1	우주항공청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 (R&D)	7,581	□ (사업목적) 국가안보, 지리정보 등 국가 수요에 필요한 초고해상도/광역관측 및 멀티스태틱 표준 레이더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구 저궤도 영상레이더 위성시스템 종합 개발 □ (면제사유) 제3호 국방 관련 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AX 실증 밸리 조성 (R&D)	6,000	□ (사업목적) AX기술개발을 지원하고 AI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를 'AX R&D·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R&D)	5,510	□ (사업목적) 대구 지역특화 산업(바이오·로봇 등)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 AX 모델 및 제품 개발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4	과학기술	인간-AI 협업형	10,000	□ (사업목적)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9)「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위: 억원)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정보통신부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		활용할 수 있는 물리지능행동모델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	10,000	□ (사업목적) 한국 강점산업에 특화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등)·솔루션 개발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6	산업통상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9,973	□ (사업목적) 국산 AI반도체 기반 첨단제품 출시 위해 주력업종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와 AI반도체 풀스택 공동개발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7	산업통상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2,695	□ (사업목적) SMR 기자재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제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8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 (사업목적) 온누리호 노후화에 따른 친환경 종합해양연구선 대체 건조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이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여지는 사례

2026년도 예산안의 일부 R&D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①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AI Agent 개발) 및 기초과학·AI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6년 국비 600억원이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추진된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의 후속 개편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사업은 GPU 등 AI컴퓨팅 인프라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대학별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자간의 전문 연구 정보 교류를 지원하던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과는 다른 신규사업으로 보임.

②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Vertical AI 국가특임연구원을 결집하여 AX 대전환에 필수적인 SOTA[10] Vertical AI 개발·지원을 위해 연구지원센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설기관으로 신설·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최소 2,179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

---

10) SOTA(State Of The Art): 특정 도메인에서 학습 속도, 의사결정 능력 등이 논문·실험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명된 모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500억원 미만인 내내역사업(내역사업 하위)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가 400억원으로 500억원 미만이라고 하여도 2030년까지 최소 2,20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6조제2항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사업은 국내 대학이 기업과 함께 AI융합 특화 및 AI 핵심 교육을 통해 실전형 AI혁신(AX : AI Transformation) 고급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6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되며 2031년까지 총 1,650억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의 후속 개편 사업인 점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X 인재 육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사업은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과는 별개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4) 기타 개선과제

(가) 특정 유형의 R&D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불일치 예외 인정 근거 미흡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을 통해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지침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는 2025년도부터 R&D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을 통해,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 및 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예산안 편성시점에는 과제 착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② 초기 일시지급 항목(장비·분담금) 등 지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 투자비용을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1차년도에 선정평가가 연초(3월)에 집중되어 평가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④ 국제공동연구는 회계연도 불일치로 협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통한 12개월분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6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2025년 상반기부터 3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

협약기간		예산반영
(2026년) 2026.6.~2027.5.		2026.6.~2027.2. (9개월)
(2027년) 2027.6.~2028.5.	⇨	2027.3.~2027.12. (10개월)
(2028년) 2028.6.~2029.5.		2028.1.~2028.12. (12개월)

(2028년) -	2029.1.~2029.5. (5개월)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이에 따라,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2026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되고 2028년에 종료(3년간 수행)됨을 가정할 때,[11] 2026년 4월부터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므로 2026년 예산이 2027년 3월까지 집행 가능하게 됨.

[2026년 4월 협약체결된 R&D 과제의 단서조항에 따른 향후 예산편성 방향]

2026년											
1월	2월	3월	4월 (협약)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2026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27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28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202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연구종료			-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하위 규범인 지침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12]

11) R&D 과제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기관 공모, 선정평가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근거하여 2025년 4월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사례로 설정함.

1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활용방안 마련 필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누적되고 있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기술료의 누적액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25년 8월말 기준 미집행 기술료가 23개 기관에 총 1,375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기술료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료 수입		117,416	115,490	118,176	122,637	72,052
기술료 집행액		110,839	124,899	114,470	108,372	64,364
미집행 기술료		6,577	△9,408	3,706	14,265	7,688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미집행액		3,071	876	3,057	3,558	2,211
미집행 기술료 누적액	114,740	121,316	111,908	115,614	129,879	137,567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미집행 누적액	2,542	4,976	5,296	7,445	10,109	11,817

주) 2025년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용도의 기술료 누적액은 2020년 25억 4,200만원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118억 1,7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3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기술료 누적액이 감소 없이 상승만 하고 있음.[14)]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미집행 누적액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573**	**1,192**	**1,499**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	-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	**29**	**33**	**46**	**62**	**9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9**	**14**	**30**	**52**	**90**
한국한의학연구원	-	-	-	-	15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88**	**1,459**	**2,012**	**2,829**	**3,466**	**3,76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92	1,120	1,276	1,291	1,326	1,21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	**-**	**70**	**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	-	13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	-	17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	-	-
한국식품연구원	-	-	-	-	-	-
세계김치연구소	6	9	13	2	4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3	289	364	303	304	168
한국기계연구원	**-**	**-**	**-**	**-**	**496**	**6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89	1,956	1,334	2,010	2,565	3,022
한국전기연구원	**6**	**2**	**38**	**39**	**64**	**64**
한국화학연구원	-	-	-	-	-	10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210**	**366**	**471**
한국재료연구원	-	-	112	-	-	2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7	103	100	112	127	146
합계	**2,542**	**4,976**	**5,296**	**7,445**	**10,109**	**11,817**

주) 2025년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 해당 성과를 기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새로운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징수된 기술료가 집행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것은 기술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수가 확대되면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일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15)]

그런데 최근 전문기관 수가 확대되면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각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가 통합·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부는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관 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새로 지정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도 실태점검 및 기획평가관리비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전문기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우선 정부는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른 유사·중복 기획,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으로 인한 연구자 부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1부처·청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하고, 당초 12부처·청 19개 전문기관을 12부처·청 12개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였음.[16)]

---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 · 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부처별 지정·운영 중인 전문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13개였던 전문기관은 2023년 72개로 증가하였음.[17]

[2023년 전문기관 현황]

연번	전문기관	연번	전문기관
1	한국연구재단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8	국방ICT지원단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9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APEC 기후센터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2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3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4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1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1	한국콘텐츠진흥원	47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1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8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산업단
13	한국임업진흥원	49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0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1	수요자중심돌봄로봇실증연구사업단
16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52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사업단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3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
1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54	국립암센터
19	(재)과학치안진흥센터	55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20	치안정책연구소	56	한국한의약진흥원
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7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8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단
2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9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24	민군협력진흥원	60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1	(재)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26	한국과학창의재단	62	한국산업단지공단
2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63	한국에너지공단
28	한국학진흥사업단	64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5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3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66	한국조달연구원

16)「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2018.8.2.

연번	전문기관	연번	전문기관
3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6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	전통문화연구회	68	한국특허정보원
33	대한민국학술원	6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6	한국고전번역원	7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 1) 실태조사는 연번 1~17에 해당하는 17개 전문기관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있음
2) 동 목록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실태조사·분석 결과 작성 시에는 전문기관을 재분류할 계획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전문기관의 수가 확대되는 것은 앞서 정부가 전문기관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R&D 사업을 일괄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사업 간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0조제3항은 전문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17개 전문기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55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속하여 확대되는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도 있음.[18]

② 다음으로, 정부는 2022년부터 기관·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별로 통합하여 일괄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개별 R&D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음.[19]

---

17) 전문기관의 수는 연도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문기관 수 증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전문기관의 범위가 넓어진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음.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 ·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③ 실태조사 · 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

19) 2022년에는 법령상 전문기관 및 기획평가관리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전문기관 15개에 출연되는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하였고, 2023년 이후 나머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통합을 추진함.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제도 개편 이전에는 각 전문기관이 개별 R&D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다른 세부사업을 기획함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었으나,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이를 해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증가되는 전문기관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가 개별 R&D 사업에만 반영되어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가 여러 세부사업에 분절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일괄 관리・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관리에 있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각 전문기관별로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각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신규 사업을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기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연구개발과제 단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례

2026년도 R&D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일부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 단가를 당초 계획 대비 상승시켰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6,000만원(77.3%) 증액된 2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계속과제 2건의 연간 단가를 상향(9억 6,000만원→12억 8,000만원)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2024년 예산 요구안 제출시의 연간 단가 대비 적게 편성되어 2026년도 예산안의 과제 단가는 기존 기획단계에서 산정했던 과제 단가 및 연차별 증액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체결 당시 2025년 7억 2,000만원, 2026년 9억 6,000만원, 2027년 9억 6,000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 또는 당초 제안요청서 및 협약서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가 상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②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국방부)

국방부의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군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5,100만원(565.1%) 증액된 6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방부는 2026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인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분야 2개 신규과제의 과제별 지원 단가를 14억 6,000만원으로 산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 단가(14억 6,000만원)는 사업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별 지원 단가(평균 10억 9,500만원)보다 높은 수치로, 신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이 완료되지 않아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기획보고서의 과제별 지원 단가 평균치(10억 9,5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14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단가로 산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임에도 국방부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정책펀드

가. 개 요

(1) 현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함.[1] 정책펀드 사업은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③ 개별 부처에서 운용하는 정책펀드로 분류할 수 있음.

2026년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은 17개 부처에서 전년 대비 1조 8,626억원(110.9%) 증액된 3조 5,421억원이 편성되었음.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1조 1,000억원), 금융위원회(1조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5,780억원) 순으로 규모가 큼.

[2026년도 부처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부처	정책펀드명(계정)	2025년		2026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펀드(중진)	2,800	5,800	8,300	5,500	196.4
	중소기업모태펀드(지방)	2,000	2,000	2,000	-	-
	중소기업모태펀드(청년)	200	200	200	-	-
	중소기업모태펀드(혁신모험)	-	-	500	500	순증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	-	10,000	10,000	순증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	1,000	1,000	-	-
	혁신성장펀드	1,762	1,762	-	△1,762	순감
	반도체생태계펀드	300	300	-	△300	순감
	원전산업성장펀드	350	350	-	△350	순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	-	-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모태펀드(문화)	2,050	2,600	2,700	650	31.7
	중소기업모태펀드(영화)	350	550	700	350	100.0
	중소기업모태펀드(관광)	330	330	730	400	121.2
	중소기업모태펀드(스포츠)	300	300	400	100	33.3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남재우,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2022.3.

(단위: 억원, %)

부처	정책펀드명(계정)	2025년		2026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콘텐츠 전략펀드	150	150	650	500	333.3
	글로벌 리그 펀드	400	400	600	200	50.0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	-	740	740	순증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600	600	60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모태펀드(과기정통)	670	1,720	1,080	410	61.2
우주항공청	중소기업모태펀드(과기정통)	35	35	1,000	965	2,757.1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모태펀드(보건)	-	-	800	800	순증
산업통상부	산단환경개선펀드	1,193	1,193	725	△468	△39.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식품)	550	550	700	150	27.3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모태펀드(환경)	456	456	592	136	29.7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모태펀드(해양)	-	-	200	200	순증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수산)	70	70	-	△70	순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0	200	100	△100	△50.0
	국고여객선 펀드	84	84	84	-	-
	원양어선 안전펀드	90	90	120	30	33.3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	150	150	120	△30	△20.0
	PIS 2단계 펀드	300	300	300	-	-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200	200	300	100	50.0
교육부	중소기업모태펀드(교육)	75	75	75	-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모태펀드 (국민안전산업펀드)	-	-	50	50	순증
경찰청	중소기업모태펀드 (국민안전산업펀드)	-	-	50	50	순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콘텐츠 전략펀드	50	50	5	△45	△90.0
지식재산처	중소기업모태펀드(특허)	80	80	-	△80	순감
합계		**16,795**	**22,095**	**35,421**	**18,626**	**110.9**

주)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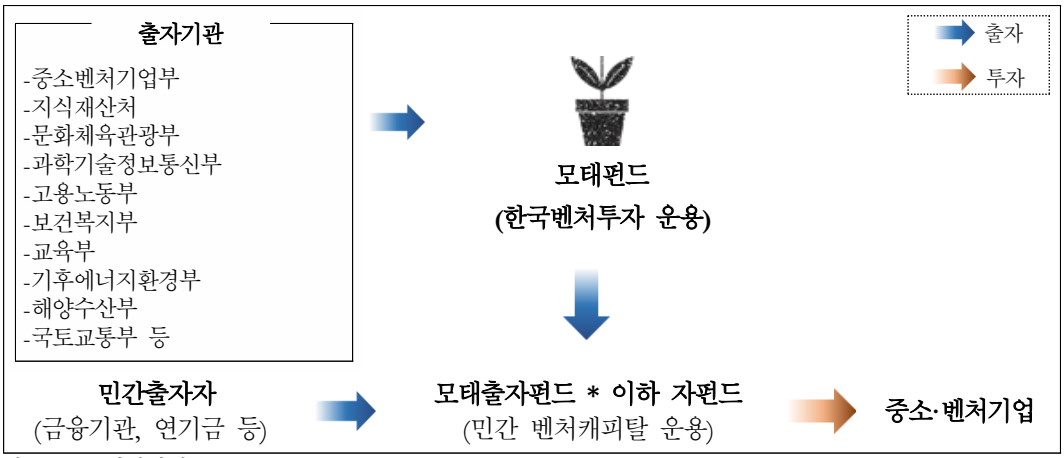
(가) 중소기업모태펀드

중소기업모태펀드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2]에 따라 2005년에 결성되었고, 모태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3]가 지정되었음.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정부재정으로 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로, 모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자펀드 결성은 ① 출자사업 공고, ② 운용사 선정, ③ 민간 출자자 유치, ④ 자펀드 결성의 절차로 진행됨. 자펀드가 결성되면 운용사는 펀드 운용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하게 됨.

[중소기업모태펀드 운용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중소기업모태펀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은 11개 부처 14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조원(105.3%) 증액된 1조 9,497억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조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3,4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1,000억원)’ 등이 있음.

[중소기업모태펀드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정명	2025년		2026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중기부	중진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진	280,000	580,000	830,000	550,000	196.4
			지방	200,000	200,000	200,000	-	-
			청년	20,000	20,000	20,000	-	-
			혁신모험	-	-	50,000	50,000	순증
문체부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문화	205,000	260,000	270,000	65,000	31.7
			영화	35,000	55,000	70,000	35,000	100.0
	관광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	관광	33,000	33,000	73,000	40,000	121.2
	체육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스포츠산업 펀드)	스포츠	30,000	30,000	40,000	10,000	33.3
기재부 (기후부)	기후대응 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환경	45,604	45,604	59,155	13,551	29.7
과기부	정보통신 진흥기금	사이버보안펀드조성	과기정통	10,000	10,000	8,000	△2,000	△20.0
	정보통신 진흥기금	AI 혁신펀드	과기정통	45,000	100,000	-	△45,000	순감
	일반회계			-	50,000	100,000	100,000	순증
	과학기술 진흥기금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과기정통	12,000	12,000	-	△12,000	순감
우주청	과학기술 진흥기금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과기정통	3,500	3,500	-	△3,500	순감
	일반회계			-	-	100,000	100,000	순증
복지부	일반회계	바이오헬스산업육성지원	보건	-	-	80,000	80,000	순증
해수부	일반회계	해양모태펀드	해양	-	-	20,000	20,000	순증
국토부	일반회계	국토교통혁신펀드	국토교통 혁신	15,000	15,000	12,000	△3,000	△20.0
교육부	일반회계	대학창업 활성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	7,500	7,500	7,500	-	-
행안부	일반회계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미정)	-	-	5,000	5,000	순증
경찰청	일반회계	미래치안기반조성	(미정)	-	-	5,000	5,000	순증
지재처	책특회계	모태조합 출자	특허	8,000	8,000	-	△8,000	순감
계				**949,604**	**1,429,604**	**1,949,655**	**1,000,051**	**105.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4]에 따라 2010년에 결성되었고, 모태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되었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중소기업모태펀드와 유사한 운용구조로, 정부재정으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모펀드)를 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면,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농식품펀드를 조성하고,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구조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1개 부처의 1개 세부사업 '농식품모태펀드출자'에서 전년 대비 150억원(27.3%)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정명	2025년		2026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농식품부	농특회계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	55,000	55,000	70,000	15,000	27.3
해수부	수산발전기금	수산모태펀드출자	수산	7,000	7,000	-	△7,000	순감
계				**62,000**	**62,000**	**70,000**	**8,000**	**12.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민성장펀드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외에도, 정부는 개별 부처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책펀드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등에 대해 직접 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 투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 민간재원 50조원)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업 예산안이 1조원 신규 편성되었음.

[국민성장펀드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출자대상기관	2025년		2026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 (A)	추경 (수정)			
금융위	일반회계	국민성장펀드	한국산업은행	-	-	1,000,000	1,000,000	순증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이 심화되어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10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9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재원 75조원)으로 확대하여 발표하였음.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펀드임.[5)]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이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국민성장펀드 조성규모인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데,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2026년 예산안 1조원)은

5)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9.10.

자율적인 민간·국민·금융기관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국민성장펀드의 연도별 자금 조성·집행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조성	첨단전략산업기금	15	15	15	15	15	75
	민간자금	15	15	15	15	15	75
	재정	1	2027년 이후 재정투입금액 미정				
소 계 (기금+ 민간)		30	30	30	30	30	150
집행 (기금+ 민간 기준)	직접지분투자	3	3	3	3	3	15
	간접지분투자	7	7	7	7	7	35
	인프라투융자	10	10	10	10	10	50
	저리대출	10	10	10	10	10	50
소 계		30	30	30	30	30	150

주 1) 금융위원회는 집행액은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산업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2026년도 재정 1조원을 포함한 재정투입액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구성하지 않고, 민간·연기금·국민자금 등의 후순위 보강을 통한 위험선분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는 ① 직접지분투자, ② 간접지분투자, ③ 인프라 투·융자 및 ④ 초저리(국고채 수준) 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용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①(직접지분투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국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②(간접지분투자)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데, 과거 정책성 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할 계획임. ③(인프라 투·융자)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임. ④(초저리 대출 지원)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에 대한 자금으로 2%대 국고채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배분으로, ①(분야)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인공지능에 30조원 이상 공급하여 투자확대 필요성을 반영하고, ②(지역) 5극·3특 전략[6]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에 40% 이상 지원되도록 노력하며, ③ (중소·중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히 지원하

6) 5극 3특 전략은 국가균형성장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에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겠다고 밝힌 바 있음.[7)]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안(예시)]

(단위: 조원)

구분	투자중심 지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합계
	직접지분	간접투자			
AI	4.0	6.0	10.0	10.0	30.0
반도체	1.6	4.3	40.0[주)]	15.0	20.9
이차전지	1.3	4.1		2.5	7.9
디스플레이	0.5	1.1		1.0	2.6
바이오・백신	1.4	2.7		7.5	11.6
수소・연료전지	0.8	1.3		1.0	3.1
항공우주・방산	1.1	1.5		1.0	3.6
모빌리티	0.9	4.5		10.0	15.4
원자력・핵융합	1.4	0.8		0.5	2.7
미디어・콘텐츠	1.4	2.7		1.0	5.1
로봇	0.6	1.0		0.5	2.1
합 계	15.0	35.0[주)] (국민참여포함)	50.0	50.0	150.0
(재원)	기금 25(마중물) + 민간 75 + 재정 5조원(뒷받침)			기금 50조원	150조원

주 1) 산업별 배분안은 산업은행의 산업별 공급실적을 기반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인공지능 분야 설비투자 확대 동향을 반영하여 일부 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할 계획임

2) 국민참여형펀드는 산업별 배분없이 운영하고, 인프라 투·융자 전체 50조원 중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가 명확한 인공지능 분야 10조원 외 40조원은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7)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라) 기타 부처별 정책펀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타 부처별 정책펀드 운영을 위해 8개 부처 12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455억원(△21.8%) 감액된 5,224억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여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를 조성하여 SPC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체 SPC 자본금의 10% 이상을 민간에서 출자하도록 하는 '산업단지환경조성(산업단지구조고도화)(725억원)' 등이 있음.

[기타 부처별 정책펀드의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출자대상기관	2025년		2026년 예산안(계획안)(B)	증감(B-A)	(B-A)/A
				본예산(당초)(A)	추경(수정)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한국산업은행	100,000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한국산업은행	176,200	176,200	-	△176,200	순감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한국산업은행	30,000	30,000	-	△30,000	순감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한국산업은행	35,000	35,000	-	△35,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	-	50,000	-	-	-
문체부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한국벤처투자	40,000	40,000	60,000	20,000	50.0
		K-콘텐츠 펀드 출자(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15,000	15,000	65,000	50,000	333.3
방미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5,000	5,000	500	△4,500	△90.0
기후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무공해차 인프라펀드)	미정	-	-	74,000	74,000	순증
	환경개선특별회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60,000	60,000	60,000	-	-
산업부	지특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산업단지구조고도화)	-	119,300	119,300	72,500	△46,800	△39.2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출자대상기관	2025년		2026년 예산안(계획안)(B)	증감(B-A)	(B-A)/A
				본예산(당초)(A)	추경(수정)			
해수부	일반회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대화펀드 선박투자회사	20,000	20,000	10,000	△10,000	△50.0
		국고여객선 건조(국고여객선 펀드)	국고여객선펀드 투자회사	8,400	8,400	8,400	-	-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선 안전펀드	안전펀드 선박투자회사	9,000	9,000	12,000	3,000	33.3
국토부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조성)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30,000	30,000	30,000	-	-
방사청	일반회계	방산수출투자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005	20,005	30,005	10,000	50.0
계				**667,905**	**717,905**	**522,405**	**△145,500**	**△21.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정책펀드 예산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민간자금의 매칭 조성 필요 등

정부는 정책펀드 사업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로서 정부 출자액을 투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결성총액 중 민간자금의 출자비중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펀드의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6.0%에서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24년 23.0%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출자 금액 증감이 미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나, 민간 부문의 출자 금액이 2021~2022년 14조원대에서 2023년 10조원대를 거쳐, 2024년 8조원대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비록 2025년 상반기에는 공공 부문의 비중이 16.1%로 다시 감소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이 17개 부처에서 전년 대비 1조 8,626억원(110.9%) 증액된 3조 5,42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정책자금에 상당하는 민간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벤처 펀드 결성의 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9,935
	비중	26.0%	19.1%	18.1%	16.7%	23.0%	16.1%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2,886
	비중	13.3%	9.8%	8.5%	7.5%	12.8%	4.7%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558
	비중	5.5%	5.0%	5.6%	2.7%	3.8%	2.5%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3,062
	비중	3.6%	2.3%	2.1%	3.4%	3.1%	5.0%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2,429
	비중	3.6%	2.1%	1.9%	3.1%	3.2%	3.9%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51,746
	비중	74.0%	80.9%	81.9%	83.3%	77.0%	83.9%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4,258
	비중	8.3%	16.2%	13.1%	11.0%	10.4%	6.9%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6,328
		비중	18.3%	22.4%	20.7%	20.9%	21.9%	26.5%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16,050
		비중	23.3%	25.2%	27.8%	32.4%	27.2%	26.0%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820
		비중	11.2%	3.8%	7.5%	5.7%	3.1%	9.4%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6,915
		비중	9.8%	11.5%	10.6%	10.5%	11.4%	11.2%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2,376
		비중	3.0%	1.8%	2.1%	2.8%	3.0%	3.9%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61,6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체 벤처투자 보도자료”(2025.2.12.), “2025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보도자료”(2025.8.13.)를 재가공

이하에서는 2026년 정책펀드 예산안 확대 편성에 따라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검토함.

(가) 국민성장펀드 사업(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민간재원 간의 구축(crowding-out)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참여형 정책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국민성장펀드’(1조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성장펀드 조성규모인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데,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2026년 예산안 1조원)은 자율적인 민간·국민·금융기관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국민성장펀드의 연도별 자금 조성·집행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조성	첨단전략산업기금	15	15	15	15	15	75
	민간자금	15	15	15	15	15	75
	재정	1	2027년 이후 재정투입금액 미정				
소 계 (기금+ 민간)		30	30	30	30	30	150
집행 (기금+ 민간 기준)	직접지분투자	3	3	3	3	3	15
	간접지분투자	7	7	7	7	7	35
	인프라투융자	10	10	10	10	10	50
	저리대출	10	10	10	10	10	50
소 계		30	30	30	30	30	150

주 1) 금융위원회는 집행액은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산업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2026년도 재정 1조원을 포함한 재정투입액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구성하지 않고, 민간·연기금·국민자금 등의 후순위 보강을 통한 위험선분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은행·연기금 등의 민간 재원의 경우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재원조성을 구축하지 않고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는 시중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동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15%→20%)하는 한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을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으로 하향하고, 위험가중치 기준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8)]

이와 같은 은행 자본규제 개선은 은행권 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펀드 등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성장펀드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예산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9)] 민간 펀딩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금융위원회,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2025.9.19.

9) 전 부처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2025년 본예산 9,496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1조 9,4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민간 투자재원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민간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 재원의 경우 과거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예금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10)]

(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의 회수재원을 통한 투자까지 고려할 때 2026년 실제 출자 규모는 적어도 1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11)]

[2019년 이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액 편성 현황]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2,400	2,900	7,400	9,400	7,400	10,100	4,600	4,600	2,835	2,835	4,500	4,500	5,000	8,000	1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의 확대는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여유자금을 미래 성장산업, 벤처·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0) 2021년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사업, 혁신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모이도록 하고 그 수익을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되었고, 손실이 발생해도 최대 21.5%까지는 개인투자자 손실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뉴딜펀드는 안정적인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음.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수익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子)펀드 10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클래스 A 펀드 4개의 수익률은 전날 기준 5.88~6.36%에 그쳤고, 클래스 C 4개 펀드는 4.86~5.40% 수준이며, 고액 자산가형 I 클래스 수익률은 7.31%임.(뉴시스, “잊혀진 정책형 뉴딜펀드 4년 수익률 5%대... 부진한 수익률로 마무리”, 2025.3.25.)

11)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모태펀드의 회수재원에 대해서는 자펀드 청산 등이 완료된 연말에서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으로, 연내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창업기업의 과잉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버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고 정책자금에 상응하는 민간자금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2021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 참여자로부터 정책자금 및 투자재원 규모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간 출자자(LP)[12] 등 민간 펀드 투자자 모집에 일부 난항을 겪은 바 있으며, 투자 대상 기업의 벨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해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 수가 감소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13]

최근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의 증감규모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역시 큰 폭의 부침을 겪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예산안의 대폭 확대가 다시 벤처기업의 밸류에이션 증폭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자펀드 결성단계에서 민간 출자자(LP)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출자예산 증액에 따른 민간 출자자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14][15]

---

12) 유한책임투자자(LP: Limited Partner)란 투자한 금액만큼만 리스크와 책임을 지는 투자자로, 펀드에 자신의 자금을 제공하고 펀드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음.

13) 한국벤처투자, 「VC(Vencture Capital) 트렌드 리포트 2021」, 2021.11.

14) 참고로 정부는 2024년 10월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산업자본, 연기금, 일반국민 등 투자주체별로 벤처투자 참여경로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모험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15)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퇴직연금의 예금 위주의 투자로 인한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2018년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는 사례가 전무하였으나, 2025년 8월 LP 첫걸음 펀드를 통해 무역보험기금이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한 바 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2025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LP 플랫폼 예산이 500억원 편성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기금투자풀 내 여유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2026년 3월부터 허용될 예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다)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모태펀드 일부 투자분야의 경우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정책펀드의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민간출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모태펀드의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정책 출자비중(모태펀드+정책기관 등)이 2025년에는 8월말 기준 41.5%로 다소 낮아졌으나, 2022년 41.5%, 2023년 49.4%, 2024년 52.7%로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책 출자비중이 2022년 61.4%, 2023년 64.3%, 2024년 60.3%, 2025년 8월말 63.4%로 2022년 이후 계속 6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모태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 모태펀드	모태펀드	17,725	37.2	15,028	35.7	11,388	39.1	13,360	42.4	6,397	34.1
	정책기관 등	4,055	8.5	2,453	5.8	2,984	10.3	3,240	10.3	1,388	7.4
	연금/공제회	4,625	9.7	5,265	12.5	1,690	5.8	550	1.7	1,750	9.3
	VC	4,052	8.5	4,130	9.8	2,179	7.5	2,840	9.0	2,328	12.4
	민간금융기관	9,356	19.6	6,375	15.1	5,186	17.8	5,294	16.8	4,418	23.5
	일반법인	6,745	14.1	7,111	16.9	4,621	15.9	5,341	17.0	1,991	10.6
	기타단체, 외국인	348	0.7	766	1.8	597	2.1	248	0.8	242	1.3
	개인	789	1.7	1,004	2.4	452	1.6	477	1.5	255	1.4
	민간모펀드	-	-	-	-	-	-	160	0.5	-	-
	계	47,695	100.0	42,133	100.0	29,096	100.0	31,509	100.0	18,769	100.0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모태펀드	1,047	54.2	1,656	60.7	1,315	61.4	1,416	56.0	346	59.1
	정책기관 등	105	5.4	20	0.7	62.4	2.9	110	4.3	25	4.3
	운용사(GP)	346.4	17.9	550.3	20.2	214.3	10.0	259.3	10.3	134	22.9
	민간금융기관	115	5.9	175	6.4	70	3.3	90	3.6	-	-
	일반법인	220	11.4	315.2	11.6	460	21.5	621	24.6	80	13.7
	기타단체	100	5.2	-	-	20	0.9	-	-	-	-
	개인	-	-	10.5	0.4	-	-	10.4	0.4	-	-
	외국인	-	-	-	-	-	-	20	0.8	-	-
	계	1,933.4	100.0	2,727	100.0	2,141.7	100.0	2,526.7	100.0	585	100.0

주) 정책기관 등: 지자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울러 2025년 운용 중인 모태펀드의 투자분야별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13개 계정의 13개 분야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2개 계정의 14개 분야에서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해당 분야를 살펴보면 '대학창업', '농식품벤처' 등 기대수익률이 낮아 정책출자 비중이 높아진 분야도 있으나, 기준수익률 중위값이 5%로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스케일업', '청년기업성장(사업화)' 등에서도 정책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운용 중인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중 정책출자 비중이 70% 이상인 분야]

(단위: %, 억원)

펀드명	계정	분야	기준 수익률	결성액 총합	A+B	모태 펀드(A)	정책 기관 등(B)	연기금	운용사 (GP)	금융 기관	일반 법인	개인 등
중소 기업 모태 펀드	중진	임팩트	3	100% (365)	79.6	54.9	24.7	-	8.5	5.5	6.4	-
	지방	규제자유 특구	3	100% (352)	75.6	56.5	19.1	-	6.1	9.1	8.5	0.7
	엔젤	창업초기 (벤처투자)	1	100% (515)	72.3	59.8	12.5	-	7.2	2.3	17.9	0.4
	혁신 모험	창업초기 (지역허브)	1	100% (100)	89.0	60.0	29.0	-	5.0	-	1.0	5.0
	문화	애니/ 캐릭터	2	100% (267)	71.3	67.5	3.8	-	11.8	-	16.9	-
	관광	관광기업 육성	3	100% (2,764)	71.5	66.9	4.6	-	10.2	2.8	15.5	-
	스포츠	스포츠 프로젝트	2	100% (120)	70.0	70.0	-	-	13.3	-	16.7	-
	도시 재생	도시재생	1	100% (375)	82.7	80.0	2.7	-	6.7	-	-	10.6
	국토 교통 혁신	공유주택	1	100% (251)	83.7	79.7	4.0	-	3.2	-	10.0	3.2
	중진 (복지)	사회서비스	2	100% (215)	76.7	69.8	7.0	-	3.3	11.1	6.0	2.8
	교육	대학창업 (1유형)	0	100% (301)	70.4	66.8	3.7	-	21.2	0.1	0.2	8.2
	환경	스케일업	5	100% (440)	83.5	66.5	17.0	-	9.7	-	4.5	2.3
	중진 (고용)	사회적기업	2	100% (278)	78.8	64.7	14.0	-	8.5	-	4.8	7.9

(단위: %, 억원)

펀드명	계정	분야	기준 수익률	결성액 총합	A+B	모태 펀드(A)	정책 기관 등(B)	연기금	운용사 (GP)	금융 기관	일반 법인	개인 등
농식품 모태 펀드	농식품	6차산업	3	100% (600)	78.3	70.0	8.3	-	17.5	-	4.2	-
		AgroSeed	0	100% (100)	90.0	90.0	-	-	10.0	-	-	-
		R&D	3	100% (100)	80.0	70.0	10.0	-	10.0	-	10.0	-
		농식품벤처	0	100% (1,255)	78.4	78.1	0.3	-	10.3	-	11.3	-
		마이크로	0	100% (515)	81.9	79.5	2.4	-	6.2	-	8.3	3.6
		소규모 경영체	3	100% (600)	73.5	70.0	3.5	-	11.2	-	12.8	2.5
		스마트 농업	2	100% (1,460)	70.2	70.2	-	-	18.2	2.7	8.9	-
		영파머스	0	100% (662)	86.1	85.3	0.8	-	10.9	-	3.0	-
		징검다리	3	100% (436)	72.3	68.8	3.5	-	17.2	8.0	2.3	0.2
		창업보육	0	100% (71.4)	70.0	70.0	-	-	30.0	-	-	-
		청년기업성장 (창업초기)	2.5	100% (160)	76.3	70.0	6.3	-	14.7	6.3	2.5	0.2
		직접투자	0	100% (40)	100.0	99.0	1.0	-	-	-	-	-
		청년기업성장 (사업화)	5	100% (100)	85.0	70.0	15.0	-	15.0	-	-	-
	수산	수산 벤처창업	0	100% (501)	77.8	75.8	2.0	-	8.9	-	10.3	3.0

주 1) 기준수익률: 분야별 자펀드 기준수익률의 중위값
2) 정책기관 등(B): 지자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운용사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뒤 자펀드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향후 펀드사업 추진 시 민간출자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부처 간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개선 필요 등

첫째, 다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펀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사업 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1년에 공적 투자기관 간 역할분담 없이 부처·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에 따른 일부 중복투자 및 비효율 우려로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2011.9.)을 마련하였음.

당시 재정이 투입되는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신성장동력펀드(산업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림부)가 있었고, 그 외 민간조달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공사의 펀드가 있었으나, 재정출자 정책펀드를 모태펀드로 통합함[16]으로써 운용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그런데 2018년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 신설 이후 개별 부처에서 정책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외에도 8개 부처에서 11개의 정책펀드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부처 간 투자분야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①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인프라 투자,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원할 목적인바,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산업통상부) 등과 정책목적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우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에는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관련 예산안 5,5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목적 출자 분야인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첨단전략산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경우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업종 고도화, 창업·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와 일부 유사성이 있음.

16) 재정출자 정책펀드 중 신성장동력펀드는 한국모태펀드로 일원화되었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사업시행 초기 및 별도 근거법률 존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펀드 운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일원화를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주요 정책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

부처	정책펀드명(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① (분야) 첨단전략산업 분야(인공지능에 30조원 이상 공급) *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백신, 수소・연료전지, 항공우주・방산, 미래차, 원자력・핵융합, 미디어・콘텐츠, 로봇 등 ② (지역) 5극・3특 전략[17]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에 40% 이상 지원되도록 노력(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 적극 발굴) * 예) 경남 방산 프로젝트, 호남 AI데이터센터, 경북 이차전지 프로젝트 등 ③ (중소・중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히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모태펀드 (NEXT UNICORN PROJECT)	AI융합 및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① AI융합: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② 딥테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 기업
금융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후순위 투자 지원
산업부	산단환경개선펀드	국가・일반・농공 등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대상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 공장,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에너지기반 시설, 물류센터, 기숙사, 오피스텔, 호텔, 문화시설 등 설치・운영 사업

자료: 각 부처 및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보건복지부의 ‘임상 3상 특화 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 ‘사이버보안펀드’ 및 우주항공청의 ‘뉴스페이스 펀드’는 각각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및 우주 분야에 특화된 펀드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부 ‘Next Unicorn Project 펀드’의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 분야와 중복성이 있음.

또한 방위사업청의 ‘K-방산수출성장펀드’는 국방 6대 첨단전략산업(우주・AI・드론・로봇・반도체・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산 분야 초기창업 기업 및 수출관련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종합하면 부처 간 투자분야가 상당히 중첩되고 있음.

17) 5극 3특 전략은 국가균형성장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에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 정책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

부처	정책펀드명(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복지부	중소기업모태펀드 (임상 3상 특화)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추진 기업
과기부	중소기업모태펀드 (AI 혁신펀드, 사이버보안펀드)	① AI: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②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기술(AI, ZT, 융합보안, 클라우드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 등 정보보호산업(물리보안 제외) 중소기업
우주청	중소기업모태펀드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및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중소 벤처 기업
방사청	K-방산수출성장펀드	방산 분야 초기창업 기업* 및 수출관련 기업 * 초기창업 기업: 국방 6대 첨단전략산업(우주·AI·드론·로봇·반도체·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기업 등

자료: 각 부처 및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펀드’와 ‘글로벌 리그 펀드’,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전략펀드’,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등은 모두 콘텐츠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성이 있음.

모태펀드 문화계정 펀드 중 ‘IP’ 분야는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수출’ 분야는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이고, ‘콘텐츠 전략펀드’는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펀드라는 점에서 서로 투자분야가 중첩되고 있음.[18)]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8) 이에 대해 정부는 ①모태펀드 문화계정(모태펀드는 「벤처투자법」제39조 등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 불가능)과 달리 전략펀드와 글로벌리그 펀드는 최근 콘텐츠·미디어 산업 내 규모의 경제 및 자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 ②상대적으로 고위험·기업 영세성으로 인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운 콘텐츠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정책펀드 조성·운영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투자분야 간 중복성은 낮다고 본다는 입장임.

[콘텐츠 분야 주요 정책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

부처	정책펀드명(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IP)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중소기업모태펀드(수출)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문체부, 방미통위	글로벌 리그 펀드	문화·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
문체부	콘텐츠 전략펀드	국내 콘텐츠 산업 전 분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펀드는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에서의 선제적인 시장조성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바, 정책펀드의 신규 설정-운용-청산의 전 주기에 걸쳐 민간시장의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 정책펀드 사업을 평가·관리하며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정책펀드는 각 부처에서 출자금을 교부한 후 부처 간 투자기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투자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최근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정책펀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복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펀드 사업의 중복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책펀드의 투자분야를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사업 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1개 부처 14개 사업에서 중소기업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예산을 총 1조 9,497억원 편성한 것 외에,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성장펀드 사업 예산 1조원이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방식이나 지원분야, 성장단계 등이 상이하여 두 정책금융 상품 간 유사중복이나 간섭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함.

① 투자방식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중소기업모태조합은 간접투자 중심이고, ② 투자대상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10대 첨단전략 산업

을 위주로 하나 중소기업모태조합은 AI·딥테크 등 전략분야 외에도 시장 소외 분야 및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며, ③ 기업의 성장단계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불문하나, 중소기업모태조합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임.

[국민성장펀드 및 중소기업모태조합 비교]

구분	국민성장펀드	중소기업모태조합
지원(투자) 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간접투자 중심
분야	10대 첨단 전략 산업, 90개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초기창업·청년·여성 등 시장 소외 분야,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등
성장 단계	중소·중견·대기업, 인프라 등 메가프로젝트 중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재원	정책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일부 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	(모태펀드) 정부 부처 재정 출자 (모태자펀드) 모태펀드, 민간자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액 1조 1,000억원 중 절반인 5,500억원이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 펀드'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목적 출자 분야인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19]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첨단전략산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예시로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술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출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20] 국민성장펀드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와 중소기업모태조합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간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투자단계별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중소기업모태조합 "Next Unicorn Project" 출자분야별 투자 대상 기업

출자 분야	투자 대상
인공지능(AI) 융합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AI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포함
딥테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 기업

자료: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5.7.11.

20)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참고로 국내 벤처투자의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4% 수준이고 업력 7년 초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53.9%로, 국내 벤처투자가 창업 초기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한국의 벤처투자가 수도권 소재,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창업 후기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1)]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초기(3년 이하)	금액	30,585	33,594	26,808	22,243	11,595
	비중	19.2%	26.9%	24.6%	18.6%	20.4%
중기(3~7년)	금액	58,083	42,828	30,709	33,551	14,582
	비중	36.4%	34.3%	28.1%	28.1%	25.7%
후기(7년 초과)	금액	70,703	48,284	51,616	63,663	30,603
	비중	44.4%	38.7%	47.3%	53.3%	53.9%
합계		159,371	124,706	109,133	119,457	56,780

주)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합산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체 벤처투자 보도자료”(2025.2.12.), “2025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보도자료”(2025.8.14.)를 재가공

이와 같이 벤처투자가 창업 후기 기업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모태조합 공고 시 창업 초기 및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창업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모태조합이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모태조합은 기업 성장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규모 융자·출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기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1) 동아일보,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 기업에 쏠려... 정부 주도 모태펀드로 지역경제 살려야”, 2025.7.29., 한국경제, “벤처캐피털 5곳 중 1곳은 '개점휴업'… 초기 창업 생태계 붕괴 위기”, 2025.8.25.

(3)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일반법 제정 방안 검토 필요

정책펀드는 출자예산의 국고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자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금 재출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회수금의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정책펀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펀드를 조성하는 사업 방식은 모펀드가 여러 하위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모펀드에 출자한 예산은 관행적으로 모펀드가 청산된 후에야 국고로 회수되는데, 모펀드의 존속기간은 통상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출자예산이 회수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하위 펀드의 청산에 따른 회수금이 모펀드로 분배될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수재원을 통해 재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펀드 사업은 구조적으로 행정부의 집행상 자율성이 클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모태펀드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결성근거를 두고[22]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23]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결성근거 및 30년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음.[24]

---

2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2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그럼에도 정부는 2018년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개별 부처에서 모펀드를 조성하도록 정책펀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외에 8개 부처에서 12개의 정책펀드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모펀드 조성 및 존속기간 설정, 회수액의 재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일단 예산이 출자된 후에는 모펀드가 청산되기 전까지 자펀드 청산에 따라 발생한 회수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출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바,[25]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금 발생 시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함이 타당함.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출자금 비목 관련 예산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다양한 펀드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한정하여 펀드운용지침과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회수재원의 국고 회수 원칙, 회수 전 청산금의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26]

그리고 기금 집행지침에서는 정책 목적을 위해 펀드·조합을 출자·운용할 경우, 펀드운용지침과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회수재원의 국고 회수 원칙, 회수 전 청산금의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27]

---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출자금(460목)' 비목 세부지침

○ 정책목적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운용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연도 출자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기금을 통한 펀드출자사업의 예에 따른다.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5.1.)

27)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금 펀드출자사업' 세부지침

그러나 현행 예산 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예산 집행지침은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 출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아닌 정책펀드에 대해서도 규정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재정이 집합투자기구·특수목적회사에 출자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산 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와 정책펀드에 출자하는 '부처·기금관리주체·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펀드운용지침·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출자금이 편성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예·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예산 집행지침은 펀드 출자금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액과 투자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재정투입분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매년 펀드 출자금의 투자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청산 시 내부수익률, 일자리 창출규모 등) 등을 포함한 '(가칭) 연간펀드운용성과'를 예·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금관리주체 등이 정책 목적을 위해 펀드(또는 조합) 출자·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관리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소관부처, 기금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예산·기금을 통해 정책 펀드출자자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펀드출자 주체')

- 펀드운용지침에는 자금조성, 자금배분 및 운영기준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구펀드에 대한 출자기준 등 포함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년도 출자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자금조성에 있어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계획된 매칭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분야에 대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펀드운용과정에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투자의무비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결성총액에서 의무적으로 특정분야에 투자해야 할 금액의 비중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용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펀드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 구펀드의 선정 및 출자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에 출자하지 않은 자산은 각 펀드별 운용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출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출자한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5.1.)

넷째, 예산 집행지침은 자펀드 청산 시 국고 회수를 협약서 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회수 전 청산금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① 자펀드 청산 시 청산금의 원칙적 국고회수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을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 재투자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28] ② 국회에서 재정투입분과 회수재원분을 모두 고려하여 펀드 출자사업을 내실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회수재원의 규모 및 재투자 계획을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정책펀드 사업은 행정부의 집행상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로, 출자 후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금 재출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회수금의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정책펀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회수액의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행 법령상 재출자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4) 자펀드 결성·투자 지연 및 회수재원 등을 고려한 적정 출자규모 검토 필요

정책펀드 사업은 정책자금이 출자되더라도 민간자금이 매칭되어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 전까지 재정출자액은 모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게 됨.

또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가 결성되면 운용사는 통상 4년의 투자기간 내에 투자대상의 주식·지분 등을 인수하여 투자를 집행하게 되므로, 각 자펀드의 결성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투자가 실시된 시점에 이루어짐. 따라서 결성총액과 실제 투자금액 간 차액은 개별 자펀드에 투자대기 중인 금액으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출자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자펀드 조성을 위해 재출자하고 있고, 매년 예산액과 회수액을 더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차년도에 활용가능한 회수재원 규모가 클 경우, 더 적은 신규 출자액으로도 동일한 규모의 정부출자가 가능하게 됨.

이를 고려할 때 2026년도 출자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유보되어 있는 재정출자액,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여력 및 회수재원 발생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별 현황을 보면 미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회수재원 발생이 예정되어 출자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음.

(가) 모태펀드(문화·영화·관광·스포츠계정) 출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문화·영화·관광·스포츠계정) 출자 사업(2026년도 예산안 4,530억원)은 각 계정별 기존 자펀드 결성 실적 및 투자여력, 연도별 투자집행액 현황 및 재출자가 가능한 회수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정 신규 출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0억원(49.5%) 증액된 4,530억원(문화계정 2,700억원, 영화계정 700억원, 관광계정 730억원, 스포츠계정 400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은 이에 회수재원(재출자액) 850억원을 더해 총 5,38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총 8,917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조성계획(안)]

(단위: 백만원)

계정	2026년 조성계획(안)					
	정부출자금			민간	정부출자 비율	결성총액 (목표액)
	'26년 예산안	회수액(안)	계			
문화	270,000	80,000	350,000	225,000	60.9%	575,000
영화	70,000	-	70,000	70,000	50.0%	140,000
관광	73,000	-	73,000	39,400	65.0%	112,400
스포츠	40,000	5,000	45,000	19,280	70.0%	64,280
계	453,000	85,000	538,000	353,680		891,680

주 1) 2026년 재출자규모는 아직 미정으로, 현재 작성된 수치는 8월말 기준 추정치임
2) 정부출자비율 및 결성총액(목표액)은 2025년 수치를 준용한 값으로 잠정적 수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아직 자펀드 결성 전인 2025년도 자펀드 결성목표액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문화계정 약 1조 2,173억원, 영화계정 약 1,379억원, 관광계정 약 1,339억원, 스포츠계정 약 1,080억원 등 각각 상당한 규모의 투자여력이 남아있음.[29)]

29) 2022년~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계정	출자연도	정부출자	민간	결성총액	투자집행액	투자소진율	투자여력
문화	2022	1,741	947	2,688	2,144	79.8	275
	2023	2,175	2,311	4,486	2,230	49.7	1,807
	2024	3,500	3,292	6,792	1,485	21.9	4,628
	2025	3,950	2,568	6,518	403	6.2	5,463
	계	11,366	9,118	20,484	6,262	30.6	**12,173**
영화	2022	436	310	746	724	97.1	-
	2023	250	280	530	492	92.8	-
	2024	325	328	653	285	43.6	303
	2025	598	598	1,196	-	-	1,076
	계	1,609	1,516	3,125	1,501	48.0	**1,379**
관광	2022	450	252	702	455	64.8	177
	2023	300	130	430	202	47.0	185
	2024	350	191	541	135	25.0	352
	2025	450	244	694	-	-	625
	계	1,550	817	2,367	792	33.5	**1,339**
스포츠	2022	254	122	376	159	42.3	179
	2023	175	89	264	167	63.3	71
	2024	375	167	542	108	19.9	380
	2025	350	150	500	-	-	450
	계	1,154	528	1,682	434	25.8	**1,080**

주 1) 2025년 8월말 기준임
2) 2025년은 운용사 선정시 결성 목표액으로 현재 조성 진행중임
3) 투자여력은 자펀드 결성규모(2025년은 결성목표액)에서 旣 투자액과 펀드 운용비용(운용사 보수 등으로 청산 시 확정되며, 통상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상 규모임. 이 표에서는 10%로 가정)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0년 이후 계정별 연간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결성총액(목표액)은 2020년에 비해 2024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집행액은 그에 비례하지 못함에 따라 각 계정별로 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 중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문화계정의 경우 결성총액은 2020년 2,438억원에서 2024년 6,79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0년 2,118억원에서 2024년 2,829억원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스포츠계정의 경우에도 결성총액은 2020년 294억원에서 2024년 5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3년 이후 100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신규 출자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0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2026(안)
문화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1,460	1,540	1,741	2,175	3,500	3,950	3,500
		민간	978	1,341	947	2,311	3,292	2,568	2,250
		결성 총액	2,438	2,881	2,688	4,486	6,792	6,518	5,750
	투자집행액		2,118	2,450	2,287	2,559	2,829	2,324	
영화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310	362	436	250	325	598	700
		민간	154	199	310	280	328	598	700
		결성 총액	464	561	746	530	653	1,196	1,400
	투자집행액		531	487	643	629	687	560	
관광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300	450	450	300	350	450	730
		민간	141	200	252	130	191	244	394
		결성 총액	441	650	702	430	541	694	1,124
	투자집행액		326	349	354	455	423	395	
스포츠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200	130	254	175	375	350	450
		민간	94	55	122	89	167	150	193
		결성 총액	294	185	376	264	542	500	643
	투자집행액		235	253	239	156	145	179	

주 1) 결성규모는 해당연도에 결성된 자펀드 기준으로 작성(단, 2025~2026년은 결성목표액 기준)
2) 투자집행액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에 집행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단, 2025년은 8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 8월말 기준 문화계정은 3,071억원, 관광계정은 221억원의 회수재원이 대기 중에 있어 현재 계획한 2026년 재출자 규모(문화계정 800억원, 관광계정 없음)보다 각각 2,200억원 및 200억원대의 재출자가 추가로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6년 신규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도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회수액 현황]

(단위: 억원)

계정	누적 회수액 (A)	누적 재출자 계획액(B)	납입예정 대기금액 (C=B-A)	'26년 재출자 계획액(안)(D)	추가 재출자 가능액(C-D)
문화	8,780	5,709	3,071	800	**2,271**
영화	678	656	22	-	22
관광	491	270	221	-	**221**
스포츠	266	214	52	50	2

주 1) 2025년 8월말 기준
2) 2026년 재출자 계획액(안)은 아직 미정으로, 현재 작성된 수치는 8월말 기준 추정치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민성장펀드 사업(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사업(2026년도 예산안 1조원)은 2024년, 2025년 산업은행출자(혁신산업펀드) 사업 예산안 심사 시 산업은행 내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반영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 방식으로 편성된 성장지원펀드(2018~2020), 소부장펀드(2020~2021), 뉴딜펀드(2021~2022), 혁신성장펀드(2023~2025) 사업 등의 재정출자분에 대해서는 그 회수재원을 재정모펀드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2024년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600억원, 2025년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1,238억원을 반영하여 혁신성장펀드 예산을 조정한 바 있음.

2025년 8월 기준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액 3,614억원 중 재투자된 재원 1,838억원을 제외한 1,776억원이 아직 미활용된 회수재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 연말까지 490억원의 회수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30]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기존 정기배당액에 더하여 특별배당 형태로 정부로 환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31] 산업은행의 배당은 산업은행의 영업활동을 통한 당기순이익이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회수재원이 특별배당 형태로 배당되더라도 각 부처의 차년도 정부출자수입(52-521) 세입으로 계상될 뿐임.

그러나 종전과 같이 산업은행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을 차년도 산업은행 출자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산업은행 출자사업의 회수재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펀드 출자금의 원금 및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성장펀드로 출자할 때

30)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액 등의 현황 및 예상내역

회수재원의 출자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종전의 혁신성장펀드 예산안 심사 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2026년도 예산안 650억원)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1~2차년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년도 추가 출자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펀드들과 투자분야가 중첩되는 '콘텐츠 미래전략펀드'의 신규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억원)

펀드명	연도	재정 출자액	펀드 총결성액 ('25.7월말 기준)	회수액(재정모펀드 기준)			
				~2025.8. 회수액	2024~2025년 재투자분주)	2025.9.~12. 회수 예상액	2026년 회수 예상액
성장지원펀드	2018	1,700	29,351	928	1,089	41	123
성장지원펀드	2019	1,000	32,034	345		24	72
성장지원펀드	2020	500	37,649	112		12	36
구조혁신펀드	2020	750	14,482	90	-	-	-
구조혁신펀드	2021	675	16,588	140	-	-	-
소부장펀드	2020	2,000	7,809	624	584	264	847
소부장펀드	2021	2,400	5,261	355		4	583
뉴딜펀드	2021	5,100	64,437	843	165	57	253
뉴딜펀드	2022	4,500	45,329	130		72	91
뉴딜펀드	2022	1,500	8,556	41	-	11	121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3	2,000	20,827	4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3	1,000	18,600	2	-	5	-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4	2,000	17,900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4	1,000	35,299	-	-	-	-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5	2,000	-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5	1,000	-	-	-	-	-
지역활성화펀드	2024	1,000	2,872	-	-	-	-
지역활성화펀드	2025	1,000	-	-	-	-	-
원전산업성장펀드	2025	350	-	-	-	-	-
반도체생태계펀드	2025	300	-	-	-	-	-
합 계		31,775	356,994	3,614	1,838	490	2,126

주) 성장지원펀드와 소부장펀드, 뉴딜펀드는 단일 모펀드로, 재투자 재원을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31) 2025년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91.99%), 국토교통부(5.05%), 산업통상자원부(1.62%), 해양수산부(0.46%), 기후대응기금(0.88%)로 사실상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에 출자하는 예산 150억원과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인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됨.

먼저 2024년부터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초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32]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조성 목표는 축소되고 있음.

1차년도인 2024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2025년 3월말에 조성되었고, 자펀드 조성 목표도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아직까지 2024년도 자펀드 결성내역이 없음.

2차년도인 2025년 출자액 또한 아직까지 모펀드 결성 전으로 현재 모펀드를 정부 출자금만으로 구성하고 자펀드 조성 목표 또한 당초 1,200억원에서 400~500억원 규모로 축소할 계획임.[33]

32) 당초 연도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계획(안)(20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계
모펀드	정부	800	200	200	150	150	1,500
	문체부	450	150	150	100	100	950
	과기부	350	50	50	50	50	550
	민간 등	1,200	200	200	150	150	1,900
	소계	2,000	400	400	300	300	3,400
자펀드	모펀드	2,000	400	400	300	300	3,400
	민간자금	4,000	800	800	600	600	6,800
	합계	6,000	1,200	1,200	900	900	10,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3) 변경된 연도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계획(안)(2025년 9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계
모펀드	정부	800	200	200	150	150	1,500
	문체부	450	150	150(예산안)	100	100	950
	과기부	350	50	5(예산안)	50	50	550
	민간 등	600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계	1,400	2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자펀드	모펀드 (및 지정출자자*)	1,600*	2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민간자금	2,400	200~3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합계	4,000	400~5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주) * 2024년 모펀드 결성 후 산업은행에서 지정출자자로 추가 200억원 참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가 2024~2025년을 더해 4,4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년도 자펀드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지, 아직까지 결성되지 못한 1~2차년도 자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2026년 추가 출자 예산이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2026년 콘텐츠 분야에서 또 다른 신규 펀드인 '콘텐츠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도 편성하였는데, 정부 출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제한 없이 'AI 활용 콘텐츠', 'AI 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활용(R&D)', '대작 IP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함.

그러나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또한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등을 통해 AI 콘텐츠 및 대작 IP 확보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및 각 펀드의 투자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분야가 중첩되는 신규 펀드의 조성이 필요한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2026년도 예산안 600억원)은 2025년 출자액의 연내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부진으로 인해 동 펀드들의 투자여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신규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자유치를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자금 4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월말 기준 아직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중으로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음.

[2025년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결성규모			출자일 (문체부→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기간)	자펀드 운용사 선정일	자펀드 결성시한
정부 출자금	민간	결성총액 (목표액)				
400	600	1,000	'25.7.31.	'25.7.31.~8.21.	'25.10.(예정)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 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현재 계획대로 자펀드 운용사가 2025년 10월 선정되더라도 자펀드 결성시한을 고려하면 2025년 연내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와 마찬가지로 결성이 지연된 1차년도 자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2026년도 추가 출자 예산이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34)]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에 대한 재정투입이 계속되었음에도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부진으로 인해 동 펀드들의 투자여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투자여력이 소진된 이후 추가적인 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2026년도 예산안 1,000억원)을 통하여 뉴스페이스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기존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실적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자펀드의 결성 및 투자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주항공청은 2026년부터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이하 “기금사업”)은 종료하고,[35)]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음.

우주항공청은 2023년 수행한「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모태펀드 활용 전략」연구에서 국내외 펀드 결성 사례 및 정부 벤처캐피탈 담당자 인터뷰 및 운용사 인터뷰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펀드자금 배정 필요성이 도출된 바 있고, 기금사업을 통해 결

34)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2024년도 자펀드가 2025년 8월말 기준 아직 결성 전으로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 출자액의 경우 9월 기준 모펀드도 결성되지 못하고 있음.

35) 과학기술진흥기금-뉴스페이스투자지원(1333-301)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민간 매칭을 통하여 총 301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음.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의 자펀드 결성내역]

(단위: 억원)

연도	모태펀드 구성액	자펀드 구성액	주목적 투자비율
2023	50	100	60%
2024	50	120	60%
2025	35	81	60%
합계	135	301	-

자료: 우주항공청

성한 펀드 운용사가 투자 협의 중인 37개 우주기업의 투자 단계별(규모별) 희망 유치 금액(3,721억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2,000억원의 펀드 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여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앞서 기금사업을 통해 결성된 자펀드 규모 80~120억원의 5~9배 수준인 600~7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바, 펀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에 대한 수요조사나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기금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보면 투자기간 5년 중 초기 1~2년 내 주목적 투자실적이 67억 5,000만원으로 집계되어, 남은 3~4년의 투자기간 동안 주목적 투자실적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펀드 및 향후 결성될 펀드에 대해 투자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36]

[기금사업의 자펀드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모태펀드 구성액	자펀드 구성액	자펀드 투자실적 ('25.8월말 기준)	주목적 투자실적 ('25.8월말 기준)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2023	50	100	40	40	60%
2024	50	120	42	27.5	60%
2025	35	81	(결성중)	-	60%
합계	135	301	82	67.5	-

자료: 우주항공청

(바)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보건복지부)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2026년도 예산안 600억원)은 임상 3상에 특화된 별도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와 출자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K-바이오·백신 펀드의 임상 3상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지적 및 회수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펀드의 회수자금을 우선 활용한 임상 3상 투자 확대 및 정부 신규 출자금의 감액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사업은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 3상[37]의 경우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 3상 등 고위험

36) 현재 결성된 자펀드 기준 최종적으로 132억원 이상의 주목적 투자실적이 필요함.

37) 임상 1상: 신약 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여 안전성과 약물의 체내 작용 특성을 평가
임상 2상: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여 치료 효과(유효성)와 적정 용량을 탐색
임상 3상: 다수의 환자 대상 대규모 시험을 통해 유효성·안전성 최종적 입증 및 허가 신청 근거 확보

구간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임.

그러나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 역시 임상 3상을 포함한 신약개발 전 단계를 펀드 결성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신규 펀드의 출자 목적이 기존 펀드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K-바이오·백신 펀드 투자 대상]

(투자 대상)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1호 펀드) →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 및 백신 관련 혁신 기술 개발 기업(2~4호 펀드)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K-바이오・백신 펀드와 관련하여 당초 펀드 결성 목표에 따라 자금을 조속히 모집・결성해 임상 3상 단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38)]

특히 K-바이오・백신 펀드의 반납자금(회수금)이 1,55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 1,110억원을 재출자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48억원 역시 현재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5호(500억원) 및 6호(600억원)에 각각 200억원씩(총 400억원) 출자할 계획임.[39)]

이러한 국회의 지적 취지와 K-바이오・백신 펀드의 당초 목적을 감안하면, 해당 회수자금을 임상 3상 단계의 투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각 펀드(5호・6호)에서 임상 3상 단계의 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위한 신규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검토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38)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시 “당초 펀드 결성 목표대로 운용사당 2,500억원의 출자금을 조속히 모집 결성하여 K-글로벌 백신펀드 내 자금이 실제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음.

39) 2025년 7월 공고, 2025년 10월 운용사 선정 예정

[K-바이오・백신 펀드 회수액 중 재출자 예정액]

(단위: 억원)

계정	회수액(A)	재출자액(B)
보건	1,558	1,110

주 1) 2025년 8월 기준
2) 복지부 출자 약정액 총 2,510억원 - 복지부 출자금 예산 1,400억원 = 1,110억원 재출자액
자료: 보건복지부

(사)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2026년도 예산안 700억원)은 최근 4년간 투자대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2026년 회수 예정 재원, 자펀드 결성-실투자 간 시차에 따른 집행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자금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모태펀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말 기준 매년 1,500억원 이상(농식품 계정: 1300억원)을 투자대기성 자산으로 보유하였고, 2024년의 평균 잔액도 1,872억원(농식품 계정: 1,535억원)에 달하였음.[40][41]

또한 모펀드 출자 이후에도 신규 자펀드 결성과 실제 투자집행 사이에 구조적 시차가 존재하여[42] 당해연도 예산 투입이 즉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고, 2025년 중 펀드 청산 등에 따른 회수액 규모가 5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회수예정 재원 규모가 최소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금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 농식품투자계정의 자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2024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출자액 550억원 및 회수액 등으로 조성된 2,173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민간 투자금 포함)되었지만 실제 투자액은 1,878억원에 그쳤고, 그 결과 연말(12.31.) 기준 농식품투자계정에는 이전 연도의 자펀드 결성 후 미투자액과 아직 자펀드 결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집행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1,313억원의 투자대기성 자금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2025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550억원의 집행 현황을 보면, 8월말까지 자펀

40) 농식품모태펀드 결산보고서상 연말기준 투자대기성 자산 보유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말 보유	2022년말 보유	2023년말 보유	2024년말 보유
현금 (A)	489	335	215	172
단기투자상품(정기예금 등) (B)	1,275	1,670	1,730	1,400
계 (A + B)	**1,764**	**2,005**	**1,945**	**1,572**
(농식품)	**(1,528)**	**(1,765)**	**(1,706)**	**(1,313)**
(수산)	(236)	(240)	(239)	(2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1) 농식품모태펀드 월별 평균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투자계정	**1,477**	**1,891**	**1,873**	**1,535**
수산투자계정	279	263	287	337
합 계	1,756	2,154	2,160	1,8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2) 자펀드가 결성되더라도 운용사는 통상 4년의 투자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주식·지분 등을 인수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함.

드에 출자된 예산액은 226억원이나 실제 투자액은 전무한 상황임.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투자계정 연도별 자펀드 결성액·투자액 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투자계정 자펀드 결성액	정부	1,526	1,235	1,206
	농식품부 출자	400	400	550
	회수금 등[1]	1,126	835	656
	민간	1,005	773	967
	계	2,531	2,008	2,173
농식품투자계정 자펀드 투자액[2]		1,246	1,297	1,878
자펀드 투자 후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투자계정 잔액(12.31 기준)		1,765	1,706	1,313

주 1) 회수금 및 회수 예정액
2) 자펀드는 4년 투자, 4년 회수 구조로 회수는 4년에 걸쳐 진행
3)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투자계정은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신규 결성펀드 투자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농식품부 출자액	민간	결성총액	투자액	자펀드 수	운용사
2025년 8월말	226	154	380	-	3	3개 선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아)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해양수산부)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2026년도 예산안 200억원)은 주목적 투자대상이 해양 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로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동일하므로, 해양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0억원을 출자하여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온바, 2025년 8월말 기준 결성된 자펀드 수는 9개, 총 결성규모는 1,522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522억원), 투자금액은 882억 8,400만원임.

그런데 9개의 자펀드 중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개 자펀드의 결성규모 및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면 해양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457억 6,600만원으로, 신규 출자하려는 200억원보다 큰 규모임.

[해양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자펀드명	결성일	존속기간	투자기간	결성규모 (A)	투자금액 (B)	잔존금액 (C=A-B)	운용비용 (D)	투자여력 (C-D)
캐○○○○조합	2019. 8.	8년	8년	14,500	13,302	1,198	1,450	△252
에○○○○조합	2019. 1.	8년	8년	15,000	12,301	2,699	1,500	1,199
B○○○○조합	2020. 6.	8년	4년	15,500	13,100	2,400	1,550	850
인○○○○조합	2020. 12.	8년	8년	14,300	11,600	2,700	1,430	1,270
해○○○○조합	2021. 11.	8년	3년	14,300	11,737	2,563	1,430	1,133
마○○○○조합	2022. 12.	8년	4년	30,000	10,300	19,700	3,000	16,700
비○○○○조합	2023. 11.	8년	4년	20,000	7,250	12,750	2,000	10,750
서○○○○조합	2024. 6.	8년	4년	21,600	7,194	14,406	2,160	12,246
2○○○○조합	2024. 6.	8년	3년	7,000	1,500	5,500	700	4,800
합계				152,200	88,284			**45,766**

주 1) 2025년 8월말 기준
2) 운용비용은 결성규모의 10%로 임의 추산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기업의 75.4%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43] 기존 해양모태펀드의 수도권 외 투자비율이 44.8%로 낮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설명하나,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신규로 조성하려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이 동일하므로, 지방소재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시 기존 해양모태펀드 투자여력의 적극적 활용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2026년도 예산안 740억원)은 2개 프로젝트 펀드와 1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1개 프로젝트 펀드는 2026년 투자수요금액 또는 시기가 미정이므로, 투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펀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충전소 운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펀드 조성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6년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후,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수소전환 패키지 프로젝트와 이동형 전기충전서비스 프로젝트 등 2개의 프로젝트 펀드 및 전기·수소차 산업생태계 전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1개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할 계획임.

43) 해양수산기업 199,567개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48,986개(24.6%), 광역시 소재 기업은 38,944개(19.5%), 지방소재 기업은 111,637개(55.9%)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소충전과 관련하여 6개 기업이, 전기충전과 관련하여 5개 기업이 수요를 표시하였고, 1개 기업이 둘을 종합하여 별도로 제출하였는데,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별도 제출한 L사를 제외하고, 자펀드 결성시기를 2026년으로 명시한 A사와 B사의 투자수요금액은 각각 700억원과 50억원에 불과함.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수요조사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수요 기업	투자수요 금액	자펀드 결성시기	사업내용
수소 충전	A사	700	2026년	기 보유 디젤차량 수소버스로 전환 및 수소충전소 운영
	B사	30~50	2026년	액화수소 공정 및 탱크 개발, 수소충전소 등
	C사	미정	미정	산업 폐기 가스 수소전환 모듈
	D사	100	미정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정 기술 독자개발
	E사	50~100	미정	수소충전 인프라 장비
	F사	30~50	미정	수전해 수소 기술 보유 및 모듈형 제작으로 충전소 직접 연동
전기 충전	G사	미정	2026년	전기차 충전결제플랫폼
	H사	미정	2026년	공동주택 중심 완속 충전 사업확장
	I사	200	미정	급속충전 파워모듈 제조·개발 선도적 기술 보유
	J사	미정	미정	전기차충전플랫폼 운영
	K사	100	미정	전기차 인프라
L사 별도 제출		2,000	2026년	수소충전 관련기업 10개사, 전기충전 관련기업 10개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한편 전기충전 관련 프로젝트를 제출한 G사, H사, I사, J사, K사의 경우 투자수요금액 또는 자펀드 결성시기가 미정이므로, 2026년에 추진하려는 2개의 프로젝트 펀드 중 하나인 전기충전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펀드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펀드를 하위펀드 설정액 대비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할 계획이므로, 예산액인 740억원이 모두 매칭자금과 결합되어 프로젝트에 투자될 경우 그 금액은 최소 1,480억원이 될 것임.

그런데 2026년 사업내용·투자수요금액과 자펀드 결성시기가 명확한 수요 기업은 A사와 B사뿐이므로, 이를 더해도 750억원에 불과하여 자펀드 최소 규모인 1,48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44]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투자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자펀드 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4)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사가 제출한 투자 수요를 포함하여 2026년에 약 2,73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프라펀드 조성 전 관련 금융기관과 투자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자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5)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상향 조정 및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 마련 필요

첫째, 모태펀드는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이 자펀드의 주목적에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최소한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는 높게 설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산운용사의 수익보전,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정부재정·회수재원)은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2025년 운용 중인 자펀드 중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낮은 펀드가 다수 발견되었음.

[정책자금 출자비율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보다 높은 펀드 현황]

(단위: 억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정책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OOOOOO	재도약	2023-11-23	160	100	405	64.2%	60%
		OOOOOO	루키리그	2024-07-30	80	15	150	63.3%	60%
		OOOOOO	루키리그	2024-07-05	170	40	244	86.1%	70%
		OOOOOO	임팩트	2024-07-29	100	20	173	69.6%	60%
		OOOOOO	재도약	2024-07-29	150	10	260	61.5%	60%
		OOOOOO	임팩트	2024-09-05	100	50	172	87.2%	60%
	청년	OOOOOO	청년창업	2023-11-23	100	15	170	67.8%	60%
		OOOOOO	청년창업	2025-08-22	135	10	225	64.4%	60%
	혁신 모험	OOOOOO	창업초기	2023-12-13	125	154	360	77.5%	60%
		OOOOOO	창업초기 루키	2024-01-26	100	45	223	65.0%	60%
		OOOOOO	초격차	2023-11-27	100	90	300	63.3%	60%
		OOOOOO	초격차	2023-12-05	150	128	408	68.1%	60%
		OOOOOO	창업초기	2024-08-27	100	30	170	76.5%	60%
		OOOOOO	창업초기	2024-09-05	180	70	300	83.3%	60%
	소부장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07-31	100	10	170	64.7%	60%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10-17	100	50	220	68.2%	60%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10-30	100	20	170	70.6%	60%
	지방	OOOOOO	지역AC세컨더리	2024-07-16	50	20	100	70.0%	60%

(단위: 억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정책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OOOOOO	지역AC세컨더리	2024-07-16	50	5	85	64.7%	60%
		OOOOOO	지역 라이콘	2024-08-12	30	5	50	7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8-28	30	10	5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17	18	3	30	7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29	30	10	5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09	30	10	60	66.7%	60%
		OOOOOO	인구활력	2025-05-12	48	10	95	60.8%	60%
		OOOOOO	인구활력	2025-04-29	48	-	78	61.3%	60%
	관광	OOOOOO	관광기업육성	2023-11-10	150	-	215	69.8%	65%
	문화	OOOOOO	K-콘텐츠IP	2023-08-09	150	25	261	67.1%	60%
		OOOOOO	K-문화일반	2023-08-11	100	15	215	53.5%	40%
		OOOOOO	M&A-세컨더리	2025-02-26	200	10	340	61.8%	60%
		OOOOOO	문화일반	2025-02-21	200	20	400	55.0%	50%
	스포츠	OOOOOO	스포츠산업	2023-11-15	119	-	184	64.7%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3-09-05	28	-	40	70.0%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3-12-04	28	-	40	70.0%	60%
		OOOOOO	스포츠산업	2024-08-26	221	-	322	68.6%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4-08-29	35	-	50	70.0%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4-11-20	35	-	50	70.0%	60%
		OOOOOO	스포츠프로젝트	2024-11-25	84	-	120	70.0%	60%
	중진 (복지)	OOOOOO	사회서비스	2024-09-24	50	-	70	71.4%	60%
	해양	OOOOOO	해양신산업	2023-11-28	130	-	200	65.0%	60%
	환경	OOOOOO	미래환경산업 영위기업	2024-09-05	293	75	440	83.5%	70%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농식품 투자	OOOOOO	영파머스	2023-07-18	135.0		152.0	88.8%	70%
		OOOOOO	직접투자	2023-07-06	29.7		30.0	99.0%	60%
		OOOOOO	마이크로펀드	2023-07-17	52.0	12.4	65.0	99.0%	60%
		OOOOOO	지역특성화	2023-12-15	60.0	20.0	120.0	66.7%	60%
		OOOOOO	수산업,수산식품	2023-09-26	120	-	150	80.0%	70%
		OOOOOO	농림축산식품	2024-07-25	150.0	50.0	300.0	66.7%	60%

주 1) 2023년~2025년 8월말 선정 펀드 기준
2) 정책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②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민간자금이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각각 있어 보이므로, 정부는 향후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설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동일한 분야 내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유도 및 민간출자자 유치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별 기준수익률의 일관된 설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펀드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로,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게 됨.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를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수익률은 운용계획에서 투자분야별 하한을 마련하되 세부 적용은 자펀드 규약 협의 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주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이 같은 하나의 분야 내에서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2024년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

(단위: 개)

계정	분야	1%	2%	2.5%	3%	3.5%	4%	5%	6%	7%	8%
중진	스타트업코리아	-	-	-	-	-	-	7	-	4	9
	루키리그	-	-	-	-	-	-	6	1	1	2
	재도약	-	-	-	1	-	-	-	-	1	-
청년	청년창업	-	-	-	-	-	-	2	-	-	1
지방	지역 라이콘	-	-	-	4	-	-	-	-	1	-
혁신모험	창업초기	-	-	-	-	-	-	3	-	-	3
문화	IP	-	-	-	-	3	-	-	-	1	-
	M&A-세컨더리	-	-	-	-	-	-	1	-	1	-
	문화일반	-	-	-	-	-	-	1	-	1	-
	신기술	-	-	-	-	1	-	-	-	1	-
스포츠	스포츠출발	-	1	-	-	-	-	-	-	1	-
과기정통	공공기술사업화	-	-	-	1	-	-	1	-	-	-
교육	대학창업	-	1	-	3	-	-	-	-	-	-

주) 2024년 출자를 통해 자펀드가 결성된 계정 중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기준수익률은 펀드별로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최소 기준수익률[45] 이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스포츠출발 분야의 경우 자펀드 기준

45) 기준수익률의 하한은 시장 금리 및 민간 출자자 모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고 시점에 출자 분야별로 정하고 있음.

수익률이 2% 또는 7%로, 루키리그 분야의 경우 5%에서 8%로 설정되는 등 동일한 분야 내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자 유치 및 운용사의 수익성 제고 유인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준수익률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자펀드 신속 청산 필요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523개 자펀드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가 315개(60.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57개 자펀드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가 26개(45.6%)로 자펀드 청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청산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를 신속히 청산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운용사는 자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총회 개최가 원칙이나, 90일 이내로 잔여자산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46]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해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47]

그런데 중소기업모태펀드는 현재까지 결성된 1,376개 자펀드 중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가 523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15개(60.2%)이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현재까지 결성된 144개 자펀드 중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가 57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26개(45.6%)에 불과함.

46)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내용

참고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공통 내용
④ 청산인(운용사)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7)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해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25년도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모태펀드 계정별 자펀드 결성, 운용 및 청산 현황]

(단위: 개, %)

정책펀드	계정	최초 결성 연도	현재까지 결성 펀드 수 (A=B+C+D)	투자 중인 펀드 수 (B)	투자기간 종료, 운용 중인 펀드 수 (C)	존속기간 만료 펀드 수 (D)	청산 펀드 수 (E)	청산 비율 (E/D)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2005	558	157	108	293	199	67.9
	혁신모험	2018	147	83	64	-	-	-
	청년	2013	79	19	29	31	4	12.9
	지방	2006	75	35	18	22	13	59.1
	엔젤	2011	46	17	14	15	2	13.3
	소재부품장비	2020	17	11	6	-	-	-
	문화	2006	160	57	28	75	50	66.7
	영화	2010	25	10	2	13	6	46.2
	관광	2015	15	7	6	2	-	-
	스포츠	2015	21	12	6	3	-	-
	과기정통	2010	43	18	8	17	6	35.3
	연구개발특구	2021	2	2	-	-	-	-
	도시재생	2019	3	1	2	-	-	-
	국토교통혁신	2020	10	9	1	-	-	-
	특허	2006	83	28	15	40	29	72.5
	보건	2013	9	3	2	4	2	50.0
	중진(복지)	2023	2	2	-	-	-	-
	교육	2017	45	18	24	3	-	-
	환경	2017	18	10	7	1	-	-
	해양	2019	9	7	2	-	-	-
	중진(고용)	2011	9	3	2	4	4	100.0
	소계		**1,376**	**509**	**344**	**523**	**315**	**60.2**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농식품	2010	123	48	26	49	24	49.0
	수산	2010	21	7	6	8	2	22.2
	소계		**144**	**55**	**32**	**57**	**26**	**45.6**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다음과 같이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청산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자펀드도 다수 발견되고 있음.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모태펀드 주요 자펀드 사례]

정책펀드	소관부처	계정	분야	펀드 결성일	존속기간 만료일	청산 지연 사유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기부	중진	국가간 전략	2011-07-08	2019-07-07	잔여자산 처분
			자조합출자	2011-10-12	2020-10-11	잔여자산 처분
			팬아시아	2011-10-28	2019-10-27	잔여자산 처분
			1인창조	2012-07-27	2020-07-26	잔여자산 처분
			창업초기	2012-07-27	2020-07-26	잔여자산 처분
	문체부	문화	애니/캐릭터	2013-08-30	2020-09-15	잔여자산 처분
농림수산 식품 모태펀드	농식품부	농식품	농림축산	2012-12-31	2020-01-22	잔여자산 처분
			소형프로젝트	2013-09-02	2020-09-23	잔여자산 처분
	해수부	수산	수산	2011-12-12	2018-12-25	잔여자산 처분
			수산	2012-07-20	2019-07-26	잔여자산 처분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 잔여자산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즉, 펀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원 전원 동의를 거쳐 청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다수로, 자펀드의 잔여자산 처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청산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IPO 시장 위축, M&A 시장침체 등 회수시장 환경 악화로 일부 잔여 투자자산의 회수가 미완료되어 청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피투자기업 사업설명회, 우수성과 홍보 등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세컨더리펀드 추가 결성을 통해 잔여 재산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펀드 결성액에 투입된 국고금은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마중물로서, 정해진 펀드운용기간을 거쳐 수익과 함께 청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고 및 민간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금 회수지연에 따라 신규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청산이 지연될 경우 정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민간투자금 유치 여건이 악화되므로, 정부투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성급한 청산은 헐값 회수 및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수익성이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산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운용 중인 자펀드의 경우에도 청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히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사업

가. 개 요

(1) 현 황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부과 및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및 전략품목의 수출 제한 등 다자주의적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각국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임.

① 대미 관세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1]과 「무역확장법」 제232조[2]를 근거로 보편관세,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음.

2025년 4월 2일 미국은 50개 이상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호관세 포고령을 발표하고,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이후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참고로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적 위협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 제재 및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 정부·단체·개인과의 금융 거래,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 및 러시아 제재, 북한 자산동결 조치 등이 있음.

2)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6)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품목별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수입제한 및 쿼터 설정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됨.

또한 미국은 3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품’에 대해 기존의 수입 쿼터를 폐지하고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였다가 6월 품목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고, 8월 철강·알루미늄의 파생제품까지 품목관세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체’에 대해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5년 10월 현재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로봇, 개인보호장비 등 9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대 100% 수준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3)]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협상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및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영국(5.8.), 일본(7.22.), 유럽연합(7.27.)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협상 현황과 영향]

- 영국: 5월 8일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협상 타결
  - 미국은 영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0% 유지, 자동차 10만대 품목관세 인하(27.5%→10%),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할당관세(TRQ) 등 합의
  -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항공기 구매(100억달러) 등 합의
- 일본: 7월 22일 관세협상 타결
  -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반도체, AI 등 경제안보 분야), 미국산 쌀 수입 비중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합의
  -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으며, 자동차 품목 관세도 12.5%로 인하 (기존 관세 2.5% 포함 최종 15%)
- 유럽연합(EU): 7월 27일 관세협상 타결
  -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및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
  - 미국은 EU산 모든 품목(자동차 포함)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 (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별도 유지)
- 한국: 7월 30일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LNG 등) 구매, 자동차・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등에 합의
  -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하(25%→15%)에 합의 (※ 다만, 한국과 미국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자동차와 차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인하(25%→15%)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대외경제동향&이슈”, 2025.9.

3)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제약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사 브랜드와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화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무역협정 체결을 마친 유럽연합(EU) 및 일본은 합의에 따라 최고 관세율이 15%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함.

한국은 2025년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은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기간 동안 상호관세율은 25%로 적용되고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지 못하였고,[4]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시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편 철강 제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었음.[5]

[미 관세 무역협상 현황]

날짜	내용
2025.7.30.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합의
2025.8.25.	한미정상회담
2025.9.25.	트럼프 미국 대통령,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요구
2025.10.13.	한국 대안 제시, 미국 추가 수정안 제시
2025.10.17.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방문
2025.10.22.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
2025.10.29.	한미정상회담 및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자료: 각 언론보도 재가공

2025년 10월 29일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세부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6]

첫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펀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됨.

①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의 연간 투자상한은 200억 달러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며,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됨. 또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②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는 우리나라 기업 주도의 FDI(해외직접투자)로 추진하고 투자와 더불어 장기 선박금융 등 대출·보증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특히,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되었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4) 최혜국대우를 받을 경우, EU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품,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됨.

5) 매일경제, ‘원화 담보로 미(美)가 직접 달러공급...대미펀드 “우회로” 뚫는다’, 2025.10.16.

6) 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함.

둘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당초 합의와 같이 15%로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가 인하되었음.

① 상호관세율은 15%로 하고, 상호관세의 적용 시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 품목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함. ② 품목관세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본·EU와 동일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은 무관세로 적용 받음.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도록 함.

② 중국의 희토류 등 희소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희토류 등 희소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수 산업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2025년 4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중국은 관세 유예 기간 중에도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었음.

특히,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9일 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② 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③ 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7][8] 2025년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으로 1

---

7)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2025.10.16.

8) 첫째,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됨.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음.
둘째,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및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로 추가되었음.
셋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됨.

년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였음.[9)]

희토류는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고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원자재 공급망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10)]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미국에 진출한 한국 조선사 5개 자회사에 대해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하였음.[11)] 이들 기업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펀드)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으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③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할당 강화 등

유럽연합(EU)은 10월 7일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해당 계획에는 ① 쿼터 물량 축소(△47%), ②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③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2026년에 확정될 경우 유럽연합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임.[12)]

① 쿼터 물량 축소는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이 유럽연합에 관세 없이 팔 수 있는 철강의 허용량이 축소되는 것으로,[13)] 한국의 철강 제조사는 EU 대상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축소되어 국내 생산에 과잉현상을 초래하거나 EU 외 다른 국가로 물량을 돌리게 됨에 따라 가격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또한 ②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은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이제 50%의 관세를 부과된다는 것으로, 이는 EU에 대한

9) KBS,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공식 발표”, 2025.10.30.

10) 서울신문, “반도체 핵심 희토류 中” 의존도 80%... 미중 전면전 땐 한국 직격탄 “, 2025.10.13.

11) 동아일보, “마스가 상징 한화필리조선소, 中” 서 제재당했다. “, 2025.10.14.

12)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유럽연합으로의 철강 수출량은 393만 2,366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3.1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한국 철강의 물량과 수출 규모 모두에서 지난 해 1위를 기록했음.

13)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EU에 약 393만t을 수출했으며 이 중 약 263만t은 국가별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무관세 쿼터를 활용한 것으로 추산됨.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국가별 쿼터 외에도 글로벌 쿼터를 운영해 어느 국가 제품이든 먼저 물량을 확보하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더팩트, “美 이어 EU까지 관세 인상... 韓” 철강 사면초가 “, 2025.10.11.)

한국산 철강의 수출량을 쿼터 내 수준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마지막으로 ③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은 철강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으로,[14] 이 경우 타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철강재를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져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야기함.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철강의 유럽 수출 여건은 나빠질 전망으로, 미국의 수입쿼터 폐지 및 철강 품목관세 50%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 부과 및 원자재 수출제한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단기 매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역시 저해될 우려가 있음.

14) 구체적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을 한국에 들여와 단순 가공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사례에 대하여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것임.

(2) 통상변화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방향

정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 제4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통상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통상종합대책은 공급망 안정, 기후·디지털 통상 대응,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통상 인력양성 등을 핵심 축으로 하며, 한·미, 한·EU 등 주요국 간 경제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15] 정부는 2025년 4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상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해당 통상종합대책에 따르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산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업종별 간담회 현황]

날짜	간단회 사례 및 내용
2025.4.4.	미 관세조치 영향 업종별 릴레이 회의 가전·디스플레이 및 기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논의
2025.4.29.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조선·항공우주·방산·원전·배터리·LNG 등 전략산업 기업 및 협·단체와 수출기업 의견 수렴
2025.9.22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2025.9.29.	의약품 수출기업 대상 긴급 간담회

자료: 서울경제 등 각 언론보도 재가공

이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문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② 수요 충격 대응 및 ③ 미 관세조치 협상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음.[16]

---

1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 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2025.4.9.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부과 시행에 대비하여 인프라, 투자, R&D, 인력양성으로 구분하여 반도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분야 R&D 투자계획 및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한 상황임.[17)]

또한 이차전지 투자 촉진 및 배터리 순환 이용 등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보증·투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실증지원 및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18)]

더하여, 최근 EU로부터의 철강 수입규제에 직면한 상황인데, 정부는 4월부터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통상 갈등에 따른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불공정 수입재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임.[19)]

조선업과 관련하여, 미국 MRO[20)] 등 신수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한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선 RG[21)]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22)]

이 외에도 AI 분야에서는 첨단 GPU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프라, 인재 및 관련 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으며,[23)]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남 여수 등 투자·고용의 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였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

17)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 2025.5.20.

18) 기후에너지환경부(舊 환경부),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5.14.

19) 한국무역협회, '산업차관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2025.10.9.

20) 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개조(Overhaul) 의 약자로, 기존 장비·선박·항공기 등의 유지보수 및 정비산업 전반을 의미함. 조선 분야에서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부품 교체, 정비, 개조 등을 수행하는 산업이며, 신규 선박건조와 달리 운항 중인 선박의 수리·개조·업그레이드 수요를 대상으로 함.

21) RG 공급 확대란 RG 보증서 지급과 관련됨. RG 보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소 조선사는 신용도 및 자금여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RG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박건조 및 수출계약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정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RG 보증서를 중소 조선사에게 발급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것임.

22)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025.4.9.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2025.4.18.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주요 전략]

컨설팅을 거쳐 「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방향」[24]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산업분야별 대책 발표 현황]

산업분야	회의 및 발표시기	대책명
자동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2025.4.9.)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반도체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 (2025.5.20.)	바이오분야 R&D 투자계획 및 규제개선 방향
이차전지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5.14.)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철강	관계부처 합동 (2025.10. 예정)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조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2025.4.9.)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4.18.)	「국가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
석유화학	관계부처 합동(2025.8.)	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방향

자료: 정부부처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확대 편성하였음.

특히 통상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 산업별 피해 완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기반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R&D·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 및 무역금융 보강,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기술자립 및 기후·디지털 통상 대응 관련 탄소감축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 지원사업 등이 주요 재정투자 항목으로 포함됨.

[전략 1]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1.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 가동
2. 민간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
3. 국산 AI반도체 성장 지원

[전략 2] 차세대 AI모델 개발
1. 혁신적 AI알고리즘 개발 지원
2. 고급 AI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전략 3] AI전환 가속화
- 분야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AI 혁신펀드 조성 규모 확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4) 투데이에너지, ‘석화업계, NCC 270~370만톤 감축 등 “사업 재편 계획” 설정’, 2025.8.21.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총 4조 3,120억원을 편성하였음.[25)]

우선 통상 현안 대응 측면에서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에 1조 9,000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 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방산·조선기업에 대한 보증·출자 예산을 반영하였음.

다음 수출기반 마련 측면에서는,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또한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30~50%)를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8개 부처, 75개 사업으로 총 4조 3,11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통상부 21개, 해양수산부 19개, 농림축산식품부 18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산업통상부 1조 820억 9,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7,090억 2,600만원, 기획재정부 7,000억원 순임.

25)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처별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기획재정부	1	700,000
2	농림축산식품부	18	709,026
3	산업통상부(舊 산업통상자원부)	21	1,082,093
4	보건복지부	1	34,923
5	해양수산부	19	394,522
6	중소벤처기업부	9	493,766
7	금융위원회	1	630,000
8	방위사업청	5	267,641
합 계		75	4,311,971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함

나. 검토의견

(1)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분류 적정성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관련 예산으로 8개 부처, 75개 사업 총 4조 3,1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26)]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통상 대응 및 공급망 확보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는데, 주제별 예산안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산안 편성의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상 대응 관련 사업이나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분류에 누락된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본예산	추경	
1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699	699	664
2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3,117	5,017	2,269
3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통상분쟁대응	18,031	18,031	15,432
4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통상협상체결 및 후속조치	5,075	5,075	4,847

자료: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함

‘통상 대응’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분류에 누락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기획재정부의 ‘통상연계형경협사업’은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고, 산업통상부의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는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통상절차법의 이행, 디지털 통상기반조성 및 해외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상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통상현안 대응 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다음 산업통상부의 ‘통상분쟁대응’ 사업은 정부간 WTO 제소·피소 등 분쟁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에 대한 민·관 합동대응 등을

26)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지원하려는 것이고, ‘통상협상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은 신규 FTA 협상 및 기존 FTA의 이행 후속조치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역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공급망 확보 관련 사업이나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분류에 누락된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본예산	추경	
1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	10,000
2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1,874	1,874	492
3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R&D)	2,767	2,767	4,943
4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	-	6,000
5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477	3,072

자료: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함

한편 ‘공급망 확보’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분류에 누락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기획재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간접 투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특별투자재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특정국을 중심으로 높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예산안 편성 목적을 고려할 때 통상 현안 대응 등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27)]

다음 기획재정부의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대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위험정보 조기입수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이고, 조달청의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2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해운·물류 등 인프라, 핵심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100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희소 금속(9종)을 비축하기 위한 소형 비축기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공급망 확보에 해당하여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 산업통상부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타이타늄광 탐사 및 채광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생명자원 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 기술개발(R&D)’은 국가필수의약품(473종) 중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및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소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공급망 확보에 해당하여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통상 대응 및 공급망 확보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음. 주제별 예산안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간 유사·중복·누락을 방지하지 못하여 예산안 편성의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국회 및 국민에게 예산안 편성내역을 내실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주제별 예산안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안 검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한·미 관세협상(2025.7.31.)에 따라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펀드)’와 조선 분야 이외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의 대출·투자·보증 등의 재원을 지원하려는 예산안이 1조 9,000억원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정책 금융기관이 대미 통상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내용의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6,300억원 신규 편성되었고, ②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내용의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7,000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③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무역보험기금의 대미 투자지원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5,7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이 6,005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대미 관세협상 관련 정책금융기관 출연·출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수행기관	지원 방식
1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700,000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630,000	한국산업은행	출자
3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00 (600,500)	무역보험기금	출연

주) 2026년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6,00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5,700억원은 대미투자지원을 위한 것이고 305억원은 중소형 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표에서는 대미투자지원을 위한 5,700억원만 기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함

참고로,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미 조선협력펀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투자·대출·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발표함.[28)]

[한·미 통상 협의 관련 진행경과]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2025.4.2.)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및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 ㅇ 美 정부의 관세 발효 유예(2025.8.1.일까지, 90일간) 및 국가간 관세협상 진행(2025.4.~2025.7.) - 우리나라도 관세율 인하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을 위한 협상 지속 ㅇ 관세협상 타결(2025.7.31.) - 상호관세(25%→15%),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 및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 -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조성 및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및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 투자·대출·보증 제공을 위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 조성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등 비관세장벽 완화 및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구매 약속 ㅇ 한·미 정상회담(2025.8.26.) -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후속 협의 예정 -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려는 공감대 형성 ㅇ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지속(2025.9.~10.) - 관세 협상 세부협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내 한국인근로자 구금 문제 이후 비자 협의 등 ㅇ 한·미 정상회담(2025.10.29.) 및 관세협상의 세부내용 합의 - 대미투자펀드 $2,000억은 연간 납입한도 $200억으로 설정, 2029년 1월까지 투자약정 - 조선협력펀드 $1,500억은 한국 기업의 FDI로 추진 - 상호관세율은 15%로 설정, 자동차·부품 15%로 인하, 의약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

자료: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및 대통령실 브리핑자료 등을 재가공

28)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소관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금융위원회 소관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 및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및 조선협력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바, 특히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납입한도(200억 달러) 내 자금조달 방식,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위한 대출·보증 등의 지원내용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지원 사업으로 5,7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별도 세부사업 없이 기타유가증권매입에 포함시켜 수지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확충이 아닌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29)]

29) 무역보험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세부사업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은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으로 이 사업으로 무역보험기금 수입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무역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점에서 자금의 기존 목적과 달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최근 통상환경을 고려한 수출바우처의 차별화된 요건 설계 필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인증·특허·물류 컨설팅 및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정규화하여 42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중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합 운영’ 사업(360억 5,000만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2026년에도 47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대미 관세협상 등 최근의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이 신설된 것임.

또한 산업통상부는 ‘K-수출스타 500’ 사업 401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0대 품목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인증, 특허 등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1,275억 6,00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2,173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도 전년 본예산 대비 137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300만원이 반영되었음.

첫째,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미국 관세조치 대상 산업이나 수입규제 위험 품목,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요건 설계가 필요함.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관세대응바우처의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추경 편성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수출바우처의 지원요건 중 미국을 대상으로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지원요건 및 산업별 지원요건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이는 2026년 긴급지원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임.

[2025년도 제1회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실적]

<table>
<tr><th>구분</th><th>수출바우처
(2025년 본예산)</th><th>관세대응(긴급지원)바우처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th></tr>
<tr><td rowspan="2">지원요건</td><td colspan="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td></tr>
<tr><td>-</td><td>(추가 조건)
1) 2022~2024년 대 미국,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2) 2022~2024년 해외의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3) 2022~2024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td></tr>
<tr><td>산업별
지원요건</td><td colspan="2">
<table>
<tr><th>세부산업</th><th>단계별 지원요건</th><th>바우처
발급한도</th><th>국고
보조율</th></tr>
<tr><td>소재·부품·장비</td><td rowspan="3">[진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td><td>[진입] 75백만원
[성장] 105백만원
[확장] 150백만원</td><td rowspan="2">(중소)
70%

(중견)
50%</td></tr>
<tr><td>그린</td></tr>
<tr><td>소비재</td><td>[진입] 45백만원
[성장] 75백만원
[확장] 82.5백만원</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즉,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바우처 및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구별하여 지원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세대응(긴급지원)바우처는 본래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므로, 지원대상을 미국의 관세조치 대상 산업, 수입규제 위험 품목 및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시기 및 지원내용을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둘째,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은 유망 내수기업을 중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K-수출스타 500 사업은 100개사를 대상으로 4억원씩 400억원을 마케팅, 인증·

특허・물류 컨설팅 및 R&D 컨설팅・실증을 위해 지원하고, 10대 산업/업종별 수출 중추기업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30]

기업당 지원금(4억원)의 상세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수요 기반 수출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산업별로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미엄 해외마케팅'에 2.4억원, 수출 IP 전략 컨설팅 및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맞춤형 특허 지원 등 '인증・특허・물류' 지원 0.8억원, 수출목적형 R&D 컨설팅 및 단기실증 지원을 위한 'Post R&D'에 0.8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세부계획]

구분	지원내용(단가:백만원)	산출내역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억원	· 해외수요 기반 수출상품 공동 기획 및 마케팅(70) - 현지 최신 트렌드・수요 기반으로 예비 히트상품 및 시장 제시, 공동 기획 및 개발 후 마케팅 지원	(국내) 15백만원 x 2회 (해외) 20백만원 x 2회
	· 산업별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 지원(140) - 핵심 바이어 발굴과 파트너십 형성, 마케팅 활동 및 영업망 구축, 현지시장 정착과 점유율 확대 지원 - 1년간 상시 맞춤형 지원 및 단독 행사・판촉 개최 지원	(행사) 52백만원 x 2회 (운영) 3백만원 x 12개월
	· 해외법인 설립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30) - 현지 전문 컨설팅기관(법무・회계・노무・관세 등) 활용 지원,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애로 해소	(컨설팅)1.5백만원 x 12회 (운영) 1백만원 x 12개월
인증・특허・물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0.8억원	· [인증] 인증조사 및 사후관리 원스탑 지원(20) - 필수인증확인-획득전략수립-시험진행·관리-사후관리	10백만원 x 2회
	· [특허] 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분쟁지원 등 맞춤형 특허 지원(20)	10백만원 x 2회
	· [물류] 물류 최적화 컨설팅 및 풀필먼트 지원(40) - 물류 최적화 컨설팅(물류 협의체 연계) 및 해외 공동물류 네트워크 활용 지원 등 - FTA활용 및 관세・통관 관련 애로해소 지원	(컨설팅) 14백만원 x 2회 (운영) 1백만원 x 12개월
Post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0.8억원	· 수출목적형 R&D 컨설팅(40) -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R&D 기획·수행 시 해외현지 기술규제·규격·인증 컨설팅 제공	20백만원 X 2회
	· 단기실증 지원(40) - 분야별 해외 주요기업 수요 반영 단기실증 관련 파트너 매칭, 실증결과 바탕 시제품 개발 및 인증 연계 지원	20백만원 X 2회

주) 무역보험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병행함.
자료: 산업통상부

30) 중추기업은 수출 1천만불 초과 5천만불 이하 기업을 의미하며, 2021년 2,789개, 2022년 2,708개, 2023년 2,621개, 2024년 2,586개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내용은 다른 내역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서비스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수출바우처의 지원 유형 14가지 중 특허/지재권,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홍보/광고, 무역보험보증 등 일부 유형의 바우처는 해외마케팅 및 인증·특허·물류 지원과 사업내용이 겹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23~2024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 현황]

서비스 대분류 변환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관리	홍보동영상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 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 운송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 보증

자료: 산업통상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망한 내수기업을 마케팅 및 R&D 지원을 통해 중추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지원유형 중복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 피해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품목별 수출의존도, 주요 수출국의 통상조치 현황, 산업별 피해예상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일정 금액 이하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나누어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수출 성장기업, 수출 강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지원한도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여 수출바우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전년도 직수출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한도가 구분되어 있을 뿐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2026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은 단순히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종전에 비해 체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음. 만일 단순히 직전년도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할 경우, 단기적인 수출 감소나 통상 제재로 인한 일시적 피해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임.

예컨대, 미국 품목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피해가 큰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의 보조금 한도 및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한도]

구간	지원 대상	보조금 한도	정부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0' 인 내수 중소기업	3,000만원	* 매출액 기준 차등지원 - (100억원 미만) 70% - (100~300억원 미만) 60% - (300억원 이상) 50%
튼튼한 내수기업	TIPS, 예비·아기유니콘, 간접수출기업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4,500만원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인 중소기업	3,000만원	
수출 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100만달러 미만' 인 중소기업	4,500만원	
수출 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500만달러' 인 중소기업	7,000만원	
수출 강소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 인 중소기업	1억원	
물류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	1,500만원	70%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테크서비스·기술 보유 중소기업	3,500만원	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히 직전년도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품목별 수출의존도, 주요 수출국의 통상조치 현황, 산업별 피해예상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공급망 안정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 지원규모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00억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으로 1,000억원을 계획하였음.

이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우주·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과 직결되는 핵심 품목의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50% 수준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특별개발 융자' 사업 예산을 2025년 390억원에서 2026년 71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여,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아울러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예산 37억 7,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용 후 배터리 등에서 유가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 순환형 공급망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이를 통해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탄력적 공급망 관리 및 자원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가)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산업통상부)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지원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상 투자수요 및 기간 확대를 기초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 투자지원금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지원 가능 금액과 투자실적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2025년에는 4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에는 로봇, 방산 분야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6,000억원의 투자예상액에 기업별 보조율과 국비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국내 생산시설은 있으나 중국 등 해외 대비 경제성이 열위하여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보조사업자로서 가동률 50%의 생산량에 대하여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중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31)]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기업 신청을 접수하여 10월 중 서면평가, 11월 중 현장조사 및 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이내에 협약절차를 완료하여 투자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2025년 8월 20일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대상 및 규모가 결정되었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실적 등을 확인하여 10월 및 12월에 3분기 및 4분기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이와 같이 두 사업은 2025년 실제 지원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도 예산을 예상 투자수요 및 기간 확대에 근거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2025년도 투자지원금 집행 결과와 기업 선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지원 가능 금액과 투자실적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32)]

(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산업통상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사업수행 인력 및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운영관리비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되, 재자원화 시설·장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핵심광물 재자원화[33)] 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 폐PCB 등을 재자원화

31)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대외 비공개 사항임.

32)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해 2025년 추경 사업 공모 결과 실제로 접수된 투자계획은 총 1조 2,473억원으로, 예상했던 투자계획을 상회하는 규모로 접수되어, 향후 평가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이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실집행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임.

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8set를 대상으로 3억 3,000만원의 단가를 설정하여 60%의 보조율로 34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보조사업 심사 및 평가비 200만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자원화사업팀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1억 7,500만원, 국제포럼 등 행사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 사업의 인건비(4명)는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필요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인력 4명이 공단의 정규 예산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신규사업의 전담기관이라는 이유로 연(年)보수 8,4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160일)하여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한편, 정부는 2025년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제시하였는데, 2024년 기준 재자원화 수준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34]

따라서 통상적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약 3% 내외 수준에서 운영관리비가 편성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비 및 보조사업 심사·평가비에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를 사업비의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자원화 시설·장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통한 융자기간 연장과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과거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석유·가스 및 해외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0억 1,700만원(82.1%) 증액된 71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33)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이미 사용했거나 버려진 자원에서 중요한 광물을 다시 회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폐배터리, 전자제품, 산업 폐기물 등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광물을 뽑아 내어 새로운 배터리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함.

34) 또한 핵심광물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5%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들도 전략적으로 재자원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82년부터 이 사업이 수행되어 2025년까지의 총 융자집행액은 5조 6,109억원이나, 2025년 9월 기준 회수된 원금은 2조 6,729억원, 감면된 원금은 1조 6,741억원[35]으로 이를 제외한 1조 2,639억원은 회수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향후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채권액이 1조 5,031억원이고,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회수금이 1조 7,332억원이므로 회수율은 양호하다는 입장임.

[1982~2025년 지원 융자금 및 회수된 원리금 현황]

(단위 : 억원)

지원된 융자금	회수된 융자원금(A)	회수된 이자금(B)	회수금 (A+B)	감면액	채권액 (향후 회수예정)
56,109	26,729	17,332	44,062	16,741	15,031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자원개발 융자사업의 특성상 산업통상부의 승인 시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어 과거 융자금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된다는 점에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회수예정인 1조 5,031억원이 장기간 미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지원된 융자원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국가재정 외의 기금인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36]의 직·간접 투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특별투자재원을

35)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감면된 금액은 석유 융자금 중 16억 227만 6,558 달러, 광물 융자금 중 원화 141억 6,652만 7,353원, 미화 1,720만 2,969 달러임. 원/달러 환율은 FRED(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산한 1982~2024년 평균 환율인 약 1,025원으로 잡아 계산하였음.

[1982~2025년 지원 융자금 중 감면액 현황]

(단위: 만달러, 백만원)

구분	석유	광물
원화	14,167	-
미화	160,227	1,720

자료: 산업통상부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업의 부도 등으로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채무가 곧바로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별도의 손실 감내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최초 출범 시부터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기로 결정되었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증[37]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외의 기금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실 감내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 지원실적 및 수은의 출연금을 활용한 지원 내역 등 기금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8]

(마) 회전자금 전출금(비철금속 구매) 사업(조달청)

조달청은 비철금속 재고일수 산출 시 개별 비철금속이 아니라 전체 비철금속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계산함에 따라, 개별 비철금속(구리·주석) 확충량 실적이 연간 목표 대비

---

36)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023.12.26. 제정, 2024.6.27.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9월 수은에 설치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사업추진 현황]

- (지원현황) 출범(2024.9월) 이후 현재(2025.8월)까지 총 58건 사업에 대해 60,681억원 승인
- (지원대상)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의 ①확보 · 도입, ②국내외 시설투자, ③기술도입, ④피해기업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 (지원부문)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 중점 지원
  * 4대 부문 12대 분야: ①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②자원안보(핵심광물, 에너지), ③경제필수재(식량, 산업원료, 기계장비), ④물류・인프라(운송, 비축, 항만)
- (자금지원 방식) 대출, 보증 및 투자
- (기금 재원)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 발행

자료: 기획재정부

37) - 2024.2월 : 2024년 국가보증동의안(5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
- 2024.12월 : 2025년 국가보증동의안(10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

38)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됨(2025.9.30.)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조달청은 비철금속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

조달청은 2024년 결산 심사 시 비철금속 전체의 재고량이 계획된 목표재고일수 53일을 충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60일분까지 재고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2024년에는 알루미늄(△1일), 구리(△2일) 등 주요 금속의 재고가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전체 평균 재고일수는 53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5년 8월 현재 구리(△1일), 주석(△1일) 등 일부 품목은 목표(58일분)에 미달했으나 전체 평균 재고일수는 60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반면 아연(+10일), 니켈(+6일) 등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품목별 재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조달청이 비철금속 전체 재고일수를 단순 산술평균으로 관리함에 따라, 개별 비철금속의 재고 확충량 실적이 예산상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 전체의 목표재고일수상으로는 연간 재고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목표재고일수의 산정 방식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금속별 목표재고일수를 개별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현행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비철금속의 재고목표 및 실제 달성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 개 요

(1) 에너지전환·탄소중립 개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제10호[1]에 따르면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 ·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함.

또한,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환경성 · 안전성 · 에너지안보 ·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함.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6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당초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2]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음.

또한, 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12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 ·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 · 안전성 · 에너지안보 ·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2030년 BAU는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함.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1.9.)함으로써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고[3] 2030 NDC 목표[4]를 명시하였음.

이어 2021년에는 당초 '2017년 대비 24.4% 감축'(2019년 UN 제출)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여 UN에 제출하였음.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 법 제10조제1항[5]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2023년 4월에 수립·발표하였음.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에 제출한 기존 NDC와 동일하나, 부문별 배출량이 일부 조정되었음.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의 2030년 감축량 목표를 810만톤을 줄이고, 수소 부문의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을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부문에 반영함으로써 감축 목표를 80만톤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환 부문 감축량 목표를 400만톤 상향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량과 CCUS를 통한 감축량 목표를 각각 400만톤, 90만톤(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 80만톤 포함) 높였음.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표 변화]

(단위: 백만톤)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2030 목표 배출량		
			기존 NDC(2021.10.)	수정 NDC(2023.3.)	증감 사유
배출량 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추가 감축
	산업	260.5	222.6(14.5%)	230.7(11.4%)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 고려하여 810만톤 완화
	건물	52.1	35.0(32.8%)	35.0(32.8%)	
	수송	98.1	61.0(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을 CCUS 부문에 반영(80만톤)
	탈루 등	5.6	3.9	3.9	
	계	727.6	507.1	512.0	
흡수·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 반영(△80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
	국제감축	-	△33.5	△37.5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으로 국제감축량 확대
	계	(△41.3)	△70.5	△75.4	

주 1) 괄호안은 2018년 대비 감축률
2) 부문별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기준임
3)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4.)

이후 2024년 5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6]에 따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를 관장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였음.[7)]

[기후변화·녹색성장 정책 주요 연혁]

(201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에 BAU 대비 37% 감축
(2020)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추진전략 발표
(2021)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02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
(2023)「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수립
(2024)「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 의결
(2025)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출범

자료: 관계부처 합동,「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4.) 등

7)「정부조직법」제4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

이전 환경부 업무	개정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7조 8,946억원을 편성하였음.[8)]

우선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다음 탄소중립 가속화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관련하여 6개 부처, 31개 사업으로 총 7조 8,946억 400만원이 편성됨.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통상부 12개, 기획재정부 11개, 기후에너지환경부 5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조 8,107억 3,900만원, 산업통상부 2조 3,915억 7,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 8,077억원 순임.[9)]

8)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9)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처별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산업통상부	12	2,391,577
2	기획재정부	11	841,553
3	기후에너지환경부	5	2,810,739
4	농림축산식품부	1	1,807,700
5	국방부	1	40,000
6	국토교통부	1	3,035
합 계		31	7,894,604

주 1)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편성 현황

「국가재정법」[10]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1]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음.

2026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은 총 7조 2,686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334억 700만원(14.7%) 증액 편성되었음.

부처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16개 부처에 세부사업 기준 총 185개가 편성되어, 2025년도 대비 34개가 늘었음. 부처별 예산안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조 583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산업통상부(9,627억 4,900만원), 국토교통부(8,214억 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12]

한편,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임.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예산액은 1,600억 8,100만원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8,21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14억 700만원(413.2%) 증액되었음.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899억 8,000만원(122.1%) 증액된 5,25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10)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부처별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2025년		2026년		증감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안)	사업수	예산(안)	증감률
교육부	1	288,601	1	200,300	-	△88,301	△30.6
과기부	2	8,820	5	28,815	3	19,995	226.7
외교부	-	-	1	1,186	1	1,186	순증
국방부	1	3,500	1	3,482	-	△18	△0.5
보훈부	1	734	1	661	-	△73	△9.9
농림부	12	95,366	15	120,428	3	25,062	26.3
산업부	38	855,894	44	962,749	6	106,855	12.5
기후부	22	4,042,665	25	4,058,381	3	15,716	0.4
국토부	26	160,081	31	821,488	5	661,407	413.2
해수부	23	215,432	24	337,112	1	121,680	56.5
중기부	3	76,156	2	87,734	△1	11,578	15.2
경찰청	2	90,770	2	83,043	-	△7,727	△8.5
농진청	6	40,985	9	65,314	3	24,329	59.4
산림청	12	436,707	22	478,443	10	41,736	9.6
기상청	1	7,420	1	7,771	-	351	4.7
해경청	1	12,069	1	11,700	-	△369	△3.1
총계	151	6,335,200	185	7,268,607	34	933,407	14.7

주 1)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 대상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조 6,873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397억 5,900만원(18.7%) 증액 편성되었음.

부처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8개 부처에 세부사업 기준 총 162개가 편성되어, 전년 대비 2개가 늘었음. 부처별 예산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2조 4,752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산업통상부(1조 4,319억 7,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4,730억 9,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부임. 산업통상부의 2025년도 계획액은 1조 211억 3,800만원이었으나, 2026년도 계획안은 1조 4,31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8억 3,200만원(40.2%) 증

액되었음.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2,217억원(52.0%) 증액된 6,480억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13)]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2025년		2026년		증감		
	사업수	계획액	사업수	계획(안)	사업수	계획(안)	증감률
기재부	135	2,194,960	132	2,475,245	△3	280,285	12.8
과기부	-	8,820	3	11,130	3	2,310	26.2
농림부	2	90,165	3	144,588	1	54,423	60.4
산업부	14	1,021,138	15	1,431,970	1	410,832	40.2
기후부	4	38,844	4	29,781	-	△9,063	△23.3
국토부	1	102,058	1	102,108	-	50	0.0
해수부	1	19,470	1	19,470	-	0	0.0
중기부	3	480,993	3	473,095	-	△7,898	△1.6
총계	160	3,947,628	162	4,687,387	2	739,759	18.7

주 1)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 대상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총 사업수는 347개로 전년 대비 36개 증가하였고, 총 11조 9,56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조 6,7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별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8개 회계에 세부사업 기준 총 185개가 편성되어, 전년 대비 34개가 늘었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3조 7,38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조 3,047억원), 일반회계(9,064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금별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11개 기금에 세부사업 기준 총 162개가 편성되어, 전년 대비 2개가 늘었음. 기금별 계획안 규모는 기후대응기금이 2조 4,75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1조 4,275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4,731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13)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회계·기금별 총괄표]

(단위: 개, 억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5년		2026년		증감		
		사업수	예산액 (계획액)	사업수	예산(안) (계획(안))	사업수	예산(안) (계획(안))	증감률
예산	일반회계	59	7,081	72	9,064	13	1,983	28.0
	교통시설 특별회계	8	394	12	6,230	4	5,836	1481.2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22	8,589	44	13,047	22	4,458	51.9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9	4,573	14	1,141	△5	△3,432	△75.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	27	1	186	△1	159	588.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	37,013	27	37,381	3	368	1.0
	우편사업 특별회계	1	45	1	40	-	△5	△11.1
	환경개선 특별회계	16	5,631	14	5,597	△2	△34	△0.6
	총계	151	63,352	185	72,686	34	9,334	14.7
기금	기후대응기금	135	21,950	132	24,752	△3	2,802	12.8
	수산발전기금	1	195	1	195	-	-	-
	전력산업기반기금	14	10,211	13	14,275	△1	4,064	39.8
	주택도시기금	1	1,021	1	1,021	-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3	4,810	3	4,731	-	△79	△1.6
	축산발전기금	1	723	1	737	-	14	1.9
	수계관리기금	4	388	4	298	-	△90	△23.2
	원자력기금	-	-	3	111	3	111	순증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	-	1	35	1	35	순증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1	10	1	10	순증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1	179	2	709	1	530	296.1
	총계	160	39,476	162	46,873	2	7,397	18.7
총계		311	102,830	347	119,560	36	16,730	16.2

주) 대상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1)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후 변경된 에너지 업무체계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관리(정책, 환경, 협력)를 수행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수출을 수행하는 등 원전 업무의 소관이 분리되었으므로,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14] 산업통상부는 기존 에너지 사무에서 원자력발전의 수출 사무만 수행함.[15]

이에 따라 원전 정책, 환경관리, 협력 등 원전 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수행함.

[원전 관련 업무의 소관 변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원전수출진흥과
↓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담당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원전수출진흥과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4)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런데 원전 산업의 관리 및 수출은 모두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수행하던 사업인데,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 부처가 분리되었으므로 정보 공유의 지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과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은 모두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인데, 산업통상부의 '원전사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은 원전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수출 지원이라는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서 수행하게 됨.

[원전 수출 관련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부처명	소관과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획액		사업내용
				2025년	2026년(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50,000	150,000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전자금 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원전 생태계 고도화사업	-	7,988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확보를 위한 현지 진출 전략 수립, 국제입찰·인증 취득, 해외 지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	전력기금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11,641	12,705	원전 도입국 및 협력국 대상 원전 세일즈 지원활동 확대,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독자수출 역량 강화 지원, 국내·외 주요 원전시장의 환경·현안 분석 및 정책연구·법률자문 등 원전수출 전략 수립 지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면밀한 소통을 통해 원전 관련 사업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고 차질없이 유기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 적정성 검토

첫째,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최근의 ESS 단가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196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ESS(Energe Storage Sytem)[16] 설치를 50% 또는 80%의 보조율로 보조하는 사업[17]이고, 각 ESS의 단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융합시스템보급사업에서의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인 5억 6,000만원/MWh으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과거 사업 예산편성 당시 ESS 평균 단가를 살펴보면, 2017년 9.9억원/MWh에서 2018년 8.12억원/MWh, 2019년 6.95억원/MWh으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5.15억원/MWh까지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4.25억원/MWh을 단가로 설정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최근 ESS 단가 하락 추세 및 ESS 규모 및 배터리의 종류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	119,616	119,616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둘째,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단순히 동일한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지의 재정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역사업인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농공단지, 대학캠퍼스의 분산 자원을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72억원이 신

16)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임.

17) 이 사업은 ① AI 활용 ESS 구축지원(보조율 50%), ② 공유형 ESS(보조율 50%), ③ 커뮤니티 솔라(보조율 80%) 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규 편성되었음.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은 전력 수요량과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으로 수요량과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2026년 예산안은 1개의 농공단지와 4개의 대학캠퍼스의 마이크로그리드 설비 구축을 70%의 보조율로 지원할 예정임.[18)]

그런데 이 사업은 농공단지와 대학캠퍼스의 보조율을 7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대학캠퍼스에 비해 민간 매칭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형별 재정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8,900	8,900	37,200	28,300	318.0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	27,200	27,200	순증

18) 농공단지 1개 x 140억원(보조율 70%) = 140억원, 대학캠퍼스 4개 x 32억 5,000만원(보조율 70%) = 130억원, 운영비 2억원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타 회계·기금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회계·기금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투입 규모는 각각 예산과 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계획안 기준 에특회계는 51.4%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기후대응기금은 52.8%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회계·기금별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6년 예산(안) (계획(안))	비중
예산	일반회계	9,064	12.4
	교통시설특별회계	6,230	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047	1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41	1.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86	0.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381	51.4
	우편사업특별회계	40	0.05
	환경개선특별회계	5,597	7.7
	총계	72,686	100.0
기금	기후대응기금	24,752	52.8
	수산발전기금	195	0.4
	전력산업기반기금	14,275	30.4
	주택도시기금	1,021	2.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4,731	10.0
	축산발전기금	737	1.5
	수계관리기금	298	0.6
	원자력기금	111	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5	0.07
	산업기술진흥 및사업화촉진기금	10	0.0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9	1.5
	총계	46,873	100.0

자료: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현재 에특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수입 규모가 지출규모 대비 적어,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서 에특회계 세입 중 타 회계·기금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합한 금액은 3조 1,647억 8,200만원(50.1%)으로, 최근 3년간 세입에서 전입금 및 예수금 비중이 연례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타 회계·기금 전입·예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에특회계 세입 총계(A)		5,329,026	5,313,723	6,471,155	5,477,512	6,305,822
	타 회계·기금 전입금(B)	1,311,821	1,307,376	1,307,376	1,307,376	1,242,635
	기금 예수금(C)	443,986	1,159,400	2,203,093	1,707,093	1,922,147
	전입·예수금 계(D=B+C)	1,755,807	2,466,776	3,510,469	3,014,469	3,164,782
	전입·예수금 비중(D/A)	32.9	46.4	54.2	55.0	50.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전체 수입 중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합계의 비중이 2024년 결산 기준 87.8%, 2025년 계획 기준 86.0%, 2026년 계획안 기준 63.9%에 해당할 정도로 외부재원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

특히, 2026년 전체 수입 중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합계의 비중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안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7,651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임.

그런데 2024년 당초 계획액 2,896억 9,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76억 7,700만원(수납률 64.8%)에 그쳤고, 2025년에도 당초 계획액 3,487억원 중 2025년 7월말 기준 458억 4,400만원이 수납되어 13.1%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획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19)]

19)

[2024~2025년 7월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24	289,694	202,121	202,121	187,677	187,677	92.9	100.0	-	-
2025	348,700	348,700	348,700	45,844	45,844	13.1	100.0	-	-
2026(안)	765,123	765,123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타 회계·기금 전입·예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계획	2026 계획안
기후대응기금 수입 총계(A)	2,046,509	2,226,698	2,305,830	2,599,717	2,905,685
타 회계·기금 전입금(B)	1,263,154	1,817,901	1,705,334	1,916,780	1,755,744
기금 예수금(C)	460,105	272,597	319,910	319,910	100,000
전입·예수금 계(D=B+C)	1,723,259	2,090,498	2,025,244	2,236,690	1,855,744
전입·예수금 비중(D/A)	84.2	93.9	87.8	86.0	63.9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에특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은 현재에도 재정지출소요 대비 자체수입이 부족해 타 회계·기금 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회계·기금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확보 방안과 지출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사업 특성상 온실가스의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상 온실가스의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있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파도 RE100 사업은 가파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풍력·ESS(Energy Storage System) 등을 활용하도록 공급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편성되지 않았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 사업은 동물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개발로 탄소감축 규제에 대응하는 사업인데, 바이오 연료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의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ce100(Circular Economy, 무채굴 순환이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ce100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음.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미포함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2025년	2026년(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가파도 RE100사업	-	22,000	재생에너지 공급 설비 지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사업	-	8,000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ce100프로젝트 추진사업	-	2,200	폐기물 순환자원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사업	-	5,000	탄소감출 기술 개발 지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가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목적임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추가 반영 등을 통한 재정투자 계획의 합리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주요 분야별 검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류기준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기타 등 총 11가지임.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류기준]

감축사업 유형	내용
전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산업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연료 대체, 저탄소 신기술 개발·보급 등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수송	무공해차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 수요관리
농축수산	스마트팜 등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등
폐기물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률 증가 등
수소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
흡수원	산림·해양·습지 흡수원 확대·관리 등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이행기반 마련, 감축사업 발굴 등
기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 내 이행기반 강화정책

자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이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유형별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하였음.

(가) 수송 분야: 전기차 보급사업의 실적 제고 필요 등

온실가스 감축인지 수송분야는 무공해차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무공해차 확대의 주요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대중교통 활성화의 주요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등이 있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버스), 전기이륜차 등 전기차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6억원(5.89%) 증액된 1조 6,11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수행하려는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버스), 전기이륜차 지원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20] 지자체 수요조사보다 많이 편성되었으므로[21], 면밀한 집행관리로 사업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내역사업인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3시간 체류하는 장소에 적합한 전기차 중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그런데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중속충전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22] 편성 대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99억 8,000만원(122.1%) 증액된 5,27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새로 도입하려는 정액패스[23]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매우 유사하므로,[24] 제도 도입에 따른 가입자수 이동과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재정 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 2024년 대수 기준 실집행률은 전기승용차 48.9%, 전기승합차 25.4%, 전기이륜차 45.0%이고, 2025년 8월 기준 실집행률은 전기승용차 44.1%, 전기승합차 25.4%, 전기이륜차 20.3%임.

21) 전기승용차는 지자체 수요조사보다 30,692대 많이 편성되었고(920억 7,600만원 차이), 전기승합차(버스)는 475대 많이 편성되었으며(181억 8,200만원 차이) 전기이륜차는 5,376대 많이 편성되었음(43억 80만원 차이)

2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완속충전기 물량을 조정하고 조정한 물량과 액수를 중속충전기로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완속충전기는 7시간 이상 체류하는자를 수요자로 하고 중속충전기는 2~3시간 체류하는 자를 수요자로 하는 등 두 충전기는 수요자가 다름.

23)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정액패스 도입 (일반 62,000원, 청소년 등 55,000원)

2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대한 발급 금액은 이 사업과 같이 62,000원, 5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④ 해양수산부의 내역사업인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은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신규 건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10월에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사들의 사업 참여 의사와 신조하려는 선박의 종류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⑤ 경찰청의 내역사업인 ‘노후차량교체 사업’은 내용연수에 따라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그중 일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억 3,800만원(△3.4%) 감액된 83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4년 구매분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제재조치 중에 있어 2025년에는 차량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안에도 동일 차종의 구매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25] 납기 지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추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수송 분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1,521,770	1,242,770	1,611,370	89,600	5.89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	-	-	30,000	30,000	순증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37,460	237,460	527,440	289,980	122.1
해양수산부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11,000	11,000	순증
경찰청	노후차량교체	83,981	83,981	81,143	△2,838	△3.4

25) 2025년에 순찰차 중 전기중형차량 217대(147억 4,100만원), 수소전기차량 45대(37억 500만원)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2026년에 전기중형차 262대(177억 9,800만원) 구매를 계획하고 있음.

(나) 농축수산 분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의 심사비용 자부담 방안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역사업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800만원(37.7%) 증액된 49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인증 신청이 증가[26]하여 인증 심사예산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타 인증사례[27]와 같이 일정 매출 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일부 심사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4,068	4,068	5,416	1,348	33.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3,583	3,583	4,931	1,348	37.7

26)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건수는 전년도(4,493건) 대비 72.3% 증가한 7,741건이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 건수는 전년도(112건) 대비 177.6% 증가한 311건임

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은 신청수수료(기본수수료+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여비)로 약 660만원을 징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항목 중 제경비(심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면제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 환경표지 인증제 비교]

구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환경표지 인증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목적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시행근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 법률상 직접적 근거 없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대상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65개 품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대상 제품
인증 수수료	해당 없음	신청수수료 (기본수수료 5만원+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폐기물 분야: LPF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역사업인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LFP배터리(리튬, 철, 인산으로 구성되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연료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억 4,000만원(35.3%) 증액된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조달청과 협의가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늦어져 당초 2025년에 계획했던 공사비 선금 지급 시기가 2026년으로 이월 예정인 등[28]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공사비 전액을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24,836	24,836	12,680	△12,156	△48.9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6,630	6,630	8,970	2,340	35.3

(라) 수소 분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단계별 예산 배분 조정 검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은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산업 육성과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5억 5,600만원(2,373.5%)이 증액된 130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5년 10월 기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하는 중이므로[29],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별 예산 배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8) 2025년 설계비로 8억 2,000만원, 공사비로 51억 1,900억원 등 총 6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8월 말 기준 설계비 6억 9,900만원 등만 집행되고 공사비는 집행되지 않아 실집행액은 7억 300만원(실집행률 10.6%)에 불과함

29) 해당 연구용역은 2025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임

[2026년도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529	529	13,085	12,556	2,373.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마) 흡수원 분야: 조림(자율) 사업의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 보조조건 설정 검토 필요

산림청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조림(자율)'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해 NDC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8억 5,800만원(29.4%) 증액된 1,05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자율계정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산림청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현재 지자체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림수종 및 복원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임.

그런데 사유림의 경우 산주들이 경제성을 중시하여 침엽수 식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30]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위주의 복원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 최근 산불 예방이 산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복구조림을 하는 경우에도 산불 확산 방지에 유리한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를 보조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조림(자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림(자율)	81,280	81,280	105,138	23,858	29.4

30) 최근 10년간 경제림 조성의 연도별 수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각각 55.7%와 44.3%였으나, 2024년에는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이 각각 62.2%와 37.8%로 나타나는 등 송이·목재 채취, 관리 편의성 등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침엽수림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바) 국제감축 분야: 투자지원 사업의 집행 계획을 고려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산업통상부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90억원(△40.9%)이 감액되었으나, 순감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액 대비 130억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에는 기체결된 계약의 잔금 27억 3,300만원과 계약 확정시[31] 최대 지원금인 200억원을 합한 227억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그런데 2025년 계획현액 253억 5,100만원과[32] 2026년 계획안 130억원을 합한 금액은 383억 5,100만원에 달하여 집행 계획에 비하여 156억 1,800만원이 초과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3]

[2026년도 투자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	30,425	8,425	21,545	△8,880	△29.2
투자지원	22,000	-	13,000	△9,000	△40.9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31) MOU만 체결된 상황인 몽골 및 캄보디아 2건의 계약

32)

[2024~2025년 투자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투자지원	2024년	33,000	29,629	-	29,629	4,278	25,351	-	14.4
	2025년	22,000	-	25,351	25,351	-	(연말 집계)		-

주) 2025년 8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33)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5년 4분기에 사전검토 중인 사업 및 캄보디아·몽골 MoU 후속 사업이 2026년 연내에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2026년도 계획안은 향후 프로젝트 협약 계획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 규모라는 입장임.

6. K-컬처 확산 및 문화 향유

가. 개 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K-컬처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총 5조 6,695억원을 편성하였음.[1)]

우선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측면에서는,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편, 순수창작자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사업을 통폐합하여 문화 재외기관 거점을 기지화하고자 하였음.

다음 한류 연계 붐업 측면에서는,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식품·뷰티·의료 등 한류와 연계된 사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또한 문화향유 측면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문화강국 관련 예산으로 10개 부처, 207개 사업으로 총 5조 6,69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 수 기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114개, 보건복지부 22개, 국가유산청 21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문화체육관광부 3조 5,245억 8,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7,090억 2,600만원, 보건복지부 4,734억 5,800만원, 해양수산부 3,945억 2,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382억 7,500만원 등임.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

1)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처별 문화강국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문화체육관광부	114	3,524,583
2	농림축산식품부	18	709,026
3	보건복지부	22	473,458
4	해양수산부	19	394,522
5	중소벤처기업부	3	238,275
6	국가유산청	21	190,409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57,523
8	식품의약품안전처	3	50,972
9	산업통상부	3	18,622
10	질병관리청	1	12,135
합 계		207	5,669,525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함

나. 검토의견

(1)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준비 철저 필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자율기획형 중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사업이 단발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국제역량 강화와 K-컬처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준비·현지활동 수행 및 관리·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해외 현지 K-컬처 확산 거점에서의 문화외교형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국제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자율기획형(900명) 및 일경험형(100명)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자율기획형은 다시 재단협업형(700명), 대학협업형(150명) 및 기존 태권도봉사단(50명)[2]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이 중에서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은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지역문화재단 및 대학을 선정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공익적 현지 문화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자율기획형) 중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추진계획]

구분	재단협업형	대학협업형
인원	700명	150명
선발/관리	공모를 통해 7개 내외 지역문화재단 선정 (7개 재단×100명)	공모를 통해 3개 내외 대학 선정 (3개 대학×50명)
지원	재단별 10개 내외 팀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10개 프로젝트×10명)	대학별 5개 내외 팀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5개 프로젝트×10명)
팀 구성	▲ 1팀 10명 내외, ▲ 시니어급 리더 1명 포함(문화기획자 등), ▲ ‘쉬었음’ 청년 30% 이상 포함 * 기회균등/형평성(고졸,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 등) 요소 가점 부여	▲ 1팀 10명 내외, ▲ 시니어급 리더 1명 포함(교수, 졸업생 등), ▲ ‘쉬었음’ 청년 30% 이상 포함 * 기회균등/형평성(고졸,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 등) 요소 가점 부여

2)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선발된 청년은 최대 1개월 동안 태권도 교실 운영, 훈련 지원, 지역 순회공연 등의 활동을 수행함.

구분	재단협업형	대학협업형
활동 내용	공연, 전시, 축제, 포럼 등 공익적 문화 활동 * 프로젝트를 관리할 현지 협업기관 필수(지자체, 자매대학, 축제, 예술기관 등)	
기간	최대 2개월 (해외 체류 기간 2주 이내)	
지원액	1개 프로젝트당 평균 5,800만원 (교육 등 운영비 750만원 포함)	

주) 공모 상황에 따라 인원수 및 세부내용 조정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정된 재단 및 대학은 시니어급 리더 1명 및 쉬었음 청년 30%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한 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다듬어 현지에서 공연, 전시, 축제, 포럼 등 공익적 문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최대 2개월(해외 체류기간 2주 이내)로 계획하고 있음.

팀별로 시니어급 리더를 포함하여 현장 활동의 질적 관리 및 현지 대응력을 제고하면서, 형평성 가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국제경험을 희망함에도 해외에 나가기 힘든 청년 일반의 참여를 권장하여 청년의 국제감각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다만, 이와 같은 공익적 현지 문화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장에서 K-컬처를 기획·운영하며 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기 체험형 활동 위주로 운영될 경우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 및 언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K-컬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운영 설계를 통해 보완하여[3] 현지에서 최종 작업물을 선보이고, 해외 활동 이후 성과공유회 등 후속 관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일회성 해외 체험이나 여행이 아닌 공공 문화 활동이라고 설명함.

또한 팀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리더를 팀별로 포함하거나, 국내 사전교육 시 전문 문화기획자의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3) 국내 교육 기간 중 현지 문화 등 문화적 감수성 함양 교육을 포함하고, 자유방임형 운영이 아닌 위탁기관(재단·대학)+현지 협업기관+참여자 간 체계적 협력 구조를 통해 체계 내에서 활동하도록 설계하여,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숙한 청년문화 프런티어로서 인재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사업이 단발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국제 역량 강화와 K-컬처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준비·현지 활동 수행 및 관리·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시기·환급조건 및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기한·사용처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을 높이고 관광 관련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여행 국민에게 여행 지출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6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를 공모하여 지자체별 10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7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 2026년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환급기준 여행경비는 단체(2인 이상)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금액의 50%가 환급(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되고, 대상 업종은 검토 중이나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관광(여행) 관련 업종(식음료, 입장료·관람료, 숙박 등)으로 제한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단체와 개인을 구별하여 사전 신청을 받고, 소비영수증(특정 결제수단 제한 등 검토 중)과 인증 사진을 첨부한 여행 후기를 포함하여 정산요청을 받을 예정으로, 정산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고, 환급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지급 연도 3개월 범위 이내로 검토 중으로, 기한 내 미사용 상품권은 말소 처리되어 환수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친지 방문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 혜택만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 매력이 약한 지역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으며, 환급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차 재방문을 하기

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시기·환급조건 및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기한·사용처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을 높이고 관광 관련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은 통합관광패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6년 시범사업을 서둘러 운영하기보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정적인 통합 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제휴처 확보에 집중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후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 전역을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통합 이용권, 전국 단위 주요 관광지 입장권, 쇼핑 및 체험 할인권 등을 통합한 모바일앱 기반 기간형/구간형 통합 관광패스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 계획안은 2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모바일 앱 및 정산 시스템 등 플랫폼을 개발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준비·운영하고, 이후 12월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환류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통합관광패스의 주요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철도(KTX, SRT, ITX, 무궁화호 등), 도심공항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 통합 이용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등과, 전국 단위 주요 관광지·전시·공연 등 입장권 및 할인권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지역 숙박·렌터카·식당·상점 할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결제·정산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따라서 주요 기관 간 협의, 참여 민간기업의 유치 및 협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 통합관광패스의 종류 및 가격 책정, 사전 홍보

4)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친지 방문이 급증하는 시기인 연휴와 명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별 경비가 지원되는 여행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환급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바 앱을 통해 발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정책수당, 타인에게 선물이 불가능)으로 지급하여 우려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며, 공모를 통해 관광 잠재력과 매력이 있어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및 고객센터 운영 준비 등에도 각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전국 단위의 교통 통합 이용권, 관광지 입장권, 할인 정산 등을 하나의 결제·정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일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 컨소시엄 설립 및 플랫폼 개발 완료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철도, 고속버스 등 교통망 연계 및 할인 혜택 부여 등을 위해 코레일, 공항철도, 티머니, 고속버스 운송조합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및 관광지 입장권 할인 등을 위해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연말까지 세부 운영체계 및 정산구조 확정과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교통수단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는 패스를 구입하면 부여받는 QR 코드 등을 통해 코레일, 티머니 등 각 교통 시스템에서 별도로 예약결제하고 운영 대행 사업자가 정산을 총괄하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시범 사업 단계에서 사업의 운영방식,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시스템 등도 점진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장기적으로 통합관광패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업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교통 시스템에서 별도로 예약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급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시스템 등을 고도화시키기보다, 처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통합관광패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교통수단 및 관광지 입장권 등을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제시스템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통합관광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 단위의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및 할인 혜택, 지역 숙박·렌터카·식당·전시·공연·상점 할인 바우처 제공 등 초기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국가유산청의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은 향후 추진될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가유산 문화상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5] 궁능 관람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6] 경복궁 내 국가유산 문화상품 활용 복합문화공간을

5)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상품 매출: ('20년) 약 40억원 → ('24년) 약 120억원(80억원 증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상품관은 경복궁 동편 주차장 권역에 조성할 예정으로, 국가유산청은 해당 부지가 주차장 및 매표소와 가까워 관람 전후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람객 동선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며, 지하에 주차장 등 현대적 건축물이 이미 조성되어 발굴조사가 생략 가능한 부지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다만, 경복궁은 '경복궁 1차 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광화문을 포함한 총 89동의 건축물이 복원되었고, 현재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상품관 조성 사업 예정지는 고종 시기 오위도총부가 위치했던 자리임.[7)]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에 따른 복원 실적 및 계획]

고종 당시	기존	1차 기본계획 (1990~2010년)	2차 기본계획 (2011~2045년)	합계
500여동	36동 복원	89동 복원	80동 복원	205동 복원
고종 당시의	7.2%	17.8%	16%	41%

자료: 국가유산청

오위도총부 복원은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중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하여 2039년에 복원정비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총 12동의 건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원 면적은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오위도총부 권역 복원·정비 기본계획과 복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따라서 상품관 조성 사업은 향후 추진될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은 준비기획단 구성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도출할 계획이나 행사 규모를 고려하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유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발언권을 강화

6) '24년 기준 경복궁 연간 관람객 수가 644만명(외국인 200만명)으로, 세계적 관광지인 바티칸박물관 수준이나 국가유산 방문을 기념할 문화상품,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공간은 부족함.

7) 오위도총부 복원 예정지에는 현재 경복궁 동편 주차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연결통로 등이 위치하고 있음.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8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부산 BEXCO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는 본회의·사전행사 및 다양한 부대행사(공연,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로 진행되고, 규모는 협약가입국 196개국 대표단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임.

우리의 정책과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성과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안건 조율 등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준비할 필요가 있고, 본회의(11일간) 외에 사전행사(2건, 각각 8일간, 10일간) 및 60여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행사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바, 준비할 업무량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음.

그런데 2025년 10월 기준 행사를 준비할 준비기획단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된 상황이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의 공무원 등을 파견 요청하여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은 전담조직 설치 후에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 사업이 18일간 196개 대표단 등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2026년 7월 회의 개최까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국가유산청은 준비기획단이 구성되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추진함에 따라 교육 대상의 범위 등이 모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격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화장품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계의 경우 안전성 평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다수로,[8]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인 ‘안전성

8)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억 달러)) (’21) 49.2→ (’22) 44.7→ (’23) 53.2→ (’24) 68.0,
(업계 현황) 업체 94%(11,088곳)가 생산실적 10억 미만이며, 연구인력이 없는 업체가 72%(8,486곳)임.

평가자’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기준을 우선 준용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전문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10)]

다만,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는 절차로, 평가자의 전문성은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토·승인을 통해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격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11)]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의 경우 교육 대상 및 범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운영되는 것이 법률과 제도의 체계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공백 최소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안전성 평가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9)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억원,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원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평가자 자격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설명임.

〈식약처 추진 자격요건(안)〉

- 의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학위 취득자로서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의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학위 취득자로서 전문 교육과정(비학위)을 이수한 사람 - 전문 교육과정(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화장품 안전성 업무 종사경력이 있으며 전문 교육과정(비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

11) 현재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2211154호, 2025.6.30.)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2) 사업방식 개선 필요

첫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여 수행 중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은 모집 대상 참여자의 질병 유형별로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 모집 과제별 실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제별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은 참여자 동의 기반 검체(혈액・소변 등)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및 공공데이터 등을 통합・개방하기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함께 수행하는 다부처 사업이며, 2023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판단을 받고 2024년부터 수행되고 있음.[12)]

그런데 2024년 신규과제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저조로 인하여 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추후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기로 약속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여 2024년 12월 모든 과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2월 특정평가를 거쳐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 추가, 모집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 반영 등 사업 내용을 확대하였음.

특정평가를 통해 반영된 사항 중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는 환자 1인당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환자의 경우 참여한 환자에게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며, 중증 환자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를 모집한 모집기관에 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됨.[13)]

---

1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개요

・총사업비 : 5,806억원(질병청 직접사업 제외) ・사업기간: 2024~2028년(총 5년) ・참여부처: (주관)보건복지부, (참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사업목적: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혈액, 소변, 조직)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수집・생산하여 R&D 인프라로서 ‘데이터뱅크’ 구축 ・사업내용: ①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희귀・중증 질환자(병원)와 일반인(검진센터 등) 참여자 모집, ②참여자의 검체(혈액・소변 등)를 채취해 인체자원(DNA・혈청 등) 제작 후 바이오뱅크(질병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존, ③참여자의 임상(설문・검진 등)+유전체+공공데이터(건보공단 등) 등을 데이터뱅크(의정원 인체유래물은행)에 통합, ④정밀의료 등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인체자원과 빅데이터 확보・검증 후 분양심의 통해 데이터 개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 참여자의 경우 주로 건강검진을 받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그 분량이 30장 이상으로 과다하여 사례금 지급을 통한 유인 구조 도입이 필요하며, 중증 질환자의 경우 5만원의 사례금 제공은 큰 효과가 없으므로, 2024년 병원의 참여 확보를 위하여 약속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참여자 모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의 희귀·중증 질환자의 모집 실적이 일반 참여자 모집실적에 비해 더욱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개선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부는 질병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4)15)]

또한 참여자 모집 과제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 참여자 모집 과제의 경우 2025년 목표실적 대비 모집실적 비율이 최소 2%에서 최대 27.1%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참여자 모집 과제의 경우 최소 12.7%에서 최대 72.6%로 나타나는 등 과제별 모집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만큼 과제별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6년 이용분야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목적인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 유도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률 제고 등 개선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적 환류를 추진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티켓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현재 2년간('24~'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 매칭 지방비 최대 5만원)을 예술분야 공연·전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16)]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2026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9~20세 성년초기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국비 10~15만원(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매칭 지방비

14) 연도별 참여자 모집 계획 및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년	모집실적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희귀	8,800	2,354	7,200	8,000	8,000	32,000
중증	36,000	3,547	34,800	34,000	34,000	138,800
일반	161,200	68,714	150,000	135,000	135,000	581,200
합계	206,000	74,615	192,000	177,000	177,000	752,000

주) 모집실적은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평가 과정에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데이터 환류 보고서 제공이 검토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16) 당초 계획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로 제한되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자 2024년 11월 22일부터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을 추가하였음.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 분야에 영화를 추가할 예정으로,[17]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91억 4,600만원(112.6%)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28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하였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자 사용기간을 2025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2024년 11월 22일부터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으나, 그럼에도 2024년 사업의 최종 실적이 신청률 79.8%, 이용률 55.4%, 집행률 34.1%에 그쳐 부진하였음.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최종 이용 실적]

(단위: 명, 백만원)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바우처 예산 (D)	이용금액 (E)	집행률 (E/D)
160,000	127,706	79.8%	70,812	55.4%	16,000	5,455	34.1%

주) 2025년 2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국비 집행액(매칭 지방비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인 2025년에도 8월말 기준 신청인원이 10만 7,286명으로 지원대상 16만명의 67.1%에 불과하고, 이용금액은 62억 5,600만원으로 바우처 예산 160억원의 39.1%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바우처 예산 (D)	이용금액 (E)	집행률 (E/D)
160,000	107,286	67.1%	90,729	84.6%	16,000	6,258	39.1%

주1) 2025년 8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국비 집행액(매칭 지방비 제외)
2) 신청인원 107,286명 중에서 1회차 발급인원은 86,713명, 2회차 발급인원은 20,573명임
(1회차 발급인원 86,713명 = 당초 발급인원 123,052명 - 6월말까지 전액 미사용・회수된 인원 36,3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청인원 중 이용인원은 84.6%로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1회차 발급기간('25.3.6.~5.31.)에 패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123,052명 중 36,339명(29.5%)이 6월말까지 전액 미사용함에 따라 회수 조치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률 또한 63.2%에[18]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7)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청년의 볼거리 확충을 위해 이용 분야에 영화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8) 전체 신청인원 143,625명(= 8월말 기준 신청인원 107,286명 + 회수인원 36,339명) 대비 이용인원 90,729명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청년의 호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이용분야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격차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지역의 문화향유활동 저조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저해로 다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년을 미래 관객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라 설명함.

이와 함께 절대적인 지역의 공연·전시 부족 문제를 이 사업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점으로 다양한 이용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2026년부터는 지역 공연·전시를 다수 보유한 예매처 등을 추가 선정하고, 지방극장을 활용한 영화·공연·전시 실황 등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하여, 전지역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이 공연 및 전시 등 순수예술에 사용가능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던 점,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낮아 이용분야에 대중음악 장르 및 영화 관람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이와 같은 사업방식이 청년의 문화예술 취향형성 및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처음부터 대중음악 장르 이용이 가능했던 2025년의 장르별 이용현황을 보면, 콘서트 분야 이용금액이 48.8%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뮤지컬 분야에서 30.9%가 이용되고 있어, 향후 이용 분야에 영화 관람까지 추가될 경우 순수예술 분야보다 콘서트·영화·뮤지컬 분야에서 대부분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장르별 이용현황]

(단위: 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8월말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클래식	1,043,981,537	13.1	14,070	11.1	680,940,150	7.5	9,029	7.4
콘서트	**900,062,491**	**11.3**	**8,051**	**6.3**	**4,414,004,574**	**48.8**	**36,033**	**29.6**
전시	347,967,443	4.4	20,119	15.8	539,525,984	6.0	29,422	24.2
연극	833,049,058	10.4	29,887	23.5	520,947,343	5.8	16,347	13.4
뮤지컬	**4,684,907,907**	**58.6**	**52,298**	**41.1**	**2,799,048,743**	**30.9**	**29,565**	**24.3**
무용	184,972,700	2.3	2,682	2.1	88,768,708	1.0	1,248	1.0
국악	3,729,400	0.0	170	0.1	3,603,400	0.0	183	0.2
합계	7,998,670,536	100.0	127,277	100.0	9,046,838,902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청년 접근성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대중음악 및 영화 분야로 지원이 집중될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를 유도한다는 당초 정책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용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한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설령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생계·일자리·교육·주거 등 다른 청년 정책과 비교하여 지원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청년 친화 지원 방식인 온라인 발급·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한 티켓 예매·발급 후 이를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19][20]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집행률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봄.

19) 2025년 3월 YES24 회원계정 판매 1건, 회원계정의 타인 양도 1건 등 총 2건의 금전 거래를 적발(총 30만원(건당 15만원))하여, 사용 금액을 강제 취소처리 및 전액 회수하고 부정거래 행위자 2명에게 조치결과 공문을 발송하였음.

20)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등 절차만 거치면 패스를 발급받아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를 선택하여 예매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는 성인초기 청년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하여 예매하고 경험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강화,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등 사전 차단 위주로 철저히 예방하고, 적발 시 전액환수 등 보조금법 등에 따라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3)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은 아직 기본구상 완료 전으로 사업 규모·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 수행주체 및 건립 장소 또한 미정으로 사업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2026년 연내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한국 대중문화예술 전 장르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이자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그런데 현재 기본구상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규모·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정부가 산출한 리모델링(100억원) 및 전시 등 콘텐츠 구입(50억원)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2025년 수행 중인 기본구상 연구와 2026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인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자체 소유 토지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 수행주체 및 건립 장소 또한 미정으로 물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2026년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5억원)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될 토지 및 건물이 지자체 대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확보되어야 하고,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2026년 연내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스튜디오 설비가 구축될 부산기장촬영소의 공사 일정 및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볼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부산기장촬영소 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63억 5,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사전 절차를 2026년 4월까지 빠르게 수행하여,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스튜디오 설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구축될 부산기장촬영소가 2024년 5월 2일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2026년 8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26년 5월~8월 스튜디오 공사 추진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전 스튜디오 큐브 내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7개월('24.4.~'24.10.), 스튜디오 구축에 6개월('25.3.~'25.8.)이 소요되어 개관식 및 기술시연회를 2025년 11월말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첫해인 2024년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했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안내판 디자인 개발,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안내판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정비대상 안내판 선정 및 문안 정비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안내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9,500만원(553.1%) 증액된 5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유산청은 2026년~2027년 국가지정 등록유산 2,860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한 안내판 현황을 파악한 후,[21] 세계유산지역 등 일반 국민이 많이 접하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안내판을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다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국가지정 등록유산 및 안내판 현황

(단위: 개)

구 분	대상유산	안내판 합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국가지정	2,860	4,867	664	200	4,003

주)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의 안내판 현황에 따르며, 무형유산, 실내위치 등 안내판 미설치 대상 유산 제외
자료: 국가유산청

안내판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선정, 문안정비, 안내판 제작,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안내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안내판 디자인 개발,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안내판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내문안 감수체계 또한 표준화·강화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정비 대상 안내판을 선정한 후 각 안내판의 문안을 정비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6년~2027년 정비할 전체 작업량의 절반 이상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22]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안내판 종합정비 예산 규모를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2026년~2027년 연차별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차별 예산		
	2026년	2027년	합계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400	400	800
국가유산 안내판 종합정비 (안내판 수)	**5,380 (2,400개)**	**3,820 (2,256개)**	**9,200 (4,656개)**
합 계	5,780	4,220	10,000

자료: 국가유산청

(4) 집행관리 철저 필요

첫째,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은 당초 2024년에 추진할 계획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수행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 특성을 유적 정비 및 유적간 연계, 향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6,800만원(24.7%) 증액된 12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역사문화권정비법」지원근거 미비[23]를 이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8일「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24] 이후 2024년 9월 12일 예산이 배정되었음.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에 추진하려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수행되는 중으로,[25]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하여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23)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 · 연구 · 발굴 ·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 ·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지자체별 기본·실시설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계약기간
나주	’25. 2. 5.	나주 역사문화권 특화경관 설계용역	504	489	’25. 2. 5. ~ ’25.10. 2.
	’25. 9.12.	나주 역사문화권 탐방센터 설계용역	168	168	’25. 9.12. ~ ’26. 1.11.
해남	’25. 6.30.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875	857	’25. 6.30. ~ ’25.12.31.
강릉	’25. 4.11.	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역사문화환경 특화경관 설계용역	677	596	’25. 4.11. ~ ’25.12. 5.
함안	’24.12.11.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900	900	’24.12.11. ~ ’25.11.15.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보조사업자 등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또는 C/B)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재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B)	실집행액		
나주	2,600	2,600	445	3,045	410				410	13.5
해남	2,567	2,567	441	3,008	2,896	-	2,896	753	753	26.0
강릉	2,600	1,650	450	2,100	208				208	10.0
함안	2,216	2,216	-	2,216	2,216	447	2,663	765	765	28.7
계	9,983	9,033	1,336	10,369	5,730	447	5,559	1,518	2,136	20.6

주 1) 2025년 9월말 기준
2) 해남군과 함안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3) '실집행액(C)'은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 수행기관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실집행액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6,800만원(24.7%) 증액된 12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연내 공사착공(선금 70% 지급) 및 기 교부된 예산의 수시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은 편의시설·보호울타리·안내판 설치 등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아 착공 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지연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1차년도 정비사업이 사실상 2026년에 추진되고, 그 결과 2026년 예산으로 추진될 2차년도 정비사업 또한 순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 완료할 계획이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5년까지 수행되는 중으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은 국가유산 내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36개소)을 대상으로 국가유산과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5,000만원(247.5%) 증액된 6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마을 5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지방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5년까지 수행되는 중으로, 태안군·나주시·완도군의 경우 2025년 9월말에 최종결과물이 제출될 예정이고 남원시·예천군은 토지매입 협의 등으로 인해 용역이 중지된 상황임.[26]

이에 따라 2025년 8월말 기준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49억 5,000만원(247.5%)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추진 전망 및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태안군	1,234	1,234	1,234	-	1,234	202	16.4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현상변경 허가 등 필요 절차 이행	2,500
남원시	176	176	176	100	276	49.5	17.9	토지매입 협의 지연	800
나주시	210	-	-	8.5	8.5	-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 이행	1,700
완도군	380	380	380	40.5	420.5	-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 이행	1,000
예천군	-	-	-	100	100	100	100.0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일정 순연	950
합계	2,000	1,790	1,790	249	2,039	351.5	17.2		6,950

주 1) 2025년 8월말 기준
2) 예천군의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일정 순연('24→'25년)에 따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5년 설계·공사비를 교부하지 않았음
자료: 국가유산청

26)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지자체별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계약기간	최종결과물 제출일
태안군	'24.9.25.	태안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200	'24.9.25. ~ '25.9.30.	'25.9.30.
남원시	'24.12.24.	남원 남원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195	'24.12.24. ~ '25.6.21.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용역 중지
나주시	'24.10.14.	나주 나주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183	'24.10.14. ~ '25.9.30.	'25.9.30.
완도군	'24.11.25.	완도 청해진 유적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200	170	'24.12.2. ~ '25.9.30.	'25.9.30.
예천군	'25.2.26.	예천 회룡포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작성	200	180	'25.3.6. ~ '25.9.1.	주민협의 중으로 용역 중지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7. 지방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생활여건 개선 사업

가. 개 요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29조 1,922억원을 편성하였음.[1)]

지방성장거점 구축 측면에서, 조선, 에너지 등 권역별 전략산업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2,553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였고,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8,73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대한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지방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시설·장비 보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1.1조원을 투입하고, 광역·도시철도의 적기 구축을 위해 1.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착수비 등으로 1,196억원을 편성하고,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703억 3,700만원 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약 11.5조원을 편성하였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지방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 생활여건 개선 관련 예산안으로 14개 부처, 254개 사업에 총 29조 1,9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 수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82개, 보건복지부 61개, 해양수산부 51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농림축산식품부 9조 7,980억 1,100만원, 교육부 3조 1,441억 3,700만원, 국토교통부 1조 7,442억원 순임.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거점성장 등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8,904
2	교육부	12	3,144,137
3	국토교통부	4	1,744,207
4	농림축산식품부	82	9,798,011
5	농촌진흥청	11	40,158
6	문화체육관광부	4	95,885
7	방위사업청	1	51,450
8	보건복지부	61	978,474
9	산업통상부	14	626,781
10	소방청	2	42,251
11	중소벤처기업부	1	96,939
12	질병관리청	1	171,60
13	해양수산부	51	1,504,331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19,640
-	기타	6	10,923,869
합 계		254	29,192,197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함

(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지방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생활여건 개선 관련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이번 정부는 5극3특[2] 권역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이하 “5극3특 전략”)을 채택하였음.

이는 초광역 권역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되, 특히, 권역별 성장거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성장거점에 대해 재정·R&D·규제완화·펀드·인재양성 지원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하였는바, 종래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5극3특 권역의 경제권·생활권 및 추진기반이라는 체계에 맞추어 총괄 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 의제를 5극3특 전략 틀 안에서 재편하고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구체적으로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지는바, 각 세부과제별 소관 부처와 일정을 명시하여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5극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이 분야는 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②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③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④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 ⑤ 5극3특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의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5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초광역 RISE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를 말함.

5극					3특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	강원	전북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 충북·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강원	전북

이번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국정과제에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1) 5극3특 초광역 단위 앵커기업 기반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 성장엔진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 - 민관합동 성장엔진 투자계획 마련 및 투자협의체 마련	- 2026년 초광역권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발굴·체결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2) 5극3특 성장 5종세트 패키지 지원		
	- 메가특구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 제도기반(법령 포함) 정비 - 지역 자율 R&D 예산구조 및 사업추진체계 개편 - 초광역권별 지·산·학·연 협의체 구성으로 과제 발굴	- 선도R&D과제 재원 마련,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 -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성장엔진 R&D·인프라 사업 검토 추진
(3) 지방투자유인 기반제도 개선		
	- 5극3특 지방거점 유도 보조금 개편안 마련 - 지역별 전기요금·망요금제 시행	- 지투 보조금 확대
2.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 초광역권 별 지역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 4대권역 AX 연구실증 거점 우선 조성 및 타권역 확대	- 권역별 TechHub 조성
(2) 지역산업 AX전환 생태계 구축		
	- 지역 AX선도기업 협업 AX 상생모델 발굴·시범사업 추진 - 초광역권별 제조AI혁신센터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 제조AI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제조AI혁신센터 설립 및 중소기업 AI 등 연구개발·인력양성
(3) 중소·중견기업 산업전환 지원 및 특화단지 연계강화		
	-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컨설팅 - 권역별 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뿌리산업 특화단지 연계방안 마련	- 사업전환 권역-기업 인센티브 확대 - 특구 및 산단 종합적·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 - 성장엔진 연계 글로벌 전시회 육성
(4) 권역별 관광 인프라·콘텐츠 구축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 교통거점-관광지 연계	- 광역관광개발 2.0 및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3.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1) 정부주도 펀드의 지역투자 확대		
	- 국민성장펀드 조성 / - 지역성장펀드 조성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프로젝트 발굴 - 지역엔젤투자허브 확대(기존 4개소→4극3특 초광역권별) 및 초광역 추진체 거버넌스 내 편입	- 한국벤처투자 사무소 확대(기존 1개소→4극3특 초광역권별) - 지역투자 인센티브 마련 - R&D지원 지역펀드 조성
(2) 초광역권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		
	- 일부권역 지역투자공사 설립 검토	- 지역투자공사 타 권역 확대 검토
4.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		
(1)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 및 RISE체계 발전방안 수립 -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본격 추진 - 산학연(출연연, 과기원, 산업계 등)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 - 혁신 선도 지방대 투자 확대로 지역 거점국립대 동반 성장 지원	- 초광역 RISE위원회 구성·운영 - RISE 체계 연계 초광역권 인재양성 사업 발굴 및 추진(메가공유대학,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 취·창업 등) - 초광역 RISE센터 독립법인 신설 및 초광역권 인재양성 사업 운영 본격화

(2) 지역산업과 연계한 투트랙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대학-기업 연계 탄력적 학사제도 추진 (대학-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또는 가칭 산업학위제,사내대학원 설치·운영) -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운영(2030년까지 50개교 지정)	- 직업계고-전문대-대학 학제 연계 강화 및 학사 자격 다변화 -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교원 국내·외대학 겸직 근거 마련, AI 해외 Top-tier급 인재유치 등)
(3)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취·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라이즈 기본계획과 지산학연 연계 강화 및 지역 수요 반영 -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개정	- 대학 내 학교 기업 지원 강화 및 대학 창업 펀드 지원 -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수요 반영 등
5. 5극3특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1) 권역별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職·住·樂 일체) 조성		
	-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통합 조성·운영 -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선도사업 1~2개 선정	- 혁신성장거점으로 연계·지원할 초광역 특별협약 마련 - 투자, 인프라, 인재 등이 결합된 창업 거점 활성화
(2)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와 연계된 복수의 거점도시 조성		
	- 지역거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개편안 마련 및 추가 지정
(3) 부처별 거점조성사업 평가 및 재설계		
	- 부처별 혁신거점사업 평가 및 재설계 방향 제안	

(나) 5극3특 생활권 : 연결과 확산

이 분야는 ① 국토공간 재설계, ②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 ③ 주거·복지·의료 통합연계망 강화, ④ K-농산어촌 조성 등 4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6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복지·의료 통합연계망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K-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국토공간 재설계		
(1) 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 공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 마련 - CTX-경부선 연결 사업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및 추진
2.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		
(1) 계획-투자-운영 일원화를 위한 권역별 교통계획체계 정비		
	- 권역별 대중교통망계획 제도 도입방안 마련	- 대광위 조정기능 강화
(2) 생활권 연결 제고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BRT 도입 확대 -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전국 확대	- 농어촌 맞춤형 DRT 사업 확대 - 공공형 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

(3) (단기)대중교통망 + (중장기)철도·도로망 등 구축으로 초광역권 연결성 강화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실시설계 착수 - 도시철도망(광주2, 양산, 대전2, 대구엑스코, 울산1, 부산하단-녹산) 구축계획 사업 추진 - 간선도로망 적기 개통 및 보완 -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 ('26~30) 수립	- 가덕도 신공항 건설 - TK 공항 건설 - 천안~청주공항 철도 건설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4) 5극3특 통합 환승체계 강화		
	- 환승센터 단계적 확대	- 통합요금제 도입을 통한 환승시스템 구축
3. 주거·복지·의료 통합연계망 강화		
(1) 지역 주거·문화여건 개선		
	- 지역활력타운 추진 (범부처 지원 협약) - 지역거점 문화시설 확충	- 문화선도산단 확대 - 문예회관 기능 강화 - 우수한 공연·전시 지역순회 지원
(2)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 강화		
	-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수가제도 및 지역필수의료 별도 재원체계 신설 추진 -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 의료취약지역 비대면진료
(3)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 - 재택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통합재가서비스 단계적 확충
(4)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여건 조성		
	- 교육특구 지정	-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체제 조성
4. K-농산어촌 조성		
(1)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		
	- 햇빛연금 조성 -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실시 -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추진 -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2)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 농촌특화지구 조성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정 - 농어촌빈집관리특별법 제정 - 빈집철거 및 마을단위 빈집재생	- 재생거점마을 조성 -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농어촌 관광벨트 조성
(3) 청년 농어업인재 육성 및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		
	- 예비농업인 컨설팅·교육 도입 - 청년농 공공비축농지 공급 확대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농촌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R&D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청년바다마을 조성
(4) K-푸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新산업 육성		
	- K-푸드파크 및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확대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확대 - 국가 농어업 AX플랫폼 조성 -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다) 5극3특 추진기반 : 행정·재정기반 구축

이 분야는 ① 5극3특 행정기반 구축, ② 5극3특 재정기반 구축 등 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수당 등에 대한 지방우대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균형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초광역특별계정 시설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5극3특 행정기반 구축		
(1)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개편 -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 구성 및 전담조직 신설	- 지방위 기능 및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 구성
(2) 권역별 초광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특별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특별지자체 실질화를 위한 규약 표준안 마련	-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지역 주도 특자체 출범 지원
(3) 권역별 패키지 정책 지원: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		
	- 초광역특별협약 구조설계	- 부처-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4) 파편화된 지방사업 추진방식 개선 : 통합공모		
	- 다부처협력사업 통합공모 방안 마련 및 통합공모 실시	- 통합공모 실시를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5) 권역단위 분권화 강화: 초광역권 중심 맞춤형 권한이양		
	- 이양사무 발굴 및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도입방안 마련	-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안 마련
2. 5극3특 재정기반 구축		
(1)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확대		
	-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 포괄보조 확대
(2) 5극3특 지원 재정체계 구축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 5극3특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지원
(3)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성과 연동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 등	
(4) 지방우대 재정지원		
	- 아동수당 - 노인일자리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비수도권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특별훈련수당)	- 지역사랑상품권 - 창업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나. 검토의견

(1) 5극3특 전략에 대한 총괄적 검토

5극3특 전략은 최근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체 구성이 속속 추진되는 등 초광역 성장거점 집중 육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권역별 성장거점이나 전략산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집행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수도권 1극체제와 비수도권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성장거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3)]

즉, 최근 비수도권의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초광역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설립에 성공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3) 참고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역대 정권 초광역 협력 정책은 다음과 같음, (김예성·하혜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5.12. 참조)

노무현 정부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기반 마련 - 2006년 11월 4대 초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구상 발표, 2007년 9월 5+2 초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5대 초광역경제권+강원권·제주권 2개 지역경제권) 구상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함.
이명박 정부	- 전 국토를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는 3차원 지역발전 방안 수립하였는데, 이 중에서 5+2 광역경제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추가 -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연계협력 및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하였다는 비판도 있음
박근혜 정부	- 초광역협력사업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행복생활권(56개), 중추도시생활권(20개)30), 경제협력권(16개) 사업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초광역협력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음.
문재인 정부	- 부울경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추진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2021년 10월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을 선정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최근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체 추진현황]

구분	현황
부산울산경남	- 2018년부터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여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으나, 시·도 간 이견으로 해산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무산됨. - 이후 경제중심의 ‘초광역경제동맹’으로 전환, 2023년 전담조직(추진단) 설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모빌리티·광역교통망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도 병행 중임.
대구경북	- 초광역 협력과 행정통합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2023년 이후 ‘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 중심의 실질협력체계로 전환. - 현재 신공항·산업 대전환·물류허브 조성 등을 중심으로 15개 실무분과가 공동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통합은 재추진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음.
광주전남	-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이후, ‘공동 초광역협력 TF’를 통해 32개 과제 중 10개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 중인바, 에너지, 바이오헬스, 철도망 구축 등이 주요 전략이며, 2024년에는 전북과 함께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며 권역 간 연계를 확대 ※ 2025년 8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 개최
충청권	- 2024년 전국 최초로 법정 초광역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 37명 규모의 전담조직과 광역의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모빌리티 육성과 생활경제권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 최근 대전-충남 간 행정통합 논의도 병행

자료: 박경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5.9.15., p.6 재정리

따라서 이번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비수도권 지역의 실제 정책 수요를 토대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성공한 충청광역연합의 경우에도 지역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가 갈등 끝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4] 연합에 이르지 못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되어 왔다는 점[5]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권역별 성장거점이나 전략산업을 선정하거나 이와 관계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집행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예를 들어,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독립적 지위 강화, 충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강화를 각각 추진하고 있음. - 하혜영,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4.

5)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은 협의를 통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 고시(2022.4.)를 받았고, 2023년 1월부터 사무개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2022년10월 3개 단체장 공동으로 출범이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했고, 2023년 3월 특별연합의 폐지규약들이 각 시·도에 고시되면서, 결국 해산되었음. - 하혜영, 위 보고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4극3특[6] 지역특화 신산업 예산 중 동남권의 ‘피지컬AI 기반 기계·부품 초정밀 가공’ 사업(20년 400억원, 총 1조원)’과 전북권의 ‘피지컬AI 제조 테스트베드’ 사업(2026년 400억원, 총 1조원)[7]은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4극3특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



6) 5극3특 중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7)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지역균형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명은 각각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4231-301)사업과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4231-302)사업임.

(2) 5극3특 지역인재 양성 관련

첫째, 각 시·도의 지방비가 매칭되는 RISE 사업예산을 시·도를 뛰어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조성 및 인재양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그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할 경우 각 시·도 간 갈등조정 장치를 면밀히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8]은 지역 대학·산업계 및 기관 등이 협력하여 각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예산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예산을 배분하면 각 시·도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더해 각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6월 기준)에 각 시·도는 국고보조금의 23.3%인 3,589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였음.

[2025년 시·도별 RISE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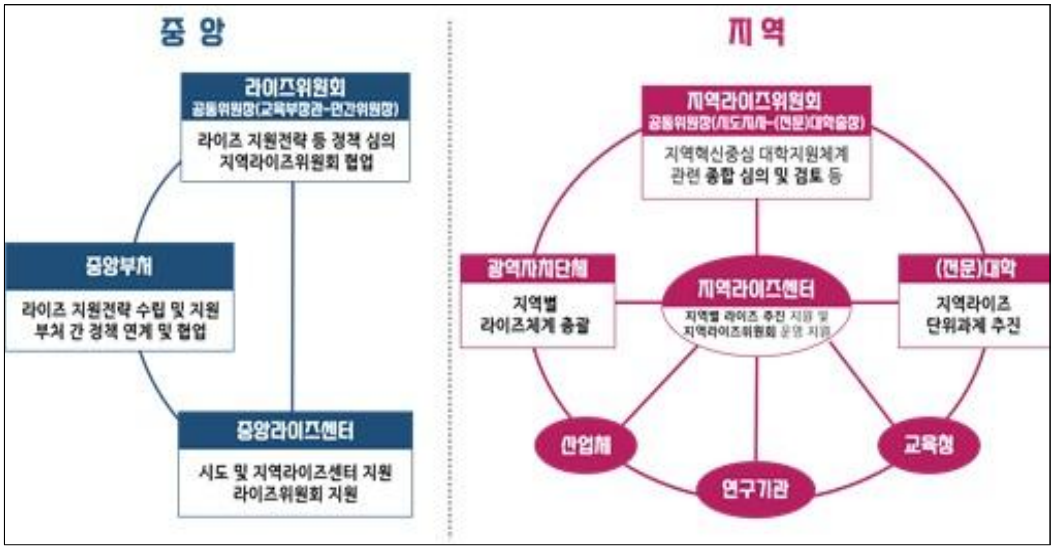
지역	국고 지원				지방비 매칭액(비율)	
	대학역량 기반		지역역량 기반	국고 합계		
	지출재구조화사업	글로컬대학				
서울	43,998	-	12,500	56,498	21,650	38.3%
부산	101,545	50,000	6,500	158,045	31,609	20%
대구	58,870	13,333	6,500	78,703	13,968	17.7%
인천	9,010	-	7,800	16,810	3,600	21.4%
광주	48,570	3,333	21,675	73,578	15,215	20.7%
대전	52,294	3,333	12,375	68,002	6,767	10%
울산	33,222	20,000	3,500	56,722	11,348	20%
세종	11,679	-	3,500	15,179	2,336	15.4%
경기	43,063	-	13,500	56,563	11,413	20.2%
강원	71,305	60,000	8,500	139,805	25,466	18.2%
충북	55,779	40,000	20,375	116,154	23,231	20%
충남	81,822	10,000	21,715	113,537	30,523	26.9%
전북	66,086	35,000	6,500	107,586	40,522	37.7%
전남	47,291	30,000	11,500	88,791	31,098	35%
경북	124,786	80,000	15,800	220,586	50,629	23%
경남	73,086	45,000	16,500	134,586	31,717	23.6%
제주	33,674	-	3,500	37,174	7,775	20.9%
계	956,080	389,999	192,240	1,538,319	358,867	23.3%

주) 2025년 6월 기준
자료: 교육부

8) 2026년 이 사업 예산 규모는 2조 1,403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방 성장거점구축’ 예산(총 29.2조원)으로 분류한 254개 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세부사업임.

또한 17개 시·도별로 5개년(2025~2029) RISE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RISE 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며, 각 지역 RISE센터에서 구체적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RISE 사업추진체계]



지역 RISE위원회	- (구성)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장과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계 위원을 1/2이상 위촉 - (기능)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평가 결과, 성과관리 등 지역 내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지자체	- 지자체 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통합·재배치하여 RISE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운영
지역 RISE센터	- 지역 대학 및 산업체, 기업과의 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또는 신설한 비영리법인 - 지역의 RISE 계획 수립 지원, 대학의 RISE 사업 수행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성과관리 등을 운영
대학	- 대학 내에서의 분절적 사업운영 방지를 위해, 학교가 수주하는 단위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RISE 사업단 구성

즉, 이 사업 예산 배분과 지방비 매칭, 사업계획 수립·집행 등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한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서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초광역 RISE 위원회와 초광역 RISE센터를 도입하고 RISE 체계와 연계된 초광역권 인재 양성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는 각 지역의 지자체·대학·연구기관·산업체가 참여하는 RISE 플랫폼을 활용해 권역별 산학연협력 및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권역에 속하는 다수 시·도 간에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도 단위의 행정·재정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시·도의 지방비가 매칭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5극3특 권역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각 시·도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면밀히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둘째, 거점국립대학은 권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핵심기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인적·물적 연구역량이 모여 있는 곳이고 향후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거점국립대학 지원은 사업추진체계와 정책목표가 서로 다른 다양한 예산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중복 투자 또는 투자 공백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거점국립대가 5극3특 권역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고 해당 권역 내 다른 대학과 연구·교육 협력이나 장비 공유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77억원이 증액된 8,73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함.

[5극3특 권역별 거점국립대 현황]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남	제주	강원	전북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강원대	전북대

그런데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원), ‘AI 거점대학’(300억원),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2,3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내 지역혁신허브화 지원분(1,200억원) 등 각각 그 사업추진체계가 서로 다름.

[2026년도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사업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국립대학육성사업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	1,200	2,836
	AI 거점대학	-	300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3,626	2,340	
	거점국립대 지원		2,622	
RISE	(지역혁신허브화)	-	1,200	1,200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330	1,071	741
계		3,956	8,733	4,777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즉,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사업은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연구인력이나 연구사업 등에 대한 이공계 지원 예산[9]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AI 거점대학’ 사업은 국내 AI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 등 제반사항과 관련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사업은 종래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각 대학이 수립한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은 각 지역의 지자체·대학·산업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RISE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것임.

따라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한 각 사업들은 그 사업추진체계나 사업목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 중복투자나 투자공백 또는 대학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10]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각 사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교육부는 2025년 9월 30일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논의하였음.

(3) 인구감소지역 등 지원 관련

첫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자체 부담분 보완방안, 일시적 거주자 수령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 본사업 전환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표 관리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권역별 성장거점을 집중육성하는 전략을 택할 경우 집중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우려될 수도 있는바, 정부는 소외지역 지원 예산도 다양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례로 2026년 1,703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1]이 있음.

이 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의 40%를 국고 지원하고 60%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인바, 2025년 10월 공모 결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12]되었고,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6년도 예산안)**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700억원* (사업비)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23.7만명)×15만원×12개월×40%(국비) - 민간경상보조(320-01) : 3억 3,700만원 (운영비)
○ **(지원내용)**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2026년도 국비 지원예산이 1,703억 3,700만원인바, 국비:지방비 지원비율(4:6)과 총 7개 군(2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부담분은 연간 약 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가 매년 확보·부담하기 어려워 보여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농촌정책국)

12)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69개 군* 중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토대로 6개 군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10.20.(월) 보도자료를 통해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사업대상 지역이 7개 군으로 확대되었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출생률, 고령·유소년·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 단위는 69개임(도시지역 5개 및 도농복합시 15개 제외).

타 지역 주민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일시적 거주를 통해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및 지역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 사업 전환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 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공동체 유지 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3)]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역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 아동수당 등 7개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할 계획인바, 비수도권 167개 지역을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3단계로 구분하고 지원내용이나 지원비율 등을 달리 설정할 것이라고 함.

[2026년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 관련 사업]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우대 내용</th></tr>
<tr><td>아동수당</td><td>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전국 공통)</td><td>특별12만원 / 우대11만원 / 일반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수령 시
특별·우대지역 +1만원 추가 지급)</td></tr>
<tr><td>노인일자리</td><td>비수도권 배분비중
70.4%(’25년)</td><td>2026년 일자리 확대분(+5.4만개)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4.7만개)</td></tr>
<tr><td>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Ⅱ유형)</td><td>-</td><td>특별720만원 / 우대600만원 / 일반48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2년간)</td></tr>
<tr><td>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td><td>월 31.6만원</td><td>인구감소50만원/ 비수도권40만원/ 수도권30만원
(Top-tier AI 융복합 과정: 80/60/40만원)</td></tr>
<tr><td>지역사랑상품권</td><td><table><tr><td>(%)</td><td>일반</td><td>인구감소</td></tr><tr><td>국비지원</td><td>2</td><td>5</td></tr><tr><td>할인율</td><td>7</td><td>10</td></tr></table></td><td><table><tr><td>(%)</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d>인구감소</td></tr><tr><td>국비지원</td><td>3</td><td>5</td><td>7</td></tr><tr><td>할인율</td><td>8</td><td>10</td><td>12</td></tr></table></td></tr>
<tr><td>창업사업화 지원</td><td>창업기업 자부담률 30%</td><td>특별10% / 우대20% / 일반25%</td></tr>
<tr><td>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td><td>중소기업 자부담률
15~55%(매출액별 상이)</td><td>특별5~40% / 우대5~45% / 일반10~50%</td></tr>
</table>

13) 한편, 경기도 기본소득 실시사례(연천군 청산면)에서 보듯이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장 등이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농촌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구체적인 우대 내용을 살펴보면, ㉠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거나(아동수당,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의 자부담률을 완화하거나(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 비수도권에 사업물량을 추가 배분하는 경우(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 국비지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가 있는데, 이 중 국비지원율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즉,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로 발행되고 있는데, 일부 수도권 소재 기초 지자체는 비수도권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14]도 있고, 2025년 8월 26일 개정(2026.1.1.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법」제15조제6항에서 차등지원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만을 명시[15]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발행주체 유형	국비지원율	정부지원 발행규모	교부(예정)액
불교부단체	-	미정	미정
수도권	3%	미정	미정
비수도권	5%	미정	미정
인구감소지역	7%	미정	미정
전체	4.8%[1)]	240,000	11,494[2)]

주 1) 지원대상 전체 발행주체 평균 국비지원율
2) 2026년 목표 지원 발행규모 24조원에 평균 국비지원율 4.8%를 적용하여 교부(예정)액 도출
자료: 행정안전부

14) 실제로 수도권 지자체 A군의 재정자립도는 24.0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자체 B시의 재정자립도는 43.9 수준임.

15)「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⑥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4) 5극3특 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인력운용이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체계 등 제반 사항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12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인 12개 병원에 필수의료 당직비를 각 10억 5,000만원씩 지급하여 지역의료 중추인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이 24시간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사업(신규) 개요]

○ (지원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12개소 ※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 (주요 내용) 필수의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비 지원 ○ (사업 기간) 2026~2027년 (한시사업) ○ (2026년 예산액) 126억 - 12개소×10개 과목*×1명(전문의 1인)×2.1억(당직비 단가)**×50%(보조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당직전문의가 필요한 중증·응급 배후 진료과목 ** 365일 당직비 : 평일 45만원·휴일 90만원(**2024년 복지부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단가 준용**) ○ (지원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 교육부

그 동안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 경위를 살펴보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갈등 속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590억원)한 바 있음.[16)]

따라서 필수의료 당직비의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대상, 적정단가 등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인력운용계획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에 대한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사업관리는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그 밖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업예산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중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2개소에만 필수의료 당직비가 국고 지원되고, 그 밖의 5개소에는 필수의료 당직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신속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3.6.)

[권역책임의료기관 현황]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 음영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으로 당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8. 저출생·고령화 대응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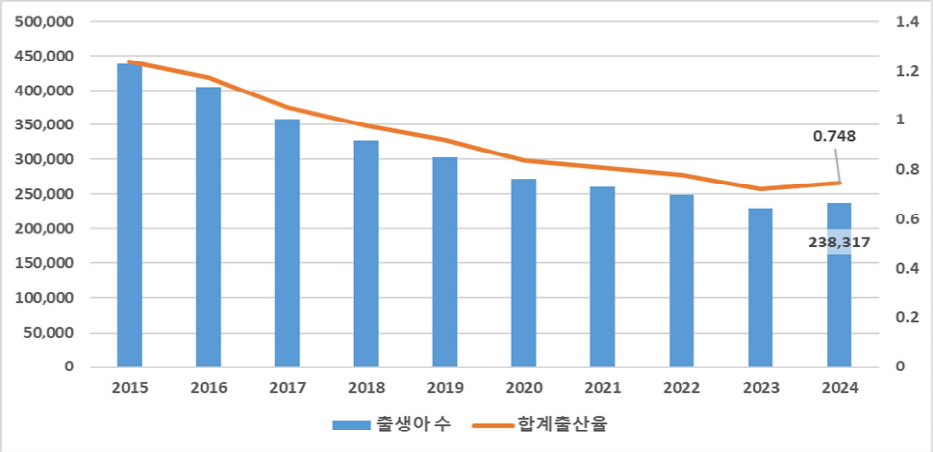
(1) 인구구조 현황

(가) 저출생 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합계출산율[1]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미만(0.977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3년 0.7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0.748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음.

연간 출생아 수도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감소하였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감소하였음.[2]

[2015~2024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가임기여성(15세~49세)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인 경우 저출산현상, 1.3명 미만인 경우 초저출산현상으로 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수준인 대체출산율(약 2.1명)을 1983년 처음 하회(2.06명)하였으며,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1.18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함.

2)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8,317명, 사망자 수는 358,400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 현상이 2020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속되고 있음.

[2015~2024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합계출산율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0.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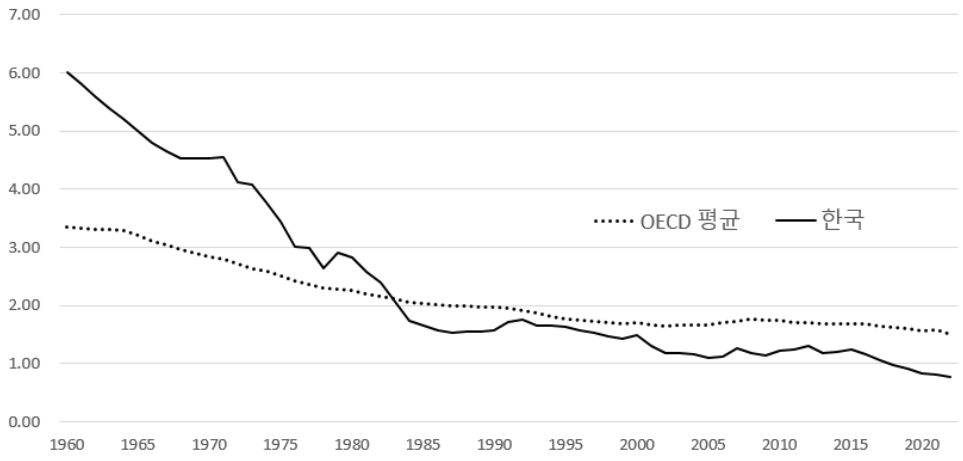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03호 출생통계」

OECD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 등 저출생 지표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 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감소 현상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OECD 평균이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약 1/2 수준으로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22년 0.78명까지 약 1/8 수준으로 낮아졌음.

[OECD 회원국과 연도별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명)



자료: OECD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등 저출생 현상이 지표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 관련 지표의 OECD 국가간 비교]

구분	OECD 결과			한국
	최소	평균	최대	
합계출산율(children per woman)	0.78	1.51	2.89	0.78(최소)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세)	27.0	30.9	33.5	33.5(최대)
전체 출생아 중 셋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8.3	19.6	31.5	8.3(최소)

주) 평균은 OECD 국가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기준연도는 2022년 또는 인근 연도
자료: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나)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4년 20.0%에 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3]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9.5%에서 28.9%로 상승(9.4%p)하였음.

중위연령 또한 2015년 40.9세에서 2024년 44.6세로 점차 높아져 인구 연령 구조가 전반적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2015~2024년 고령화 현황]

(단위: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 세)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년부양비	18.0	18.5	19.5	20.4	21.5	22.9	24.1	25.5	27.1	28.9
고령인구 비율 (65세~)	13.1	13.5	14.2	14.8	15.5	16.4	17.1	18.0	19.0	20.0
생산연령인구 비율 (15~64세)	73.1	73.1	72.7	72.4	72.0	71.4	71.0	70.5	70.0	69.3
중위연령	40.9	41.4	42	42.6	43.1	43.7	44.3	44.9	45.5	44.6

자료: 노년부양비, 고령인구 비율, 생산연령인구 비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중위연령: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OECD 국가 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저출생 지표가 심각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되어 고령화 지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OECD에서 제일 낮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으로, 2060년에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인구 수(96명)는 가장 높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3) 고령인구비율이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로 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을 기록(7.3%)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14.2%), 2024에는 초고령사회(20.0%)에 진입함.

[저출생 관련 지표의 OECD 국가간 비교]

구분	OECD 결과			한국
	최소	평균	최대	
기대수명	73.1	80.3	84.5	83.6
20~29세 청년 중 부모와 거주하는 비율(%)	10	50	81	81(최대)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 인구 수	33	59	96	96(최대)

주) 평균은 OECD 국가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기준연도는 2022년 또는 인근 연도
자료: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경과

(가)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같은 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2005.9.1.)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음. 이후 제1차(2006~2010)부터,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 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음.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비전으로,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였음. 또한 저출생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측면의 요인 및 인구학적 경로로 제시하고, 청년・가족・고령층 등 세대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상 저출산 원인]

구 분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①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②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③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④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⑤ 잔존하는 돌봄 공백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①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②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인구학적 경로	①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②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연령의 상승 ③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자료: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4]에 따라 정부는 2025년 말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인구 감소의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범부처 차원의 투자 방향 및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나)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5]

시행계획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별 과제 및 재정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점에 성과 달성도, 예산집행률을 파악, 목표 미달성 및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며,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202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지방비 포함)은 전년 대비 5.0조원(6.0%) 증가한 88.3조원으로 파악됨.

---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단위: 조원)

추진전략	2025년 예산(비율)	2024년 예산(비율)
합 계	88.3(100.0%)	83.2(100.0%)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47.7(54.1%)	42.8(51.5%)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2.1(36.3%)	30.2(36.3%)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8(5.4%)	5.8(7.0%)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3.7(4.2%)	4.3(5.2%)

자료: 정부, 「202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정책 대상별로는 ①영유아 · 아동, ②청소년 · 청년, ③여성, ④양육부모, ⑤중장년 · 고령자, ⑥전국민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025년 정책대상별 주요과제]

현금성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 **부모급여** 확대, 첫 만남 이용권 지급 • **부모급여 :** 만 0세 월100만원, 만 1세 50만원 ('25년 월평균 438천명 지원 예정) •**첫 만남 이용권 :** 아동 출생 시 바우처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아동수당 지급**(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영유아·아동	■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소 확대** ■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확대**(11만→12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신설 및 예산 확대**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지원 추가, 1,948억원 확충	청소년·청년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임대주택 3.65만호, 전·월세 금융지원 7만가구)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확대**(9천명→12천명)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연 16.8만원) ■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7,777명, 460만원)	여성	■ **임산부·영아 건강 관리 시범기관**(68→78개소) 및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확대**(10→12개소) ■ **신기술 응용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산** (17개 과정→25개 과정)
■ **육아휴직 지원 신설·확대** • **육아휴직급여 지원**(최대 월 25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확대 개편** (생후 18개월 내 첫 6개월 월 최대 250만~450만원)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월200만원/3개월) ■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구간 100만명 → 9구간 125만명)	양육부모	■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공급** (건설·매입·전세 7천호)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기초연금 월 최대 약 34만 원**(하위 70%, 736만명)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7천명→11천명)	중장년·고령자	■ **노인 일자리 확대**(103만개→110만개)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2천호), **주택개조 지원**(2만호) ■ 모바일 헬스케어, AI·Iot 건강관리서비스(5.6만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55만명)
■ **상병수당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운영**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19.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지원**(30.5만 명)	전국민	■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추진**

자료: 관계부처 · 지자체합동, 「202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점 투자방향의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를 설정하고, 총 6개 부처, 41개 세부사업에서 2025년 본예산 대비 7.9조원(12.6%) 증액된 70.4조원을 편성하였음.[6)]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반등(35조 8,239억원), 미래세대(7조 780억원), 고령화 대응(27조 5,386억원) 분야에 예산을 편성함.

우선 저출생 반등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및 유아 무상교육 지급대상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다음 미래세대 지원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지원 강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향상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유지와 지역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6)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저출생 반등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신혼부부형)	10,265	23,662	13,396	130.5	·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신혼부부형)	9,128	20,373	11,245	123.2	·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아동수당 지급	19,588	24,822	5,233	26.7	· 지급대상 확대 (7세 이하 → 8세 이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4,703	4,703	순증	· 지급대상 확대 (5세 → 4~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	2,512	2,512	순증	· 0세반 교사비율 개선 (1:3 → 1:2)
	그 외	288,786	282,167	△6,631	△2.3	
	소계	**327,768**	**358,239**	**30,459**	**9.3**	
미래세대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청년형)	5,607	15,811	10,203	182.0	·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청년형)	5,047	14,230	9,183	182.0	·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미래적금	-	7,446	7,446	순증	· 자산형성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7,141	8,736	1,595	22.3	· 구직촉진수당 상향 (50만원 → 60만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	9,080	1,308	16.8	·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그 외	15,950	15,477	△473	△3.0	
	소계	**41,517**	**70,780**	**29,263**	**70.5**	

(단위: 억원, %)

구 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고령화 대응	기초연금 지급	218,146	233,627	15,481	7.1	·월 수급액 인상 (34.3만원 → 34.9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847	23,851	2,004	9.2	·노인일자리 확대 (110만개 → 115만개)
	다가구매입임대융자(고령자형)	755	1,590	835	110.6	·고령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다가구매입임대출자(고령자형)	677	1,431	754	111.4	·고령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1	777	706	990.4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그 외	14,807	14,109	△698	△4.7	
	소계	**256,304**	**275,386**	**19,082**	**7.4**	
합 계		**625,588**	**704,404**	**78,816**	**12.6**	

주 1) 각 분류별(저출생 반등, 고령화 대응, 미래세대) 증감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사업(5개)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2) 사업단위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개 정부부처 기준으로 보면, 사업 수는 국토교통부 24개, 교육부 15개, 보건복지부 14개 순으로 많고,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보건복지부 31조 7,784억 2,600만원, 국토교통부 17조 6,239억 2,900만원, 교육부 13조 2,277억 3,100만원 순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처별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보건복지부	14	31,778,426
2	국토교통부	24	17,623,929
3	교육부	15	13,227,731
4	고용노동부	12	6,465,433
5	금융위원회	1	744,625
6	성평등가족부(舊 여성가족부)	1	600,305
합 계		67	70,440,449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총괄분석

첫째, 2026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 중 일부는 대상 사업의 판단 기준과 선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판단 기준은 사업 목표로 합계출산율 제고, 노인빈곤률 개선 등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인바, 주거·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특히, 사업의 지원(수혜) 대상이 영유아·청소년·여성·노인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026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의 중분류 항목은 ①저출생 반등, ②고령화 대응, ③미래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사업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다음 일부 세부사업은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규모의 판단기준을 개선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중 저출산 또는 고령화와 관련성이 적은 예산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증감률
국토부	통합공공임대출자	830,901	774,512	△56,389	△6.8
	(신혼부부형)	255,347	226,382	△28,965	△11.3
	(육아친화플랫폼)	-	7,644	7,644	순증
	(고령자형)	319,184	282,978	△36,206	△11.3
	(고령자복지주택)	16,687	38,148	21,461	128.6
	(고령자복지주택 특화시설)	32,214	34,944	2,730	8.5
	(청년형)	207,469	183,936	△23,533	△11.3
	(청년특화주택)	-	480	480	순증
국토부	통합공공임대융자	720,269	404,018	△316,251	△43.9
	(신혼부부형)	232,326	128,904	△103,422	△44.5
	(고령자형)	290,407	161,130	△129,277	△44.5
	(고령자복지주택)	8,771	9,249	478	5.4
	(청년형)	188,765	104,735	△84,030	△44.5
국토부	다가구매입임대융자·출자(든든전세)	1,205,440	1,015,000	△190,440	△15.8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I유형)	3,029,187	2,936,945	△92,242	△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통합공공임대(융자·출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고령자 등 유형별 입주실적 비율을 토대로 통합공공임대(융자·출자)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을 구별하였음.

다만, 2026년 실제 공급되는 비율은 연도별 지원자의 대상요건 부합여부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적용한 비율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내용(2025년 기준)
소득기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총자산가액이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반공급	□무주택요건 등을 갖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인 (추첨방식)
우선공급(비중)	철거민(1%), 국가유공자(5%), 장기복무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3%), 다자녀가구(4%), 장애인(5%), 비주택거주자(쪽방,고시원 등, 5%), 기초생활수급자(9%), 청년(5%),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3%), 고령자(10%), 신생아(10%)

자료: 마이홈(www.myhome.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도 통합공공임대(융자 · 출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이 중 든든전세 유형은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전환 미선택 시 추가 2년(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한 유형인데, 자격 요건에서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음. 다만,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 공급함.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므로 전액을 저출산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다른 임대주택 유형과 같이 실제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공급되는 비율을 토대로 계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유형별 조건]

유형(일부)	자격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일반	무주택	시세 30%	20년
청년역세권	무주택+대학생,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19~39세	시세 40%	10년 (혼인시 20년)
다자녀	무주택+소득70%이하+2명이상자녀 (미성년자,태아)	시세 30~40%	20년
고령자	무주택+65세이상	시세 40%	제한없음
신혼·신생아Ⅱ	무주택+소득70%(맞벌이90%)이하+(예비) 신혼부부,한부모·혼인가구 (6세이하자녀)	시세 60~80%	10년 (유자녀 14년)
든든전세	무주택	시세 80~90%	8년

주) 입주자 선정기준은 든든전세를 제외하고 소득 ·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자료: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Ⅰ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설계된 장학금임.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50만원(9구간)에서 전액(1구간)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미래세대인 청년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Ⅰ유형은 학생의 소득수준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유형 중 하나로서, “촘촘한 사회안전매트”의 중점 투자 방향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사업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 대응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국가장학금 유형]

구분	유형
소득연계형 (4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8개)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국가우수 (8개)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주거안정(1개)	주거안정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1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2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해외탐방)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예시로 제시한 위 사업들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수혜자의 체감 정도가 재정 투입 규모에 비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중점 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 감축 여력이 제한적인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 증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에 따른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상 투자계획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81조 7,518억 1,300만원에서 2029년 96조 8,090억 9,400만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점 투자방향(저출생·고령화 대응) 세부사업의 중기재정계획(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81,751,813	82,874,183	82,041,785	91,304,114	96,809,094	4.32

주) 중점 투자방향(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속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세부사업 기준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2029년 증감액 상위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사업(6조 4,082억 8,900만원 증),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융자(2조 4,346억 8,400만원 증), 통합공공임대출자(2조 1,099억 6,900만원 증) 등 순으로, 복지지출 및 주거지원 확대에 따른 큰 폭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 상 증가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A)	2026	2029 (B)	증감액 (B-A)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21,814,577	23,362,715	28,222,866	6,408,28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통합공공임대융자	1,481,708	1,246,805	3,916,392	2,434,68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1,642,403	2,237,618	3,752,372	2,109,969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961,911	2,984,805	3,455,285	1,493,374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0,039	3,730,198	4,686,469	1,446,43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1,958,823	2,482,169	3,015,107	1,056,284
국토교통부	주택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612,000	3,044,394	4,302,350	690,35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612,000	3,044,394	4,302,350	690,350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28,852	470,335	696,063	567,211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84,689	2,414,065	2,637,914	453,22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일부 사업은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 및 단가·대상이 결정되는 의무지출 사업[7]에 해당하여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별도의 재정지출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26년 중점투자방향(저출생·고령화) 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21,814,577	23,362,715	25,039,852	27,092,057	28,222,86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35,263	2,372,567	2,375,757	2,364,256	2,451,64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1,958,823	2,482,169	2,663,298	2,921,720	3,015,10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454	4,072,832	4,195,017	4,320,868	4,450,49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수급률[8]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7)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8) [사업대상자 수 및 실제 수급률 비교]

(단위: 만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대상자 수	예산편성인원	598	628	665	701	736
	실제 지급인원	597	624	651	676	집계중
수급률	예산편성기준	70	70	70	70	70
	실제 수급률	67.6	67.4	67.0	66.0	집계중

주) 2025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903천명(수급률 65.8%)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14,031	175,473	16,289,504	-	△106,478	92,859	16,275,885	16,275,264	-	621
2023	18,530,432	-	18,530,432	-	△9,786	-	18,520,646	18,190,029	35	330,582
2024	20,201,456	-	20,201,456	35	△202,486	-	19,999,005	19,608,485	80	390,441
2025.8.	21,814,577	△392,662	21,421,915	80	-	-	21,421,995	16,837,462	-	-

자료: 보건복지부

또 다른 사업인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은 2026년 예산안 편성 근거에 있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상 0세와 1세 인구 전체를 반영하여 동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9]의 이용 인원이나 수요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실제 정책 수요와 예산 편성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관 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 상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소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별도의 관리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중 영아종일제와의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를 선택할 유인이 높으므로, 부모급여(영아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간에는 정책 수요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만 0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5,337명 중 214,870명(91.3%)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07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으며, 만 1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4,405명 중 241,566명(103.1%)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73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음.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등록인구보다 부모급여 사업의 월평균 지원인원이 많을 수 있음)

셋째,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중점투자방향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사업 41개(세부사업 기준)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총 56개이며, 이 중 변경·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2026년에 관리 중인 지표는 46개임.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평균 성과목표 달성율을 보면, 46개 지표 중 33개 지표가 달성율 10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사업 성과지표 현황]

(단위: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지표 (단위)	'23	'24			'25	'26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목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0세 부모금여(영아수당) 지급률 (%)	105.7	90	94.2	104.6	91	91.5
		부모급여 종합만족도(점)	-	-	-	-	-	3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지급률(%)	100	95	100	100	95	95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률(%)	100	97.4	97.2	99.8	97.2	97
		아동수당종합만족도(점)	-	-	-	-	-	3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수혜율(%)	104.1	67	59.3	88.5	64.8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평균 사용률(%)	-	-	-	-	-	87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점)	99.4	91.3	90.8	99.4	91.3	91.3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관리 운영	입양사후서비스 사업 만족도(점)	100.8	91.2	91.8	100.6	91.6	91.4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성·피임 교육전후 인지변화율(%)	111.8	29.5	29.9	101.4	30.3	30.8
		임신·출산 종합상담 이용자 만족도	101.7	85.5	86.5	101.2	86.5	86.6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점수)	102.3	94	96.6	102.8	94	94.5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건소 기반 노쇠예방)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만족도(점)	101.3	85.64	86.32	100.8	85.9	86.5
		가족기능향상 기여도(점)	100.7	75.8	76.5	100.9	75.9	76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만족도(점)	102.5	88	86.9	98.8	88	88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혜율(%)	105.2	5.8	5.8	100	5.5	5.5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지표 (단위)	'23	'24			'25	'26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목표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통합 자립생활 유지율(%)	100	80	96.9	100	80	8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률(%)	98.9	99.2	96.5	97.3	97.9	97.9
		부당수급환수율(%)	100.9	94	96.2	102.3	94	94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실적(천명)	104.8	1030	1074	104.2	1098	1152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률(%)	-	19.7	27	137.1	32.4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106	81.2	85.3	105	81.2	84.5
		치매안심센터이용자 만족도(%)	-	91.2	91.9	100.8	91.2	91.6
보건복지부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정책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통계 공표(건)	-	-	-	-	-	2
		현신기반강화: 우수제품품질·안전관리이행(건)	-	-	-	-	-	130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해당없음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해당없음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105.1	81.7	87.1	106.6	82.1	82.1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98.1	71	60	84.5	71	65.8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인지도(점)	-	-	87.3	-	-	83
교육부	보육사업관리	시간제보육반 1개반당 월평균 이용건수(건)	137.7	45	37	82.2	-	-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비율(%)	396.2	8.3	12.7	153	-	-
		시간제보육 국민참여 및 소통 건수(건)	116.7	8	8	100	-	-
		시간제보육 이용자 만족도(점)	76.4	-	-	84.8	80.1	82
교육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보수교육 이수자의 교육 이수 역량(점)	99	92	-	-	92.2	92.4
교육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고객만족도 향상 성과(점)	-	-	-	-	86.2	87.5
		어린이집평가A,B등급비율(%)	99.7	94.6	96.4	101.9	97.3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지표 (단위)	'23	'24			'25	'26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목표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그밖의 연장형 교사(아침돌봄) 등)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개소)	99	1720	1896	110.2	1980	-
		정부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비율(%)	99	1720	1896	110.2	1980	-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Ⅰ유형, 다자녀)	대학생 1인당 학비부담 경감액(만원)	100.4	230	257	111.7	240	245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 대비 저소득층(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평균 지원액 비율(%)	100.8	-	-	-	-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출산휴가 등)	30~40대 여성고용률(%)	104.9	67	68.9	102.8	69	69.1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육아기 10시출근제, 워라밸+4.5 프로젝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30~40대 여성고용률(%)	104.9	67	68.9	102.8	69	69.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30~40대 여성고용률(%)	104.9	67	68.9	102.8	69	69.1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수급자수(명)	101.2	11,784	12,622	107.1	11,784	18,859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긴급돌봄채움프로그램(일반+중기))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소수(개소)	100.2	942	929	98.6	960	1065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통합장려금)	중장년 고용률(40~60대)(%)	-	-	72	-	-	72.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100.8	15,993	16,060	100.4	16,188	1631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103.4	-	-	-	-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지표 (단위)	'23	'24			'25	'26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목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5~64세 고용률(%)	101.8	69	69.5	100.7	69.5	70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	-	-	-	48.5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자(신혼부부 · 고령자 ·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실적 (만호)	82.9	3.5	4.2	120	3.5	3.5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융자(신혼부부 · 고령자 · 청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96.8	81.8	76.7	93.8	84.2	79
국토	다가구매입임대(출자)(신혼부부 · 고령자 · 청년 ·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100.5	86.5	84.9	98.2	86.5	86.3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하향지표)	84	2.5	2.8	88	2.5	2.8
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100.5	86.5	84.9	98.2	86.5	86.3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하향지표)	84	2.5	2.8	88	2.5	2.8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융자(신혼부부 · 청년)	전세임대 공급량(만호)	105.4	4	4.5	112.5	4.5	
		전세임대 입주자만족도(점)	118.1	90	88.6	98.4	90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실적(호)	166.1	216,775	347,887	160.5	307,908	241,871
국토교통부	이차보전지원(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해당없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수(만명)	0.701	16.2	17.3	106.7	22.7	-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수(만명)	-	-	-	-	-	6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천명)	-	111	111.6	100.5	118	120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해당없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방안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2026년 신규사업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실현 사업, 청년미래적금 사업과 기존사업인 이차보전지원(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사업은 별도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생 또는 미래세대 대응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정량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10] "아동수당 지급률(%), 기초연금 지급률(%)" 과 같은 투입·산출지표와 "부모급여 종합만족도(점), 입양사후서비스 사업 만족도(점),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와 같은 정성지표 외에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 중 "중장년 고용률(40~60대)(%),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15~64세 고용률(%), 전세임대 공급량(만호),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하향지표)" 등은 저출생·고령화 또는 청년세대 대응과 무관하거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직접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추가하거나 보조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방안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상사업 선정, 재정투입 규모, 성과계획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전체 재정사업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의 작성 시기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연도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된 주요 재정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해당 재정사업 규모는 정부가 차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일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합산한 것임.

즉, 2026년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70.4조원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중 일부 금액이므로, 전체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규모와 성과계획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10) 「2026년 성과계획서 총괄편」, p. 12.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정량지표로 설정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재정사업의 목록과 규모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하고는 있으나, 그 작성 시점이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다음연도 하반기)이므로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2025년 예산 기준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확정 단계 및 시기]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예산안 국회 제출	⇨	국회 예산안 의결	⇨	각 부처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규모 취합	⇨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및 예산 규모 확정
2024.8.		2024.9.		2024.12.		2025.1.~2025.4.		2025.9.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거 시행계획 발표 및 예산규모 확정시기를 고려해보았을 때, 2026년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규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중반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발표시기 및 예산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발표시기	2021.5.24.	2022.8.10.	2023.7.24	2024.11.18	2025.9.30.
예산규모	72.7	78.9	78.9	83.2	88.3

주) 예산 규모는 중앙부처 시행계획 상의 사업 예산액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규모임
자료: 2021~2025 중앙부처 시행계획

이처럼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규모를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으로 인해, 성과를 환류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연계된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정사업의 현황을 파악·관리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 심사 시 관련 재정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사업 분석

(가) 저출생 반등 사업

첫째,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돌봄수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2026년 지원대상 가구 및 추가지원 확대에 상응하도록 사업 추진 전 아이돌보미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시 사용하는 이용료 중 일부 금액을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대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11] 2024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71.6%에 그쳤음.[12]

[돌봄수당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2024	384,222	384,222	384,117	384,117	-	384,117	275,212	-	108,905	71.6
2025.8.	384,637	384,637	294,140	294,140	-	294,140	232,031	-	-	60.3
2026	504,892	-	-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11) 2025년 6월말 기준 9,475가구가 대기 중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27.3일 동안 대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매칭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대기일수
2023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6.	106,963	95,865	89.6	9,475	27.3

주 1)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및 단기, 기관연계 포함
2)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 수
자료: 성평등가족부

12)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8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실집행률이 제고되었고(10.7%p), 동일 추세로 집행시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약 91%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한편, 돌봄수당 지원 가구는 저출생 대응 등 정책 목적 추진에 따라 2026년 12만 6천 가구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6천 가구 증가하였으며, 야간·긴급돌봄 요금지원 등 신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나,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5년 6월 기준 29,409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여, 지원대상 확대에 비해 인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13)]

따라서 2026년 확대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과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유입을 촉진하고, 잦은 퇴사 등 인력 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보완하는 등 2026년 사업준비 단계에서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부 중첩되고 중복 수급이 제한됨으로 인해 정책 수요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과거 실적 및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이하 "영아종일제")는 영아(생후 3~36개월)를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이하 "시간제")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함. 서비스 대상자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하나의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함.

13)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5년 6월말 기준 29,409명으로 전년동기(2024년 6월말 26,781명) 대비 9.8% 확대되었으며, 매달 9~10%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는 2024년말 기준(29,635명) 대비 약 10% 증가한 33,000명까지 돌보미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임.

[영아종일제 및 관련 사업 현황]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영아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 (대상)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지원)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연 2,40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사용료 중 일부를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3개월 ~ 12세 이하 ○ (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사용료 중 일부를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만 0세 ~ 2세 미만 ○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주)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으로 2023년 신설되었음

최근 영아종일제는 2023년 이후 실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말 기준 집행률은 34.4%에 불과하고, 2024년 계획가구(3,981가구) 대비 실제 지원 가구(1,025가구) 비율은 25.7%에 그쳤는데, 이는 영아종일제 이용시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제도(2023년 시행)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이용 수요가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14]

[영아종일제 집행 실적 및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가구)

연도	집행 실적							지원 현황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가구	지원 가구	비율
	예산		집행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	24,948	24,948	24,948	24,948	21,900	3,048	87.8	3,588	2,543	70.9
2023	23,059	23,059	23,059	23,059	15,781	7,278	68.4	3,508	1,707	48.7
2024	28,033	28,033	28,033	28,033	12,982	15,051	46.3	3,981	1,025	25.7
2025.8.	15,677	15,677	11.989	11,989	5,394	6,595	34.4	2,500	-	-
2026(안)	17,884	17,884	-	-	-	-	-	2,500		

자료: 성평등가족부

14)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시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시간제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 시간제를 선택할 유인이 높음.
2024년 기준 만 0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5,337명 중 214,870명(91.3%)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07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으며, 만 1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4,405명 중 241,566명(103.1%)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73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음.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등록인구보다 부모급여 사업의 월평균 지원인원이 많을 수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이와 같이 영아종일제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2026년 계획인원을 2024년 지원가구(1,025가구)의 243.9%에 해당하는 2,500가구로 계획하였으므로, 영아종일제의 수요 감소 추세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등 유사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도 계획가구 및 예산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미래세대 지원 사업

첫째, 금융위원회 소관의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종전의 청년자산형성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기여금 매칭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청년미래적금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에게 기여금의 6~1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5] 기존의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매칭 기여금 지원율을 설정하였고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대비 짧은 3년으로 설정하여, 자산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보임.

다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경우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경우 지원대상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 상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16]

청년층 내에서도 현재 구직 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17]에는 가입이 어려워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려는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과,[18] 가구소득 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세대 독립 후 부모로부터 도움을 계속 받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으므로,[19][20]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15) ① 개인소득 6,0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③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에게 기여금의 6~12%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16) 뉴시스, "소득 아닌 자산 봐야, 35년부턴 중년이냐...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불만", 2022.2.23.
매일경제, "이 나라는 청년만 힘드나... 월 70만원·5천만원 통장에 중장년층 부글부글", 2023.12.5.

17) 과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소득 신고 이력이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나, 소득신고가 없고 소득금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함.

18) 데일리안, "구직난에 청년미래적금 권하는 정부... 취준 중인데 적금이요?", 2025.9.8.

19) 서울신문, "청년도약계좌도 부모찬스?... 월 납입액 클수록 해지율 낮아", 2024.8.27.
이데일리, "尹정부 청년도약계좌, 양극화 한계 속 종료... 미래적금 시험대", 2025.8.12.

[(참고) 금융위원회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개요]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사업 연도	2022.2.21.~2022.3.4	2023.6.~	2026.~
지원 대상	①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③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③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20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납입금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 저축장려금 지급 (최대 36만원)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납입금에 비례한 매칭형태로 기여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납입금액의 3~6% 수준)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일반형: 납입금액 6% 지급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은 납입금액 12%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미정
상품 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50만원,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기본금리 5%(최대 6.0%)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미정
기여금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매월 지급	미정
취급 은행	12개 은행	11개 은행	미정
비고	-	2년 이상 성실 납입자에 대한 부분인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제도 신설(2025.~)	2026년 6월 상품출시 예정

주)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상품출시 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20)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 현황]

(단위: 천명, 억원, 2025년 7월 말 기준)

월 평균 납입금액[1]	0~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소계
가입자 수[2]	236	133	120	130	185	131	1,036	1,971
(전체 대비 비중)	12.0%	6.7%	6.1%	6.6%	9.4%	6.6%	52.6%	100.0%
납입금액	1,676	3,082	4,462	6,409	11,875	10,329	87,751	125,584
(전체 대비 비중)	1.3%	2.5%	3.6%	5.1%	9.5%	8.2%	69.9%	100.0%

주 1) 월 평균 납입금액 = 계좌별 가입 후 경과기간에 대한 월 평균 납입금액
2) 일시납입자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우대형 상품으로 6%p의 추가 기여금을 지원할 예정인바, 중소기업 기존 취업자 등에 비해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를 우대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규 취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임.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만족하는 근로자·소상공인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형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적용하여 매월 납입금의 6%를 지급하는 반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만족하는 청년 중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3년 근속)에 대해서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적용하여 매월 납입금의 12%를 지급할 계획임.[21)]

그러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우대는 기존 취업자 또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과거 유사사업인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 요건을 충족한 이후 장기재직 유인이 사라져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22)]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취업기준 및 가입심사 절차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논의 중인 상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고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21)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우대지원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정책목적이 있음.

22) 아울러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894억 2,600만원의 청년 근속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토교통부 소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논의와 기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 간 반복 수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제 임차료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며, 당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6년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의 일종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사업(사회서비스사업)에 해당하고,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회보장사업의 변경에 해당함.

국토교통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23]에 따라 4월 30일 전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만일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되,[24] 이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 협의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25]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월세 사업이 신설된 때를 포함하여 지원 요건을 변경할 때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였는바,[26] 한

---

2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61.

26)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월세 사업 신설 협의 1회, 2024년 거주요건 완화(보증금 5천, 월세 60만→보증금

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간 반복 수혜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월세 지원 유사사업 예시]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 연령	소득 (중위소득 기준)	지원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20만원 /2년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독립가구 60%, 원가구 100%	월 20만원 /2년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	19~39세	180%	월 10만원 /4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19~39세	120%	월 20만원 /2년
제주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35~39세	60%	월 20만원 /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19~45세	120%	월 20만원 /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시비)	19~39세	120%	월 10만원 /5개월
울산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15만원 /4년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20만원 /10개월
파주시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9~39세	120%	월 10만원 /1년
고성군	고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18~49세	150%	월 20만원 /1년

주) 인천시의 경우, 19~34세의 경우 국토부의 청년월세 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35~39세의 경우에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자료: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5천, 월세 70만), 거주요건 폐지, 사업기간 완화로 각각 변경 협의를 3회 진행하여 사회보장협의를 총 4차례 진행하였음.

(다) 고령화 대응 사업

첫째,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규 확충 전담 공무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따른 제도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지침과의 상충 가능성, 조례 개정 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 확보 및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조기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한시적(6개월)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 전담 인력은 지방공무원(9급 1호봉)으로 임용될 계획임.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24.4.)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027년까지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수요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 확대 추진이 지침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27)]

특히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인바,[28)]

향후 정원 확보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확보·채용 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28)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감하거나 조정하여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수급률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2022~2027 장래인구추계, 국가데이터처」에 따른 65세 인구 수 증가, 물가상승률 및 재정열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지원금 증액 등이 반영되어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9,404억 100만원(9.1%) 증액된 23조 3,38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는 3,926억 6,200만원이 추경 재원으로 감액되는 등 매년 상당한 여유 재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수급률도 예산 편성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29)30)]

[기초연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14,031	175,473	16,289,504	-	△106,478	92,859	16,275,885	16,275,264	-	621
2023	18,530,432	-	18,530,432	-	△9,786	-	18,520,646	18,190,029	35	330,582
2024	20,201,456	-	20,201,456	35	△202,486	-	19,999,005	19,608,485	80	390,441
2025.8.	21,814,577	△392,662	21,421,915	80	-	-	21,421,995	16,837,462	-	-

자료: 보건복지부

29)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기준인 70%에 맞춰 수급대상자 수를 산정하고 있음.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30) [사업대상자 수 및 실제 수급률 비교]

(단위: 만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대상자 수	예산 편성 인원	598	628	665	701	736
	실제 지급인원	597	624	651	676	집계중
수급률	예산 편성 기준	70	70	70	70	70
	실제 수급률	67.6	67.4	67.0	66.0	집계중

주) 2025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903천명(수급률 65.8%)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실제 수급률이 예산 편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액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이는 바,[31] 실제 수급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이·전용 및 불용 등 여유 재원 규모를 줄임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1)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추세 감안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실제 수급률 일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찾아뵙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거주불명자 모바일 안내 등을 통해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임.

9. 사회안전 기반 강화

가. 개 요

(1) 현 황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요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의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모두의 성장 및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 분야를 3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모두의 성장 및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① 지방거점성장, ② 저출생·고령화 대응, ③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④ 민생·사회연대경제, ⑤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세부 중점 투자방향 중 ‘촘촘한 사회안전매트’(이하 “사회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위기가구·청(소)년·여성, 자살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총 32조 5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음.[1)]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사회안전 기반 강화와 관련한 예산안은 총 12개 부처, 7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32개, 성평등가족부 22개, 경찰청 5개 순임.

예산안(계획안) 규모로는 보건복지부 24조 6,893억 6,000만원, 국토교통부 3조 2,308억 9,600만원, 성평등가족부 6,944억 5,900만원, 산업통상부 5,171억 6,700만원 순임.[2)]

문의 : 민승환 입법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안전 기반 강화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계획안)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150
2	교육부	1	171,058
3	경찰청	5	10,26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4,000
5	국토교통부	1	3,230,896
6	농림축산식품부	1	73,991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5,822
8	법무부	2	310
9	보건복지부	32	24,689,360
10	산업통상부	1	517,167
11	성평등가족부	22	694,459
12	다부처	1	2,658,526
합 계		71	32,057,007

주 1) 사업 수는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사업 수 및 예산안은 제출 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처명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 주요 정책대상별 지원강화 주요 내용

(가) 저소득층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및 농식품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23조 88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저소득층 대상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재정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2		의료급여	8,437,605	8,688,201	8,688,201	9,839,997
3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9,947	51,912	51,912	82,367
4	교육부	교육급여	160,379	165,171	165,171	171,058
5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2,744,991	3,036,823	3,036,823	3,230,896
6	산업통상부	에너지바우처	585,927	501,365	501,365	517,167
7	농림부	농식품바우처	14,800	38,100	38,100	73,991
합계			19,344,083	20,971,553	20,971,553	23,088,15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6,09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4,738원인데, 이는 역대 최대로 인상(6.51%)된 것임.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자료: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의 경우 2026년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교육급여 324만 7,369원 및 주거급여 311만 7,474원으로 결정되었음.[3)]

3)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 혹은 수급자 인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만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0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2026년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20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2026년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교육급여 (중위 50%)	2025년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026년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주거급여 (중위 48%)	20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6년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정부는 각 급여의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음.

생계급여의 경우 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②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 ③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의 소득 산정 제외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기준중위소득 인상 효과에 따라 약 8만여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생계급여 제도개선 세부내역]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1](11,499백만원), 승합화물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 완화[2](2,183백만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 완화[3](349백만원),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1,932백만원)

주 1)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 34세 이하, 6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2) (현행) 1,000cc, 200만원 미만 → 소형, 500만원 미만
3) (현행) 3명 이상 → 2명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 경우 ①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② 전국 2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급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를 2025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7,000원에서 39,000원(4.7~11.0%) 인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였음.

정부는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5]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역시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약 73만 6,000명)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월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등 분야별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나) 장애인

정부는 주요 정책 지원대상인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강화 및 고용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총 6개 사업에 7조 3,61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장애인 대상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재정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356,687	402,962	427,853	481,049
2		장애인활동지원	2,280,510	2,532,340	2,532,340	2,810,159
3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	232,654	232,654	250,254
4		장애인일자리지원	222,695	234,510	234,510	254,638
5		장애인연금	893,061	884,658	884,658	907,129
6	다부처	장애인사업군	2,444,940	2,514,438	2,514,738	2,658,526
합계			6,391,940	6,801,562	6,826,753	7,361,75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의미함.

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수당 및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17개소의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시간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임.

장애인 고용지원 측면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2,300개 확충한 3.6만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장애인 정책 주요 내용]

○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2,222→2,848억원)
-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3배 상향(월 5→15만원)하고, 지원단가 인상(일반지원의 150→170%)
-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신규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17개소, 59억원)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1,080→1,200시간)
- 발달장애인・장애아 가족 휴식프로그램 확대(1.5→1.9만명)

○ (소득)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확충(3.4→3.6만개)하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인상(월 10→13만원)하여 소득기반 확보
-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한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확대(3→5개소)
* 예: (기존) A4용지 등 → (개선) 운동매트,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등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다) 한부모가정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보호 강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 확대와 돌봄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을 편성하였으며, 총 2개 사업에 5,97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부모가정 대상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재정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17,645	552,833	552,833	572,246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22,464	23,203	23,203	24,972
합계			540,109	576,036	576,036	597,21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현행 63%에서 65%로 상향하여 약 1만 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조손가족과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추가 양육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임.

또한 한부모가정의 맞춤형 보호 강화를 위해 미혼모·부 및 조손가정의 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센터를 6개소 추가 지정하고, 한부모복지시설 입소가족의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임.

[한부모가족 정책 주요 내용]

○ (양육비) 한부모 양육비(월 23만원)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 65% 확대하여 1만명(25→26만명) 추가 지원(194억원 증액)
-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 확대(월 5→10만원)

○ (돌봄) 미혼모·부, 조손가정에 출산·양육 등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소 추가 (6억원 증액)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 인상(월 5→1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라) 위기가구, 청년·청소년, 여성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청소년・여성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을 편성하였으며, 총 49개 사업에 7,95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기가구, 청년·청소년 및 여성 대상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재정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358,486	350,109	373,007	405,254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AI 복지 기반 구축	-	-	-	500
3		AI 복지・돌봄혁신	-	-	-	5,870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긴급돌봄	2,548	3,500	4,148	4,240
5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686	17,544	17,544	17,574
6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31
7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638	4,261	4,261	5,909
8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4,373	46,903	46,903	56,621
9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4,760	49,058	49,058	52,369
10		공적 입양체계 관리 운영	2,005	3,570	3,570	4,720
11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730	1,602	1,602	3,567
1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6,427	28,038	28,038	31,092
1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45,371	36,283	36,283	34,068
14		가정위탁 지원 운영	6,418	5,706	5,706	5,701
1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3,694	31,347	31,347	36,625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6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2,885	6,620	6,620	7,508
17		민간사회복지 육성지원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	-	-	-	4,974
18	성평등 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	-	-	474
19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1,590	1,590	1,590	2,412
2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쉼터(급식비)	3,360	3,422	3,422	4,106
2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급식비)	161	164	164	197
2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급식비)	-	-	-	414
23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급식비)	8,327	7,741	7,741	9,289
2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 마을 운영(급식비)	147	113	113	135
25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사업비(급식비)	198	370	370	444
26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	-	-	700
2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	-	800
2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지역주도형 직업교육훈련	-	-	-	9,935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29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새일센터운영지원	28,017	28,730	28,730	32,436
30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새일여성인턴	23,642	28,619	28,619	28,619
31		양성평등문화확산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	-	-	663
32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180	300	300	300
33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	529	529	229
3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475	3,269	4,359	4,555
35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613	712	712	1,115
36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237	265	265	265
37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	-	153
37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체계구축	747	831	831	831
39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4,662	4,195	4,195	4,991
4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 개발(R&D) -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	1,000	1,000	1,000
41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R&D)	-	-	-	3,00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4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방지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체계 운영	1,500	1,500	2,796	1,150
43	법무부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딥러닝기반 위변조 동영상 분석기법 일반연구비	-	95	95	95
4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AI기반 첨단영상분석시스템	-	215	215	215
45	경찰청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R&D) -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개발	-	2,700	2,700	3,600
46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 -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수사지원	297	500	600	1,012
47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 - 디지털증거 분석실 포렌식 장비 구매	5,088	4,871	5,321	5,298
48		사이버수사역량강화 -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고도화	-	90	500	90
49		사이버수사역량강화 - 디지털성범죄위장수사지원	147	152	152	268
합계			672,610	676,514	703,406	795,61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단전·연체 등의 정보를 AI로 분석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려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위기가구 정책 주요 내용]

○ (생필품) 최초 방문시 기본 생필품(2~3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시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하는 신규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신설(130개소)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053억원)
○ (사각지대) AI 기반 위기가구 선제발굴 시범사업(AI콜을 통해 고위험가구 선별)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②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으로는 연 200만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6] 시행 지역을 2025년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사전훈련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③ 여성 대상 사업으로는 새일센터를 통해 지역주도형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스토킹 피해자용 안심장비(호신용 스프레이 등)를 보급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할 예정임.

[청년·청소년 및 여성 정책 주요 내용]

○ (청년·청소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대상 확대(4→8개 시도)
- 가정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사전훈련(3개소)을 신규지원, 인문·문화 등 신규청소년 그룹활동 지원(1,020팀)
○ (여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일센터 지역주도형 직업훈련 신설(99억원), 호신용 스프레이 등 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보급
-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7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이 외에도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등 새로운 수법을 포함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탐지·피해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개소 확대 및 인력 보강을 위해 2025년 대비 4억 300만원(56.6%) 증액된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7]

6)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음.

7)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개소→16개소로 확대 및 개소당 인력 2명→3명 증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해성 딥페이크 변환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변환억제 기술 및 플랫폼 연구·개발 등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R&D)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찰청은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200만원(100.2%) 증액된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마) 자살위험군

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8]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에 총 7개 사업, 2,14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살위험군 대상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재정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및운영 (손익) -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1,853	2,268	2,268	2,626
2		나주병원 병원관리및운영 - 호남권트라우마센터(나주)	498	620	620	954
3		부곡병원 병원관리및운영 - 영남권트라우마센터(부곡)	470	696	696	882
4		공주병원 병원관리및운영 (손익) - 충청권트라우마센터(공주)	368	626	626	764

8)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3.2명으로, 2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자살률은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또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음(「한국의 자살률, OECD 1위, 국회도서관 Data+, 2025-15호, 2025.8.4.)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당초)	2025년 추경(수정)	2026년(안)
5		춘천병원 병원관리및운영 (손익) - 강원권트라우마 센터(춘천)	208	487	487	533
6		정신건강 증진사업	126,098	131,796	131,796	137,712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50,947	56,184	58,730	70,797
합계			180,442	192,677	195,223	214,26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전담인력을 607명 추가 확충하여 총 1,275명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기준을 폐지[9]함으로써 고위험군 중심의 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이에 더하여 자살시도자의 가족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1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정서지원·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자살위험군 정책 주요 내용]

○ (자살위험군)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현행)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개편) 소득요건 폐지

-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81억원)하고, 신규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신설

* 상담, 상속·시체검안 등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등 경제 지원

○ (트라우마) 산불 등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58억원) 뒷받침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9) (현행)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개편) 소득요건 폐지

10) 상담, 상속·시체검안 등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등 경제 지원

나. 검토의견

(1)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합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첫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은 실질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위임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매년 ①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수준과 ② 수급자 선정 기준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를 모두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①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

다만, ②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최저보장수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 수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위임하고 있음.[12]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하한 관련 내용	상한 관련 내용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없음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3항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상	없음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없음
주거급여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상	없음

자료: 국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에 더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인(기재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 차관 등)과 위촉직 위원 10인(전문가 5인, 공익대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최저보장수준 및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 의무지출 항목 등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 심의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영향력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둘째, 2026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향후 의무지출 소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급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저소득층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를 제시하였음.

주된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며,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7~11%

상향 조치하고, 교육급여는 고교생 교육활동지원비를 12% 인상하는 등 평균 6% 인상할 계획임.[1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확대 내용]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원 초과(195.1 →207.8만원)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200개소) 등 의료급여 대폭 확대(8.7→9.8조원)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주거・교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7~11% 상향(+1.7~3.9만원/월), 고교생 12% 인상(+9.2만원) 등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초등생) 연 48.7→50.2만원, (중학생) 연 67.9→69.9만원, (고교생) 연 76.8→86.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확대 기조로 수급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요되는 재정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실제 2025년 국회에 제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무지출의 2026년도 전망치는 22조 4,665억원으로, 작년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무지출 소요액인 21조 8,382억원보다 6,283억원 증가(2.9%)하였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생계급여	75,411	84,900	95,769	112,059	118,400		11.9
		84,900	91,727	95,373	104,621	107,421	6.1
의료급여	89,377	86,882	89,648	89,648	89,648		0.1
		86,882	98,400	105,002	112,010	115,694	7.4
주거급여	27,424	30,368	30,848	31,336	31,831		3.8
		30,368	32,309	34,363	36,553	37,233	5.2

13) (초등생) 연 48.7→50.2만원, (중학생) 연 67.9→69.9만원, (고교생) 연 76.8→86.0만원

(단위: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교육·해산·장제급여	2,030	2,118	2,117	2,119	2,124		1.1
		2,118	2,229	2,265	2,304	2,342	2.5
합 계	194,242	204,268	218,382	235,163	242,003		5.6
		204,268	224,665	237,003	255,488	262,690	6.5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9.2.)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5.9.3.)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기조에 따라 수급가구 역시 2016년 103만 5,435가구에서 2025년 9월 기준 198만 3,787가구로 94만 8,352가구(91.5%)가 증가하였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35,435**	**1,032,996**	**1,165,175**	**1,281,759**	**1,459,059**
생계급여	808,575	822,417	837,310	861,409	923,873
의료급여	85,189	84,481	97,224	105,373	107,161
주거급여	13,420	13,165	136,222	236,643	358,891
교육급여	128,251	112,933	94,419	78,334	69,134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합계	**1,637,569**	**1,699,497**	**1,788,309**	**1,884,089**	**1,983,787**
생계급여	1,081,655	1,157,750	1,200,418	1,268,179	1,367,343
의료급여	98,494	81,897	86,777	85,380	83,330
주거급여	394,210	408,125	452,391	484,953	489,207
교육급여	63,210	51,725	48,723	45,577	43,907

주 1) 출처: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2) 본 통계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통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는 국가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나 다른 지방재정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최근 4년간 급여별 재원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국비 (보조율)	지방비
생계급여	5,654,702		6,328,738		7,238,690		9,109,990	
	4,653,562	1,000,140	5,261,080	1,067,658	6,012,456	1,226,234	7,539,428	1,570,562
	82.31%		83.13%		83.06%		82.76%	
의료급여	10,210,767		10,801,713		12,026,791		11,761,563	
	7,678,691	2,532,076	8,121,437	2,680,276	9,096,067	2,930,724	8,935,505	2,826,058
	75.7%		75.7%		75.7%		75.7%	
주거급여	2,513,831		2,733,548		3,111,038		3,329,032	
	2,020,263	493,568	2,207,925	525,623	2,512,828	598,210	2,689,026	640,006
	82.31%		83.13%		83.06%		82.76%	
교육급여	124,629		146,403		183,176		189,736	
	102,513	22,116	121,763	24,640	154,473	28,703	158,230	31,506
	82.31%		83.13%		83.06%		82.76%	

주) 추경포함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확대를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의 개선, 수급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정책 목표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첫째,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신규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탈수급 유인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생계급여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4] 이를 고려할 때 생계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 외에도 이들이 탈수급·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평균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과 중복되어 일부 취약계층이 오히려 다른 복지사업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일자리 참여 시 급여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가 실제 취약노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생계급여 수령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지원 현황]

사업명	지원대상자(지원조건)	급여 수급자 제외 사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일부 만60세)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두 제도간 목적 차이로 인한 지원 제외 -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 (노인일자리) 근로활동의지가 있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보전 *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일자리 참여 시 급여보장이 중지될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시 그만큼의 기존 참여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음
긴급복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에 대해 중복지원 제한 * (생계급여⇔긴급생계지원, 주거급여⇔긴급주거지원, 교육급여⇔교육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정부는 노일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5년 110만개에서 2026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오히려 취약계층 중 수혜대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또한 생계급여의 지속적인 상향은 수급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공급 유인을 낮추거나,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잔류하고자 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음.[15]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15)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급자 중 21%

따라서 정부는 생계급여 확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되, 근로유인 저하 및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배제 등으로 인한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제도의 보충성 원칙과 자립 지원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6년 예산안 편성시 현행 고시 기준(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다 강화된 8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법령상 기준과 예산상 기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및 집행 혼선 방지를 위해 조속히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50% 또는 정액(46,350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이 사업 예산안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다 강화된 80만원을 적용하면서 일률적으로 50%의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기준과 예산 편성 기준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전 고시 개정 후 예산 변경으로 인해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등에 따른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고시와 다른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에 혼선 방지를 위해 예산 심의를 고려하여 조속히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사업관리체계 개선 필요

첫째, 성평등가족부의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경우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이 분리 편성되지 않아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향후 고용유지 실적에 따른 지원액 조정 등 환류 과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분리하여 추계·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이며,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1인당 460만원 한도로, 인턴 연계 기업에 3개월 동안 월 80만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함.

인턴 종료 후에는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기업(80만원) 및 개인(60만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지급하고, 12개월 경과시 기업에게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2차로 지급함.[16)]

2026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 인원인 7,777명에 1인당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286억 1,900만원(7,777명×46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연계인턴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많은 10,000명 내외의 실적을 보이는 반면,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인원은 5,000명 내외로 인턴채용지원금의 부족액을 고용유지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임.[17)]

그러나 인턴채용지원금은 직접적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고용유지장려금은 기업과 개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두 항목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예산이 통합 편성되어있어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새일여성인턴의 취업률은 90%대 중반으로 높지만, 6개월 고용유지율은 70%대, 12개월 유지율은 50~60% 수준에 그쳐 단기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장려금을 인턴채용지원금과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고용유지 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차 이용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에 유리하나 일부의 부적정·과다 이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업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기준과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2025년 기준 지원금 현황>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시)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시점	12개월 시점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40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17) 2024년 기준으로 7,777명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인턴채용지원금은 49억 1,520만원이 초과 집행된 반면, 고용유지장려금은 26억 1,940만원이 과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사업운영 측면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생계 곤란자를 지원하여 이른바 '장발장'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이용이 전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사업의 목적·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지자체 및 푸드마켓별로 설정한 '이용한도 내' 또는 '기부 전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도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바,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집중되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사업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 대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4)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나,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간 1:1 매칭이 필요한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실적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돌봄종사자 인원 증가 및 집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도전적 행동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1:1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실집행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당시 기준 인원 및 금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2025년 7월 31일 기준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모두 실집행률이 40%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당 지원기관 등에서 최대 수용가능 인원을 의미하는 '지원율' 역시 예산편성 인원 대비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산집행					지원인원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획[1] (a)	실적[2] (b)	지원율 (b/a)
2024	24시간 개별 1:1	17,563	17,563	8,238	-	46.9	340	214	62.9
	주간 개별 1:1	14,192	14,192	6,386	-	45	500	360	72.0
	주간 그룹 1:1	35,552	35,552	4,671	-	13.1	1,500	816	54.4
	합 계	67,307	67,307	19,295	-	28.7	2,340	1,390	59.4
2025 (7.31 기준)	24시간 개별 1:1	25,394	20,383	6,711	-	26.4	340	256	75.3
	주간 개별 1:1	17,782	14,286	5,606	-	31.5	500	400	80.0
	주간 그룹 1:1	43,986	35,644	14,412	-	32.8	1,500	1,043	69.5
	합 계	87,162	70,313	26,729	-	30.7	2,340	1,699	72.6

주 1) 예산 편성상 인원
2) 지원기관 등에서 최대 수용가능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이 실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전문수당 및 돌봄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돌봄종사자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해 처우개선(3.5%)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이용자와 돌봄종사자 간 1:1 매칭이 전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돌봄종사자 인력확보와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정책이 실제 집행률 제고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돌봄종사자 인원 확대 및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평등가족부의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사업은 청소년들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을 통한 상담,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수사 동행 등 맞춤형 피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또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사업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성착취 유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디포유스(d4Youth)’ 채널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2.8%로 조사되었음에도, 피해 발생 시 지원기관 인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경찰청(112)과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87.6%, 73.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디포유스(d4youth) 채널의 인지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인지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중	고
학교폭력신고센터(117)	73.4	70.0	76.5	73.4	73.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21.7	20.1	22.5	19.3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15.6	16.7	14.5	16.9	14.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6.9	28.5	25.5	24.2	29.6
경찰청(112)	87.6	86.9	88.2	86.5	88.7
디포유스(d4youth)	14.3	16.1	12.6	15.0	13.6
없음	9.5	10.3	8.8	10.1	9.0

주) 중복응답 포함
자료: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교육부 보도자료(2024.12.11.)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실제 접근성이 낮고, 피해 인식과 지원 연계 사이에 단절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지원센터 및 디포유스 채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한 홍보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홍보자료 개발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구독료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공모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 5명을 포함한 총 7명에 대하여 12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수행기관이 모니터링 인원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모니터링 대상 구독형서비스 및 크리에이터 조사 및 선정,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선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관련 인건비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모니터링 구독료도 12개월 구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기간만 구독하면 되므로 업무수행 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사업

가. 개 요

(1) 배 경

2025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9~2.0%의 상승률을 보이고, 고용률 또한 62.8~62.9%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음.

[2025~2029년 소비자물가, 취업자수 증감, 고용률, 실업률 전망]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	2.0	1.9	2.0	2.0	2.0
취업자 수 증감(만명)	17.5	16.0	11.4	11.6	10.8
(증감률)	0.6	0.6	0.4	0.4	0.4
고용률	62.8	62.8	62.8	62.9	62.9
실업률	2.9	2.9	3.0	3.0	3.0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의 여파로 누적된 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건설 부진·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2024년 15.9만명, 0.6%→2029년 10.8만명, 0.4%)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

[2016~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9	1.5	0.4	0.5	2.5	5.1	3.6	2.3
식료품·비주류음료	2.3	3.4	2.8	0.0	4.4	5.9	5.9	5.5	3.9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이데일리, 물가 '안정'됐다는데 왜 체감 안되나 했더니, 2025.6.18.

[2022~2040년 생산연령인구 추계]

(단위: 만명, %)

시나리오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중위추계	총인구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생산연령인구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6	58.0
고위추계	총인구	5,167	5,172	5,185	5,188	5,215	5,244
	생산연령인구	3,674	3,657	3,640	3,604	3,457	2,993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3	57.1
저위추계	총인구	5,167	5,171	5,166	5,150	5,051	4,774
	생산연령인구	3,674	3,657	3,626	3,578	3,376	2,814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8	58.9

주) 생산연령인구: 15~64세까지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야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민생회복 분야 23조 7,475억원, 소상공인 분야 2조 2,743억원, 사회연대경제 분야 1,505억원을 포함하여 총 26조 1,72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및 12대 핵심과제]

(단위: 조원)

중점투자방향	핵심과제	재정투입내용		2026년도 예산안 규모
		분야	세부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AX	산업·생활·공공 전분야 AI 도입	2.6
		기반조성	전국민 AI 붐업, GPU 5만장 조기 확보	7.5
	신산업·R&D 혁신	R&D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	35.3
		신산업	100조원+α 국민성장펀드 조성	9.1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통상대응	대미 관세협상 뒷받침	2.1
		수출지원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신설	2.2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	4.2
		탄소중립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원	3.7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K-컬처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1.8
		한류 연계 붐업	K-관광·푸드·뷰티 등 붐업	3.2
		문화향유	지방 공연·전시 순회 대폭 확대	0.7

(단위: 조원)

중점투자방향	핵심과제	재정투입내용		2026년도 예산안 규모
		분야	세부내용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거점성장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	0.9
		전략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1.0
		생활여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3.1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1.5
	저출생·고령화 대응	저출생 반등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	35.8
		미래세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7.1
		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27.5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	23.1
		장애인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확대	7.4
		한부모	한부모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6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8
		심리안정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수준 확대	0.22
	민생·사회연대경제	**민생회복**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23.7**
		소상공인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2.3**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	**0.2**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1.5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8
		고용안전망	구직촉진수당 50→60만원	13.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 예측·예방·대응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5.5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3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5.1
		전력증강	전투기·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3.2
		보훈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4.5
		실용외교	국익 연계 ODA로 개편	5.4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확대	1.0

자료: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민생회복 분야

민생회복 분야는 ①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대상 6조원 규모의 햇살론 공급, ② 신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및 기존 K-패스 환급률 상향, ③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6조 6,506억 9,500만원(38.9%)이 증액된 23조 7,475억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햇살론의 기존 5개 상품(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을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의 3개 상품으로 개편하고 취급창구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기존 K-패스 환급지원의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민생회복 분야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165,738	350,000	184,262	111.2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	30,640	-	△30,640	△100.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100,000	100,000	순증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	△56,000	△100.0
			햇살론15	90,000	-	△90,000	△100.0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237,460	527,440	289,980	122.1
	주택기금	공공주택 사업군	-	16,516,967	22,770,060	6,253,093	37.9
합계				17,096,805	23,747,500	6,650,695	38.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 분야는 ①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전바우처 25만원 지급, ②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국비보조율 상향, ③ 지역상권 혁신, 수출지원·AI교육 신설 및 온라인 진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조 8,561억 8,000만원(443.9%)이 증액된 2조 2,74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1조 1,5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4,579억 5,800만원, 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지원 및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8억 8,000만원, 고유 브랜드 보유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를 위한 6,068억 3,000만원,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상공인 분야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안전부	지특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	1,150,000	1,150,000	순증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기금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390,748	457,958	67,210	17.2
			지역상권 육성	-	37,800	37,800	순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육성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	11,360	11,360	순증
			글로벌 소상공인육성	-	9,520	9,520	순증
		소상공인 성장지원	브랜드 소상공인육성	15,000	21,000	6,000	40.0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	579,005	579,005	순증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1,540	6,825	△4,715	△40.9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디자인산업 진흥	지속가능 디자인지원	831	831	-	-
합계				418,119	2,274,299	1,856,180	443.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사회연대경제 분야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① 사회적기업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신규 도입, ② 우수 협동조합 대상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마을기업 대상 성장자금 지원, ③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증원 및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046억 9,100만원(228.5%)이 증액된 1,50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창업희망 500팀 대상 창업자금 제공 및 사회적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 매칭 등 지역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1,179억 7,200만원, 우수 협동조합(60개사) 대상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등 31억 3,000만원, 마을기업(130개사) 선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52억 5,000만원, 마을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1억 6,000만원,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13개소 지원 등을 위한 3억 6,000만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을 위한 5억 900만원, 공정거래 조사인력 증원을 위한 75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사회연대경제 분야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적기업 지원	-	28,412	85,872	57,460	202.2
	지특회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	-	32,100	32,100	순증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	1,585	3,130	1,545	97.5
행정안전부	지특회계	마을기업 육성사업	-	1,675	5,250	3,575	213.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도시재생사업 지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160	160	-	-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	360	36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	509	509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공정거래 조사인력 증원 관련 사업군	-	-	7,530	7,530	순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	12,757	14,509	1,752	13.7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중소기업간 거래형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350	507	157	44.9
		한국소비자원 출연	온라인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	-	200	200	순증
			신소조정부 운영	-	200	200	순증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환경 구축	-	72	72	순증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가격표시의무 준수 모니터링	-	100	100	순증
합계				45,808	150,499	104,691	228.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회계·기금별 편성 현황

2026년도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사업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3개 기금에 총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회계·기금별로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2,138억 2,000만원(0.8%), 특별회계 1조 7,147억 9,000만원(6.6%), 기금 24조 2,436억 8,800만원(92.6%)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나타났고, 기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복권기금 순으로 나타났음.

[2026년도 회계·기금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일반회계	15	190,804	213,820	23,016	12.1
특별회계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1,675	1,187,350	1,185,675	70,786.6
	교통시설특별회계	1	237,460	527,440	289,980	122.1
기금 (3)	주택도시기금	2	16,517,127	22,770,220	6,253,093	37.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	417,288	1,123,468	706,180	169.2
	복권기금	2	196,378	350,000	153,622	78.2
합계		30	17,560,732	26,172,298	8,611,566	4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부처별 편성 현황

2026년도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사업이 편성된 총 10개 기관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 규모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유산청 순으로 나타났음.

[2026년도 부처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1	237,460	527,440	289,980	122.1
	주택도시기금	2	16,517,127	22,770,220	6,253,093	37.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1,675	1,155,250	1,153,575	68,87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	417,288	1,123,468	706,180	169.2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1	1,585	3,130	1,545	97.5
	복권기금	2	196,378	350,000	153,622	78.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	28,412	85,872	57,460	20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	32,100	32,100	순증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3	146,000	100,000	△46,000	△31.5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7	13,107	23,118	10,011	76.4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1	831	831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	509	509	-	-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1	360	360	-	-
합계		30	17,560,732	26,172,298	8,611,566	4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민생회복 분야

(가)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약화 및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검토 필요(기획재정부)

햇살론 사업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2026년 복권기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부재정의 추가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햇살론의 정책목적이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적 금융에 지속적으로 편입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통폐합 및 전 업권에서의 금융상품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보다 용이하게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위한 2025년 예산은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925억원, 햇살론15 90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근로자 햇살론 1,750억원과 햇살론 유스 456억원이 편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었음.

이와 달리 2026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1,000억원이 편성되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3,039억원 및 햇살론 유스 461억원이 편성됨.

즉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4,031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사업은 1,82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복권기금 사업은 2,206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 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 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공급규모	2,800	6,500 (10,500)[1]	11,000 (33,300)[2]	3,000	23,300	23,300	3,000	26,300

주 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 시 햇살론15의 총 공급규모는 10,500억원임
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조 2,300억원) 합산 시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규모는 3조 3,300억원임
3) 2025년 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560억원→925억원), 햇살론유스(306억원→456억원) 증액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2] 정부재정 투입의 확대로 인해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기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3]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4. 상반기 (A)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025. 상반기 잠정 (B)	1/4 분기	2/4 분기 잠정	증 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18.5	21.2	22.2	12.6	5.3	7.2	6.2	3.4	14.9	6.9	8.0	2.3	18.4
일반은행	13.2	13.6	14.8	7.8	3.4	4.3	4.9	2.2	9.4	4.2	5.3	1.6	21.9
시중은행[주]	12.0	12.2	13.0	6.7	2.9	3.8	4.4	2.0	8.4	3.8	4.7	1.7	26.0
지방은행	1.2	1.1	1.2	0.7	0.4	0.4	0.4	0.1	0.6	0.3	0.4	△0.1	△11.8
인터넷은행	0.08	0.4	0.6	0.3	0.2	0.2	0.2	0.1	0.4	0.2	0.2	0.1	13.7
특수은행	5.3	7.7	7.4	4.8	1.9	2.9	1.3	1.2	5.4	2.7	2.7	0.6	12.7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5.8.22.

2) 뉴시스, “4대 금융”, ‘역대 최대’ 실적 행진... 상반기 10조 순익, 2025.7.26.
아시아경제, “구조조정 통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2,570억 흑자전환”, 2025.8.29.

3) 햇살론 상품의 당초 취지는 제도권 금융사의 여신 행위로부터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역시 예대마진차 등을 통한 이익 확대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이 필요함.

한편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햇살론은 기존에는 민간 및 정부 재원을 함께 활용하였으나, 2026년도부터 민간재원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복권기금은 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신용·소득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신규상품햇살론 특례보증(舊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통합)을 집중 지원하게 됨.

기존의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민간 재원) 및 한시적(2024·2025년)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고 있음.

이와 달리 통합된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즉 현행 2단계 구조 하에서 정부재정은 햇살론15 일부와 햇살론15로도 구제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한정하여 소액의 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투입되었던 것과 달리,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는 정부재정만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지원이 수행되어 정부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은 대출액에 대해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거치기간 동안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거치기간이 종료된 2027년부터 대위변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및 햇살론 특례보증 비교]

구분	현 행		변 경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목적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당초 1,400만원이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최대 1,000만원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
보증 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 금리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이내*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보증 재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10,500억원) × 사업손실률(13.7%) × 보증비율(100%) = 1,448억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2,800억원) × 사업손실률(33%) × 보증비율(100%) = 925억원	(2026년 기준) 대출공급액(23,300억원) × 사업손실률(17.3%) × 보증비율(100%) = 4,039억원
예산	(2025년 기준) 1,448억원 (일반회계 900억원 + 금융회사 출연금 548억원)	(2025년 기준) 925억원 일반회계 925억원	(2026년 기준) 4,039억원 (일반회계 3,039억원 + 복권기금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신규 정액패스 제도 도입 관련 예산 추계 시 면밀한 검토 필요(국토교통부)

정액패스 제도 도입으로 기존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서 정액패스로 이동하는 가입자 수 추계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액패스가 추가 도입되는 경우 월 이용횟수에 따라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를 계산하면, 2026년 수치를 기준으로 일반과 청년 모두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액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계산됨.

[기존 K-패스 vs 정액패스 이용혜택 비교]

구분	유형	회당 요금 (원/회)	할인율 (K-pass, %)	이용횟수 (회)	할인규모 (원)	결론
일반	K-패스	1,591	20	49	15,592	49회 이상 사용시 정액패스 구입이 유리함
	정액	62,000원 이상 이용시 할인율 100%			15,959	
청년	K-패스	1,630	30	48	23,472	
	정액	55,000 이상 이용시 할인율 100%			23,240	

주) 회당 요금은 2026년 정부 예산안 단가를 참조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재 K-패스 가입자 실적을 보면,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2025년 1월 26.2만명에서 2025년 7월 66.3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월 9.27%에서 7월 17.66%로 증가하였음.

[K-패스(정액패스) 가입자 수 추정]

(단위: 명, %)

시기	15회 미만	49회 이상 (A)	실가입자	전체 가입자수 (B)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 (A/B)
2025.1	952,293	**262,068**	1,875,823	2,828,116	**9.27**
2025.7	1,375,715	**663,382**	2,379,733	3,755,448	**17.66**
2025.12(추정)	1,728,567	**833,975**	2,799,658	4,528,225	**18.42**
2026.7(추정)	-	**1,028,662**	-	5,366,000	**19.17**
2026.12(추정)	-	**1,244,573**	-	6,247,000	**19.92**

주 1) 2025년 12월 가입자수 추정치는 2025년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2026년 7월과 12월 가입자수 추정치는 2026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가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실적(17.66%)과 2026년 예산안의 추정치(19.17%)를 바탕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예산안을 산출하면서 K-패스 이용자 중 기존 환급사업이 유리한 이용자의 비율이 연평균 80.83%로 가정하였음. 이는 가입자 중 19.17%(100% - 80.83%)의 이용자는 정액패스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함.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19.17%)을 고려하여 정액패스 가입자 수를 추정하면 2026년에 약 83.4만명에서 124.4만명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평균치는 약 103만명임.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정액패스 연평균 가입자 수 177만명보다 적은 수치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K-패스에서 정액패스로 이동하려는 이용자의 이용패턴,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등 유사 제도로부터 이동하는 이용자, K-패스 이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 이용자 등을 감안하여 정액패스 이용자를 추정하였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가입자수 평균치에서 추가 70만명을 합산하였음.

비록 2026년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부터 이동하는 가입자 수 등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요인이 존재하나,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입자 수 177만명은 2025년 7월 기준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 수 66만명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 83만명을 모두 흡수한 숫자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이고, 정액패스 사용자 예상 비중을 기초로 추정한 103만명과 비교할 때 41%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다 추계 소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액패스 제도 도입에 따른 패스별 이용자 수, 유사제도 이용자 등을 감안하여 예산 추계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공적주택의 성과관리를 위한 주택공급 실적 집계방식 검토 필요(국토교통부)

공적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택공급계획과 실적의 판단 기준(시점)을 우선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9월에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62번 과제는 "공적주택 공급"과 관련이 있음.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청년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과 적은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등 공적주택을 "5년 동안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123대 국정과제 中 일부]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 과제목표
○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주요내용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 기대효과
○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주택 공급 계획과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공적주택 공급계획(목적)과 공급실적(결과)를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계획과 공급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

주택은 건설/매입 등 공급방식에 따라 사업개시부터 주택공급까지 시차가 다양하고,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주민 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함.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그 기간이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주택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계획/실적의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할 경우, 주택분양 또는 임차를 기다리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이 각각의 시점마다 실적으로 계산되는 등 중복 계산의 우려도 있음. 이는 공적주택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준 일원화가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그런데 현재 주택도시기금 세부사업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실적의 판단 기준(시점)이 사업별로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임.

예를 들면, ‘공공임대 융자’와 ‘통합공공임대 융자’ 등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되거나 착공되는 시점을 공급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등 사업은 매입시기에 공급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특히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 사업은 해당 연도 매입이 개시된 주택을 공급물량으로 잡고 있는데, 기축은 1년 내 구입·공급이 완료되는 반면, 신축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세부사업에서 같은 시점에 공급실적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이 임차인에게 인도되는 체감 시점은 상이함.

[주택공급 사업절차에 따른 세부사업별 공급실적 판단 시점]

사업절차(시점)	해당 시점을 공급실적으로 판단하는 세부사업
사업개시를 위한 출자	임대리츠 출자
사업승인, 착공 등	공공임대 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통합공공임대 융자, 분양주택 융자
매입 등 약정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전세임대(융자)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각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공적주택 공급계획/실적 시점의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분야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관련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후속사업으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되었는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확정 후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대상이 축소(매출액 3억원 이하→1억 400만원 미만)되고 지원금 역시 축소(50만원→25만원)되어 관련 예산 역시 1조 5,660억원에서 5,790억원으로 사실상 감액 편성되었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경영안정 바우처 비교]

구분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1조 5,660억원 (2025년 제1회 추경)	5,790억원 (2026년 본예산)
사용처	공과금(전기・수도・가스), 4대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차량연료비(추가), 통신비(추가)	좌동
대상·단가	❶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❷ 지원금: 50만원	❶ 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❷ 지원금: 25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10일 기준으로 322만명이 1조 6,100억원을 신청하였고 실제 지급은 272만명에게 1조 3,608억원이 지원되었음.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경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의 소상공인 23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81만명의 소상공인은 2025년에는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2026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원액이 절반으로 축소됨.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4]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규모의 적정성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국회의 계획안 심사 후 확정된 사업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의적

4) 노컷뉴스, “소상공인 안전망 강조 중기부, 관련 예산은 ‘찔금’ 증액”, 2025.9.3.

으로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 이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 국회 심사내역과 달리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다수 있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매출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국회 심사를 거쳤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다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2차례 확대한 바 있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2차 공고 (2024.2.15.~7.7.)	3차 공고 (2024.7.8.~9.1.)	4차 공고 (2024.9.2.~12.31.)
매출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주요 변경 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000만원 이하 업종제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매출기준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국회 심사를 거쳤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한 바 있음.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 공고 (2025.2.10.~5.19.)	2차 공고 (2025.5.20.~)
매출기준	1억 4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소급 지원	-	기존 신청자 중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4만개사) 지급 전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경우, 당초 사용처를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및 4대 보험료로 한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통해 확정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처에 차량연료비와 통신비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관련 수도권-비수도권 차등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은 2026년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6년 예산안의 지원기준을 보면, 수도권에 3%, 비수도권에 5%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어 비수도권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발행주체 유형	국비지원율	정부지원 발행규모	교부(예정)액
불교부단체	-	미정	미정
수도권	3%	미정	미정
비수도권	5%	미정	미정
인구감소지역	7%	미정	미정
전체	4.8%[1)]	240,000	11,494[2)]

주 1) 지원대상 전체 발행주체 평균 국비지원율
2) 2026년 목표 지원 발행규모 24조원에 평균 국비지원율 4.8%를 적용하여 교부(예정)액 도출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시도 단위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발행주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5)]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대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보다 낮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6)]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단순히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수도권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2025년 8월 26일 개정(2026.1.1.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 역시 제15조제6항에서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명시[7)]하고 있음.

---

5) 같은 수도권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바, 현 기준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68.2인 A시와 24.0인 B군에 동일한 3%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실제로 수도권 지자체 A군의 재정자립도는 24.0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자체 B시의 재정자립도는 43.9 수준임.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7%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음.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참고로, 현재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계법령에 추가지원의 근거가 명시(「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제6항)에 되고 있고,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③ 청년순이동률, ④ 주간인구, ⑤ 고령화 비율, ⑥ 유소년 비율, ⑦ 조출생률, ⑧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다)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AI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AI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의 1단계 기초 교육의 경우, AI 입문자를 위해 업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공통교육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활동에 즉시 활용가능한 실습 중심의 업종별 특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소상공인에게 AI 신기술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경영활동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기초 공통교육(예시)]

구분	지원 내용
마케팅 자동화	· AI 답변·이미지·영상 등 콘텐츠 결과물을 사업장에 접목하는 실습 * (예시) 리뷰 답글 작성, 홍보이미지, 음식점 메뉴판 제작 등
업무 효율화	· 데이터 기반 고객분석, 자동응답 기능 등으로 업무 효율화 실습 * (예시) 챗봇 응답 자동화, 예약공지, 리뷰 요약 등
상품/서비스 기획	· AI도구를 활용한 트렌드분석, 경쟁사 분석 등으로 상품/서비스 기획 실습 * (예시) 신제품 개발, 상품조합/패키지 구성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특화교육(예시)]

구분		목표	강의내용	협업(안)
서비스	외식	고객유입을 통한 매출향상	리뷰 분석, 자동댓글 메뉴판 제작, SNS 홍보 등	배민, 네이버, 카카오, 미리디 등
	도소매	판매채널 확대, 광고 효율	검색 추천 알고리즘 POS 데이터로 매출 분석	네이버, 쿠팡, 현대홈쇼핑 등
	미용	예약률, 재방문율 증가	예약 챗봇 설정, SNS	네이버, 카카오 등
제조	B2C	생산, 재고 효율화	판매데이터 기반 생산 예측	KT 등
	B2B	납기관리	과거 납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일정 계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AI 공통교육 및 특화교육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아직 AI 교육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8]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운영기관별 편차 발생 및 낮은 교육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AI 활용 교육의 경우, 2025년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2025년 2억 3,000만원)을 통해 분야별 현장맞춤 실습형 신규과정을 13개 개발하고, 직무별로 AI 이해-적용-내재화의 단계별 AI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 AI 연수 교육과정 로드맵(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기초 공통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의 구체적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협업기업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AI 활용교육 대비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기관 선정 시 전국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소상공인 AI 기초교육의 표준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기관별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8)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심화 교육에 대한 상세 커리큘럼 등 세부 추진계획을 2025년 11월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연수사업과 달리 구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임.

한편,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① 소상공인 상생협업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에게 국비 100% 지원을 통해 업종별 AI 전문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9] ②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1만명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AI 경영지원 SW를 보급(국비 100%, 자부담 0%)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10]

소상공인연합회의 업종별 AI 전문교육의 경우, 이 사업의 기초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의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표준화된 AI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보다 지역밀착 방식으로 AI 활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SW 보급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AI 활용교육 시 교육성적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경영지원 SW 사업의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SW 보급사업으로 AI 활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사업과 보조사업간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4131-322)

(라)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의 임의 변경 유의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가 심사·확정한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의 추가할인 및 환급행사를 추진하였는데, 2026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관련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① 지류형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 할인, ② 디지털 상품권은 5% 또는 10% 할인하는 등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계획액 3,90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말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거쳐 확정(2024.12.10.)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된 것과 달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하고 결제액 환급행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1.)」을 발표하였고,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할인율 상향) 2025년 1~2월(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하였고,[11] ② (결제액 환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결제액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였는데, 1~2월(1.10.~2.10.)에는 결제액의 15%를 환급하고,[12] 3월

11) [2025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 (할인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 (할인율・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판매율을 상향(10→15%)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
-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 (할인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2025년 할인판매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739	-	70	809
5% 할인	1,135	-	-	1,135
10% 할인	-	△5	△6	△11
15% 할인	-	3,330	5,063	8,393
소계	1,874	3,326	5,127	10,3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개요]
- ○ (행사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7,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 (환급액) 170억원

(3.17.~28.)에는 결제액의 20%를 환급하였음.[13)]

참고로 2025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조 1,529억원으로, 이 중 특별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실적은 8,453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함. 특히 당초 5% 할인판매로 2조 3,000억원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특별 판매기간동안 15% 할인판매로 8,393억원을 공급하였고, 상품권 발행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5% 할인판매 관련 예산을 모두 특별할인판매기간 동안에 전액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2025.9.30. 기준)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1~2월 특별판매 기간	1~2월 특별판매 기간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3,080	739	2,341
	5% 할인	9,000	6,621	1,135	5,486
	10% 할인	-	-	-	-
	15% 할인	-	-	-	-
	소계	17,000	9,701	1,874	7,827
디지털*	비할인	-	952	70	882
	5% 할인	23,000	△0.1	-	△0.1
	10% 할인	15,000	12,329	△10	12,339
	15% 할인	-	8,248	8,393	△145
	소계	38,000	21,529	8,453	13,076
계		55,000	31,230	10,327	20,903

주 1) 온누리상품권 환불 시에는 환불액을 음의 값(-)으로 표기함
2) 디지털상품권은 결제취소 및 환불 건 발생으로 일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1~2월 결제액 15% 환급행사 시 170억원이 지급되었고, 3월 20% 환급행사 시 103억 2,000만원이 지급되어 총 273억 2,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었음.

13)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3.17.(월) ~ 2025.3.28.(금)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5,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03.2억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넘어서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가능 총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14] 실제로 당초 5% 할인판매로 2조 3,000억원을 공급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발행 소요비용이 3배에 달하는 15% 할인판매로 8,248억원[15]을 공급하는데 사실상 전액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가능규모가 약 1조 5,000억원 가까이 축소되는 결과로 귀결된 것임.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음.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7%, 10%로 설정하여 총 4조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이후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집행하여 국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 할인율 5%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의 약 3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15) 특별할인판매 기간 동안의 판매액 8,393억원에서 결제취소 및 환불 등에 따른 환급액 145억원을 차감한 수치임.

(3) 사회연대경제 분야

(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 기업 지원에도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 요건 설정 필요(고용노동부)

2025년 8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가치 평가(SVI) 탁월(3.8%)~우수(23.6%) 등급 기업이 27.4%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영향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지원에도 SVI 평가 등급 요건을 설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16]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SVI 등급에 따른 참여 제한보다 우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5년 8월말 기준 SVI 평가실적을 보면, 전체 2,811개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탁월 또는 우수 기업 수는 769개(전체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의 27.4%)로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SVI 평가 등급 양호 또는 미흡에 해당함.

[2025년 8월말 기준 SVI 등급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소, %)

기업규모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전체
30인 미만	107 (3.8)	662 (23.6)	822 (29.2)	1,213 (43.2)	7 (0.2)	2,811 (100.0)
30인 이상	48 (12.6)	186 (48.8)	87 (22.8)	59 (15.5)	1 (0.3)	381 (100.0)

자료: 고용노동부(연도별 SVI 평가 기업 누적)

16) 그러나 현재의 사업 요건 하에서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건의 30인 미만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것으로 보임.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이 저조한 30인 미만 기업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요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이 저조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되고,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도 SVI 등급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2023년 74~75억원에서 2024·2025년 16억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1.3억원으로 증가하였는바,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생애주기별 성장지원 등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주체로서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7]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지원, 판로개척 및 교육지원 등 관련 인프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6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안 증액·신규 편성 내역]

- (설립 및 운영지원) 법률·회계 등 법인 운영의 일반분야 외 조직변경·합병·해산 및 자금조달 등 문의 영역 및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현재 2개 분야(법률, 회계·세무)에 국한된 전문상시자문을 4개 분야(조직변경·합병, 자금조달 분야 추가)로 확대하여 협동조합 현장애로 해소 지원(+70백만원)
- (판로지원) 협동조합의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농협 하나로마트, 4대 생협 매장, KTX역사 등) 및 소셜커머스(11번가 등)를 활용한 온라인 팝업스토어 등 개최 확대(5회→10회) 반영(+70백만원)
-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기능별 지원을 벗어나 초기창업부터 사업 고도화 단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 컨설팅 지원에 대한 현장요구 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특화 지원사업 신규 반영(+1,320백만원)
- (협동조합 협업패키지) 돌봄, 지역소멸, 주거 등 지역현안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민간·정부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공동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지원(+90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17) (2014) 4,904개 → (2017) 10,695개 → (2020) 17,595개 → (2023) 24,378개 → (2025.8월말) 27,390개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73억 6,400만원, 2023년 75억 800만원 수준에서 2024·2025년 15억 8,0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98.1%) 증액된 3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2026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산	7,364	7,508	1,580	1,580	3,130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년 등 창업지원 사업' 등 과거 추진 사업의 실적 저조 등의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18)]

[2023~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내 용	2023	2024	2025.6.
전문상시자문	자문건수	1,353건	1,703건	1,233건
설립인가 변경행정	설립지원	922건	992건	433건
	변경행정 지원 (개시, 24.4.~)	-	343건	376건
판로지원	시장진입 지원	163개 조합	110개 조합	연말 집계 예정
	팝업스토어	130개 조합 (10회)	90개 조합 (7회)	28개 조합 (2회)
	판로지원 관련 매출	29억원	25억원	연말 집계 예정
교육	업종 특화교육	2,661명 (66개 과정)	568명 (30개 과정)	연말 집계 예정
	설립·운영 기초교육	2,102명 (38개 과정)	2,776명 (41개 과정)	785명 (41개 과정)
경영공시	공시조합 안내·검토	4,249개 조합	4,757개 조합	5,585개 조합

자료: 기획재정부

18)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핵심지표인 ‘상용근로자 수’ 관련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을 개선하고, 발행지침에 명시된 지역성, 기업성 및 공동체성 관련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측정되고 있는 ‘마을기업 고용인원’은 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음.

이 지표는 「마을기업법」의 경제적 목적[19]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공성[20]과도 밀접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026년 예산안 기준 성과지표를 보면, 3년간 평균치를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100점의 달성도가 충족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측정산식에 있어서도 ‘예산 대비 고용근로자 비율 평균’에 2026년 예산을 곱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과거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와 당해년도 지원에 따른 성과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2025·2026년 기준 성과지표 비교]

연도	2025년		2026년	
지표명	마을기업 고용인원(단위: 명)		마을기업 고용인원(단위: 명)	
항목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내용	마을기업 증가추세 및 **평균 상용근로자 수를 근거로 목표치 설정**	Σ(전국 마을기업 상용근로자 수)	연도별 예산대비 고용인원 **3년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마을기업 3년간 예산 대비 고용근로자 비율 평균×2026년 예산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 1개소당 상용근로자 수의 추세를 보면, 최소 1.70명(2021년)에서 최대 1.98명(2019년)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표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1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참고로, 「2025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침」상 일자리의 질·고용의 형평성 확대 노력은 ‘공공성’ 관점에서 운영요건에 반영되고 있음.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을기업 수(A)	1,514	1,556	1,652	1,697	1,770	1,800	1,726
상용근로자 수 (1년 이상 채용)(B)	2,925	3,077	3,219	2,888	3,171	3,189	3,167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B/A)	**1.93**	**1.98**	**1.95**	**1.70**	**1.79**	**1.77**	**1.83**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핵심지표인 '상용근로자 수'를 보다 적정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공공성 관점에서 강조되는 일자리의 질·고용의 형평성 등에 관한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을기업 발행지침'에 규정된 운영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성'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에 관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업성'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적립되는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공동체성' 관점에서는 회원 간 출자금 비율이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사업

가. 개 요

(1)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2)]

현재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음.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산재기금은 사업주만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조성되며, ① 산재보험급여지급, ② 산재예방사업, ③ 기금운영비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음.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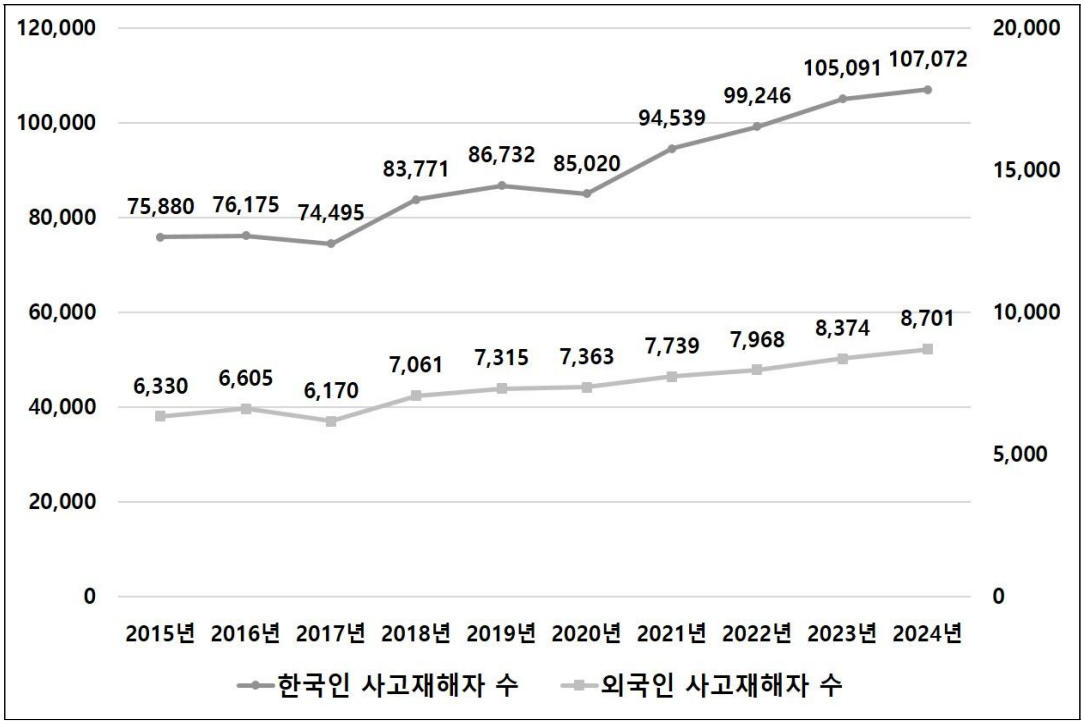
(가) 총괄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7만 5,880명이었던 한국인 재해자 수는 2023년 10만 5,091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10만 7,072명이 발생하여 2015~2024년간 연평균 3.9% 증가하였음.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에 따라 외국인 사고재해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15년 6,330명이었던 외국인 사고재해자 수는 2024년 8,701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음.

[2015~2024년 한국인 및 외국인 사고재해자 수]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반면,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한국인 사고사망자 수는 859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725명으로 연평균 △1.9% 감소하였음.

그러나 외국인 사고사망자수는 20215년 96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2024년 한국인 및 외국인 사고사망자 수]

(단위: 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률
한국인	859	894	874	857	751	788	726	789	727	725	△1.9
외국인	96	75	90	114	104	94	102	85	85	102	0.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기업 규모별·업종별 산재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사고재해자 수 및 사고사망자 수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자 수 및 사고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업종별로는 고위험업종인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 사고재해자 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2020~2024년 기업규모별·업종별 사고재해자 수 및 사고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기업 규모별	5인 미만	31,159	312	33,934	318	34,557	342	34,473	278	36,202	309
	5~49인	41,524	402	44,782	352	45,231	365	48,169	359	46,901	361
	50~299인	13,394	131	16,356	110	17,465	120	19,140	130	19,352	110
	300인 이상	6,306	37	7,206	48	9,961	47	11,683	45	13,318	47
업종별	건설업	24,617	458	26,888	417	27,432	402	26,829	356	25,152	328
	제조업	23,127	201	24,265	184	23,764	184	24,403	165	24,409	187
	서비스업	36,008	122	39,833	123	42,089	150	45,792	140	47,888	145
	운수창고 통신업	6,504	67	9,148	72	11,591	104	14,039	111	15,998	138
	그 외 업종	2,127	34	2,144	32	2,338	34	2,402	40	2,326	29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사고사망만인율과 질병사망만인율은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업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아 영세사업장 및 업종별로 특화된 산재예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기업규모별·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및 질병사망만인율]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6	0.43	0.43	0.39	0.39
기업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5인 미만**	**1.04**	**0.99**	**1.00**	**0.80**	**0.87**
	5~49인	0.49	0.42	0.42	0.41	0.40
	50~299인	0.29	0.24	0.25	0.27	0.22
	300인 이상	0.12	0.15	0.14	0.13	0.12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2.00**	**1.75**	**1.61**	**1.59**	**1.57**
	제조업	0.50	0.46	0.46	0.41	0.46
	서비스업 (기타의 사업)	0.11	0.11	0.13	0.12	0.11
	운수창고 통신업	0.72	0.72	0.97	0.99	0.99
	그 외 업종	0.32	0.30	0.30	0.34	0.24
질병사망만인율		0.62	0.65	0.67	0.58	0.59

자료: 고용노동부

(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별 산재 현황

또한 산업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로 구분될 수 있음.[3)]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를 2015~2024년의 기간 동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기타’ 등은 전체 업무상 사고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5~2024년 업무상 사고 유형별 재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화재 폭발 파열	무리한 동작	교통 사고	기타
2015	82,210	14,126	15,632	2,321	6,658	7,151	476	13,467	8,743	589	3,090	4,342	5,615
2016	82,780	14,679	15,948	2,296	7,020	7,246	416	13,260	8,541	566	2,941	3,971	5,896
2017	80,665	14,308	16,420	2,153	6,720	6,677	379	12,614	8,752	439	2,652	3,792	5,759
2018	90,832	15,558	19,077	2,171	7,315	7,237	483	13,196	9,905	569	3,834	4,724	6,763
2019	94,047	15,103	20,101	2,235	7,828	7,358	610	13,007	10,734	490	4,548	4,917	7,116
2020	92,383	14,406	20,659	2,201	7,503	7,248	535	12,894	10,374	549	4,343	5,533	6,138
2021	102,278	14,775	23,957	2,436	8,219	8,360	510	13,668	11,085	471	5,651	6,883	6,263
2022	107,214	14,387	25,084	2,801	9,283	8,252	466	13,368	10,514	505	7,187	7,951	7,416
2023	113,465	14,357	28,228	3,299	10,218	8,264	597	13,173	10,328	479	7,368	8,020	9,134
2024	115,773	14,655	28,244	3,309	11,220	7,876	538	12,941	10,611	618	8,073	8,315	9,373
연평균 증가율	3.9	0.4	6.8	4.0	6.0	1.1	1.4	△0.4	2.2	0.5	11.3	7.5	5.9

주) 기타는 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익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등임
자료: 고용노동부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20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요양기간 6개월 이상인 중증 재해자의 수가 연평균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시에, 요양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증 산재근로자의 수도 연평균 12.5% 증가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의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대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재근로자 수 비교표]

(단위: 명, %)

구분	사망자	재해자	6개월 이상	91일 ~ 180일	29일 ~ 90일	4일 ~ 28일
2020	2,062	108,379	26,695	35,481	30,662	13,215
2021	2,080	122,713	28,812	38,722	35,869	16,962
2022	2,223	130,348	29,635	39,487	37,917	20,784
2023	2,016	136,796	32,483	41,751	39,514	20,752
2024	2,098	142,771	32,982	44,142	42,077	21,189
연평균 증가율	0.4	7.1	5.4	5.6	8.2	12.5

주 1)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2) 사망자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되어 있고, 재해자에는 제외되는 사고사망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재해정도(요양기간별)를 합한 수치와 재해자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4.6%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5년 7,919명이었던 업무상 질병자는 2024년 2만 6,998명으로 약 3.4배 증가하였음.

소음성 난청 및 진폐증 등과 같은 직업병은 2015년 1,959명에서 2024년 9,291명으로 연평균 18.9% 증가하였으며, 작업관련성 질병은 같은 기간 5,960명에서 1만 7,707명으로 연평균 12.9% 증가하였음. 특히 소음성 난청은 2015~2024년 간 연평균 37.1%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신체부담작업[4]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또한 연평균 18.3% 증가하였음.

4)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은 경견완장해(經肩腕障害) 등을 포함하며, 경견완장해는 목, 어깨, 팔 부위에서 후두부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을 보임.

[2015~2024년 업무상 질병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기타	소계	근골격계질환				기타
							신체부담작업	요통	사고성요통	기타	
2015	7,919	1,959	1,125	372	462	5,960	2,180	1,009	1,883	141	747
2016	7,876	2,234	1,418	472	344	5,642	2,098	575	2,162	112	695
2017	9,183	3,054	1,553	1,051	450	6,129	2,436	891	1,747	121	934
2018	11,473	3,368	1,451	1,414	503	8,105	3,322	1,210	2,071	112	1,390
2019	15,195	4,035	1,467	1,986	582	11,160	4,988	1,914	2,362	176	1,720
2020	15,996	4,784	1,288	2,711	785	11,212	5,252	1,712	2,465	172	1,611
2021	20,435	6,857	1,506	4,168	1,183	13,578	6,549	2,158	2,900	261	1,710
2022	23,134	9,762	1,679	5,376	2,707	13,372	6,629	2,001	3,090	225	1,427
2023	23,331	8,937	1,930	5,611	1,396	14,394	7,596	2,272	2,932	210	1,384
2024	26,998	9,291	1,883	6,355	1,053	17,707	9,917	3,124	3,003	223	1,440
연평균 증가율	14.6	18.9	5.9	37.1	9.6	12.9	18.3	13.4	5.3	5.2	7.6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화로 근로자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중 업무상 질병 발생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8.7%였으나, 2024년에는 이 비율이 63.4%로 증가하였음. 특히 질병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소음성 난청 재해자의 94.3%가 60세 이상 근로자임.

[2018~2024년 질병 종류별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전 체(A)	11,473	15,195	15,996	20,435	23,134	23,331	26,998	15.3
신체부담작업	3,322	4,988	5,252	6,549	6,629	7,596	9,917	20.0
소음성난청	1,414	1,986	2,711	4,168	5,376	5,611	6,355	28.5
기타	6,737	8,221	8,033	9,718	11,129	10,124	10,726	8.1
60세 미만(B)	7,028	9,010	8,991	10,491	10,693	9,639	9,872	5.8
신체부담작업	2,366	3,401	3,543	4,050	3,711	3,890	4,128	9.7
소음성난청	267	242	229	285	314	308	362	5.2
기타	4,395	5,367	5,219	6,156	6,668	5,441	5,382	3.4
60세 이상(C)	4,445	6,185	7,005	9,944	12,441	13,692	17,126	25.2
신체부담작업	956	1,587	1,709	2,499	2,918	3,706	5,789	35.0
소음성난청	1,147	1,744	2,482	3,883	5,062	5,303	5,993	31.7
기타	2,342	2,854	2,814	3,562	4,461	4,683	5,344	14.7
업무상 질병자 중 60세 이상 비율(C/A)	38.7	40.7	43.8	48.7	53.8	58.7	63.4	8.6
신체부담작업	28.8	31.8	32.5	38.2	44.0	48.8	58.4	12.5
소음성난청	81.1	87.8	91.6	93.2	94.2	94.5	94.3	2.5
기타	34.8	34.7	35.0	36.7	40.1	46.3	49.8	6.2

주) 재해자 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3)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사업 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특징

(가) 산재기금 총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5]에 따라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2026년 산재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수입이 11조 5,062억 4,900만원, 정부내부수입 5조 297억 3,900만원, 여유자금회수가 4조 3,641억 8,500만원 계획되어 있음.

자체수입 중 부담금은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으로 구성됨. '고용주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수입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임. 부담금 수입은 2022~2026년(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2항[6]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지출계획안에 산재보험운영지원을 위한 63억원, 산재예방사업지원을 위한 250억원, 도합 313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획되어 있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00억원(46.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2026년(안)의 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증가 및 가장 큰 증가율임.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4조 8,500억원의 원금 회수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1,484억 3,900만원을 계획하여 기금부문에서 정부내부수입 4조 9,984억 3,900만원이 발생함.

---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22~2026년도 산재기금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부담금	융자원금 회수	재산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기타	소계		
2022결산	8,296,255	137,935	412,698	132,437	8,979,325	18,300	-	2,942,896	-	2,961,196	-	2,040,490
2023결산	9,105,419	153,922	789,405	125,125	10,173,871	20,000	-	2,113,636	-	2,133,636	-	2,660,272
2024결산	9,161,297	180,861	1,361,090	125,515	10,828,763	21,300	-	53,873	-	75,173	-	4,688,379
2025수정	9,834,968	225,720	988,677	136,432	11,185,797	21,300	-	5,062,349	-	5,083,649	-	7,148,672
2026(안)	10,106,235	270,068	998,974	130,972	11,506,249	31,300	-	4,998,439	-	5,029,739	-	4,364,185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2026년 산재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수정계획 대비 3,900억 2,600만원(4.1%) 증액된 9조 9,810억 9,7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융자사업비는 5,531억 8,5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5.5% 수준임.

한편 정부내부지출로는 5조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산재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4.1%) 증가하였음.

[2022~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여유 자금 운용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소계				
2022결산	7,615,355	371,963	7,987,318	-	-	2,030,000	2,030,000	425,283	-	-	3,538,410
2023결산	8,276,543	371,945	8,648,488	-	-	1,550,090	1,550,090	426,845	-	-	4,342,356
2024결산	8,657,662	472,904	9,130,566	-	-	3,300,000	3,300,000	436,204	-	-	2,725,545
2025수정	9,111,372	479,699	9,591,071	-	-	4,850,000	4,850,000	457,488	-	-	8,519,559
2026(안)	9,427,912	553,185	9,981,097	-	-	5,050,000	5,050,000	469,464	-	-	5,399,612

자료: 고용노동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지출계획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기금의 산재보험프로그램에서 수행되고 있고, 2026년 산재보험프로그램은 전년도 계획 대비 1,988억 3,800만원(2.4%) 증액된 8조 4,751억 9,3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2~2026년간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 산재보험급여는 전년도 계획 대비 1,419억 7,400만원(1.8%) 증액된 8조 1,463억원이 편성되었고, 2022~2026년간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을 지원하는 ‘산재병원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에 전년도 계획 대비 431억 3,400만원(54.2%) 증액된 1,22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2026년간 연평균 9.8% 증가하였음.

한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경우 전년도 계획 대비 4,600만원 증액된 143억 4,5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2~2026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2~2026년 산재보험프로그램 지출 및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계획	2026년 계획(안)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프로그램	6,913,531	7,507,440	7,857,775	8,276,355	8,475,193	4.6
산재보험급여	6,686,486	7,284,941	7,633,318	8,004,326	8,146,300	4.6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498	76,537	78,372	77,937	87,651	0.5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0,275	10,446	12,717	12,665	14,104	5.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663	9,181	10,648	9,757	14,146	0.2
산재병원지원	54,820	32,421	32,734	79,654	122,788	9.8
산재보험시설건립	7,136	17,714	7,023	7,253	3,119	0.4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1,021	15,047	20,059	19,114	23,191	14.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7,575	17,768	17,824	18,844	19,348	1.8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24,421	27,768	30,816	32,506	30,201	7.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636	15,617	14,264	14,299	14,345	△2.2

주) 2025년도 계획은 당초 계획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다) 산업재해예방 사업 예산 및 지출계획 분석

산업재해예방 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기금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2026년도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계획액은 전년도 계획 대비 2,127억 4,800만원(16.5%) 편성된 1조 5,05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2026년간 연평균 4.8% 증가하였음.

[2022~2026년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 및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계획	2026년 계획(안)	연평균 증가율
산재예방프로그램	1,073,787	1,141,048	1,272,791	1,293,156	1,505,904	4.8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40,512	458,237	471,652	481,792	537,093	2.3
산재예방시설융자	356,327	356,328	458,640	458,840	538,840	6.5
업종별재해예방	88,921	126,104	148,410	163,152	234,829	16.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7,623	7,639	6,124	6,324	6,017	△4.6
유해작업환경개선	76,290	80,441	80,765	75,526	75,032	△0.3
근로자건강보호	40,111	43,043	43,145	45,295	47,151	3.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392	404	381	386	386	△0.4
안전보건문화정착	28,987	32,357	32,366	35,674	34,506	5.3
산재예방시설건립	23,006	21,025	5,544	4,200	2,882	△34.6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신규)	0	0	0	0	11,142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768	8,653	7,749	7,331	7,031	6.2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850	6,817	18,015	14,636	9,441	25.8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신규)	0	0	0	0	1,554	-

주) 2025년도 계획은 당초 계획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수사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35억 3,400만원(1,362.2%) 증액된 574억 6,40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A)	2026년(안)(B)	증감	
						B-A	%
노동부	일반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직무교육	408	408	-	-
			중대재해수사과학화	986	798	△188	△19.1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875	1,044	169	19.3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158	158	-	-
			증원 수사인력지원	1,503	1,503	-	-
			근로감독제도 혁신	-	54,522	54522	순증
합계				3,930	57,464	53,534	1,362.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산재예방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서도 추진될 예정임.

[2026년 타부처·타회계 산재예방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A)	2026년(안)(B)	증감	
						B-A	%
과기부	일반	재난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2단계)	320	450	130	40.6
과기부	일반	AI기반안전관리 분야디지털트윈선도(산업안전 과제)	-	-	2,000	2,000	순증
소계				320	2,450	2,130	666
중기부	일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혁신구축지원 -선도형 제조혁신(정부일반형_부처협업형)	30,000	30,000	-	-
중기부	일반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 예방기술개발(R&D)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1,650	7,700	6,050	366.7
소계				31,650	37,700	6,050	19.1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A)	2026년 (안)(B)	증감	
						B-A	%
국토부	일반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운영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운영	6,715	6,122	△593	△8.8
국토부	일반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R&D)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10,578	22,822	12,244	115.7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13,140	20,540	7,400	56.3
소계				30,433	49,484	19,051	62.6
산업부	일반	국가산업단지관리 위탁보조	산업단지 발전기반강화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1,400	1,400	-	-
산업부	일반	제조안전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2,550	6,500	3,950	154.9
소계				3,950	7,900	3,950	100.0
합계				66,353	97,534	31,181	47.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시 2026년 산재예방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733억원 증가한 2조 72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편성된 금액은 이보다 약 4,687억원 적은 약 1조 6,034억원(고용부 산재기금 산재예방 프로그램 1조 5,509억 400만원, 타부처 일반회계 97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7)]

7)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사업이 5,06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편성된 금액은 377억원에 불과하였음.

(4)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재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 수요 중심으로의 재정지원 개편, ②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노동자 집중 지원, ③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④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있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과거 정부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당시 사고사망만인율 감축 목표를 2026년까지 0.29‰로 설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 감축 속도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상황으로 보임.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방향]



자료: 「노동안전 종합대책」

나. 검토의견

(1) 총괄분석

(가)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노력 필요

2026년도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이 증액되었으나, 단순한 사업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산재예방사업 활성화 → 산재 감소 → 산재보험급여 지급 감소 → 산재기금 건전성 강화 → 산재예방사업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2항은 회계연도마다 산재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8]의 산재예방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용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9] 산재예방사업은 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2026년 산재기금의 산재예방프로그램은 전년도 1조 3,081억 5,600만원 대비 2,127억 4,800만원(16.5%) 증액된 1조 5,05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러한 산재예방프로그램의 증가는 2021년에 2020년 대비 4,530억 9,600만원(90.7%) 증가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증가 및 가장 큰 증가율임.

---

8)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산재예방프로그램 사업의 증가는 대부분 안전보건재정지원 확대 및 안전보건기술지원 확대에 기인함.

소규모 사업장에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53억 100만원(11.5%) 증액되었고, 산재예방시설 구입 시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800억원(17.4%) 증액되었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도로 산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이 전년대비 716억 7,700만원 증액(43.9%)되었음.

[2026년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계획액		2026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안전보건재정지원	930,292	940,632	955,632	1,075,933	1,075,933	135,301	14.4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151-350)	471,652	481,792	496,792	537,093	537,093	55,301	11.5
산재예방시설융자 (융자)(4151-351)	458,640	458,840	458,840	538,840	538,840	80,000	17.4
안전보건기술지원	278,825	290,683	290,683	364,053	363,415	72,732	25.0
업종별재해예방 (4152-350)	148,410	163,152	163,152	234,829	234,829	71,677	43.9
안전인증및안전검사(4152-351)	6,124	6,324	6,324	6,017	6,017	△307	△4.9
유해작업환경개선 (4152-352)	80,765	75,526	75,526	75,526	75,032	△494	△0.7
근로자건강보호 (4152-353)	43,145	45,295	45,295	47,295	47,151	1,856	4.1
원하청산업재해통합관리 (4152-355)	381	386	386	386	386	0	0.0
안전보건문화확산	37,910	39,874	39,874	49,698	48,530	8,656	21.7
안전보건문화정착 (4154-350)	32,366	35,674	35,674	35,521	34,506	△1,168	△3.3
산재예방시설건립 (4154-351)	5,544	4,200	4,200	3,035	2,882	△1,318	△31.4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4154-357)	-	-	-	11,142	11,142	11,142	순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계획액		2026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안전보건기반조성	25,764	21,967	21,967	20,139	18,026	△3,941	△17.9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7,749	7,331	7,331	7,131	7,031	△300	△4.1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운영(정보화) (4155-351)	18,015	14,636	14,636	11,454	9,441	△5,195	△35.5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4155-361)	-	-	-	1,554	1,554	1,554	순증
산재예방프로그램 합계	1,272,791	1,293,156	1,308,156	1,509,823	1,505,904	212,748	16.5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예방 사업을 확대한 것은 노동자 보호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거부터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다소 정체 상태에 있음.

[2015~2024년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 예산 및 산재현황]

(단위: 백만원,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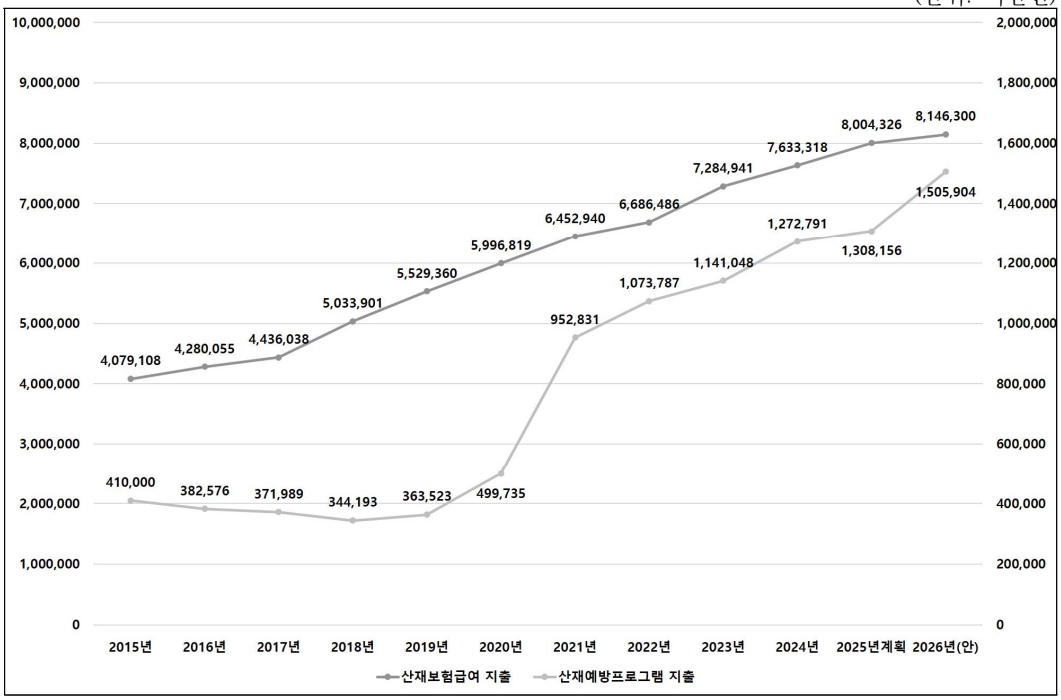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재예방 프로그램 예산	391,015	387,708 (△0.8)	376,777 (△2.8)	358,161 (△4.9)	368,206 (2.8)	513,397 (39.4)	1,030,213 (100.7)	1,092,165 (6.0)	1,198,698 (9.8)	1,285,544 (7.2)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53	0.53 (-)	0.52 (△1.9)	0.51 (△1.9)	0.46 (△9.8)	0.46 (-)	0.43 (△6.5)	0.43 (-)	0.39 (△9.3)	0.3 (-)
사고재해자 수	82,210	82,780 (0.7)	80,665 (△2.6)	90,832 (12.6)	94,047 (3.5)	92,383 (△1.8)	102,278 (10.7)	107,214 (4.8)	113,465 (5.8)	115,773 (2.0)
사고사망자 수	955	969 (1.5)	964 (△0.5)	971 (0.7)	855 (△11.9)	882 (3.2)	828 (△6.1)	874 (5.6)	812 (△7.1)	827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산재보험급여 지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도 산재보험급여 지출 계획액은 2015년도 결산 대비 약 4조 671억 9,200만원(99.7%) 증가된 8조 1,463억원이 편성되어있음.

[2015~2026년(안) 산재보험급여 및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5~2026년(안) 산재보험급여 및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보험급여	수급자 수	269,893	269,510 (△0.1)	283,514 (5.2)	297,239 (4.8)	320,184 (7.7)	350,363 (9.4)	386,260 (10.2)	390,475 (1.1)	398,324 (2.0)	405,539 (1.8)	4.7
	보험급여 지급액	4,079,108	4,280,055 (4.9)	4,436,038 (3.6)	5,033,901 (13.5)	5,529,360 (9.8)	5,996,819 (8.5)	6,452,940 (7.6)	6,686,486 (3.6)	7,284,941 (9.0)	7,633,319 (4.8)	7.3
연금	수급자 수	89,496	91,307 (2.0)	93,201 (2.1)	95,490 (2.5)	97,538 (2.1)	99,648 (2.2)	101,926 (2.3)	104,184 (2.2)	105,983 (1.7)	108,566 (2.4)	2.2
	보험급여 지급액	1,797,312	1,879,662 (4.6)	1,971,154 (4.9)	2,128,270 (8.0)	2,256,548 (6.0)	2,372,521 (5.1)	2,479,976 (4.5)	2,566,891 (3.5)	2,708,498 (5.5)	2,879,185 (6.3)	5.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재예방 사업 외에도 사업장 지도·감독, 안전문화 등과 같이 다양하고,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증가 또한 ① 산재보험 적용확대[10]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산재 수혜대상 지속 증가,[11] ② 고시금액 인상 등 보험급여 지급기준액 상향, ③ 산재보험 인지도 개선에 따른 질병신청 및 승인 건수 증가,[12] ④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 대상자 증가[13]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액과 산재 관련 실적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예방에 투자하는 지출 대비 산재 감소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4]

따라서 2026년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계획액의 증액이 단순한 사업의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산재예방사업의 활성화가 산재를 감소시키고, 산재가 감소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감소되며,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산재기금의 건전성이 개선되어 추가적인 산재예방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0) 출퇴근 재해 적용('18.1월), 소규모사업 건설 적용 확대('18.7월), 중소기업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21.6월) 적용 확대,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및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23.7월) 등

11) 적용대상자: ('22년) 20,173,565명 → ('23년) 20,637,107명 → ('24년) 21,420,560명

12) ① 질병신청건수: ('22년) 28,796건 → ('23년) 31,666건 → ('24년) 38,219건
② 질병승인건수: ('22년) 18,043건 → ('23년) 18,333건 → ('24년) 21,827건

13) 연금 수급자: ('22년) 104,184명 → ('23년) 105,983명 → ('24년) 108,566명

14) 2015~2024년간 증가하는 산재 규모에는 노무제공자 산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무제공자 외 근로자 산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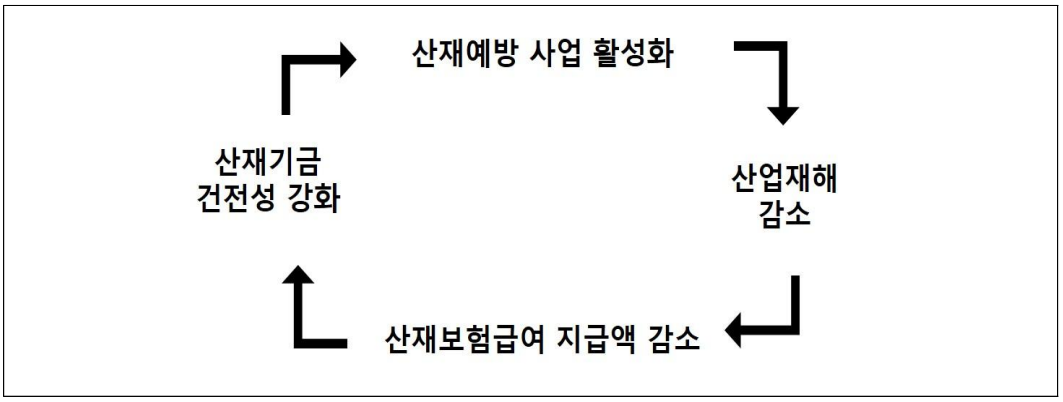
〈 2015~2024년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자 외 근로자의 산재 현황 〉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재해자 수	82,210	82,780 (0.7)	80,665 (△2.6)	90,832 (12.6)	94,047 (3.5)	92,383 (△1.8)	102,278 (10.7)	107,214 (4.8)	113,465 (5.8)	115,773 (2.0)
노무제공자	130	396 (20.46)	587 (48.2)	783 (33.4)	1,378 (76.0)	2,555 (85.4)	5,328 (108.5)	8,221 (54.3)	10,556 (28.4)	13,212 (25.2)
노무제공자 외	82,080	82,384 (0.4)	80,078 (△2.8)	90,049 (12.5)	92,669 (2.9)	89,828 (△3.1)	96,950 (7.9)	98,993 (2.1)	102,909 (4.0)	102,561 (△0.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사업 활성화 후 선순환 구조도]



(나) 산재기금 적립금 규모 및 공자기금 예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최근 5년간 산재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유자금에서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과 산재기금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적립금과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산재기금의 적립금은 전년 대비 1조 354억 2,700만원(4.6%) 증가한 27조 9,715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여유자금운용규모 또한 전년 대비 1조 354억 2,700만원(4.7%)증가한 22조 9,21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산재기금의 적립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유자금운용 수익과 함께 산재기금이 2017~2024년간 매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안정적인 수지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사회보험성 기금인 산재기금은 미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 등의 급여 지출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재기금은 타 사회보험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는 다르게 가입자 모두에게 급여(연금)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당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상이한 성격의 기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7~2026년(안) 산재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정)	2026년 (안)
전체수입(A)	7,289,479	7,995,079 (9.7)	8,067,258 (0.9)	8,287,818 (2.7)	9,527,674 (15.0)	9,047,421 (△5.0)	10,277,507 (13.6)	10,903,936 (6.1)	11,419,356 (4.7)	11,685,988 (2.3)
전체지출(B)	5,307,776	5,950,890 (12.1)	6,449,626 (8.4)	7,077,074 (9.7)	8,008,283 (13.2)	8,412,601 (5.0)	9,075,333 (7.9)	9,566,770 (5.4)	10,048,559 (5.0)	10,450,561 (4.0)
수지차(A-B)	1,981,703	2,044,189 (3.2)	1,617,632 (△20.9)	1,210,744 (△25.2)	1,519,391 (25.5)	634,820 (△58.2)	1,202,174 (89.4)	1,337,166 (11.2)	1,370,797 (2.5)	1,235,427 (△9.9)
적립금	15,847,055	17,891,244 (12.9)	19,508,876 (9.0)	20,719,620 (6.2)	22,222,203 (7.3)	22,838,565 (2.8)	24,033,966 (5.2)	25,365,343 (5.5)	26,736,140 (5.4)	27,971,567 (4.6)
여유자금운용	15,447,055	17,491,244 (13.2)	19,108,876 (9.2)	18,996,520 (△0.6)	19,652,203 (3.5)	20,808,565 (5.9)	22,483,876 (8.1)	22,065,343 (△1.9)	21,886,140 (△0.8)	22,921,567 (4.7)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400,000	400,000 (-)	400,000 (-)	1,723,100 (330.8)	2,570,000 (49.1)	2,030,000 (△21.0)	1,550,090 (△23.6)	3,300,000 (112.9)	4,850,000 (47.0)	5,050,000 (4.1)

주) 2017~2024년은 결산 기준, 2025년은 계획·2026년은 계획(안)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결국 장래 산재보험급여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여 지출의 근본적인 원인인 산재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재예방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산재예방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미래 산재보험급여 지출 압력이 심화될 수 있음.

2026년 산재기금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프로그램 사업비 중 약 35.8%가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계획액 중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7~2026년(안) 산재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정)	2026년 (안)
산재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371,989 (100.0)	344,193 (100.0)	363,523 (100.0)	499,735 (100.0)	952,831 (100.0)	1,073,787 (100.0)	1,141,048 (100.0)	1,272,791 (100.0)	1,308,156 (100.0)	1,505,904 (100.0)
산재예방시설 융자	166,054 (44.6)	122,759 (35.7)	106,654 (29.3)	102,758 (20.6)	319,051 (33.5)	356,327 (33.2)	356,328 (31.2)	458,640 (36.0)	458,840 (35.1)	538,840 (35.8)
융자제외 사업비	205,935 (55.4)	221,434 (64.3)	256,869 (70.7)	396,977 (79.4)	633,780 (66.5)	717,460 (66.8)	784,720 (68.8)	814,151 (64.0)	849,316 (64.9)	967,064 (64.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산재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자본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산재예방을 하고 추후 자금이 회수되어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2023년에는 융자지원 사업장의 지원 1년 전후 사고재해자 수가 33명 증가하고 사고재해율도 0.03%p 증가하는 등 시설교체를 위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26년에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강화·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R&D 신규 추진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이나, 미래 산재보험급여 지출 증가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산재기금 적립금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3~2026년(안)의 기간 동안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익률이 낮은 공자기금 예탁 규모의 확대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를 의미하므로, 향후 기금 사업 확대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의 수익성 관점도 고려하며 균형적인 시각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021~2026(안)년 산재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수정)	2026년(안)
공자기금 예탁(A)	2,570,000	2,030,000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여유자금 운용(B)	19,652,203	20,808,565	22,483,876	22,065,343	21,886,140	22,952,535
적립금 대비 공자기금 예탁 비율 (A/A+B)	11.6	8.9	6.4	13.0	18.1	18.0

주: 2021~2024년은 결산 기준, 2025년은 계획·2026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1~2024년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의 연간수익률]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여유자금 수익률	6.47	△7.31	11.63	8.18
직접운용	1.00	2.07	4.08	3.70
위탁운용	7.03	△8.36	12.25	8.56
공자예탁 수익률	0.81	1.95	4.20	2.45

자료: 고용노동부

(다)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신규 사업 존재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을 다수 편성하였으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법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산재기금의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포상금과는 다르게 포상금 지급의 법적근거는 없음.

산재기금의 ‘산재근로자요양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업무상재해조사판정’은 업무상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선대리인 지원의 근거가 필요해 보임.

산재기금의 ‘업종별재해예방’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300인 이상 대규모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및 대책 등을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기업안전보건공시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제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가 필요해 보임.

이상의 사업들은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행가능 여부 및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이는 산재예방 신규 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관련 법개정 필요 사항	기타 특이사항
산재기금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산업안전보건법」에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필요	’25년 하반기 입법 추진예정
산재기금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업무상재해조사판정 (국선대리인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 근거조항 신설 필요	’25년 하반기 입법 추진예정
산재기금	업종별 재해예방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업안전보건 공시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거규정 신설 필요	’25년 하반기 입법 추진예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기준 검토 필요

업종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과 급여 지급액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산업재해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설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15]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따라 산정하고 있고,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음.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인쇄·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26년도 산재기금 수입 중 사업주의 보험료인 ‘고용주부담금’은 전년도 계획 대비 2,312억 7,100만원(2.4%) 증액된 9조 8,18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무제공자[16] 들이 납부하는 ‘피고용자분담금’은 전년 대비 399억 9,600만원(16.1%) 증액된 2,88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2~2026년(안) 산재기금 사용자부담금 및 피고용자 분담금 계획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고용주 부담금	2022	8,214,951	8,214,951	9,408,962	8,194,773	99.8	87.1	1,114,607	99,583
	2023	8,524,313	8,524,313	10,223,012	8,988,573	105.4	87.9	1,151,731	82,708
	2024	9,134,689	9,134,689	10,135,947	8,957,314	98.1	88.4	1,100,361	78,273
	2025.7	9,586,905	9,586,905	7,005,696	5,853,421	61.1	83.6	1,130,889	21,386
	2026(안)	9,818,176	9,818,176	-	-	-	-	-	-
피고용자 분담금	2022	104,877	104,877	111,149	101,482	96.8	87.9	9,646	21
	2023	185,055	185,055	132,806	116,846	63.1	88.0	15,906	54
	2024	283,819	283,819	224,412	203,983	71.9	90.9	20,340	89
	2025.7	248,063	248,063	175,685	149,919	60.4	85.3	25,743	23
	2026(안)	288,059	288,059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산재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재해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료율을 설정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⑬ 건설현장 화물차주, ⑭ 화물차주, ⑮ 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⑯ 방과후 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임.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징수액은 10조 423억원이고, 이는 산재보험급여지출액 7조 6,333억원의 약 131.6%으로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업종별로는 보험료 납부액 대비 보험급여 지출액의 수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예를 들어 2024년 광업의 경우 보험료 징수액이 보험급여 지출액의 5.9%에 불과하고, 임업의 경우 보험료 징수액이 보험급여 지출액의 46.1% 정도이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대비 산재보험료 징수액이 568.8%에 해당하고, 기타의 사업 또한 209.0%에 이르는 등 높은 흑자 수지를 달성하고 있었음.

[사업별 산업재해보험 징수액 및 급여지급액]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재 보험료 징수액 (A)	합계	85,764	90,266	97,624	105,802	100,423
	금융 및 보험업	2,615	3,068	3,599	3,661	3,138
	광업	**462**	**479**	**475**	**454**	**400**
	제조업	22,955	23,807	25,573	27,008	24,86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64	469	480	498	376
	건설업	26,137	27,301	29,321	33,089	33,001
	운수・창고・통신업	4,249	4,551	4,822	5,503	6,336
	임업	**228**	**241**	**239**	**264**	**246**
	어업	40	45	48	54	48
	농업	311	351	374	434	442
	기타의 사업	**28,303**	**29,954**	**32,692**	**34,836**	**31,569**
산재 보험 급여 지급액 (B)	합계	59,968	64,529	66,865	72,849	76,333
	금융 및 보험업	412	440	478	510	552
	광업	**6,449**	**6,805**	**6,908**	**6,498**	**6,738**
	제조업	18,646	19,987	20,659	22,616	22,937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59	158	157	177	181
	건설업	18,831	20,273	21,149	23,095	24,905
	운수・창고・통신업	3,133	3,555	3,961	4,513	5,079
	임업	**437**	**469**	**469**	**528**	**534**
	어업	29	38	32	41	31
	농업	231	236	258	268	270
	기타의 사업	**11,642**	**12,569**	**12,794**	**14,603**	**15,106**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율 (A/B)	합계	143.0	139.9	146.0	145.2	131.6
	금융 및 보험업	**635.0**	**697.6**	**752.7**	**718.3**	**568.8**
	광업	**7.2**	**7.0**	**6.9**	**7.0**	**5.9**
	제조업	123.1	119.1	123.8	119.4	108.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92.8	297.8	304.9	280.9	207.8
	건설업	138.8	134.7	138.6	143.3	132.5
	운수・창고・통신업	135.6	128.0	121.7	122.0	124.7
	임업	**52.2**	**51.4**	**51.0**	**50.1**	**46.1**
	어업	135.5	118.8	152.3	129.1	156.3
	농업	134.7	148.9	144.7	162.0	163.4
	기타의 사업	**243.1**	**238.3**	**255.5**	**238.6**	**209.0**

주) 광업 등 폐업 사업장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별 징수액 및 급여 지급액 비율을 타 업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산정 체계가 업종별 재해발생률이나 보험급여 수급 실적 등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함.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의 공동부담 원리에 따라 사양산업과 호황산업 간 재분배 기능 및 사회 근간 산업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지급률[18] 산정 시 폐업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는 각 업종별 보수총액 비율에 따라 전 산업으로 분산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와 '폐업사업장의 급여를 분산하지 않은 급여액' 간 비율을 업종별로 단순 비교하여 업종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경우 특정 업종은 사실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19]

18)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산정 시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업종류별 요율 = ①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② 추가지출률 + ③ 부가보험료율
① (산재보험급여지급률)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② (추가지출률) 해당 연도 보수총액추정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될 금액(제도 개선 등)과 연금 등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
③ (부가보험료율) 산재보험사업(재해예방, 재활・복지 등)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로,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목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율로 환산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9) 대표적인 사양산업인 광업의 경우,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나, 진폐보상연금 등에 따른 급여지급은 계속되고 있음.

또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20]에서 특정 업종의 요율이 전체 평균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회보험의 공동부담 원리에 따라 특정 업종의 급격한 요율변화 또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물론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과 근간 산업의 특징, 소득 격차를 감안한 수직적 형평성[21] 도 고려하여야 하나, 업종별 과도한 수지 불균형은 산재보험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재해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설정의 필요성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도개선은 산재보험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적정 부담 유도를 통해 산재예방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조세 등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것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 예산 분석

(가) 유사 사례가 없는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 처리기간 단축 노력 필요

역학조사 의뢰 및 회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유사 사례가 없어 문헌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 '업무상재해조사판정' 등의 사업이 유사 사례가 없는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으로 재해 노동자 산재 입증부담 완화와 업무상재해 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판정 기간을 단축하고자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사업을 2025년 29억 4,000만원 대비 97억 8,300만원(332.8%) 증액된 127억 2,300만원 편성하였음.

[2026년도 업무상재해판정 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5년 지출계획	2026년 지출계획(안)	증감	증감률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127	114	△13	△10.2
		재해조사업무 인프라 지원	740	-	△740	순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2,073	-	△2,073	순감
		재해조사 위원수당 등	-	3,274	3,274	순증
		재해조사판정 업무지원	-	4,322	4,322	순증
		소송비용	-	1,446	1,446	순증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	1,925	1,925	순증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	360	360	순증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	1,082	1,082	순증
		재해조사 신속처리 디지털 업무지원	-	200	200	순증
합계			2,940	12,723	9,783	332.8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기간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19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역학조사의 평균 처리기간은 517.6일로 나타났으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에 의뢰된 사건의 경우 206.3일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역학조사 의뢰 및 회신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2024년에는 각각 699.8일과 588.8일로 증가하였음.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역학)조사 업무 분장과 처리기간]

(단위: 건, 일/건)

구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종질병, 희귀병 등)			직업환경연구원 (폐암 등 호흡기질병 등)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 (소음성 난청 등 측정·분석 필요 질병)		
	의뢰	회신	평균처리기간	의뢰	회신	평균처리기간	의뢰	회신	평균처리기간
2019(A)	111	59	517.6	703	548	206.3	3	3	267
2020	54	70	441.4	553	491	275.2	2	2	65
2021	83	69	601.3	596	457	371.5	-	-	-
2022	36	58	659.8	438	398	436.7	1	1	83
2023	30	66	954.6	174	451	588.1	-	-	-
2024(B)	26	47	699.8	282	281	588.8	-	-	-
증감(B-A)	△85	△12	182.2	△421	△267	382.5	-	-	-

주: (회신건수) 민원반려 등 포함, (소요일수) 민원반려 등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 역학조사는 2019년 548건 중 86건(15.7%)이었으나, 2023년 404건(89.6%)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에도 전체 회신 건수 281건 중 1년 이상 역학조사가 소요된 건은 247건(87.9%)에 달했음.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 일, 건, %)

연도	평균 소요일수	1년 이상 사건수/전체 회신건수	최장 처리기간 사건			
			의뢰일	회신일	소요일수	사유
2019	206.3	86/548(15.7)	'16.6.2.	'19.4.24.	1,057	의뢰 건수 폭증으로 지연
2020	275.2	119/491(24.2)	'17.5.22.	'20.2.19.	1,004	사업장 폐업으로 유사사업장 섭외로 지연
2021	371.5	249/457(54.5)	'19.8.26.	'21.12.21	850	사업장 요청자료 입수 지연
2022	436.7	239/398(60.0)	'19.7.22.	'22.8.24.	1,130	사망원인 검토로 지연
2023	588.1	404/451(89.6)	'16.12.19.	'23.7.19.	2,404	급성심장사와 업무관련성에 대한 기존사례없어 문헌 검토
2024	588.8	247/281(87.9)	'21.07.26.	'24.05.22.	1,032	서류 보완

주) 직업환경연구원 회신일 기준. (전체 회신건수) 민원반려 등 포함. (평균 소요일수) 민원반려 등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역학조사는 2019년 전체 회신건수 59건 중 30건으로 52.6%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체 회신건수 47건 중 42건으로 89.4%를 차지하였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 일, 건, %)

연도	평균 소요일수	의뢰 건수	1년 이상 사건수/ 전체 회신건수	최장 처리기간 사건			
				의뢰일	회신일	소요일수	사유
2019	517.6	111	30/59(52.6)	'16.4.20	'19.12.31	1,350	의뢰 건수 급증
2020	441.4	54	37/70(52.8)	'16.4.20	'20.1.7.	1,357	역학조사 적체
2021	601.3	83	50/69(72.5)	'18.4.30	'21.6.28.	1,155	적체현상 지속
2022	659.8	36	49/58(84.5)	'19.10.15	'22.12.21	1,163	적체현상 지속
2023	954.6	30	61/66(92.4)	'16.6.17	'23.8.22	2,622	최신 문헌검토
2024	699.8	26	42/47(89.4)	'22.02.08	'24.12.27	1,053	특별진찰 진행

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회신일 기준 (전체 회신건수) 민원반려 등 포함. (평균 소요일수) 민원반려 등 제외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처리 지연 사유는 의뢰건수 폭증·사업장 요청자료 입수 지연·서류 보완 등도 있으나, 기존 유사 사례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문헌 검토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조사 결과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친 역학조사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 질병 처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26년 증액 편성된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사업 등이 유사 사례 없는 업무상 질병 판정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장해급여 지급 시 연령요인 고려 필요

산재기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유사한 사고임에도 보상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해 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임.

[산재보험급여 종류]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중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지원	▲ 진료비(진찰, 처치, 수술 등) → 현물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평균임금[1]의 70% 지급 ('24년 기준) * 최고: 최고보상기준 고시금액(1일 253,354원)의 70% * 최저: 일반근로자(1일 78,880원, 최저임금 적용), 노무제공자[2](1일 41,150원)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
요양종결	장해 급여	일반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8~14급: 일시금 지급
		진폐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 기초연금(최저임금×365×60%)[3] + 진폐장해연금* *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장해등급: 1급(132일),3급(132일),5급(72일),7급(72일), 9급(24일),11급(24일),13급(24일) 지급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간병 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상시) 전문간병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 (수시) 전문간병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직업 재활 급여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지급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고시금액) ·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 직장복귀지원금[4] · 1~3급(80만원), 4~9급(60만원), 10~12급(45만원) ▲ 직장적응훈련: 45만원, 재활운동지원: 15만원
사망시	유족 급여	일반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수급자격자 희망시 50% 일시금 지급
		진폐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사망 전 진폐근로자가 수급하던 진폐보상연금액 *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례비		유족 또는 사망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8,125,360원, 최저 13,053,080원('24년 기준) * 유족이 아닌 경우 장례실비 지급

주 1)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이 아닌 별도의 급여임
4) 최대 12개월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의 경우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2조 9,77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기금지출계획액 8조 1,463억원의 약 36.6% 수준이며, 2024~2026년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4~2026년 산재보험급여 유형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연금	전체
2024년 결산	1,540,630 (19.6)	2,072,138 (26.3)	2,703,410 (34.3)	981,157 (12.5)	324,904 (4.1)	7,876,091 (100.0)
2025년 계획	1,467,065 (18.3)	2,118,282 (26.5)	2,781,327 (34.7)	1,030,880 (12.9)	347,473 (4.3)	8,004,326 (100.0)
2026년 계획(안)	1,418,467 (17.4)	2,047,752 (25.1)	2,977,823 (36.6)	1,107,050 (13.6)	384,744 (4.7)	8,146,300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액에서 해당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 평균 지급액 및 최고지급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80대 이상이 일시금을 평균 4,090만원을 지급받아 가장 높았으며, 연금의 경우도 평균 276만원을 수급하여 1인당 가장 많은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재보험 장해급여 연령별 평균 지급액 및 최고 지급액(2024년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만원)

구분	일시금				연금			
	지급인원	지급액 (백만원)	평균지급액 (만원)	최고지급액 (만원)	지급인원	지급액 (백만원)	평균지급액 (만원)	최고지급액 (만원)
10대	57	518	909	3,252	1	21	178	178
20대	2,023	24,205	1,196	12,989	185	3,395	153	382
30대	4,193	58,557	1,397	20,012	974	17,628	151	479
40대	7,355	116,421	1,583	17,565	4,654	103,863	186	347
50대	14,385	257,690	1,791	20,646	12,951	380,910	245	695
60대	18,908	425,238	2,249	26,125	21,355	654,765	256	695
70대	6,206	178,427	2,875	16,757	12,643	347,356	229	695
80대 이상	1,031	42,165	4,090	25,399	3,436	92,251	276	695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고 지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 기대여명, 향후 노동능력상실분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 장해급여 지급 한도액(2024년 기준)]

(단위: 원)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일수	지급액	일수	지급액
제1급	329일분	6,946,120	1,474일분	373,443,790
제2급	291일분	6,143,830	1,309일분	331,640,380
제3급	257일분	5,425,990	1,155일분	292,623,870
제4급	224일분	4,729,270	1,012일분	256,394,240
제5급	193일분	4,074,770	869일분	220,164,620
제6급	164일분	3,462,500	737일분	186,721,890
제7급	138일분	2,913,570	616일분	156,066,060
제8급	해당없음		495일분	125,410,230
제9급			385일분	97,541,290
제10급			297일분	75,246,130
제11급			220일분	55,737,880
제12급			154일분	39,016,510
제13급			99일분	25,082,040
제14급			55일분	13,934,470

주) 장해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동일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지만, 연령대별로 향후 노동 가능 기간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22)]

예를 들어 동일한 장해를 입은 경우 30대 근로자는 향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70대 근로자에 비해 길고 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70대 노동자와 동일한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임.

위와 같은 지급 방식은 개인별 손실에 대한 보상의 실질적 형평성과 급여 지급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준 마련 등 장해급여 지급 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연령, 기대여명, 향후 노동능력 상실분 등이 고려되고 있음.

(다) 산재근로자 재활 강화를 통한 직장 복귀 실적 제고 노력 필요

연도별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2024년의 기간 동안 44.4%~46.4%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산재근로자 재활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세부사업을 전년 대비 97억 1,400만원(12.5%) 증액된 876억 5,100만원 편성하였음.

증액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및 무장해로 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89억 1,600만원(14.8%) 증액된 69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요양 승인 후 요양 초기부터 요양 종결 후까지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내내역 사업이 12억 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산재근로자 재활 복지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5년 지출계획	2026년 지출계획(안)	증감	증감률
산재근로자 재활 복지지원	합병증등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	53,279	57,623	4,344	8.2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6,875	11,447	4,572	66.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요양초기 지원	900	900	-	-
		요양 중 지원	9,420	9,713	293	3.1
		직업복귀 사후관리 지원	703	-	△703	순감
		직업복귀토탈케어	-	1,208	1,208	순증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통계조사 지원	570	570	-	-
	사회심리 재활지원	재활프로그램	1,002	1,002	-	-
		사회적응프로그램	1,470	1,470	-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3,168	3,168	-	-
	직업복귀통합 지원시스템운영	-	550	550	-	-
합계			77,937	87,651	9,714	12.5

자료: 고용노동부

23) 직업복귀 프로그램은 요양 초기 단계에는 지원하지 않았음.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은 요양 초기에 개입하여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개선임.

2024년 요양이 종료된 13만 404명의 산재근로자 중 원직장으로 복귀한 인원은 6만 523명으로, 원직장 복귀율은 46.4%에 불과함. 2020년 원직장 복귀율 44.4%에 이어 매해 복귀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개선이 다소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산재근로자의 요양종료 후 원직장 복귀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재근로자 수(A)	88,821	107,657	115,345	123,472	130,404
원직장 복귀인원(B)	39,473	48,088	52,496	56,487	60,523
원직장 복귀율(B/A)	44.4	44.7	45.5	45.7	46.4

주) 산재근로자 수는 연도별 산재요양종결자 수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복귀는 근로자 개인의 고용 유지를 통한 심리적·사회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력재배치 및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복지지출을 절감하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함.

따라서 2026년도에 편성된 산재근로자 재활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산재기금을 통한 공공의료 제공의 정당성 및 확대되는 산재병원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 검토 필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중 일부 병원은 산재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산재병원의 기능이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는데, 사업주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산재기금으로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확대되는 산재병원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지원하는 '산재병원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31억 3,400만원(54.2%) 증액된 1,22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85억 3,600만원(245.9%) 증액된 12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울산병원신축을 위해 전년 대비 144억 5,300만원(22.7%) 증액된 78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199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재병원지원 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 지출계획	2026년 지출계획(안)	증감	증감률
산재병원지원	노후시설개선	3,472	12,008	8,536	245.9
	장비현대화	3,812	3,812	-	-
	재활전문센터	4,228	4,228	-	-
	산재병원본부	4,518	4,315	△203	△4.5
	울산병원신축	63,624	78,077	14,453	22.7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	19,975	19,975	순증
	차세대EMR 구축	-	373	373	순증
합계		79,654	122,788	43,134	54.2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2023~2024년간 적자 운영이 심화되고 있음. 2023년 120억 9,700만원이었던 산재병원 적자는 2024년 200억 8,700만원 증가한 321억 8,4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현재 적자는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 지원금 등으로 누적된 유보금 약 500억원을 통해 보전되고 있으나, 유보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산재병원 적자의 감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2024년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별 경영 상태]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합계	△12,097	359,652	371,749	△32,184	358,064	390,248
인천병원	158	51,301	51,143	212	51,162	50,950
안산병원	1,712	54,808	53,096	1,097	56,917	55,820
창원병원	△484	42,232	42,716	△4,366	38,494	42,860
대구병원	5,866	31,065	25,199	1,587	27,675	26,088
순천병원	349	38,656	38,307	△514	40,398	40,912
대전병원	△3,040	40,602	43,642	△6,425	38,903	45,328
태백병원	△3,074	30,043	33,117	△2,331	32,533	34,865
동해병원	△1,503	34,324	35,827	△3,747	33,784	37,531
정선병원	△2,008	10,798	12,806	△2,647	9,797	12,444
경기요양병원	△366	7,555	7,921	△645	7,231	7,876
태백요양병원	-	-	-	△2,130	1,717	3,847
서울의원	7	2,395	2,388	△606	1,776	2,382
광주의원	37	3,270	3,233	△200	3,849	4,049
부산의원	106	3,220	3,114	△345	3,045	3,390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의 적자운용에는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지방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급성기 치료역량 저하,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만성 산재환자 담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산재를 제외한 일반진료가 확대되고 있고, 태백과 같은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병원의 역할과 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24)]

24)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취약계층 보건의료, 응급진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수행)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국민의 의료 이용권을 거부할 수 없음.

[2023~2024년 산재병원 산재 및 일반진료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3			2024		
		손익	산재	일반	손익	산재	일반
합계	입원	△12,097	554,142	83,427	△32,184	488,878	114,569
	외래		668,930	477,411		636,181	482,063
인천병원	입원	158	79,538	2,476	212	70,224	4,270
	외래		178,188	31,275		168,291	30,484
안산병원	입원	1,712	90,785	14,009	1,097	85,717	16,525
	외래		69,049	83,261		71,874	79,337
창원병원	입원	△484	55,457	8,218	△4,366	46,428	9,317
	외래		70,787	58,858		68,976	59,533
대구병원	입원	5,866	37,582	11,254	1,587	27,482	11,748
	외래		66,106	21,511		60,542	17,309
순천병원	입원	349	54,498	13,071	△514	57,490	16,616
	외래		24,125	50,671		24,625	50,605
대전병원	입원	△3,040	46,318	10,104	△6,425	33,814	11,818
	외래		109,135	48,272		108,734	47,689
태백병원	입원	△3,074	53,458	13,796	△2,331	50,946	14,530
	외래		35,539	95,559		35,354	92,902
동해병원	입원	△1,503	58,405	9,728	△3,747	44,798	18,380
	외래		59,282	61,469		50,762	74,784
정선병원	입원	△2,008	43,354	266	△2,647	41,706	289
	외래		5,498	19,938		5,614	21,630
경기요양병원	입원	△366	34,747	505	△645	30,273	1,861
	외래		3,714	4,417		3,960	4,891
태백요양병원	입원	-	-	-	△2,130	-	9,215
	외래		-	-		-	248
서울의원	외래	7	14,213	316	△606	9,657	567
광주의원	외래	37	15,816	1,649	△200	15,224	1,489
부산의원	외래	106	17,478	215	△345	12,568	595

주) 일반은 산재를 제외한 기타 모든 대상(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산재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25]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보험사업을 위해 사용되는데,[26] 이러한 산재기금을 활용하여 산재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재의 운영구조가 보험재정 사용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7]

또한 일부 산재병원은 지역주민에게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실·중환자실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확대되는 산재병원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27) 참고로 산재병원은 전체 지출 대비 평균 5.9% 수준의 기금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2020~2024년 산재병원 전체예산 대비 기금출연금 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출연금(A)	24,519	25,885	31,850	18,068	16,881	117,203
전체예산(B)	371,744	397,902	433,610	400,191	404,006	2,007,453
출연비율(A/B)	6.60	6.51	7.35	4.51	4.18	5.84

자료: 고용노동부

(4) 산재예방 사업 분석

(가) 기관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관리 필요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재예방 사업을 2026년도 계획안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각 기관과 사업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산재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일반 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2026년도 계획안에 편성하였음.

다만 여러 기관들이 산재예방사업에 참여하면서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가 분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 기관과 사업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전년과 동일한 8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민간보조 방식(보조율 70%, 1,200개소 지원 목표)으로 추진되고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026년 산재기금에 429억원 신규 편성된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지원' 사업 또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대상 선정 시 운영기관 간 정보 공유, 사전 확인 등을 통해 품목별 과다지원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28)]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지원' 사업을 자치단체 보조방식(보조율 100%)으로 편성하였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 예시(안)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인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역 안전문화 확산·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은 이미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로 보임.[29)]

---

28)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장이 1개 장비 도입 시 다수의 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아 개당 단가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29) 예를 들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은 업종별재해예방(4152-350)의 내내역사업인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를 통해 지원되고 있고,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예시(안)]

❖ 사업 예시(안)

① 지역 업종·산업 특화 산재예방 사업

* (예시) ❶중대재해 다발 또는 고위험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시설 개선, 교육·캠페인 등 산재예방 패키지 지원 ❷소규모 건설 인허가권, 착공신고, 상하수도 맨홀 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 신고 연계 개별 현장 안전수칙 준수 점검 ❸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등

②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5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③ 지역 안전문화 확산 사업(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세미나, 포럼, 캠페인 등)

④ 지역 업종별 안전 네트워크 구축 ⑤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이 성립한 이후에 현장을 인지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도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를 통해 사전에 유해위험요인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지역별 사각지대의 기업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없이 지역에 특화된 산재예방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30]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산재기금에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445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지도·점검은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에서의 기술지원(2026년 55,000회 계획)과 유사하고, 소규모 사업장(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민간 기술지도’ 사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전문분야·주력업종·점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상호 보완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0)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 심사 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시 중복여부를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공모신청에 대한 심사 시 유사·중복사업 제외 또는 사업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실제 체계적인 사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6년도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산재예방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 지출계획	2026년 지출계획(안)
소공인 산재예방 시설지원	중기부	소진기금	소공인특화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8,400
	노동부	산재기금	클린사업장조성	안전일터조성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110,707 (-)	160,607 (42,900)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역 안전문화 확산·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	노동부	산재기금	업종별재해예방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지원)	95,823 (-)	120,702 (14,321)
	노동부	산재기금	업종별재해예방	사고성재해집중관리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13,386 (10,368)	60,234 (11,678)
	노동부	산재기금	안전보건문화 정착	-	35,674	34,506
	노동부	산재기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496,792	537,093
안전 점검 확대	노동부	산재기금	업종별재해예방	안전한일터지킴이	-	44,578
	노동부	산재기금	업종별재해예방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13,386	60,234
	노동부	산재기금	업종별재해예방	민간 기술지도	51,323	51,273

자료: 고용노동부

(나) 사업내용 개선을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검토 필요

2026년 산재예방사업 중 보조율을 90%로 설정하고, 고의적인 법 위반 시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내용 개선을 통해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후진국형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설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99억원(45.0%) 증액된 1,60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지출계획액의 증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이 신설되어 429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1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및 부딪힘 설비 지원 시 교체비용 90%를 지원할 예정임.[31)]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재정적 능력을 감안해 기존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비율인 70~80%보다 상향된 90%를 지원하여 사업 참여 효과와 사업장 당 지원수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32)]

‘끼임’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80%로 조정하여 지원 단가를 약 774만원으로 설정할 경우(현재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보조율은 70%) 사업주의 부담은 약 100만원 정도 증가 하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약 412개소를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율 조정으로 한정된 지출계획액 내에서 수혜 대상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재정능력을 감안한 사업장 당 지원수준 확대 필요성과 함께, 한정된 지출계획액 내에서 사업 수혜 대상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1) 끼임 예방설비의 경우 덮개 또는 방호울, 인터록 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며, 부딪힘 예방설비는 부딪힘 사고가 많은 지게차에 부착하는 인체감지센서(카메라) 및 모니터 등 충돌예방장치가 있음.

32) 또한 ① 끼임 사고사망자가 부딪힘 사고사망자보다 많은 점('24년 사고사망자 기준 끼임 41명, 부딪힘 39명), ② 끼임재해 지원품목은 기계·기구의 근원적 교체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재정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2026년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사업 중 끼임·부딪힘 추계 근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출 계획액	목표 개소	산출근거	지원 단가	산출근거
끼임	28,708	3,296	'24년 컨베이어 보유 사업장 59,920개소(추정) 중 끼임 사고사망 비중(5%) 및 지원비율(90%)을 감안하여 3,296개소 산출	8.71	안전장치가 설치된 컨베이어 평균 교체 비용 968만원×0.9
부딪힘	4,731	1,232	'24년 지게차(보행식 및 입식 제외) 보유 사업장 22,404개소(추정) 중 부딪힘 사고사망 비중(4.7%) 및 지원비율을 감안하여 1,232개소 목표	3.84	스마트 센서, 전동지게차 장착 카메라 평균 구매 비용 427만원×0.9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은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에 111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으나,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당 50만원, ② 산재은폐, 정부이행명령 미이행과 같은 고의적인 법 위반의 경우 1건당 500만원으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단가를 규정하고 있음.[33]

이에 대해 「농지법」과 같은 유사입법례 및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한정된 지출계획액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포상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의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사업은 300인 이상 대규모 위험업종(건설·제조·전기업 등)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액에 9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가 300인 미만 규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제 대상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영세기업의 공시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3) 허위·가명 신고, 조사·처분 완료건, 근로감독관의 신고, 직무상 알게 된 관련인(안전지킴이 등)의 신고, 사전 공모·부정신고 등은 제외될 예정임

[2023년 기준 업종별·기업규모별 산재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수	412,474	275,436	61,799	38,947	14,636	10,626	6,754	3,483	447	208	138
	근로자수	4,006,893	463,172	405,798	527,415	348,552	401,893	465,657	554,555	169,946	142,700	527,205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24,403	5,332	3,568	4,073	2,210	2,120	1,967	2,021	636	413	2,063
	업무상사고 재해율	0.61	1.15	0.88	0.77	0.63	0.53	0.42	0.36	0.37	0.29	0.39
건설업	사업장수	321,949	258,248	28,161	18,757	6,201	4,128	2,999	2,582	571	236	66
	근로자수	2,233,184	338,212	186,179	251,304	147,423	155,388	206,799	443,536	213,256	152,113	138,974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26,829	8,928	2,768	3,482	1,910	1,650	2,012	3,681	1,335	665	398
	업무상사고 재해율	1.20	2.64	1.49	1.39	1.30	1.06	0.97	0.83	0.63	0.44	0.29

자료: 고용노동부

(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6일 수시직제를 통해 산업안전감독관 기준정원을 당초 892명에서 1,179명(+287명)으로 증가시켰고, 2026년에는 기준정원을 1,829명(+650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우리나라의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 10주와 현장직무교육(OJT)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교육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관련 법과, 수사사례 등을 학습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되어 업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신임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영국은 12개월, 독일은 1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일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1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황]

		한국	영국	독일	일본
산업안전 감독관	교육 기간	22주 집체10주 +OJT12주	12개월 집체교육 +OJT	[바이애른주 감독관] 18개월 이론 500시간 + 기관실습 [재해보험조합 감독관] 1~3년 AP Ⅰ(학위 유형): 2년~3년 AP Ⅱ(기술자 유형): 1년~3년	1년
	교육 주요 내용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 체험 및 실습	법률 및 집행, 산업보건 및 위생안전 기술 전문 실무역량 등	[바이애른주 감독관] 산업안전감독 기초 산업안전집행, 실습 등 [재해보험조합 감독관] 법적근거, 직업병 조사, 안전 보건조치, 종사 산업별 역량강화교육 등	일반 근로감독관과 함께 동일한 연수 진행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단기적으로는 노동교육원 등의 인프라 한계 및 예산 상 한계 등으로 교육기간을 즉각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인프라와 기간 내에서도 실습 중심의 교육과 OJT를 내실화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실무에 적합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라) 업무상 질병 예방 강화 필요

사고에 의한 신체장해 발생 비율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에 의한 신체장해 발생 비율은 2011년 37.6%에서 2023년 58.0%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질병 사망만인율이 2015년 0.48‰에서 2024년 0.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업재해의 양상이 사고 중심에서 질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므로, 내실 있는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업무상 질병 예방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업무상 질병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함. 이는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특정한 질병이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기저질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과정 중 노출된 유해 요인, 반복적인 신체활동, 또는 직무 스트레스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됨.

전체 산업재해자 중 신체장해 및 사망에 이른 비율은 사고와 질병이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사고에 의한 신체장해 발생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질병에 의한 신체장해 발생 비율은 2011년 37.6%에서 2024년 61.4%로 증가하였음. 이는 산업재해의 양상이 사고 중심에서 점차 질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산업재해 유형별 신체장해 및 사망 비율(출퇴근 재해 제외)]

(단위: %)

구분	산업재해자 수 대비 신체장해자수 비율			산업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		
	사고	질병	전체	사고	질병	전체
2011	39.8	37.6	39.6	1.3	10.1	2.0
2012	40.9	35.2	40.5	1.3	9.8	2.0
2013	39.0	34.5	38.7	1.3	11.0	2.1
2014	38.1	34.9	37.8	1.2	11.2	2.0
2015	37.9	37.7	37.9	1.2	10.8	2.0
2016	36.1	38.5	36.3	1.2	10.3	2.0
2017	35.1	41.0	35.7	1.2	10.8	2.2
2018	30.9	45.9	32.6	1.1	10.2	2.1
2019	32.2	47.3	34.3	0.9	7.7	1.8
2020	32.3	47.6	34.5	1.0	7.4	1.9
2021	31.0	49.1	34.0	0.8	6.1	1.7
2022	29.5	54.4	33.9	0.8	5.8	1.7
2023	29.1	58.0	34.0	0.7	5.2	1.5
2024	30.8	61.4	36.6	0.7	4.7	1.5

주 1)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
2) 신체장해자수는 장해판정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로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53‰에서 2024년 0.39‰으로 0.14‰p 감소하였으나, 질병사망만인율은 2015년 0.48‰에서 2024년 0.59‰으로 0.11‰p 증가하였음.

[산업재해 유형별 신체장해 및 사망 비율(출퇴근 재해 제외)]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	0.53	0.53	0.52	0.51	0.46	0.46	0.43	0.43	0.39	0.39
질병사망만인율	0.48	0.44	0.54	0.61	0.62	0.62	0.65	0.67	0.58	0.59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업무상 질병 예방에 중심이 되는 산재기금의 보건 및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지출계획액은 전년 대비 61억 7,900만원(4.0%) 증액된 1,617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건 및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지출계획액은 2026년 산재기금의 산재예방 사업 지출계획액 1조 5,059억 400만원의 약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비중인 12.0%(1조 2,970억 8,600만원 중 1,555억 8,0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① 혹서기(6~9월)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등)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원(55.6%) 증액된 280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폭염·한랭질환, 감정노동, 장시간근로 등 위험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 발생 고위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 15억 4,700만원(45.9%) 증액된 4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장시간 근로 및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 등 집중관리를 지원하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3.1%) 증액된 3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계획한 보건 및 건강 증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업무상 질병 예방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2026년 산재기금 보건 및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지출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출계획액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장치	15,825	17,825	12,825
		온열질환 예방설비	-	18,000	28,000
유해작업 환경개선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32,121	32,122	32,124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31,965	31,968	31,972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6,824	6,824	6,824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715	715	715
	유해작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300	300	1,024
		소규모 석면해체 제거 작업 모니터링	724	724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1,160	1,160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1,413	1,713	1,213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자건강센터		22,060	22,963	22,963
	업무상질병핵심고위험요인집중관리		3,373	3,374	4,921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2,888	2,888	2,888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932	932	932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운영	2,566	2,570	2,578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840	3,840	3,958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62	7,662	7,662
보건 및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합계			133,208	155,580	161,759
산재예방사업 합계			1,287,826	1,297,086	1,505,90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2. 재난예방·대응

가. 개 요

(1) 개념 및 유형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사업’은 정의상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음.[2]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재난 외 각종 사고’로 구분되고 있고, 재난은 다시 피해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고 있음.

이 구분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사회재난은 ‘자연현상 외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각각 구분될 수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상 ‘재난 외 각종 사고’가 재난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2026년도 작성지침」”)상 이에 대응하는 ‘안전사고’라는 별도의 유형이 반영되고 있음.[3]

이에 따라 「2026년도 작성지침」상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는 재난안전예산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및 공통 등 4개 유형 및 41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분야 (4)	유형 (41)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재난 (9)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사태	「사방사업법」 제2조의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뭄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 등 가용 수자원(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상 정의만으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내용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3) 「재난안전법」상 ‘재난 외 각종 사고’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에서는 ‘안전사고’라는 별도 유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음.

분야 (4)	유형 (41)		정의 및 분류기준
	황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조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한파		겨울철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폭염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낙뢰 등 기타		낙뢰,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물체 추락·충돌, 「전파법」에 따른 전파 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사회재난 (18)	화재	화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불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시설 재난사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의 예방 등 사업
	다중운집 인파사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위면적 당 군중밀도 증가로 군중의 흐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화생방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누출 및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 화학물질 재난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화학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환경 오염 사고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수질오염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사고	「철도안전법」 제2조의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분야 (4)	유형 (41)		정의 및 분류기준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시재난·테러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사업
안전사고 (9)	생활안전	승강기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등산·레저사고	등산, 레저활동(수상레저 포함)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가·가스사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가·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의료제품 사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식품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	사업장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농·수산업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공통 (5)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조, 구급과 관련된 사업
	재난 구호 및 복구		「재해구호법」 제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을 위한 사업
	안전취약계층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관련된 사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해외재난 관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외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성을 지닌 사업 중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 * 교부세,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점검, 조사, 진단 등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207-208

(2)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가) 전체 현황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조 8,234억원(16.0%)이 증액된 27조 6,65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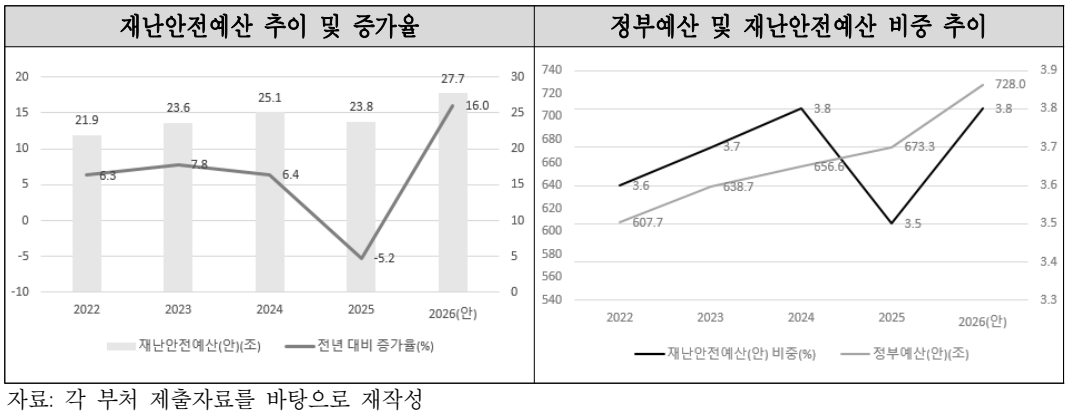
구분	2025년도[1]		2026년도 예산안[3]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2]			(B-A)/A
재난안전사업	238,422	255,797	276,656	38,234	16.0

주 1) 2025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된 430개 재난안전사업 예산 합계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 2026년도 430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합계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2021년 20.6조원→2022년 21.9조원→2023년 23.6조원→2024년 25.1조원)하였으나 2025년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음. 그러나 2026년 예산안 기준 27.7조원으로 전년도인 2025년 대비 16.0% 증가하고 있음.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최소 3.5%에서 최대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 728.0조원 대비 27.7조원으로 재난안전예산이 총지출의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2-2026) 재난안전예산(안) 추이·증가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부처별 현황

부처별 현황을 보면, 2026년도 예산안 기준 26개 부처에서 총 430개의 재난안전사업이 편성되었음. 각 부처의 예산안 총액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75개 사업에서 6조 66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재난안전예산안의 편성규모가 가장 컸고, 국토교통부의 37개 사업에서 4조 9,51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47개 사업에서 4조 3,850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그 뒤를 잇고 있음.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 기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52억 900만원(29.7%)이 증액되어 증액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9,101억 3,300만원(17.7%)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5,994억 8,300만원(59.7%)이 증액되어 그 뒤를 잇고 있음.

감액규모 기준 산업통상부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21억 200만원(△91.6%) 감액되어 감액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부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5억 2,800만원(△15.1%) 감액되었으며, 소방청의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억 1,600만원(△10.2%)이 감액되어 그 뒤를 잇고 있음.

[2026년도 부처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6년도			2025년도			차이	증가율
부처명	사업 수	예산안(A)	부처명	사업 수	본예산(B)	(A-B)	(A-B)/B
기후부	**75**	**6,066,282**	**환경부**	**64**	**5,156,149**	**910,133**	**17.7**
국토부	37	4,951,979	국토부	37	4,620,764	331,215	7.2
행안부	**47**	**4,385,009**	**행안부**	**48**	**3,379,800**	**1,005,209**	**29.7**
농식품부	24	3,593,084	농식품부	24	3,327,261	265,823	8.0
기재부	**2**	**1,604,082**	**기재부**	**2**	**1,004,599**	**599,483**	**59.7**
고용부	9	1,533,814	고용부	9	1,274,733	259,081	20.3
산림청	8	990,562	산림청	8	663,725	326,837	49.2
해수부	35	888,357	해수부	36	842,447	45,910	5.4
질병청	23	816,865	질병청	23	761,004	55,861	7.3
해경청	22	670,935	해경청	22	602,191	68,744	11.4
복지부	15	516,352	복지부	15	355,874	160,478	45.1
경찰청	10	357,298	경찰청	10	351,562	5,736	1.6
소방청	**29**	**217,189**	**소방청**	**30**	**241,905**	**△24,716**	**△10.2**
교육부	**2**	**210,662**	**교육부**	**2**	**248,190**	**△37,528**	**△15.1**
식약처	33	197,746	식약처	33	199,492	△1,746	△0.9
기상청	23	141,121	기상청	23	160,792	△19,671	△12.2

(단위: 개, 백만원)

2026년도			2025년도			차이	증가율
부처명	사업 수	예산안(A)	부처명	사업 수	본예산(B)	(A-B)	(A-B)/B
원안위	6	141,104	원안위	6	139,012	2,092	1.5
성평등부	7	127,682	여가부	7	124,244	3,438	2.8
과기부	6	80,467	과기부	7	101,482	△21,015	△20.7
국유청	3	59,453	국유청	3	45,256	14,197	31.4
법무부	2	41,053	법무부	2	39,607	1,446	3.7
국방부	1	31,687	국방부	1	32,245	△558	△1.7
외교부	2	15,763	외교부	2	15,802	△39	△0.2
산업부	**4**	**12,123**	**산자부**	**11**	**144,225**	**△132,102**	**△91.6**
방미통위	3	7,904	방통위	3	4,887	3,017	61.7
농진청	2	7,010	농진청	2	4,960	2,050	41.3
전체	**430**	**27,665,583**	**전체**	**430**	**23,842,208**	**3,823,375**	**16.0**

주) 증·감액규모 기준 주요 부처로 언급된 6개 부처는 굵은 글씨로 표기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재해예비비' 내역사업[4]은 전년 대비 6,000억원(60.0%) 증액된 1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처리장설치(자율)' 사업은 전년 대비 3,195억 5,900만원(40.4%) 증액된 1조 1,10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자율)' 사업은 전년 대비 1,702억 7,700만원(18.9%) 증액된 1조 713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그 뒤를 잇고 있음.

[2026년도 주요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현황(편성규모 기준 상위 10개)]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차이 (B-A)	증가율 (B-A)/A
		본예산(A)	추경			
기재부	예비비(재해예비비)	1,000,000	1,000,000	1,600,000	600,000	60.0
기후부	하수처리장설치(자율)	790,900	848,466	1,110,459	319,559	40.4
기후부	하수관로신설및분류식화(자율)	901,096	901,096	1,071,373	170,277	18.9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20	1,020,020	1,010,040	650,020	180.6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801,929	801,929	887,089	85,160	10.6
기후부	하수관로정비	678,456	769,750	882,070	203,614	30.0
국토부	도로유지보수	866,507	996,407	865,886	△621	△0.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지정·관리하는 재난안전사업 명단에서 '재해예비비'를 기획재정부 소관 내역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규모 기준 상위 5개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사업(6,500억 200만원), 기획재정부의 ‘재해예비비’ 내역사업(6,00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처리장설치(자율)’ 사업(3,195억 5,900만원)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2,036억 1,400만원),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사업(2,151억 400만원) 등의 증액규모가 컸음.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 기준 상위 5개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931억 4,700만원) 및 ‘댐안전성강화(Ⅱ단계)’ 사업(△376억원),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 사업(△632억 5,800만원) 및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378억 8,900만원) 및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사업(△375억 8,400만원) 등의 감액규모가 컸음.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주요 증감액 사업 현황(증·감액규모 기준 상위 5개)]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 예산안 (B)	차이 (B-A)	증가율 (B-A)/A
		본예산(A)	추경			
1. 주요 증액사업(상위 5개)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20	1,020,020	1,010,040	650,020	180.6
기재부	예비비(재해예비비)	1,000,000	1,000,000	1,600,000	600,000	60.0
기후부	하수처리장설치(자율)	790,900	848,466	1,110,459	319,559	40.4
국토부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545,457	598,270	760,561	215,104	39.4
기후부	하수관로정비	678,456	769,750	882,070	203,614	30.0
2. 주요 감액사업(상위 5개)						
기후부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	290,279	290,279	197,132	△93,147	△32.1
국토부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	413,604	451,804	350,346	△63,258	△15.3
국토부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112,616	112,616	74,727	△37,889	△33.6
기후부	댐안전성강화(Ⅱ단계)사업	71,790	71,790	34,190	△37,600	△52.4
교육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247,905	242,306	210,321	△37,584	△15.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다) 단계별 현황

2026년도 예산안 기준 430개 재난안전사업은 재난관리 활동단계별로 「재난안전법」 및 「2026년도 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5)]

[재난관리 활동단계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구분]

단계	정의
예방	재난·사고 발생 전에 재난 발생원인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과 대책 단계의 투자
대비/대응	재난발생 직전 또는 재난발생 이후의 과정으로 인명구조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상황 활동 단계의 투자
복구	재난 이후 피해복구, 국가기반체계 복원 등 피해나 장애 이전의 상태나 기능을 회복하는 활동 단계의 투자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08.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예방 단계 274개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 편성규모는 18조 7,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9,600만원(9.0%) 증액되었고, 대비/대응 단계 126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편성규모는 2조 5,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2억원(19.8%) 증액되었으며, 복구 단계 30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편성규모는 6조 3,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506억원(40.9%) 증액되었음.

[2026년도 단계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단계	2026년		2025년도		차이	증가율
	세부사업수	예산안(A)	세부사업수	본예산(B)	(A-B)	(A-B)/B
예방 단계	274	187,331	270	171,835	15,496	9.0
대비/대응 단계	126	25,562	129	21,330	4,232	19.8
복구 단계	30	63,763	31	45,257	18,506	40.9
전체	**430**	**276,656**	**430**	**238,422**	**38,234**	**16.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에 반영된 단계별 주요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 예방 단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처리장설치(자율)’ 사업(1조 1,104억 5,900만원), ‘하수관로신설 및 분류식화’ 사업(1조 713억 7,300만원) 및 ‘하수관로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체계상 재난관리 활동을 재난의 예방(제4장), 대비(제5장), 대응(제6장) 및 복구(제7장) 등 4개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재난관리 활동을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등 3개 단계로 구분한 다음 각 단계를 정의하고 있음.

비’ 사업(8,820억 7,000만원),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1조 488억 1,000만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사업(1조 361억 5,300만원) 등의 편성규모가 컸음.

대비/대응 단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2,969억 4,800만원), 해양경찰청의 ‘함정건조’ 사업(2,025억 2,300만원), 산림청의 ‘산림헬기도입·운영’ 사업(1,938억 2,600만원),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1,764억 7,600만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1,290억 7,300만원) 등의 편성규모가 컸음.

복구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재해예비비’ 내역사업(1조 6,000억원),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사업(1조 100억 4,000만원)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9,541억 3,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보험’ 사업(8,870억 8,9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4,000억원) 등의 편성규모가 컸음.

[2026년도 단계별 주요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차이 (B-A)	증가율 (B-A)/A
		본예산 (A)	추경			
1. 예방 단계 예산안 규모 상위 5개 사업						
기후부	하수처리장설치(자율)	790,900	848,466	1,110,459	319,559	40.4
기후부	하수관로신설및분류식화(자율)	901,096	901,096	1,071,373	170,277	18.9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기후부	하수관로정비	678,456	769,750	882,070	203,614	30.0
2. 대비/대응 단계 예산안 규모 상위 5개 사업						
기후부	국가하천유지보수	262,157	262,157	296,948	34,791	13.3
해경청	함정건조	157,137	157,137	202,523	45,386	28.9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93,858	197,533	193,826	99,968	106.5
복지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62,927	71,833	176,476	113,549	180.4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정보화)	112,752	112,752	129,073	16,321	14.5
3. 복구 단계 예산안 규모 상위 5개 사업						
기재부	예비비 (재해예비비)	1,000,000	1,000,000	1,600,000	600,000	60.0
행안부	재난대책비(보조)	360,020	1,020,020	1,010,040	650,020	180.6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801,929	801,929	887,089	85,160	10.6
기후부	하천재해대책비	232,000	232,000	400,000	168,000	72.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라) 피해유형별 현황

2026년도 예산안 기준 430개의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안전법」 및 「2026년도 작성지침」 등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및 공통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2026년도 작성지침」상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에서는 이를 41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음.

「2026년도 작성지침」상 분류체계 기준 재난안전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연재난에 대한 64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7조 2,6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5억원(10.7%) 증액되었고, 사회재난에 대한 182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9조 9,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13억원(8.8%) 증액되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86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조 3,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2억원(12.1%) 증액되었고, 공통 유형에 대한 98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8조 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94억원(34.3%) 증액되었음.

[2026년도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피해유형주)	2026년		2025년도		차이	증가율
	세부사업수	예산안(A)	세부사업수	본예산(B)	(A-B)	(A-B)/B
자연재난	64	72,652	62	65,657	6,995	10.7
사회재난	182	99,879	180	91,801	8,113	8.8
안전사고	86	23,658	87	20,911	2,532	12.1
공통	98	80,466	101	60,054	20,594	34.3
전체	**430**	**276,655**	**430**	**238,422**	**38,234**	**16.0**

주) 「2026년도 작성지침」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재난안전예산안의 41개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자연재난에 속하는 9개 세부유형 중 ‘풍수해’ 등 5개 유형·6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994억 9,700만원(10.7%)이 증액된 7조 2,65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황사, 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 등 4개 세부유형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

사회재난 유형에 속하는 18개 세부유형 중 ‘화재’ 등 16개 유형·18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8,078억 5,600만원(8.8%)이 증액된 9조 9,879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다중운집 인파사고, 토양오염 등 2개 세부유형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

안전사고 유형에 속하는 9개 세부유형·8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747억 8,900만원(13.1%)이 증액된 2조 3,65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통 유형에 속하는 5개 세부유형·98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조 412억 3,300만원(34.0%)이 증액된 8조 46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41개 세부유형별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피해유형			세부 사업수	2026년 예산안(A)	세부 사업수	2025년 본예산(B)	차이 (A-B)	증가율 (A-B)/B
대분류	중·소분류							
자연재난 (9개)	풍수해		48	5,642,078	45	4,868,962	773,116	15.9
	산사태		2	350,895	2	300,015	50,880	17.0
	가뭄		7	1,176,540	7	1,232,028	△55,488	△4.5
	지진		6	68,431	7	134,504	△66,073	△49.1
	황사		-	-	-	-	-	-
	조류		1	27,213	1	30,151	△2,938	△9.7
	한파		-	-	-	-	-	-
	폭염		-	-	-	-	-	-
	낙뢰 등 기타		-	-	-	-	-	-
	자연재난 합계		**64**	**7,265,157**	**62**	**6,565,660**	**699,497**	**10.7**
사회재난 (18개)	화재	화재	6	63,590	6	46,969	16,621	35.4
		산불	4	387,560	4	261,381	126,179	48.3
	시설 재난사고		6	26,423	6	27,357	△934	△3.4
	다중운집 인파사고		-	-	-	-	-	-
	화생방 사고	방사능	8	151,732	8	149,038	2,694	1.8
		유해 화학물질	7	51,234	7	53,072	△1,835	△3.5
	환경오염 사고	대기오염	12	376,543	12	477,222	△100,679	△21.1
		수질오염	28	1,627,262	26	1,295,026	332,236	25.7
		토양오염	-	-	-	-	-	-
		해양오염	9	121,310	9	110,262	11,048	10.0
	감염병		19	800,790	19	744,780	56,010	7.5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10	367,563	10	394,282	△26,719	△6.8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8	2,247,860	8	2,321,264	△73,404	△3.2
		철도교통	11	2,760,424	11	2,359,953	400,471	17.0
		항공교통	13	80,231	13	70,647	9,584	13.6
		선박	24	714,312	24	647,814	88,048	13.6
	국가핵심기반 마비		5	60,367	5	69,419	△9,052	△13.0
	전시재난·테러		12	150,743	12	151,602	△859	△0.6
	사회재난 합계		**182**	**9,987,944**	**180**	**9,180,088**	**807,856**	**8.8**

(단위: 백만원, %)

피해유형			세부 사업수	2026년 예산안(A)	세부 사업수	2025년 본예산(B)	차이 (A-B)	증가율 (A-B)/B
대분류	중·소분류							
안전 사고 (9개)	생활 안전	승강기사고	1	6,010	1	5,872	138	2.4
		등산·레저 사고	1	1,095	1	1,047	48	4.6
		전기·가스 사고	6	122,346	6	117,595	4,751	4.0
		생활제품 사고	6	49,966	6	42,823	7,143	16.7
		의료제품 사고	9	29,452	9	26,241	3,211	12.2
		식품 사고	29	238,099	29	248,796	△10,697	△4.3
		범죄	20	351,854	20	342,139	9,715	2.8
	산업 안전	사업장산재	11	1,538,464	12	1,281,884	256,580	20.0
		농·수산업 사고	3	28,560	3	24,660	3,900	15.8
	안전사고 합계		**86**	**2,365,846**	**87**	**2,091,057**	**274,789**	**13.1**
공통 (5개)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34	574,285	34	449,046	125,239	27.9
	재난 구호 및 복구		21	4,949,809	22	3,190,014	1,759,795	55.2
	안전취약계층 안전		4	76,009	4	77,092	△1,083	△1.4
	해외재난 관리		1	13,920	1	13,959	△39	△0.3
	재난안전관리체계		38	2,432,613	40	2,275,292	157,321	6.9
	공통 합계		**98**	**8,046,636**	**101**	**6,005,403**	**2,041,233**	**34.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공통 사항

(가) 재해복구의 신속한 수행 및 재해대책비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정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재해대책비 일부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는 향후 재해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한편, 재해대책비가 적정규모로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국가재정법」제47조제1항[6] 및「예산총칙안」제10조제1항제8호, 제17조 등을 근거로 2026년 예산안에 부족분의 자체 이용 등이 허용되는 재해대책비를 편성하였음.[7]

2026년 예산안 기준 재해대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소관 6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고, 해당 사업들의 편성규모 합계는 2조 93억 5,000만원임.

부처별 사업내용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재해대책비’ 사업(4,000억원)을 통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복구를 지원하고, ‘재해대책비’ 사업(500억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및 국립공원의 복구를 수행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비’ 사업(2,500억원)을 통해 농작물, 가축 및 수리시설 등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 사업(2,500억원)을 통해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재난피해지 복구 등을 수행할 계획임.

---

6)「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예산총칙안」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 · 대책비 포함)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등재해대책비’ 사업(493억 1,000만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재개를 지원하고, 국가·지방어항의 복구를 수행하며, 적조 및 이상수온 등에 따른 피해절감 및 복구비용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보조)’ 사업(1조 100억 4,000만원)을 통해 생계안정지원 및 도로·소하천 등의 시설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발생 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 기준 6개 재해대책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기후부	하천 재해대책비	재해복구비 (국가하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가하천(전액 국비보조) 및 지방하천(국비보조율 50%) 등에 대해 항구복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재발을 방지	42,952
		재해복구비 (지방하천)		357,048
		내역사업 합계		**400,000**
	재해대책비	재해복구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국립공원 등의 수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안전 확보 및 추가피해 방지	50,000
농식품부	재해대책비	-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가축,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인·지자체를 대상으로 복구비의 일부 지원	250,000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 신속한 복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250,000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기타보전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영어의욕 고취	33,219
		지방어항 등 피해복구	자연재해(태풍 등)에 따른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의 피해에 대해 어업기반 시설을 복구함으로써 어업기반의 안정성 확보	2,000
		국가어항 등 피해복구		2,600
		유해생물구제(적조)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한 장비(황토, 철망), 시설(선박, 차량 등) 대여 등의 지원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	3,423
		이상수온 대응지원	이상수온 발생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장비 및 관련 연구 지원	7,76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개선 연구	피해복구 단가 산정 시 현장과의 격차 발생으로어업·양식분야 전반에 걸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실효성있는 복구 지원	300
		내역사업 합계		**49,310**
행안부	재난대책비 (보조)	재난대책비 지원	인명피해 구호금, 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급 및 도로·소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1,009,940
		재난대책비 운영	재난복구지침 발간,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등	100
		내역사업 합계		**1,010,040**
전체 합계				**2,009,35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해대책비는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집행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에 발생한 재난피해의 복구비 중 일부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지원'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1조 99억 4,000만원 중 80.2%인 8,100억원이 전년도인 2025년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편성됨.

[최근 4년간(2023-2026) 6개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안 산출내역							
			합계 (A+B+C)		전전년도 피해복구비(A)		전년도 피해복구비(B)		당해년도 피해복구비(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후부	하천 재해 대책비	2023	-	-	-	-	-	-	-	-
		2024	250,000	100.0	-	-	229,854	91.9	20,146	8.1
		2025	232,000	100.0	예산안 편성시 발생연도별 피해복구비를 구분하지 않음					
		2026	400,000	100.0	35,485	8.9	309,515	77.4	55,000	13.8
	재해 대책비	2023	-	-	-	-	-	-	-	-
		2024	50,000	100.0	-	-	-	-	50,000	100.0
		2025	50,000	100.0	-	-	-		50,000	100.0
		2026	50,000	100.0	-	-	-	-	50,000	100.0
농 식품부	재해 대책비	2023	200,000	100.0	-	-	-	-	200,000	100.0
		2024	280,000	100.0	-	-	48,887	17.5	231,113	82.5
		2025	160,000	100.0	-	-	-	-	160,000	100.0
		2026	250,000	100.0	-	-	-	-	250,000	100.0
산림청	산림 재해 대책비	2023	20,000	100.0	-	-	498	2.5	19,502	97.5
		2024	100,000	100.0	-	-	81,326	81.3	18,674	18.7
		2025	100,000	100.0	-	-	6,615	6.6	93,385	93.4
		2026	250,000	100.0	-	-	102,610	41.0	147,390	59.0
해수부	양식등 재해 대책비	2023	8,000	100.0	-	-	-	-	8,000	100.0
		2024	50,000	100.0	-	-	-	-	50,000	100.0
		2025	25,000	100.0	-	-	-	-	25,000	100.0
		2026	49,310	100.0	-	-	-	-	49,310	100.0
행안부	재난 대책비 지원	2023	150,000	100.0	-	-	-	-	150,000	100
		2024	600,000	100.0	-	-	540,283	90.0	59,717	10.0
		2025	359,960	100.0	-	-	241,311	67.0	118,649	33.0
		2026	1,009,940	100.0	-	-	810,000	80.2	199,940	19.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안에 피해복구비 일부를 반영하여 이연집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피해발생 시기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비용을 무리하게 당해 년도에 배정하여 이월할 것이 아니라 당해 년도에 집행가능한 비용과 차년도에 집행가능한 비용을 구분하여 편성·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그런데 6개 재해대책비 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이연집행을 예정하여 편성된 전년도 피해복구비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전년도(2023년) 피해복구비 2,29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결산 기준 797억 7,700만원만 실집행(34.7%)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최근 3년간(2023-2025.8.) 6개 재해대책비 사업 이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연도	당해 연도 본예산	전년도 피해복구비 이연집행 현황			
				전년도 피해복구비 본예산(A)	교부액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기후부	하천 재해 대책비	2023	-	-	-	-	-
		2024	250,000	229,854	165,779	79,777	34.7
		2025.8.	232,200	미구분	160,364	49,865	31.0[1]
	재해 대책비	2023	-	-	-	-	-
		2024	50,000	5,919	5,919	3,667	62.0
		2025.8.	50,000	16,490	16,490	8,410	51.0
농 식품부	재해 대책비	2023	200,000	-	-	-	-
		2024	280,000	48,887	48,887	46,249	94.6
		2025.8.	250,000	-	-	-	-
산림청	산림 재해 대책비	2023	20,000	498	436	436	87.6
		2024	100,000	81,326	81,011	73,792	90.7
		2025.8.	100,000	6,615	6,033	5,522	83.5
해수부	양식등 재해 대책비	2023	8,000	2,000[2]	2,000	2,000	100.0
		2024	50,000	-	-	-	-
		2025.8.	25,000	-	-	-	-
행안부	재난 대책비 (보조)	2023	150,000	-	-	-	-
		2024	600,000	540,283	540,283	331,261	61.3
		2025.8.	359,960	241,311	241,311	70,156	29.1

주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해대책비' 사업의 2025년 8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실집행액/교부액(집행액)에 의해 산출하였음.

2) 전년도 연말에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집행되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산정된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추계되는 전년도 피해복구비의 집행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복구가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피해복구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에 전년도 피해복구비를 반영하는 경우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정규모가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및 근거 자료 관리 미흡 문제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흡하였거나 측정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조속히 개선하여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차년도 재난안전예산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해당 사업의 성과가 적정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재난안전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 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예산안(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8)]

또한, 「재난안전법」 제10조의3 제3항에서는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9)]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안에 대한 사전협의에서 최근 실시된 2025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를 35% 비중으로 반영하였음.[10)]

한편,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데, 이 중 30점은 각 재난안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실시된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성과달성도 측정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가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예를 들어, 경찰청의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성과지표인 '형사범 검거율(%)'의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여 만점인 15점이 부여되어야 하나 해당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반영" 등급으로 판정되어 15점에 0.7을 곱하여 산정된 10.5점만이 부여되었음.[11)]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행정안전부(2025.6.),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11) 2025년 실시된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이전 평가에서 제기된 성과지표 관련 지적사항의 반영수준에 따라 "반영"(1.0), "일부 반영"(0.8~0.9) 및 "미반영"(0.7)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음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성과지표 적절성 미흡사례)]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사업 대상 2025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사업별 지표)	지표 측정결과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30점 만점) (A×B)
			목표치	측정값	달성도 (A)	지표 적절성 (B)	
경찰청	형사・교통・여성 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형사범 검거율(%)	77.6	81.4	15	0.7	10.5
		마약사범 검거인원(명)	12.093	13.512	15	1.0	15
		합계					25.5
국토부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항공안전데이터 수집, DB화 관리 및 위험분석 활용률(%)	100	100	30	0.7	21
	건설기계제작결함 시정사업	제작동일성조사	52	52	15	0.7	10.5
		안전기준 성능시험	88	88	15	0.7	10.5
		합계					21
	자동차안전도강화	자동차안전도평가 기준 강화 항목 건수	4	4	15	1.0	15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시행건수	19	19	15	0.7	10.5
		합계					25.5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정보화)	수정 및 갱신된 지하정보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률(%)	100	100	24	1.0	2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만족도	80	81.7	6	0.7	4.2
		합계					28.2
	항공안전교육훈련	교육 수료율	95	76.08	14.4	0.7	10.1
		교육 만족도	4.5	5	12	0.7	8.4
		합계					18.5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항공교통 관제안전 목표 달성(하향지표)	0.088	0.064	30	0.7	21
기후부	수문조사시설설치 및 개선	수위관측소 이중화 설치율(%)	35	36	9	1.0	9
		AI홍수예보 구축 공정률(%)	100	101	12	0.7	8.4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 공정율(%)	40	42	9	1.0	9
		합계					26.4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확충	5	6	21	0.7	14.7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개선	개선	4.5	1.0	4.5
		집중측정소 확충	1	1	4.5	1.0	4.5
		합계					23.7
	국가하천정비	국가하천 안전제방 안전율	81	81.1	30	0.7	21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금강수계)	할당시설 사업장 수질측정률(%)	90	100	30	0.9	27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사업 대상 2025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사업별 지표)	지표 측정결과				성과달성도
			목표치	측정값	달성도 (A)	지표 적절성 (B)	측정결과 (30점 만점) (A×B)
성평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도	88.0	87.8	15	0.7	10.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도	87.8	89.9	15	0.7	10.5
		합계					21
외교부	사이버안보외교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대테러 관련 국제논의 주도 및 참여 건수(신규)	4	6	15	0.9	13.5
		대테러 관련 정부·학계 논의 활성화 건수(신규)	7	9	15	1.0	15
		합계					28.5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안전 종합규제지수	86.7	90.0	30	0.7	21
해수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정보화 (정보화)	전자민원처리율	88	89.4	15	0.7	10.5
		사용자만족도	80	87	15	0.7	10.5
		합계					21
식약처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율(%)	30	37.2	30	0.7	21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실태조사 결과공개율(신규)	80	97.6	30	0.9	27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외품 품질모니터링 적합률(%)	95%	98%	30	0.7	21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검사 적합률(%) (하향지표)	0.96	0.96	30	0.7	21
	마약류안전관리강화	마약류폐해대국민인식도(점)	135	143.3	30	0.7	21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운영	식의약 위해사건 대응률(%)	41	43.3	30	0.7	21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천연물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만족도(점)	70	81	15	0.7	10.5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 적합판정서 발급률(%)	27	59.6	15	0.7	10.5
		합계					21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88.3	90.6	6	0.7	4.2
		표준품 안정성시험 수행률	97	100	6	0.7	4.2
		신종 마약류 의존성 시험 수행률	92	92	6	0.7	4.2
		마약류 표준물질 확보율	95	95	6	0.7	4.2
		규제조화교육에 대한 APEC 회원국의 이해도	32	32.1	6	1.0	6.0
		합계					22.8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사업 대상 2025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사업별 지표)	지표 측정결과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30점 만점) (A×B)
			목표치	측정값	달성도 (A)	지표 적절성 (B)	
해경청	수상레저관리	수상레저 관리 전문성 강화	600	623	15	1.0	15.0
		수상레저 사고예방 홍보활동 만족도	90.0	92.0	15	0.7	10.5
		합계					25.5

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하향)’ 지표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미흡으로 0점이 부여되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 측정결과에 관한 증빙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예를 들어, 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은 불법 풍속사범 단속지수에서 목표치인 32점을 초과하는 34.1점을 취득하여 지표상 성과의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였으나, 증빙 자료가 미흡하여 측정결과에 0점이 부여되었음.[12)]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증빙자료 미흡 사례)]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사업 대상 2025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사업별 지표)	지표 측정결과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30점 만점)
			목표치	측정값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불법 풍속사범 단속지수(점)	32	34.1	0
	교통안전활동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하향)	4.92	4.88	0
	교통과학장비관리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하향)	0.87	0.83	0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소년범죄예방활동 지수(%)	90	114.4	0
		가정폭력 사건 대응 지수(%)	63	66.7	
성평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가해 아동·청소년 젠더감수성 및 심리 종합 변화율	11	11	0
소방청	소방행정정보화(정보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개선율	70	해당없음	0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및 관리수준 만족도	70	해당없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년 수행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성과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차년도 재난안전예산안에 관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므로,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신뢰도 저하는 차년도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증빙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면 성과달성도와 상관 없이 0점이 부여됨.

따라서,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적절성 문제가 확인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실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단계적 추진 필요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 포함 70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정보시스템에 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9월 26일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0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음.[13] 특히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있던 96개 정보시스템은 서버가 전소되어 복구작업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복구작업을 수행하는 한편,[14]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1,521억원 규모[15]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음. 10월 21일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에는 전산장비 중 서버·스토리지 구매비용 및 기타 장비 임차비용(1,303억원), 기반 시설 복구비(156억원) 및 데이터 분석·복구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6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16]

과거 정부는 미국의 9·11테러사태 발생 등을 계기로 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대책 수립 차원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17]을 마련한 바 있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예: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해'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을 마련할 것이 강조된 바 있음.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복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시설 측면에서는 주센터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분류됨.

재해복구센터는 구축 및 운용방식에 따라 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자원이 공유되고 서비스 제공이 주센터와 원격지 센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 ② 실시간으로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연동되나, 재해복구센터의 서비스 제공은 재해발생 시에만 이루어지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 및 ③ 데이터만 재해복구센터

13) 행정안전부는 당초 647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709개로 정정(10.9.)하였음.

14) 화재발생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10월 25일 기준, 장애가 발생하였던 정보시스템 709개 중 72.1%인 511개가 복구되었음.

15)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추정한 복구비용(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클라우드 전환 등을 적극 고려함에 따라 추가 투입비용이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

16) 행정안전부(2025.10.21.),「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예비비 1,521억원 국무회의 의결」

1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2005.12.),「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

에 주기적으로 보관하다 재해 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콜드 사이트(Cold Site)' 방식 등으로 구분됨.

이론상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은 시차 없이(RTO=0) 복구가 가능하나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비용이 가장 크고, 액티브(Active)-스탠바이(Standby) 방식 역시 사실상 시차 없이(RTO≒0) 복구가 가능하나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비용이 큰 편이며, 콜드사이트(Cold Site) 방식은 초기투자 및 유지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나 복구시간(RTO)이 수주~수개월까지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18]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용방식 구분]

용어	구축 및 운용방식	목표 복구시간(RTO)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비용
액티브-액티브 (Active-Active)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동시 가동	0	높음
액티브-스탠바이 (Active-Standby)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재해발생 시 가동	≒0	높음
웜 사이트 (Warm Site)	일부 정보자원에 한하여,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 **(일부에 한하여 액티브-스탠바이 방식 운용)**	수시간 ~ 1일	비교적 저렴
콜드 사이트 (Cold Site)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 재해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구	수주 ~ 수개월	가장 저렴

자료: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2005.12.), pp.15~16.

한편, 정부는 「정부시스템 등급분류 가이드」상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각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업무영향도(40%), 사용자 수(50%) 및 서비스 파급도(10%) 등을 고려하여 1등급(최고)에서 4등급(최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등급 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수가 많고, 다수의 타 업무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중단되면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함.

18) RTO는 목표복구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의 약어로, 재해복구시스템의 기대성능에 관한 지표로 상용됨.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table>
<tr><th>측정
항목</th><th>설명</th></tr>
<tr><td>업무
영향도
(40%)</td><td>○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table>
<tr><th>점수</th><th>기준</th></tr>
<tr><td>1등급</td><td>-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td></tr>
<tr><td>40</td><td>-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td></tr>
<tr><td>35</td><td>-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td></tr>
<tr><td>30</td><td>-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td></tr>
</table></td></tr>
<tr><td>사용자수
(50%)</td><td>○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table>
<tr><th colspan="2">내부업무</th><th colspan="2">대국민 업무</th></tr>
<tr><th>점수</th><th>기준</th><th>점수</th><th>기준</th></tr>
<tr><td>-</td><td>-</td><td>1등급</td><td>100만명 이상</td></tr>
<tr><td>50</td><td>1만명 이상</td><td>50</td><td>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td></tr>
<tr><td>45</td><td>1천명 이상 1만명 미만</td><td>45</td><td>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td></tr>
<tr><td>40</td><td>1백명 이상 1천명 미만</td><td>40</td><td>1천명 이상 1만명 미만</td></tr>
<tr><td>35</td><td>1백명 미만</td><td>35</td><td>1천명 미만</td></tr>
</table>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td></tr>
<tr><td>서비스
파급도
(10%)</td><td>○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table>
<tr><th>구분</th><th>0개</th><th>1~9개</th><th>10~49개</th><th>50개 이상</th></tr>
<tr><td>점수</td><td>0</td><td>5</td><td>10</td><td>1등급</td></tr>
</table></td></tr>
<tr><td>등급산정</td><td>○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이상을 종합하면,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재해복구시스템(예: 액티브-액티브 방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나,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28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128개 1등급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현황을 보면, 48.4% 비중인 62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센터가 미구축되었고,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된 66개 정보시스템 중 '콜드사이트' 방식으로 구축된 13개 정보시스템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1등급 정보시스템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현황]

(단위: 개)

부처명	1등급 정보시스템 수 (A+B)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여부				
		구축				미구축 (B)
		합계 (A)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콜드사이트	
경찰청	11	7	2	1	4	4
공수처	1	1	-	-	1	-
과기부	3	3	-	3	-	-
관세청[1]	18	-	-	-	-	18
고용부	7	5	-	5	-	2
교육부	5	5	-	4	1	-
국세청	3	3	-	3	-	-
국조실	2	2	-	2	-	-
국토부	12	4	-	4	-	8
권익위	1	-	-	-	-	1
금융위	5	5	-	3	2	-
기상청	7	7	4	3	-	-
기재부	2	2	-	2	-	-
기후부	10	5	2	3	-	5
농식품부	1	1	-	-	1	-
문체부[2]	1	-	-	-	-	1
방사청	1	-	-	-	-	1
법무부	2	1	-	-	1	1
법제처	2	-	-	-	-	2
보훈부	1	-	-	-	-	1
복지부[3]	9	9	-	8	1	-
산림청	1	-	-	-	-	1
소방청	1	1	-	-	1	-

(단위: 개)

부처명	1등급 정보시스템 수 (A+B)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여부				
		구축				미구축 (B)
		합계 (A)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콜드사이트	
식약처	2	-	-	-	-	2
외교부	1	1	-	1	-	-
해경청[4]	1	-	-	-	-	1
행안부[5]	18	4	1	2	1	14
합계	**128**	**66**	**9**	**44**	**13**	**62**

주 1) 관세청은 18개 정보시스템 모두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으로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주 센터인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재는 재해복구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2) 문체부는 2026년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 예정
3) 산림청은 2026년 ISMP 추진 예정
4) 해경청은 2026년 ISP 추진 예정
5) 행안부 소관 14개 재해복구센터 미구축 정보시스템 중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은 2026년 예산안에 1년차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재해복구센터 구축 추진 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민생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상 ‘범죄’ 유형에 대한 계획내용이 민생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등 일부 유형의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생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가 발표(2025.9.)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을 위한 민생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민생범죄 대응 강화 차원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19] 2025년 10월에는 경찰청 산하기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격상시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기구인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을 개소하였음.[20]

한편, 정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사고’의 세부유형으로 ‘범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안 기준 7개 부처의 20개 세부사업에 3,51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예산안 기준 '범죄' 유형 재난안전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단계	2026년 예산안
경찰청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대비/대응	16,004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예방	24,70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대비/대응	12,228
	사이버수사역량강화	대비/대응	14,875
	사회적약자보호활동	대비/대응	18,462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대비/대응	19,620
교육부	대학내성범죄근절및안전환경조성	예방	341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예방	13,599
법무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대비/대응	3,787
	전자감독	예방	37,266
복지부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	예방	52,369
성평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대비/대응	45,319

19) 경찰청 보도자료(2025.3.17.), 「상반기 주요 민생범죄 집중단속 시행」

20) 경찰청 보도자료(2025.10.15.), 「전기통산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경제범죄수사)」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단계	2026년 예산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대비/대응	20,783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예방	4,798
	성폭력피해자지원	대비/대응	40,394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예방	5,092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예방	2,701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복구	8,595
해경청	범죄수사활동	대비/대응	9,539
	외사경찰활동지원	대비/대응	1,377
합계			**351,85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주된 대상이고, 민생범죄 중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25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민생범죄 대응 강화 기조에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중 '범죄' 유형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신종범죄 증가 등을 반영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정폭력 피해 최소화 추진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예방 및 재범을 방지 •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발견을 위해 지역 사회 관계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강화
추진체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 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등 **〈법무부〉** • 제도 개선 및 재범방지 등 **〈경찰청〉** •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제도 개선 •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활동 • 가정폭력 신고접수·초기 대응, 가해자 수사 • 학교폭력 사안 대응, 위기청소년 선도·관리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기반으로 지원·연계망 구축하여 지원

자료: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pp.374-384

따라서, 정부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민생범죄 대응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현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별 검토

(가) 사업방식의 개선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현행 사업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예견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경찰 운영 사업(경찰청)

경찰청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 및 '지역경찰 운영' 사업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규정상 임무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있으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보아 지휘체계 혼선 및 현장 대응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동순찰대의 임무 범위는 범죄취약지 도보순찰에서부터 간첩·테러·국가비상사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한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지역경찰 역시 순찰근무를 통해 범죄예방, 초동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1조 동원 규정에 따라 대간첩작전 등 비상사태에도 투입될 수 있어 기동순찰대와 업무 범위가 상당히 중첩되는 실정임.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의 업무범위]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임무) 기동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2. 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 **3.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 **4. 중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5. 간첩, 테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 수요에 대한 지원** 6. 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 7. 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 8.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제25조(순찰근무) **③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범법자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제31조(지역경찰의 동원)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1.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치안 활동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자료: 기동순찰대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처럼 두 조직의 임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상이한 배치 단위(시·도경찰청, 지구대·파출소)로 운영되는 구조는 지휘체계 혼선과 현장 대응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실제 사건 발생 시 대응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휘·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21] 기동순찰대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휘부·관리자 모두 지역경찰과의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22] 지역경찰의 경우에도 응답자 1,148명 중 44.1%가 임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실제 지휘·관리 상황 및 일선 대응 상황에 있어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의 운영 목적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상적 범죄 예방 순찰에서부터 국가적 비상사태 대응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휘체계 혼선과 일선 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경찰청)

경찰청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총포·화약 소지허가의 갱신 안내를 위한 우편료, 소지허가증 발급기 교체,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1) 「기동순찰대 효과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 ㅇ 설문기간: 2025. 8. 8. ~ 8. 14.
- ㅇ 설문대상: 지휘부(시도청장·서장) 258명, 관리부(부·과장) 1,884명, 지역경찰 1,148명
- ㅇ 설문내용: 기동순찰대 인식·활용도, 규모 적정성, 활동 필요분야, 보완·개선방안 등

22) 기동순찰대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응답 결과
- ㅇ 지휘부: 인력조정(55.0%)과 **역할 차별화(55.0%)** > 署·기순대 협업강화 45.7%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응답자의 62.0%는 현재 인력이 많다고 응답
- ㅇ 관리자: **역할 차별화(58.2%)** > 인력조정(51.2%) > 서·기순대 협업강화 42.6%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응답자의 69.5%는 현재 인력이 많다고 응답
- ㅇ 지역경찰: 112신고처리 지원 70.8% > **기순대임무 명확화 44.1%** > 심야근무 31.0%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서술형) 대다수가 112신고처리 지원이나 야간근무 확대 등 요구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에 의하면, 등기우편료 단가는 동일하나 「총포화약법」개정에 따른 소지허가 갱신 안내 건수가 2025년 48,000건에서 2026년 123,000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우편료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23)]

등기우편료의 단가의 건당 발송 요금은 2,500원으로 모바일 발송 단가(176원) 및 일반우편 단가(약 476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모바일 등 발송 방식을 변경할 경우 우편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24)]

현행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은 갱신 안내의 실시가 가능하다고만 규정[25)]하고 있고 안내 방식이나 송달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소지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 등으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례로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시 사전 동의자에게 이메일·문자(SMS)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갱신대상자 확대에 따라 우편료 증가가 예상되므로 발송 방식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전수신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업은 기존의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부 무기류에 대하여 소지허가 갱신 절차를 전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무기류의 규격 및 갱신자의 결격요건 등을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는 것은 요건 판단에 한계가 있음.

---

23) 경찰청은 2025년 전체 총포 등 무기류 소지자 367,687명의 약 1/3(갱신주기 3년)을 반영하여 2026년의 갱신 안내 대상자(123,000명)를 산출함.

[총포·화약류 등 소지자 및 갱신자]

(단위: 명)

구 분	2023		2024		2025	
	소지자	갱신자	소지자	갱신자	소지자	갱신자
총포	86,262	8,958	88,734	8,048	89,192	13,363
도검	42,592	-	44,383	-	44,553	-
분사기	177,691	-	179,715	-	203,969	-
전자충격기	28,733	-	29,133	-	29,241	-
석궁	710	-	721	-	732	-
합 계	338,011	8,958	344,710	8,048	**367,687**	13,363

주) 2025년 2월 기준
자료: 경찰청

24) 총포 소지자 특성상 농촌지역 중·장년층이 주요 안내 대상이었으나 갱신대상인 무기류의 다양화로 지역 및 연령 특성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 특히 모바일 고지의 경우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료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총포 등 무기류의 소지허가의 갱신 절차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면담을 통하여 결격사유 등 요건 확인에 따라 갱신 허가증이 발급됨.

이 사업은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갱신 대상이 되는 무기류의 확대에 따라 일부 무기류에 대하여 소지허가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기존에 운영하던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시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와 무기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갱신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총포 등 무기류의 규격 및 형태와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비대면 온라인 절차로 이루어지게 됨.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시 변화]

도입 전		도입 후
▸총포(10만정) 3년 단위 갱신제도 - 경찰서 방문시 허가갱신 가능	⇨	▸도검·분사기 등(54만정) 갱신제도 도입 - 분사기·전자충격기 온라인으로도 허가갱신 가능
▸대상자 대면을 통해 **무기 실물 확인**이 가능		▸위·변조 확인 기능 활용, **무기류 사진을 제출**받아 실물확인 가능
▸'13년부터 사용 중인 구식 UI		▸최신 UI 활용으로 업무능률 향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시스템 기능 활용 가능		▸크롬·엣지 등에서도 시스템 기능 활용 가능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현재 계획 상 위험성이 낮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에 한정하여 온라인 갱신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나, 이들 역시 불법 개조나 성능 조작 등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영향 등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26]에 대하여 온라인 절차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찰청은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제출 서류와 사진의 위·변조를 철저히 방지하고,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명확한 허가요건 판단이 어려워 추가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세부 요건과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포 등 무기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통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과거 유사사업인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 지원 시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과거 ‘만 55세 이상 퇴직자’ 중 해당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 소지자를 건설업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였음.

이후 2021년 제2회 추경(7월)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지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건설업·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만 계속 지원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원을 중단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작업 공정이 변경되어 불시 방문 효과가 큰 건설업·조선업과 달리 제조·서비스업은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채용이 부진하여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27)]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과거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지원예정인 200명의 일터 지킴이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④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 사업(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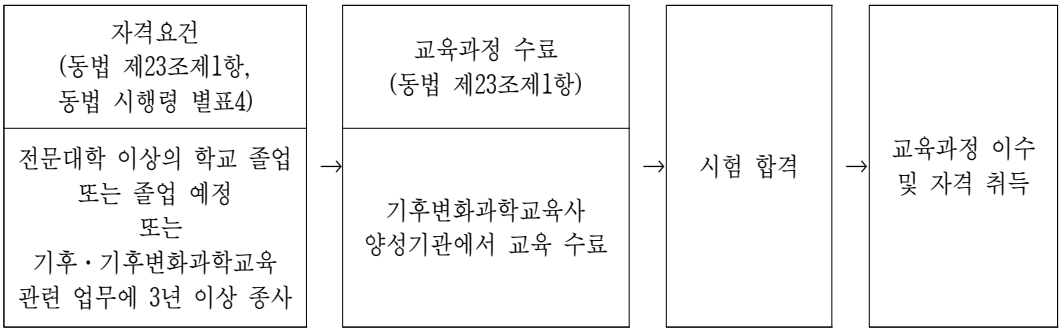
기상청은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 사업을 통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27) 제조·서비스업은 위험한 작업공정 및 위험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업 공정이 일정한 분야이므로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을 신청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합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 절차]



그런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법의 위임을 받아 자격요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으로, 제3호는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5년 10월 기준으로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내용]

	교육과정 관련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28])	**시험 관련**
규정이 필요한 내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시험 과목, 절차 등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	
2025년 10월 기준	고시 마련되지 않음	별도의 규정 없음

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근거 법률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29)]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과학교육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취득 후에도 활용처가 제한될 수 있음.

이와 같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어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특히,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 기후·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할 만큼의 유인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2026년 사업이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보호지원단 2개 조직 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산림재난대응단의 규모(9,272명), 고용기간 확대(10개월)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산림보호지원단(64명)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림청은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6개월), 산사태현장예방단(5개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개월)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대응단(10개월)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함.

---

29)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업무 관련 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시기별·기간별로 분산 운영되던 민간 지원 인력을 연중 10개월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체재]

구분	2025년				2026년
종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폐지)	산사태현장예방단 (폐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폐지)	→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주요임무	산불예방 및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산불진화 및 잔불 정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 발생지 현지 확인, 응급복구 지원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발생조사, 돌발 병해충 등 발생지 긴급방제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연중 대응
사업기간	2003~2025	2013~2025	2009~2025		**2026~**
인원	11,864명 (국 1,841명 / 지 10,023명)				9,272명 (국 340 / 지 8,932)
	9,604명 (국 1,405명 / 지 8,199)	760명 (국 108 / 지 652)	1,500명 (국 328 / 지 1,172)		
운영기간	**6개월 (단기)**	**5개월 (단기)**	**10개월 (장기)**		**10개월 (장기)**
임금(1일)	80,240원	80,240원	80,240원		90,560원
보조율	40%	40%	50%		40%

자료: 산림청

한편 통합조직인 산림재난대응단과 별도로 기존의 산림보호지원단은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지원단은 전국 국유림관리사무소에 64명(사무소당 3~4명)이 배치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산림 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함.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보호지원단 비교]

구분	산림재난대응단(신설)	산림보호지원단
주요임무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연중 대응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계도 및 산지정화 활동 등
사업기간	2026~	2007~계속
인원	9,272명 (국가 340 / 지자체 8,932)	64명 (국가 64)
운영기간	10개월(장기)	10개월(장기)
임금(1일)	90,560원	82,560원
보조율	40%	-

자료: 산림청

그러나 단기로 운영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6개월), 산사태현장예방단(5개월)이 장기 일자리(10개월)로 전환됨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기간 전후에도 해당 인력이 산림보호지원단이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이 9,272명(국가 340명 / 지방 8,932명)에 달하고 고용기간도 10개월이므로, 기존의 산림보호지원단이 담당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등의 업무는 산불·산사태 방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림재난대응단이나 산림보호지원단 모두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의 지휘·통제 하에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업 관련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령화로 인한 진화업무의 비효율적 운용과 안전사고 문제는 통합되는 산림재난대응단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고령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과정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3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인력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산사태현장예방단	12	20	41	215	469 (62.0%)	75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9	23	49	217	1,311 (81.0%)	1,61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	139	527	1,649	7,071 (74.9%)	9,446

주)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025년 8월말 현원 기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나누어 운영하여 2025년 2월말 현원 기준
자료: 산림청

30) 평균 61세·최고령 81세…산불 최전선에 선 위험한 노인들(노컷뉴스, 2025.3.25.) /매년 산불 덩치 커지는데…진화대 95%는 비전문 인력인 현실(한겨레, 2025.4.2.) / 대형화 되는 산불…진화 인력 전문화 시급(KBS뉴스, 2025.4.2.)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소방청)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진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

대형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인력들은 장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024년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심리지원 상담 결과에 따르면, 출동대원 2,204명 중 약 12.5%인 275명의 인원이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 중 70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긴급심리지원 상담 결과]

(단위: 명)

구분	계	전남	광주	전북	중구본	경남	충남	서울	충북	경기	대전	부산	세종	경북
출동대원	2,204 (100.0)	1,186	339	180	153	68	76	56	50	46	34	6	6	4
치료·관리 필요	275 (12.5%)	243	21	1	9	-	-	-	-	1	-	-	-	-
치료필요	70 (3.2%)	52	16	-	1	-	-	-	-	1	-	-	-	-
관리필요	205 (9.3%)	191	5	1	8	-	-	-	-	-	-	-	-	-

주) 치료 필요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후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한 사람이며, 관리 필요는 치료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1,125명에 대해서도 긴급심리지원을 통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142명(12.6)으로 확인하였고, 전원 병원으로 연계하였음.

그러나 2025년 7월 29일 이태원참사 당시 투입된 40대 소방관이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2025년 8월 20일에는 이태원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관이 10일 동안 실종 후 숨진 채로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건들은 참사 현장을 목격하여 발생한 트라우마 등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수년 뒤에 증상이 발현됨을 시사함.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참사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을 단발적·임시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추적관찰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마음건강 설문조사・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은 1년 단위의 신청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방관이 매해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건강의 악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대형 재난・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추적관찰하고 마음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⑦ 드론 조종교육 사업(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드론 조종교육' 사업을 통해 드론 운용직원의 조종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드론 보유 대수 증가 및 순환보직에 따른 신규 교육 수요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함정에 배치된 드론 수와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드론 수에 비해 교육인원이 2 ~ 3배 가량 많음.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드론 조종교육을 이수한 직원 95명 중 35.8%인 34명은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드론 조종교육자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육인원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비율)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2021	18	14	4 (22.2%)	1
2022	16	11	5 (31.3%)	3
2023	33	13	20 (60.6%)	12
2024	28	23	5 (17.8%)	23
합계	95	61	34 (35.8%)	39

자료: 해양경찰청

현재 드론 조종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비 지출은 2021년 9,4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드론 조종교육 예산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교육인원	예산액	집행액
2021	18	94	94
2022	16	93	93
2023	33	152	152
2024	28	156	156
2025. 8.	99	336	336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향후 함정에 드론을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 드론이 추가 배치되면 운용 인력 또한 증가해야 하고, 순환보직의 특성상 신규 조종자 교육이 반복되면서 교육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함정 탑재 드론 도입 현황 및 계획]

2021	2023 ~ 2024	2024 ~ 2025	2026 ~ 2027
무인헬리콥터 7대	무인헬리콥터 6대	무인멀티콥터 15대	4대(예정) (드론 종류 미정)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드론 조종인력의 지속적 확대와 교육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행 위탁 방식보다는 해양경찰교육원 중심의 자체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⑧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의 내내역사업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단계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인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31]

다만,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는 절차로, 평가자의 전문성은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토·승인을 통해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격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32]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의 경우 교육 대상 및 범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운영되는 것이 법률과 제도의 체계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공백 최소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안전성 평가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⑨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지원 및 확대,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HACCP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한 식품의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HACCP 인증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근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31)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억원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원

32) 현재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2211154호, 2025.6.30.)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근거법 상 HACCP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서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원은 납부된 수수료를 인증원 내부 규정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등 수수료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납하고 있음.

[HACCP인증 업무 관련 예산 징수 및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	자체집행
2021년	17,628	3,942,945	3,942,945
2022년	18,355	3,695,429	3,695,429
2023년	20,860	4,439,000	4,297,946
2024년	18,892	4,566,000	4,481,593
2025.9.	14,733	4,328,240	697,2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국고로 납입하게 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단체에 수수료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33]

따라서 HACCP 인증 수수료의 경우 인증업무 등의 필요 경비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4]

3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및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34)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제10조에서 수입금을 운영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심사수수료 규정」에서 HACCP 수수료를 인증원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25.2.)하였으므로, 이를 세입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인증원의 위・수탁사업에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⑩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 예시(안)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역 안전문화 확산·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유사해 보이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예시(안)]

❖ 사업 예시(안)

① 지역 업종·산업 특화 산재예방 사업

*(예시) ❶중대재해 다발 또는 고위험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시설 개선, 교육·캠페인 등 산재예방 패키지 지원 ❷소규모 건설 인허가권, 착공신고, 상하수도 맨홀 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 신고 연계 개별 현장 안전수칙 준수 점검 ❸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등

②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5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③ 지역 안전문화 확산 사업(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세미나, 포럼, 캠페인 등)

④ 지역 업종별 안전 네트워크 구축 ⑤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 심사 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시 중복여부를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공모신청에 대한 심사 시 유사·중복사업 제외 또는 사업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실제로 체계적인 사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점검 결과
1. 사업의 내용이 국가·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는지	□ 예(1-2로 이동) □ 아니오 (종료)
1-2. 사업 내용의 유사·중복이 있다면, 기존 사업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2. 유사·중복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지	□ 예 (2-1로 이동) □ 아니오 (2-2로 이동)
2-1.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 국비 □ 지방비 □ 국비+지방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2-1-2.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2-2.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3. 유사·지원 사업과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는지	□ 예(3-1로 이동) □ 아니오(3-2로 이동)
3-1.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된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3-2.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4. 1~3번 모두 중복임에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이 성립한 이후에 현장을 인지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도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를 통해 사전에 유해위험요인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지역별 사각지대의 기업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재예방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성과의 개선 노력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사업성과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① 산재예방시설 융자(융자) 사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융자)'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 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산재 현황을 보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났음.

2020~2023년간 1년을 단위로 하여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 실적을 비교하면 산재예방시설 도입을 위한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고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20~2023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 전·후(1년) 실적]

(단위: 명, %p)

	2020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1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2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3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사고사망자 수	△1	1	1	△3
사고재해자 수	6	9	5	33
사고사망률	△0.0084	0.0027	0.0029	△0.0093
사고재해율	△0.03	△0.04	△0.07	0.03
사고사망만인율	△0.84	0.27	0.29	△0.93

주) 2024년 지원사업의 지원 전후(1년) 증감은 2025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산출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30인 미만이 약 90%)이고, 융자지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 자체가 최근 5년간 평균 2,802명 증가함에 따라 사고재해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음.[35)]

이 사업 지원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2025년 8월말을 기준으로 총 2,541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약 12.4%인 314개소가 지게차 교체를 명목으로 융자를 받았음.

35) 또한,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장의 지원 전후 재해감소율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모두 감소하였으며, '융자지원시설 설치공정' 만으로 한정한 지원 전후 재해감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직접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노후 지게차 등을 교체해서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여 산재가 예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산재예방시설을 위한 융자가 아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저리 융자로 사용되는 측면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보임.[36]

[2021~2025년(8월말) 산재예방시설융자 품목별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		2,525	319,051	2,691	356,327	2,540	356,328	2,795	458,640	2,541	346,313
안전인증 위험기계 기구	소계	391	85,431	574	89,152	562	99,367	773	141,562	591	107,952
	프레스	194	49,976	226	39,199	172	35,025	212	40,868	136	30,753
	크레인	41	4,820	35	5,382	47	6,656	60	10,143	28	3,857
	사출성형기	104	23,615	162	22,829	126	18,773	166	23,050	111	14,318
	전단기, 절곡기	42	6,054	151	21,742	168	22,464	119	16,496	99	13,680
	기타	10	966		-	49	16,449	216	51,005	217	45,345
자율안전 확인대상	소계	928	179,831	1,119	222,445	806	178,635	1,587	277,190	1,263	181,970
	공작기계	654	129,916	624	116,318	574	126,457	1,279	217,678	1037	147,310
	목재가공용 기계	127	11,789	153	17,298	119	14,250	132	13,268	138	12,462
	산업용로봇	17	4,834	19	4,181	24	5,068	37	10,248	21	2,706
	연삭기, 연마기	51	6,231	35	6,090	40	9,752	42	8,614	43	6,897
	기타	79	27,060	288	78,559	49	23,107	97	27,382	24	12,595
작업환경 개선	소계	77	18,323	67	14,628	256	45,833	158	29,067	370	43,745
	국소 배기장치	8	2,020	17	3,077	84	12,769	21	3,880	1	150
	기타	69	16,303	50	11,552	172	33,065	137	25,187	369	43,595
기타	소계	1,129	35,466	931	30,102	916	32,493	277	10,822	317	12,646
	지게차	1,122	34,422	930	30,002	916	32,493	277	10,822	314	12,256
	기타	7	1,044	1	100	-	-	-	-	3	390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자동제어장치(안전속도) 탑재 설비 지게차 등 스마트 안전 품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융자지원 품목을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기여하도록 설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6) 지게차 산업재해는 과속·과적·충돌, 경사면 작업이나 과속 중 추락 등으로 발생함.

②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통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26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향후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실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정식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6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따라서 향후 정식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실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획한 규모의 지킴이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연초 예정된 지킴이의 채용・위촉[37]을 위한 인지도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 사업의 경우 한시적 사업으로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 제38조[38]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향후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7) 노동단체(133개 본부・지부)와 경영자총연합회(15개)별 약 1명씩 위촉 예정임.

3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③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사전요건으로 GMP를 운영하고,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임.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부적합 원인 중 ‘기능성원료 함량 부적합’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부분 원료 칭량시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	26 (49%)	27 (73%)	27 (77%)	33 (58%)	27 (64%)	140 (63%)
그 외 기준·규격 부적합	27 (51%)	10 (27%)	8 (23%)	24 (42%)	15 (36%)	84 (38%)
계	53	37	35	57	42	224

주) 자가품질검사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원료 함량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아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GMP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스마트 GMP를 구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업소의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구축률이 낮음.

[스마트 GMP 구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매출액				계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전체 제조업소 수	11	45	140	308	504
스마트GMP 구축업소 수	5 (45.5%)	8 (17.8%)	3 (2.1%)	2 (0.5%)	18 (3.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지출규모 과다추계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사업수요 대비 지출규모를 과다추계하여 예산안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대수가 증가하거나 같게 편성되었음.

2026년 예산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건설기계 조기폐차로 87억 5,000만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중 건설기계 전동화로 219억 4,5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으로 23억 2,100만원,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5,000대 편성 중 1,091대(21.8%), 건설기계 전동화는 150대 편성 중 19대(12.6%),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220대 편성 중 42대(19.0%),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3개소 편성 중 2개소(66.6%)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5,000대 편성 중 735대(14.7%), 건설기계 전동화는 455대 편성 중 245대(53.8%),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70대 편성 중 22대(31.4%)만이 집행되었고,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집행된 개소가 없는 등(0%)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 및 실제 집행대수]

구 분	2024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4년 실제 집행대수 (실집행률)	차이	2025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5년 8월말 실제 집행대수	2026년 예산안
건설기계 조기폐차	5,000대	1,091대 (21.8%)	3,909대	5,000대	735대 (14.7%)	5,000대
건설기계 전동화	150대	19대 (12.6%)	131대	455대	245대 (53.8%)	1,155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220대	42대 (19.0%)	178대	70대	22대 (31.4%)	82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3개소	2개소 (66.6%)	1개소	3개소	0개소 (0%)	3개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은 건설기계 전동화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각각 2025년보다 700대, 12대 더 많이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조기폐차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은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심지어 이러한 편성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것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지자체 수요조사보다 1,371대 많은 5,000대, 건설기계 전동화는 492대 많은 1,155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4대 많은 82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1개소가 많은 3개소로 편성되었음.

[2026년 수요조사와 예산안 편성대수]

구분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편성대수	차이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건설기계 조기폐차	3,629대	5,000대	1,371대	23억 9,925만원
건설기계 전동화	663대	1,155대	492대	36억 9,0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78대	82대	4대	1억 1,320만원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2개소	3개소	1개소	1억 5,0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과거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하수관로 정비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하수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할 계획인데,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에 달함.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7,487억 7,300만원의 예산안 중 1,443억 2,400만원(19.3%)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839억 4,800만원의 예산안 중 1,380억 2,500만원(17.6%)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9,359억 4,300만원의 예산안 중 1,936억 2,700만원(20.7%)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액과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액]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안(A)	748,773	783,948	935,943
실집행 이월액(B) (비율: B/A)	144,324 (19.3)	138,025 (17.6)	193,627 (20.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교부하였고, 결과적으로 2024년 총 3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4억 3,100만원의 재이월이 발생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2년 이상 이월액이 발생한 발생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2024년 실집행액	이월액	2년 이상 이월액
1	20	-	-	-	20	20
2	150	-	-	-	150	150
3	200	150	100	-	300	200
4	857	842	420	148	1,117	697
5	175	-	-	-	175	175
6	84	-	-	-	84	84
7	765	1,402	-	51	714	714
8	1,708	-	-	1,584	124	124
9	1,677	2,312	2,312	2,116	1,873	1,466
10	724	579	579	875	428	171
11	5,454	272	272	487	5,239	4,967
12	40	1,417	1,417	168	1,289	40
13	4	1,303	1,303	9	1,298	4
14	742	1,679	1,679	1,182	1,239	98
15	719	901	901	709	911	268
16	500	1,945	1,600	477	1,623	107
17	2,479	1,454	1,454	2,348	1,585	205
18	1,904	1,459	1,459	1,433	1,930	471
19	471	106	106	28	549	443
20	738	517	267	790	215	57
21	12,098	13,414	12,414	12,387	12,125	1,672
22	1,022	18,064	15,064	7,355	8,722	392
23	1,269	819	819	208	1,880	1,239
24	424	1,544	1,389	172	1,641	252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2024년 실집행액	이월액	2년 이상 이월액
25	129	245	245	2	372	127
26	598	-	-	500	98	98
27	491	100	100	386	205	105
28	2,792	3,219	3,219	4,548	1,462	244
29	336	-	-	-	336	336
30	140	172	-	-	140	140
31	626	1,489	1,293	82	1,837	621
32	100	214	214	308	6	6
33	106	222	222	54	274	52
34	129	100	100	34	195	95
35	272	-	-	-	272	272
36	70	-	-	-	70	70
37	2,456	2,939	2,939	4,698	697	249
합계	42,469	58,879	51,887	43,139	51,195	16,43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재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도 위반되고 있는 것임.[39]

그런데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조차 실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39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2026년에도 총 955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상반기까지 당해연도 교부액은 물론, 전년도 이월액조차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5년 교부액이 그대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③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2025년도 예산(2,078억 1,700만원)이 2024년(81억원) 보다 25.6배 급증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9개 품목[40]을 2025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6개 품목[41]을 시범사업으로 추가함에 따른 것임.

그러나 2025.8월말 기준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이 목표치(25%)에 미달해 집행액이 302억 1,800만원(집행률 14.5%)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고구마는 9.2%, 옥수수는 2.9%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였음.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가입률]

<table>
<tr><th>구분</th><th>목표 가입률</th><th>8월말 기준 실제 가입률</th></tr>
<tr><td>예산</td><td>207,817백만원</td><td>30,218백만원(14.5%) 집행</td></tr>
<tr><td rowspan="2">본사업 9개 품목
가입률</td><td rowspan="2">25%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td><td>판매완료: 가을감자 29.3%, 콩 21.9%, 양배추 17.0%,
고구마 9.0%, 옥수수 2.8%</td></tr>
<tr><td>향후 판매 예정 품목
: 보리·마늘·양파 10~11월, 포도 11월</td></tr>
<tr><td rowspan="3">시범사업 품목
가입률</td><td rowspan="3">15%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td><td>판매완료: 벼 19.3%, 감귤(만감류) 1.3%</td></tr>
<tr><td>판매 진행 중 품목 가입률(9.21 기준)
: 가을무 7.1%, 가을배추 22.9%</td></tr>
<tr><td>향후 판매 예정 품목
: 가을무・가을배추 9월, 단감・복숭아 11월</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농업인들이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수입안정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으나 보험료 부담이 높아 농작물재해보험보다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이처럼 낮은 가입률과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2,751억 8,100만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2]

40)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41)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42) 농식품부는 10월현재 보리・마늘・양파 등 판매 중이거나 향후 판매예정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④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중계기 218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중계기 설치 기관의 자부담(50%이상)이 존재하는 점과 2015년 이후 구축한 중계기가 총 250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설치 가능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중계기 설치지원 규모 18대의 12.1배인 218대의 중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7개 터널에 총 250대 중계설비를 지원하였음에도, 2026년 한 해 동안 그 87% 수준인 218대의 중계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설치 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통한 중계기 설치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신청시설 수		15	4	10	16	45
선정시설 수		2	4	9	12	27
중계기 설치 수	112	40	20	60	18	250
지원예산	1,362	370	200	593	178	2,703

주) 시설마다 신청하는 중계기 수가 상이하여 선정시설 수와 중계기 설치 지원 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담하나, 그 외의 공사비, 운용비용 등은 시설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비 지원에 상응하는 시설관리기관의 수요와 재정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관리기관에 사전 수요 조사(공문발송, 사업예고, 방문 협의 등)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사전 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이므로 실제 설치 가능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최근 4년간 연 평균 신청 건수 166건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다 많은 19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기술지원 규모 51개의 3.8배인 190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최근 5년간 기술지원 신청시설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166건의 신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19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설의 신청이 그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시설수]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조사중)	기술지원 신청시설
도로터널	1,684	532	1,684	153	1,655	133	1,630	91	1,630	43
철도터널	162	22	162	-	286	-	296	-	296	70
지하철역사	179	12	179	87	268	-	305	90	305	-
합 계	2,025	566	2,025	240	2,209	133	2,231	181	2,231	113

주 1) 기술지원 대상시설은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수신 불량으로 확인된 시설을 의미
2) 기술지원 신청시설은 시설관리기관이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세부자료를 제출한 시설을 의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히 2025년의 경우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2,231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113개(5.1%)만 기술지원 신청을 하였으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모집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수시 접수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⑤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소방청)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공항 인접부지(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공사비가 일부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동안 총사업비 4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사비의 경우 2024년에 12억 1,800만원, 2025년에 114억

9,500만원, 2026년에 39억 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임.[43]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2023~2027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현행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8,550	1,200	14	1,200	14	1,200	14	3,176	49	1,774	9
건설비	기본설계	542	218	40	324	60	-	-	-	-	-	-
	실시설계	858	-	-	813	94	-	-	-	-	45	6
	감리비	3,250	-	-	24	1	173	4	1,400	42	1,653	53
	공사비	29,513	-	-	1,218	5	11,495	39	3,909	15	12,891	46
	시설부대비	84	-	-	8	9	51	60	15	19	10	12
합계		42,797	1,418	3	3,587	9	12,919	30	8,500	23	16,373	35

자료: 소방청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따른 정비실 건립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2024년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였고, 2024년 편성된 12억 1,800만원은 전액 국립소방병원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2025년 7월에서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5년 편성된 공사비 114억 9,500만원 중 약 40%(약 45억 9,800만원)만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한 원인행위로 10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고, 남은 60%(약 68억 9,700만원)는 2026년도로 이월될 예정임.[44]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단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고
기본계획 수립		2022.5.	2022.5.	-
부지 선정		2021.12.	2021.12.	-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2023.8.~12.	2023.11.~2024.7.	7개월 지연
	실시설계	2024.1.~4.	2024.7.~2025.6.	1년 2개월 지연
토지보상		2023.3.	2023.12.	9개월 지연
공사		2024.9.~2026.3.	2025. 10. ~ 2027. 6.(예정)	1년 3개월 지연
시설완공		2026.3.	2027. 6.(예정)	1년 3개월 지연

자료: 소방청

전문적인 항공정비실이 건립될 경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며,[45] 이를 통한 헬기

43) 최초 총사업비는 320억원(2023년 착수, 2026년 완료)였으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을 위해 총사업비가 2024년 38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2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물가변동・설계의 도구현비용 등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428억원으로 증액되었음.

44) 결국 시설완공 또한 당초 계획인 2026년 3월에서 2027년 6월로 약 1년 3개월(15개월) 지연될 예정임.

가동률의 증가는 화재진압 역량 제고로 이어져 일선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방청은 119정비실 건립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건립되어 사업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⑥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인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그런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권고·실시('21.2월~'24.6월)되었으나,[46] 2024

45) 특히 AW139 헬기 기종을 기준으로 제작사별로 외주 정비를 맡겼던 정비들을 119항공정비실에서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정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1년 이상 운항한 AW139 기종의 경우 정비실 구축 전에는 50일 이상 정비기간이 소요되었다면, 정비실 구축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후 기체정비 기간 비교(AW139) 기준>

정비실 구축 전(前)	구분	119항공대						외주정비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50일 이상	28일 이상	50일 이상	2개월 이상	50일 이상	60일 이상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소	119항공대						제작사별 외주 정비업체						
정비실 구축 후(後)	구분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35일 이내	28일 이내	35일 이내	2개월 이내	30일 이내	40일 이상	40일 이상	3개월 이내
	장소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주 1) 시간, 개월, 년은 소방헬기의 운항 시간 및 기간임
2) 119항공대 정비는 119항공정비실 구축이후에도 자체정비 범위를 축소하여 존치함
(‘25시간~300시간’ → ‘25시간~100시간’)
자료: 소방청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년 하반기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접종량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코로나19 연도별, 접종대상별 접종 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접종실적			
연도	대상	계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2021	전국민	103,415,932	1,629,645	85,447,585	16,338,702
2022	전국민	30,943,359	595,699	30,320,747	26,913
2023	전국민	6,456,774	228,395	6,228,379	-
2024	고위험군[1)]	5,180,763	118,192	5,062,571	-
2025.8말	고위험군[1)]	253,460	25,673	227,786	-

주 1)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자료: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보상을 위한 기타보전금을 2025년 대비 9억 7,700만원(16.1%) 증액된 7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10.23.시행)에 따라 기존 ‘지원 영역’이 ‘보상 영역’으로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해보상 제도는 그동안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최대 3천만원) 등 지속적으로 국가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음에도 보상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접종량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이상반응 보상건수 역시 2023년 2,078건에서 2024년 239건, 2025년 8월말 기준 40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보상심사 신청 및 보상 현황]

(단위: 건)

구분	신청 건수	심의 건수	보상[1)]			
				진료비등	사망일시보상금등	장애일시 보상금
2021	47,784	8,618	3,433	3,433	1	-
2022	43,285	70,357	19,097	19,092	15	-
2023	6,686	15,694	2,078	2,076	7	-
2024	2,272	5,255	239	238	2	1
2025.8.	367	411	40	39	-	1
합계	100,394	100,335	24,887[2)]	24,878	25	2

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2)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6명,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명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보상건수 감소로 인해 기타보전금은 2024년도의 경우 본예산 100억 4,000만원 중 2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4.8%)되고 7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 8월말 기준으로도 집행률이 13.3%에 불과한 상황임.

[2024 및 2025년 8월말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4년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12,031	12,031	15,870	27,901	19,818	12,031	4,436	-	8,083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465	504	465	-	39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100	100	100	-	-
	- 기타보전금(310-04)	10,040	10,040	15,490	25,530	17,594	10,040	2,487	-	7,936
	- 민간위탁사업비 (320-01)	1,387	1,387	380	1,767	1,659	1,387	1,384	-	108
2025. 8월말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7,700	7,700	-	7,700	1,391	7,700	1,893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118	504	118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60	100	60		
	- 기타보전금(310-04)	6,033	6,033	-	6,033	298	6,033	8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1)	1,063	1,063	-	1,063	915	1,063	915		

자료: 질병관리청

⑦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국가결핵예방’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국내 생산 중단 결핵 치료제 구매를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결핵치료제 공급사업의 실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결핵환자 수의 지속적 감소,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성 변화에 따른 주사제 사용량 감소 및 단기 치료요법 확대 등 치료환경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결핵치료제 구입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345	106	949	779	787	146	289	91	336	집행중	336

주) 2025년 7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700만원임(실집행률 11.0%)
자료: 질병관리청

특히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년~'27년)」에 따라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 20명(10만명 당)을 목표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결핵환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5년간 결핵 치료제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

[결핵치료제 공급 사업 실집행내역]

구분	편성	집행
2021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62,500앰플(소요량)=15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7,980원(단가)×17,000바이알(소요량)=136백만원 클로파지민: 600원(단가)×64,000정(소요량)=38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1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4,430원×5,641팩=2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8,289원×9,570바이알=76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5백만원
2022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62,500앰플(소요량)=15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7,980원(단가)×17,000바이알(소요량)=136백만원 클로파지민: 600원(단가)×64,000정(소요량)=38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600천원(공급단가)×1,000병(소요량)=604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 1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85천원×4,160병=767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 12백만원
2023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31,000앰플(소요량)=77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11,000원(단가)×5,500바이알(소요량)=60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45,000원(단가)×4,166병(소요량)=604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46백만원	카나마이신: 2,486원×29,640앰플=74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 170천원×500병=85백만원×80%(선금)=67백만원 * 소아용 항결핵제 입고 지연으로 20% 이월(17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5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2024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31,000앰플(수요량)=77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11,000원(단가)×3,280바이알(수요량)=3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85천원(단가)×951병(수요량)=176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9,800원×4,950바이알=48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63천원×85병=14백만원 의약품 구매 부대비용 등: 29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사전 수요조사, 사용량·재고량에 대한 정기 조사 및 모니터링, 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해외 유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량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기 치료의 특성상 실제 사용과 예측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최근 공급이 중단된 다제내성결핵치료제(프로티온아미드)의 공급 필요성에 따라 긴급 도입이 결정되는 등 장기요법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결핵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근 환자 수의 감소 추세 및 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핵 치료제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소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⑧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전국의 노후한 위판장 시설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 사업은 2023년에 4개소, 2024년에 5개소, 2025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교부된 금액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4년은 16.9%가 집행되었으며, 2025년 집행률은 8월말 현재 16.3%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D)
2023	600	480	480	-	480	-	480	-	-
2024	11,940	9,510	9,510	480	9,990	1,691	8,299	-	16.9
2025. 8.	5,130	3,840	3,840	8,299	12,139	1,980		-	16.3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지별 사업진행상황을 보면 2023년 사업지로 선정된 4개소의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군산시수협 비응위판장은 2025년 8월에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

2024년 사업지로 선정된 5개소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동군수협 노량위판장만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실시설계(준비) 단계로 예산집행률은 0% ~ 11.8%임.

특히 제주시수협 본소위판장과 서천서부수협 활어위판장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서천서부수협 선어위판장은 실시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5년 연내에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지별 사업진행상황(2025. 10.)]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위판장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국비				이월액, 불용액 발생 사유	사업 진행상황
				지원 총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	서산수협 안흥항 위판장	2023 ~ 2025	6,000	3,000	3,000	1,814	60.5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9. 편성)	공사 중 (2025. 3. ~)
	보령수협 활어위판장	2023 ~ 2025	3,000	1,800	1,800	408	22.7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12. 편성)	공사 중 (2025. 7. ~)
	강진군수협 마량위판장	2023 ~ 2025	3,000	1,800	1,800	1,554	86.3	지방재정투자심사(2023. 10. 완료)로 사업지연	공사 중 (2025. 5. ~)
	군산시수협 비응항 위판장	2023 ~ 2025	6,000	3,000	3,000	150	5.0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12. 편성)	공사계약 완료 (2025. 8.)
2024	제주시수협 본소위판장	2024 ~ 2026	3,000	1,800	945	45	2.5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4. 12. 편성)	실시설계 중 (2025. 6. ~)
	서천	2024	6,000	3,000	1,140	-	0.0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실시설계 중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위판장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국비				이월액, 불용액 발생 사유	사업 진행상황
				지원 총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서부수협 활어위판장	~ 2026						(추경예산 2024. 12. 편성)	(2025. 10. ~)
	하동군수협 노량위판장	2024 ~ 2026	2,000	1,200	1,200	630	52.5	지자체 인허가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순연	공사업체 선정 완료 (2025. 7.)
	고성군수협 대진항 위판장	2024 ~ 2026	3,000	1,800	945	111	11.8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4. 12. 편성)	실시설계 공모 완료 (2025. 8.)
	서천 서부수협 선어위판장	2024 ~ 2026	6,000	3,000	105	-	0.0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2024. 12.)으로 예산 자체 이월(해수부)	실시설계 준비 중
2025	모슬포수협 활어위판장	2025 ~ 2026	2,000	1,200	42	-	0.0		사업지 선정 (2025. 7.)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안에 2024년 선정 4개소의 3년차 사업비 45억 6,000만원, 2025년 선정 1개소의 2년차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2026년 신규로 선정할 4개소의 1년차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후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⑨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데이터를 품질관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할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부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47] 2025년 8월말 기준 47개 기관의 81개 정보시스템에 소재하고 있는 약 1,800

종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 중 1,178종의 데이터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중 활용빈도·대체불가성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564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직접 연계 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의 연계주기, 값의 정확성, 결측치·이상치를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임.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 각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불분명함에도,[48]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중 약 절반 수준(47.9%)에 해당하는 564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활용방안	2026년 예산안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25.1월 개통) 총 1,800건의 데이터를 연계 완료 · 564건 데이터는 직접 연계를 추진하여, 연계 방식·주기·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을 확보	· 학계·민간기업에 고품질 재난안전 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안전 관련 연구, 서비스 개발, 산업적 활용 촉진	1,44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직접 연계 작업은 각 기관이 보유한 원데이터의 품질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급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⑩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HACCP 적용 등을 통한 수입식품 생산단계 안전 위해요인 분석 및 차단, 국내 생산식품 수출위생관리 지원 확대 등 수출입식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47)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https://www.safetydata.go.kr)

4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활용빈도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업을 통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49]에 따라 수입식품등[50]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51]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임.

현행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안전한 수입식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은 수입업체가 해외 위생평가기관의 위생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수수입업소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52]

---

4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 ·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0)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51)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 · 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함)을 말함.

이와 같이 등록 절차가 개선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의 실제 소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도개선에 따른 현지실사 소요 감소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지실사를 위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53][54]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지실사 집행 현황[55]]

(단위: 개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우수수입업소 등록점검 업소수	1	6	15	28
우수수입업소 등록점검 여비 총 소요예산[1)]	2,696,952	8,194,015	21,593,653	33,713,555

주 1) 출장자의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1개소 현지실사 시 유럽 지역 약 220만원, 미주 지역 280만원, 아시아 지역 110만원 소요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52)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예정('25.12)
(현행) 수입자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위생점검 보고서 제출 후 식약처 현지실사 통해 등록
(개정) 위생평가기관 위생점검 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여 신속 등록

53) 2026년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위한 예산은 2025년과 같은 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54)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기준 해외제조업수는 총 51,363개소이며 이 중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가 매년 800여 개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 수는 200개소에 불과('24년 280개소 수행)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개선으로 소요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위해 우려 해외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5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해외제조업소와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 접수된 해외제조업소를 묶어서 동시에 진행하며, 수출국 현지 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국외 출장 1회(입출국 기준) 시 4~8개소(이동동선 등 고려) 점검, 점검관 2인 1조).

(라) 보조사업 국비보조율의 적정성 문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여부 및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소방청)

소방청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소방청의 다른 지자체 보조사업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다소 높다는 점에서 적정 보조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소방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노후아파트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해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보조하고, 사업비의 20%는 지방이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최근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시·도별 예산이 2021년 총 187억 3,700만원에서 2025년 91억 2,100만원으로 약 51% 감소하였고, 2025년 7개 시·도의 소방시설 보급사업 예산이 3억원 미만, 11개 시·도 전년 대비 삭감, 1개 시·도의 경우 예산이 미반영되는 등 지방비 만으로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최근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도 예산 확보(지방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8,737	12,601	12,621.9	11,179	9,121.5
서울본부	1,140	1,140	1,549	1,037	1,470
부산본부	972	1,187	551.8	559	549
대구본부	500	500	500	500	200
인천본부	300	787	891	747	650
광주본부	828	887	920	864	1,035
대전본부	1,420	1,554	800	5	4.5
울산본부	162.4	223	223.1	244	298
세종본부	18.7	219	235	207	-
경기본부	1,005	1,437	2,065	1,483	878
강원본부	622	1,312	712	432	336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충북본부	405	362	362	492	591
충남본부	380	380	491	165	101
전북본부	649	465	236	464	427
전남본부	1,310	743	844	206	430
경북본부	883.5	519	569	630	505
경남본부	7,901	483	432	429	240
창원본부	198	360	912	376	374
제주본부	43.2	43	300	1,815	32

자료: 소방청

다만,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방청의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율은 40~5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56)]

아울러, 이 사업은 시·도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80%의 국고보조율을 설정하였으나,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별 재정여력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설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HACCP 인증지원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HACCP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체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시설개선자금 등) 및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이 사업은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HACCP 인증 정착을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시설 개선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규정하고 있고, 지원방식의 경우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국고보조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HACCP 인증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업체당 평균 900만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보조율 80%임.

[HACCP 인증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
지원업체 수	597	260	422	428	268
총 지원액	5,600	2,500	4,000	4,000	2,475
업체당 평균 지원액	9.4	9.6	9.5	9.3	9.2
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1천만원				

주) 해썹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러한 국고보조지원 방식은「식품위생법」제48조에서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57] 영세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이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인「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르면,[58]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지원 주체 중 하나인 지자체 차원의 참여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지원주체 확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59]

57)「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8)「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59)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서 적정 수준을 부담할 경우 지자체의 업체 점검 등 업무 부담 발생 및 업체의 자금 지원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13.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가. 개 요

(1)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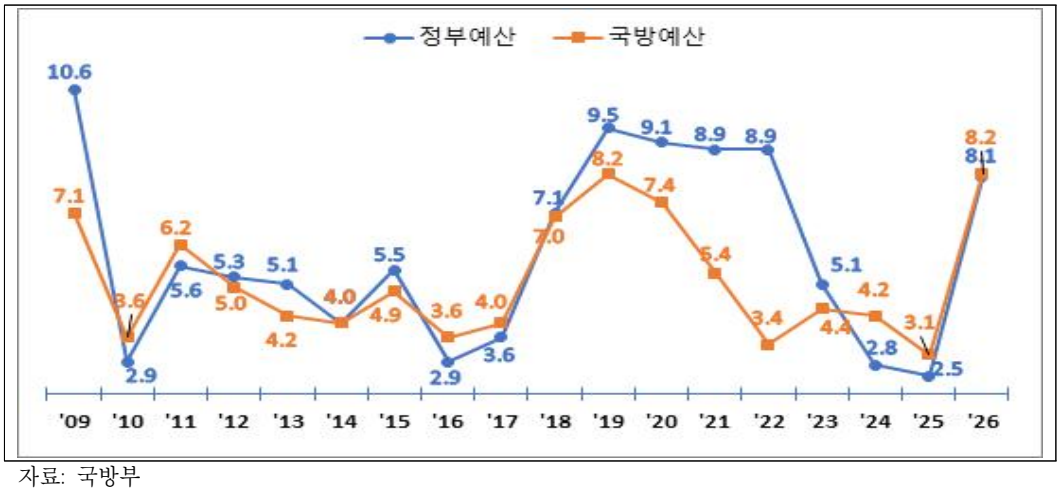
장병복지 사업은 장병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여 장병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향상 및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은 AI·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기술개발(R&D) 및 무기체계 도입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2) 현 황

국방 분야의 2026년도 예산증가율은 8.2%로, 이는 2019년도(예산증가율 8.2%)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임.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방부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국방 분야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6조 2,947억원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1,203억원(국방 분야의 69.6%)이고, 군사력 확충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원(국방 분야의 30.4%)임.

[국방 분야 재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안)	비 고
■ 전력운영비	434,007 (70.9%)	461,203 (69.6%)	·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0.03조원) · 급식단가 인상,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0.1조원)
■ 방위력 개선비	178,462 (29.1%)	201,744 (30.4%)	· 한국형 최신 전투기 양산 및 스텔스 전투기 연구(+1.1조원) · 첨단 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R&D(+0.9조원) · K-방산 육성 지원(+0.2조원)
합계	612,469	662,947	전년대비 +8.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p.59.

정부는 전력운영비의 경우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제공 등을 위해 장병복지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 5세대 전투기 개발과 같은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음.

한편, 다음의 표는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국방 분야 재원배분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력운영비는 2020년도 33조 4,723억원에서 2026년도 46조 1,20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반해 방위력 개선비는 2020년도 16조 6,804억원, 2021년도 16조 9,964억원, 2022년도 16조 6,917억원, 2023년도 16조 9,169억원, 2024년도 17조 6,532억원, 2025년도 17조 8,462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2026년도의 경우 20조 1,744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전체 국방 분야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2020년도 33.3%에서 2025년도 29.1%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30.4%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음.

[2020~2026년 국방 분야 재원배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 전력운영비	334,723 (66.7%)	358,437 (67.8%)	379,195 (69.4%)	400,974 (70.3%)	417,712 (70.3%)	434,007 (70.9%)	461,203 (69.6%)
■ 방위력 개선비	166,804 (33.3%)	169,964 (32.2%)	166,917 (30.6%)	169,169 (29.7%)	176,532 (29.7%)	178,462 (29.1%)	201,744 (30.4%)
합계	501,527 (100.0%)	528,401 (100.0%)	546,112 (100.0%)	570,143 (100.0%)	594,244 (100.0%)	612,469 (100.0%)	662,947 (10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연도별 본예산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가) 장병복지 지원 필요성

다음의 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할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9.3%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설문응답자 중 63.4%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군 간부의 군인 직업 추천 의향은 2019년 69.5%에서 2020년 67.1%, 2021년 58.8%, 2022년 54.2%, 2023년 29.3%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군 간부 중 직업 군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정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군인이라는 직업 추천 의향 설문조사(군 간부 대상)]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적극 추천(①)	가능하면 추천(②)	추천 (①+②)	가능하면 미추천(③)	적극 미추천(④)	미추천 (③+④)	모르겠음 (⑤)	합계
2019	1,792	20.5	48.9	69.5	19.6	4.0	23.6	6.9	100.0
2020	1,459	21.5	45.6	67.1	21.2	5.8	27.1	5.8	100.0
2021	1,547	15.6	43.2	58.8	26.4	7.6	33.9	7.3	100.0
2022	1,575	14.2	40.0	54.2	28.5	10.0	38.5	7.4	100.0
2023	1,395	6.7	22.7	29.3	38.5	24.9	63.4	7.3	100.0

자료: 국방부, “2024 국방통계 연보”, 2025. 11, p.342.

이와 관련하여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군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은 “노후생활보장”(43.5%)·“신분보장”(41.4%)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7.4%)·“근무환경”(7.4%)의 경우 낮게 나타남.

민간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군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신분보장(62.3%→41.4%)·보수(18.0%→7.4%)·승진(22.3%→15.9%)·근무환경(19.6%→7.4%) 등 모든 항목에서 5년 전에 비해 낮아짐.

[직업군인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근무여건 비교 설문조사(군 간부 대상)]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신분 보장	보수	승진	근무 환경	업무량	자기 개발	노후 생활보장	사회적 지위
2019	1,792	62.3	18.0	22.3	19.6	29.1	32.0	75.4	35.3
2020	1,459	64.4	19.5	25.3	19.6	27.7	32.0	78.9	38.3
2021	1,547	62.6	16.1	22.1	16.0	25.9	26.4	73.6	32.3
2022	1,575	54.3	12.3	21.0	13.2	22.8	26.6	65.1	28.1
2023	1,395	41.4	7.4	15.9	7.4	15.4	18.5	43.5	19.1

주) 전체 설문응답자 중 직업군인이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방부, “2024 국방통계 연보”, 2025. 11, p.344.

(나) 첨단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래전 양상은 전장 공간의 확대와 전투수단의 다양성, 전투형태의 정보화 등 근본적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래 전장 공간은 기존 육·해·공 등의 전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및 사이버 공간까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음.

전투수단은 기존 정밀타격 무기가 장거리로 확대 재편되는 한편,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무인 체계(UAV, 드론, 무인 수상정, 무인 차량 등)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전투형태도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 정보가 공유되고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전 양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는 동시에, 전장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1)]

(3)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은 군 장병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및 전투기・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총 18조 2,77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2)]

우선 장병복지 측면에서는,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 인상・단기복무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급식단가 및 동원훈련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음.

다음으로 첨단 무기체계 도입 측면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2개 부처, 46개 사업에 총 18조 2,77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업 수 기준으로는 방위사업청 35개, 국방부 11개이며, 예산안 규모로는 국방부 15조 1,479억 9,700만원, 방위사업청 3조 1,295억 9,100만원 순임.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2)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8.29.

[2026년도 예산안 중 부처별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
1	국방부	11	15,147,997
2	방위사업청	35	3,129,591
합 계		46	18,277,588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가) 장병복지 사업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장병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1개 부처, 9개 사업에 총 15조 887억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중 부처별 장병복지사업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
1	국방부	9	15,088,700
합 계		9	15,088,700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장병복지 사업 관련 9개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98억 7,200만원(4.9%) 증액된 15조 887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교 인건비’ 사업은 5조 260억 8,300만원, ‘부사관 인건비’ 사업은 7조 2,372억 6,400만원, ‘간부확보장려사업’은 1,667억 8,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장병복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방부 (9)	장교인건비	4,865,905	4,865,905	5,026,083	160,178	3.3
	부사관인건비	7,018,290	7,018,290	7,237,264	218,974	3.1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동원훈련	51,396	51,396	51,371	△25	△0.04
	일반훈련	73,860	73,860	96,825	22,965	31.1
	기본급식	1,684,395	1,684,395	1,811,925	127,530	7.6
	기본피복	350,712	350,712	391,449	40,737	11.6
	자기개발교육	20,716	20,716	40,888	20,172	97.4
	부대운영지원	220,174	220,174	266,112	45,938	20.9
합 계		14,378,828	14,378,828	15,088,700	709,872	4.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나)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2개 부처의 37개 사업에 총 3조 1,888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업 수 기준으로는 방위사업청 35개 및 국방부 2개이며, 예산안 규모로는 방위사업청 3조 1,295억 9,100만원, 국방부 592억 9,700만원 순임.

[2026년도 예산안 중 부처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 수	2026년 예산안
1	국방부	2	59,297
2	방위사업청	35	3,129,591
합 계		37	3,188,888

주) 사업 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전투기 사업군, AI 사업군, 드론 사업군, 로봇 사업군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

우선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 전투기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보라매(R&D)' 사업 및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1,751억 2,700만원(93.8%) 증액된 2조 4,28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와 이에 탑재할 공대지 유도탄 및 공대공 유도탄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 밖에 첨단 항공엔진 및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관련 연구개발(R&D)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예산안(전투기 사업군 관련)]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방위사업청 (8)	전투기 (2)	보라매(R&D)	71,807	71,807	839,876	768,069	1,069.6
		보라매 최초 양산	1,149,482	1,149,482	1,418,115	268,633	23.4
	미사일 (3)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31,465	31,465	42,794	11,329	36.0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R&D)	500	500	49,981	49,481	9,896.2
		장거리공대공유도탄(R&D)	-	-	5,402	5,402	순증
	첨단엔진 (1)	미래도전국방기술(R&D) (첨단 항공엔진)	-	-	8,609	8,609	순증
	유인기 스텔스 (2)	미래도전국방기술(R&D) (PM과제)	-	-	61,204	61,204	순증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전개념연구)	-	-	2,400	2,400	순증
전투기 사업군(8) 합계			1,253,254	1,253,254	2,428,381	1,175,127	93.8

주) 미래도전국방기술(R&D) 사업 및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업은 전투기 사업군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예산안을 나타낸 것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 AI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AI인재양성'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1억 3,500만원(35.2%) 증액된 2,76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AI 관련 인력양성·기술개발(R&D) 및 무기체계 도입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각 ‘국방AI인재양성’ 사업, ‘국방AI선도연구협력(R&D)’ 사업 및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업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예산안(AI 사업군 관련)]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방부(1)		국방AI인재양성	-	-	40,612	40,612	순증
방위사업청(13)	국방기술(6)	기초연구(R&D)	951	951	2,987	2,036	214.1
		핵심기술(R&D)	44,655	44,655	42,298	△2,357	△5.3
		미래도전국방기술(R&D)	3,596	3,596	2,556	△1,040	△28.9
		신속시범(R&D)	21,990	21,990	8,647	△13,343	△60.7
		민군기술협력(R&D)	2,087	2,087	12,844	10,757	515.4
		국방AI선도연구협력(R&D)	-	-	417	417	순증
	무기체계(7)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30,358	358	129,140	98,782	325.4
		중요시설경계시스템	33,924	33,924	4,969	△28,955	△85.4
		다목적무인차량	14,800	14,800	1	△14,799	△100.0
		사이버전장관리체계	8,318	8,318	2	△8,316	△100.0
		무인수색차량	34,606	34,606	18,737	△15,869	△45.9
		정찰용무인수상정	9,375	9,375	13,490	4,115	43.9
		수중자율기뢰탐색체	-	-	95	95	순증
AI 사업군(14) 합계			204,660	174,660	276,795	72,135	35.2

주) 기초연구(R&D) 사업·핵심기술(R&D) 사업·미래도전국방기술(R&D) 사업·신속시범(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R&D) 사업은 AI 사업군에 해당하는 R&D 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 드론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부의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96억 1,500만원(60.3%) 증액된 3,18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에 19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무장헬기와 무인기 간의 상호연동체계 구축을 위해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사업에 7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예산안(드론 사업군 관련)]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국방부(1)		교육용 상용드론	530	530	19,135	18,605	3,510.4
방위사업청(18)	국방기술(6)	기초연구(R&D)	823	823	877	54	6.6
		핵심기술(R&D)	14,350	14,350	39,894	25,544	178.0
		미래도전국방기술(R&D)	4,961	4,961	19,889	14,928	300.9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	-	660	660	순증
		신속시범(R&D)	16,230	16,230	27,755	11,525	71.0
		민군기술협력(R&D)	6,456	6,456	23,927	17,471	270.6
	무기체계(12)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113,733	113,733	67,242	△46,491	△40.9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35,672	35,672	37,615	1,943	5.4
		소총사격무인항공기	205	205	4,844	4,639	2,262.9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66	66	940	874	1,324.2
		중거리자폭드론	5,000	5,000	20,322	15,322	306.4
		신속획득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42	42	94	52	123.8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316	316	697	381	120.6
		근거리 정찰드론	-	-	3,886	3,886	순증
		특임여단전력보강-Ⅱ (특수작전용 정찰무인항공기)	59	59	13,235	13,176	22,332.2
		특임여단전력보강-Ⅱ (특수작전용 대물타격무인항공기)	79	79	29,550	29,471	37,305.1
		소형무인기대응체계	-	-	575	575	순증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	-	7,000	7,000	순증
드론 사업군(19) 합계			198,522	198,522	318,137	119,615	60.3

주 1) 기초연구(R&D) 사업·핵심기술(R&D) 사업·미래도전국방기술(R&D) 사업·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신속시범(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R&D) 사업은 드론 사업군에 해당하는 R&D 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합산한 수치임

2) 신속획득 사업 및 특임여단전력보강-Ⅱ 사업은 드론 사업군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예산안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 로봇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79억 8,500만원(186.1%) 증액된 1,66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은 폭발물을 탐지·제거하거나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로봇을 양산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3억 2,700만원(441.6%) 증액된 1,13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예산안(로봇 사업군 관련)]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방위사업청 (7)	국방기술 (5)	기초연구(R&D)	303	303	872	569	187.8
		핵심기술(R&D)	26,946	26,946	23,182	△3,764	△14.0
		미래도전국방기술(R&D)	6,077	6,077	16,183	10,106	166.3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	-	2,330	2,330	순증
		민군기술협력(R&D)	3,707	3,707	3,439	△268	△7.2
	무기체계 (2)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20,907	20,907	113,234	92,327	441.6
		특임여단전력보강-Ⅱ (특수작전용정찰로봇)	100	100	6,785	6,685	6,685.0
로봇 사업군(7) 합계			58,040	58,040	166,025	107,985	186.1

주 1) 기초연구(R&D) 사업·핵심기술(R&D) 사업·미래도전국방기술(R&D) 사업·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R&D) 사업은 로봇 사업군에 해당하는 R&D 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합산한 수치임
2) 특임여단전력보강-Ⅱ 사업은 로봇 사업군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예산안을 나타낸 것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나. 검토의견

(1) 장병복지 사업

(가) 사전준비 및 사전절차 필요

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신규)(국방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아직 심사 중인 상황으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단기복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복무 부사관의 획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3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4]

그런데 「군인사법」 제62조의2[5]에서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ROTC) 및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에 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3)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4)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개편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확대(민간모집부사관, 학군부사관 등 포함)하였음.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지급대상>

구분	복무	복무기간	대상자	2025	2026(안)
부사관	장기	7년	임관시 장기	미지급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단기	4년	현역모집부사관	장려수당	장려금
		4년	임기제부사관(1년 내 4년 복무 확정)		
		4년	임기제부사관(1년 후 4년 복무 확정)	미지급	
		4년	민간모집부사관		
		4년	학군부사관		

자료: 국방부

5)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 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법률안이 2025년 8월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국방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6)]

②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신규)(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아직 심사 중인 상황으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금과 연계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73억 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8)]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9)]의 경우 「병역법」 제79조의2[10)]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2025년 8월말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아직 없음. 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11)]

---

6) 참고로 국방부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에서 「군인사법」 제6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사람(졸업생)을 포함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단계에 이르러 해당 대상의 경우 법률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음.

7)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8) 지원대상: 사관생도 등 장기복무자,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및 군 가산복무지원자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지급대상>

구분	복무	복무기간	대상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장교	장기	10년	사관학교	미지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중기	6년	3사·간호사관		
부사관	장기	7년	임관시 장기	미지급	

자료: 국방부

9) 일반회계-병내일준비지원(2242-304)

10)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초급간부 가입 적금과 연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제220603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이 2025년 8월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함.

(나)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①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국방부)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은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23년~2024년)의 실제 훈련 인원의 평균 수치에 일정한 보정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 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함.[12)]

[예비군훈련 유형별 물량 산출내역]

(단위: 명)

세부사업	유형	최근 2년의 실제 훈련 인원			2026(안) (B)	보정치 ((B-A)/A)
		2023	2024	평균 인원 (A)		
동원훈련	동원훈련Ⅰ형	365,147	343,630	354,389	370,894	**4.66%**
일반훈련	동원훈련Ⅱ형	338,936	360,498	349,717	367,496	**5.08%**
	기본훈련	879,945	962,858	921,402	967,471	**5.00%**
	작계훈련	568,020	542,699	555,360	555,361	**0.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보정치를 적용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최근 2년의 실제 훈련 인원보다 더 많은 지원물량이 편성되었음.

즉, 동원훈련 사업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36만 5,147명 및 2024년 34만 3,630명보다 많은 37만 894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와 유사하게 일반훈련 사업 중 동원훈련Ⅱ형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33만 8,936명 및 2024년 36만 498명보다 많은 36만 7,496명을, 일반훈련 사업 중 기본훈련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87만 9,945명 및 2024년 96만 2,858명보다 많은 96만 7,471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따라서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은 최근 실제 훈련 인원의 추세를 감안하여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2) 즉, 국방부는 2023년 대비 2024년의 실제 훈련 인원이 증가한 경우(동원훈련Ⅱ형 및 기본훈련) “5% 추가 인원 보정치”를 추가 적용하였으며, 일정한 경우(동원훈련Ⅰ형) 훈련 인원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4.7% 추가 인원 보정치”를 추가 반영하였다고 함.

②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신규)(국방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최근 부사관 임관율 감소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단기복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복무 부사관의 획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3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다음의 표는 최근 5년간 부사관 선발률, 임관율 및 운영률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사관 선발률은 2022년 86.0%에서 2024년 51.2%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9.4%에서 45.2%로 하락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부사관 선발률, 임관율 및 운영률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선발률	94.7%	91.5%	86.0%	55.7%	51.2%
임관율	86.0%	86.4%	79.4%	56.6%	45.2%
운영률	92.0%	92.6%	93.4%	91.8%	87.7%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최근 3개년 평균 임관율을 감안하여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임관율이 일정한 단기추세를 보임에도 평균치를 적용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예산을 과다추정하거나 과소추정할 수 있음.[14)]

따라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최근 부사관 임관율 감소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③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신규)(국방부)

첫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가산복무지원금 수령대상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은 군 가산복무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가산복무지원자는 대학 재학 중에 이미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15)]

13)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14)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은 임관율이 상승추세일 경우 과소추정하고 하락추세일 경우 과다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큼.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 273억 7,100만원
- 임관시 장기 1,512명 × 30만원 × **12월**	= 54억 4,300만원
- 장기복무선발 4,300명 × 30만원 × **12월**	= 154억 8,000만원
- **군 가산복무지원자** 1,782명 × 30만원 × **12월**	= 64억 1,500만원

자료: 국방부

군 가산복무지원자는「군인사법」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데,[16]

이미 일정한 혜택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복무를 이행 중인 자까지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실제 지급가능한 적정 지원기간을 감안한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국방부는 지원대상자별로 12개월분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지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이 사업은 매월 개인별 적금 입금액을 파악한 후 그 다음 달에 매칭지원금을 개인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 2026년 1월 임관 대상자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예산 집행은 2026년 2월이 될 것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 사업은 사업 1년 차인 2026년의 경우 최대 11개월분의 매칭지원금의 집행이 가능함.

다음, 이 사업은 2026년 1월 이후 임관한 초급간부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지원대상자가 2026년 1월 임관하는 것을 전제로 12개월분의 매칭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산정방식은 실제 임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중 사관생도의 경우 통상 3월에 임관이 이루어지고,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임관이 이루어짐.

---

15)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16)「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 집행관리 필요

① 부사관인건비 사업(국방부)

부사관인건비 사업은 최근의 운영인력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과다추계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부사관 정원을 13만 5,059명으로, 예산편성인원을 11만 5,746명으로 각각 산정하였음. 정원 대비 예산편성인원을 의미하는 편성률은 85.7%임.

[2026년도 부사관인건비 사업 계급별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

(단위: 명, %)

구분	2026년도 부사관 정원(A)	2026년도 예산편성인원(B)	편성률 (B/A)
원사	10,711	10,585	98.8
상사	37,290	35,768	95.9
중사	43,017	41,349	96.1
하사	37,420	25,505	68.2
임기제	6,621	2,540	38.4
합계	135,059	115,746	85.7

자료: 국방부

다음의 표는 최근 5년간 부사관 선발률, 임관율 및 운영률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사관 선발률은 2022년 86.0%에서 2024년 51.2%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9.4%에서 45.2%로 급격히 하락함.

[최근 5년간 부사관 획득률, 임관율 및 운영률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선발률	94.7%	91.5%	86.0%	55.7%	51.2%
임관율	86.0%	86.4%	79.4%	56.6%	45.2%
운영률	92.0%	92.6%	93.4%	91.8%	87.7%

자료: 국방부

정원은 2023년 13만 2,798명, 2024년 13만 3,483명, 2025년 13만 4,631명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운영인력은 2023년말 12만 1,911명, 2024년말 11만 7,119명, 2025년 6월말 11만 3,386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인력 감소추세가 2026년에도 지속된다면 이 사업 예산편성인원을 11만 4,920명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추계의 가능성이 큼.

[부사관 정원 대비 운영인력 현황]

구 분	부사관 정원(A)	부사관 운영인력(B)	운영률(B/A)
2023	132,798명	121,911명	91.8%
2024	133,483명	117,119명	87.7%
2025.6	134,631명	113,386명	84.2%

자료: 국방부

따라서 부사관인건비 사업은 최근의 운영인력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과다추계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시간외근무수당(국방부)

국방부는 시간외근무 실태확인을 위한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장교인건비’ 사업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 중 ‘시간외근무수당’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7억 9,500만원(11.0%) 증액된 7,85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본예산 (A)	추경	예산안 (B)	(B-A)	(B-A)/A
시간외근무수당	707,423	707,423	785,218	77,795	11.0

주) 장교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2026년도 예산안 2,166억 2,000만원)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2026년도 예산안 5,685억 9,800만원)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국방부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함정·비행단·경계부대 등에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월 110시간 → 월 160시간 또는 210시간[17])하였으며, 그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이 777억 9,500만원 증액되었다고 설명함.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급격하게 확대(월 110시간 → 월 160시간 또는 210시간)됨에 따른 수당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국방부는 시간외근무 실태확인을 위한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7) 19,933개 직위(육군 9,380개·해군 9,026개·공군 884개·해병대 643개) 중 364개 직위(GP)는 최대 210시간까지, 기타 직위는 160시간까지 확대하였다고 함.

(2)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

(가) 사전준비 및 사전절차 필요

①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신규)(국방부)

첫째, 국방부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은 국방 AI 전문인력이 민(산・학)・군 협력 AI 기술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95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국방부는 민・군 협력 공동개발 지원 장소인 국방 AX 거점을 총 5개소 설치하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산・학 협력센터를 이러한 국방 AX 거점 인근(동일 건물 또는 협업이 가능한 근거리)에 설치할 계획임. 또한, 국방부는 공모를 통해 AI 기술에 특화된 대학 5개를 군・산・학 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임.

그런데 국방부는 9월말 현재 국방 AX 거점 5개소 중 2개소를 확정하지 못하였음. 국방 AX 거점은 AI 서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군・산・학 협력센터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군・산・학 협력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2025년 9월말 현재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음. 또한, 과제 기획 및 실제 AI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소요군・기관에서 필요한 AI 기술 소요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2025년 9월말 현재 AI 기술 소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국방 AX 거점의 확정, 군・산・학 협력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의 진행 및 AI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준비가 미흡하거나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면, 이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취지가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8) 일반회계-국방AI인재양성(2432-309)

둘째, 국방부는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다수의 GPU서버 공급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1대씩을 각각 구축할 계획으로, GPU(모델: H100) 8장으로 구성된 서버를 구축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규모 GPU확보사업 및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추진, 세계적인 수요 급증 등으로 GPU서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다수의 공급업체들과 미리 협력하여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급망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능(연산능력)을 지닌 다양한 후속·개량 모델(H200, B200 등)의 납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사전개념연구 사업(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사전개념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사전개념연구’ 사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개념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700만원(51.5%) 증액된 6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방위사업청은 5세대 스텔스 등 첨단무기체계 관련 개념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4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20]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즉, 방위사업청은 당초에는 연구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관계기관에 이 사업 예산을 출연하고 해당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변경 여부 검토는 당초 방위사업청의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체계 변경을 위한 협의·예산 비목변경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음.

---

19) 일반회계 - 선행연구/분석평가(2636-300)

20) 수행내용: 차세대 전투기 및 기타 첨단무기체계 운영개념, 요구능력, 개념설계 등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사전개념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③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신규)(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은 기술 진부화에 따른 사업효과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은 소형무장헬기와 무인기 간의 상호 연동체계를 통해 소형무장헬기의 전장 인식 능력을 확대하고 전투력 발휘역량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총 5,196억원(변동 가능)의 투자가 계획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탐색개발이 실시될 예정임.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6	2027	2028	2029	2030이후
사업비	519,600	7,000	6,400	200	48,800	457,200
주요공정	-	탐색개발		체계개발 / 양산		

자료: 방위사업청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2026년 초 탐색개발 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 사업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 9월 3일 현재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탐색개발 수행 방산업체 선정공고, 탐색개발 실행계획 수립, 탐색개발 계약, 탐색개발 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탐색개발(체계요구 조건 검토, 기술성숙도 평가 등)이 수행될 예정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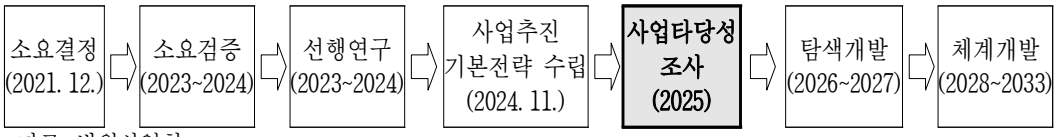
---

21) 일반회계-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2431-308)

22)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조건부 타당성을 확보(잠정결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예산액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함.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잠정결과,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ㅇ (필요성) 최근 국외 유·무인복합체계 도입 및 발전현황, 북한군의 위협, 현용 소형무장헬기의 제한사항 등을 고려시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 방위사업청

계약이 2026년 초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2027년까지 탐색개발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6년도 예산안의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23)]

이 사업은 탐색개발 후 사업타당성조사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의 수정이나 총사업비 재산정 등과 같은 추가적인 행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탐색개발 후 체계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24)]

특히, 첨단기술(무인기, AI 등)의 발전속도가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유·무인복합체계의 전력화가 늦어질수록 기술의 진부화에 따라 사업 추진 효과가 낮아질 우려도 있음.[25)26)]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 진부화에 따른 사업효과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연 발생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총사업비) 적정 추정 총 사업비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예산 대비 658.41억원 증가한 5,195.56억원 수준으로 검토(최종보고서 발간 전으로 변동 가능)

ㅇ (분석결과 종합) 조건부 타당성확보 판단 / 탐색개발 후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개발 후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

23)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2026년 5월에는 탐색개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24)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잠정결과,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ㅇ 조건부 타당성확보 판단

ㅇ 탐색개발 후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등의 주요 사항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개발 후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

25) 미국은 아파치 유·무인복합체계를 2015년에 이미 전력화하였고 독일도 2027년까지 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임.

26) 이 사업은 탐색개발 후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탐색개발 후 총사업비 재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나)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①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국방부)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집행예산 절감을 위하여 예산단가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저가형 교육용 드론을 구매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6억 500만원(3,510.4%) 증액된 19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이 사업은 납품업체 선정 시 투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88% 미만인 업체를 배제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다소 제한되는 사업임. 즉, 이 사업은 예산편성 단가가 높게 설정되는 경우 예산 절감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에 실제 낙찰률(88.4%)이 최저입찰률(88.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인다는 점,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입찰률(88.0%)에 근접한 입찰률로 투찰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국방부가 더 낮은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이 사업 집행예산은 더욱 절감이 가능했을 것임.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 현황(투찰 결과)]

순번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률	입찰결과
1	A사	459,510,974원	88.4%	낙찰
2	B사	460,206,520원	88.5%	2순위
3	C사	463,617,000원	89.1%	3순위
4	D사	468,885,700원	90.2%	4순위
5	E사	470,300,000원	90.4%	5순위
6	F사	455,840,100원	87.7%	낙찰 하한가 미만
7	G사	457,200,000원	87.9%	낙찰 하한가 미만
8	H사	457,336,634원	87.9%	낙찰 하한가 미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의 교육용 상용드론 대당 예산편성 단가는 169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단가(168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바, 2026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에서도 2025년도 공모와 유사하게 최저입찰률에 근접한 투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할 때, 예산편성 단가를 더 낮게 조정한다면 이 사업 집행예산은 더욱 절감이 가능함.[28)]

27) 일반회계-공통교보재지원(2438-303)

28) 더욱이 2026년도 예산안의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대수는 총 1만 1,265대로 2025년도 도입대수 315대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수치이므로, 대규모 도입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2026년도 도입단가는 2025년도 도입

②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사업(방위사업청)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사업은 변경된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사업은 적의 기갑·기계화 부대를 원거리에서 타격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4억 7,100만원(37,305.1%) 증액된 29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의 경우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30)] 방식 및 상업구매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결정(2024. 8월)되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소요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일부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방위사업청의 제출 자료(2025년 8월 제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에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2026년 12월에 전력화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변경함.

[방위사업청 제출 향후 일정계획 비교표]

구분	방위사업청 제출(2024.9월) 향후 일정계획	방위사업청 제출(2025.8월) 향후 일정계획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2025.1월~2025.3월	2025.8월~2025.11월
구매시험평가 및 협상	2025.6월~9월	2025.12월~2026.5월
기종결정 및 계약	**2025.11월**	**2026.6월**
전력화(예정)	2026년	2026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 사업은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변경된 일정계획에 따르더라도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의 체결이 2026년 6월로 예상되어, 구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전력화가 완료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31)]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 사업의 납품 대금이 전액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임.

따라서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사업은 변경된 사업 추진 일정, 전력화 일정 등을 감안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임.

29) 일반회계-특임여단전력보강-Ⅱ(2232-393)

30)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자국 군수업체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방국을 대신해 군수업체로부터 미군 조달장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판매하는 제도임.

31) 방위사업청은 FMS 장비로 기종 결정될 경우 2026년 전력화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③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방위사업청)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은 로봇 양산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039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폭발물을 탐지·제거하거나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로봇을 양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3억 2,700만원(441.6%) 증액된 1,13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 9월 3일 이후인 2025년 9월 5일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양산계약이 체결되었음.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은 267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신규 착수 사업 낙찰차액 발생현황(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 일자	계약 업체	계약방법	조달요구금액 (총사업비)(A)	계약금액 (B)	낙찰차액 (A-B)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2025~ 2027	2025.9.5.	A사	수의계약 (중도확정)	296,010	269,310	26,700

주) 조달요구금액(총사업비)은 양산계약에 해당하는 총사업비를 의미함
자료: 방위사업청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원가산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시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방위사업청은 중도확정 계약방식[33)]으로 해당 양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확한 계약금액의 경우 중도확정일(2026년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양산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체결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감액조정)되지 않았음. 또한, 낙찰차액을 2027년도 이후 예산에만 반영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설명은 낙찰차액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

32) 일반회계-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2132-357)

3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 ·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집행관리 필요

① 보라매(R&D) 사업(방위사업청)

보라매(R&D) 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여부의 불확실성 및 정산 지연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정산유보금의 설정 및 예산 미집행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보라매(R&D)’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용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KF-21)를 국제공동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680억 6,900만원(1,069.6%) 증액된 8,398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보라매(R&D)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2023년 5월 최초시험평가 당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있었음. 다만, 최종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2025년 9월말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속시험평가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임.

[보라매(R&D) 사업 체계개발(Block-Ⅰ) 추진경과 및 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체계 설계 및 시제기 제작 (2015. 12. ~)							최초시험평가 (2021. 5. ~ 2023. 5.)		후속시험평가 (2023. 6. ~ 2026. 2.)		개발 종료 (6월)

자료: 방위사업청

이와 관련하여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원가 확정에 따른 정산이 가능함. ‘전투용 부적합’의 경우에는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여부의 불확실성,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으로 인한 조치 기간, 원가 확정 및 정산을 위한 추가 소요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현재 기준 체계개발 종료계획 일자(2026년 6월)[35)]에 맞춰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만약 방위사업청의 계획과는 달리 사업종료 및 정산이 조속히 완료되지 않는다면 보라매(R&D) 사업은 2026년도에 대규모 정산유보금(4,412억 4,000만원) 및 미집행액(다음연도 이월액)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임.

34) 일반회계-보라매(R&D)(2431-302)

35) 업체와의 체계개발 계약 종료 일자도 2026년 6월 말임.

요약하면, 보라매(R&D) 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여부의 불확실성 및 정산의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정산유보금의 설정 및 예산 미집행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방위사업청)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구매시험평가 경과를 감안한 적정 규모의 자산취득비가 계상될 필요가 있음.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기 전력화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속도 등을 고려하여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7억 8,200만원(325.4%) 증액된 1,29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36]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산취득비: 1,252억 7,100만원(전력화 대상부대 중 3개 사단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 간접비(연구개발출연금): 2억 3,800만원(GOP 성능개량 사업 기술지원 인력(2명) 채용 비용)
○ 시설부대비: 36억 3,100만원(정보통신 감리비 35억 9,800만원, 조달청 수수료 3,300만원)

자료: 방위사업청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 9월말 현재 3개 업체의 장비를 대상으로 구매시험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구매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1개 업체와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들 3개 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이 발견되어 구매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 경우 이 사업은 2026년에 다시 구매시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37]

따라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2025년 9월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매시험평가 경과 및 일정변경 사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자산취득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6) 일반회계-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2132-364)

37) 현 구매시험평가 중단 시 향후 계획 일정(방위사업청 제출자료)
- 2025.10월: 합참 통시팀 회의(종료여부 판단) 및 현안협의회(종료여부 결정)
- 2025.11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관련 사항)
- 2025.12월 ~ 2026. 1월: 재공고 및 제안서 평가 / 대상장비 업체 선정
- 2026. 2월 ~ 3월: 구매시험평가 준비
- 2026. 4월 ~ 9월(6개월): 구매시험평가
- 2026.10월: 종합평가 / 계약
- 2027. ~ 2028.: 전력화

③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방위사업청)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은 적기에 전력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은 특수임무여단[38]의 특수타격작전 간 정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억 7,600만원(22,332.2%) 증액된 13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방위사업청은 무인항공기 구매를 위한 최초 공모를 2025년 5월에 시행하여 7월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업체가 1개만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가 유찰되었으며, 2025년 8월말 현재 재공모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2025년 8월 제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6년 5월에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2026년 12월에 전력화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변경함.

[방위사업청 제출 향후 일정계획 비교표]

구분	방위사업청 제출(2024.9월) 향후 일정계획	방위사업청 제출(2025.8월) 향후 일정계획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25.1월~2025.3월	(최초)2025.5월~7월 (재공모)2025.9월~2025.10월
제안서 평가 및 장비 선정	2025.4월	2025.10월
구매시험평가 및 협상	2025.7월~10월	2025.11월~2026.4월
기종결정 및 계약	**2025.11월~12월**	**2026.5월**
전력화(예정)	2026년~	**2026.12월**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변경된 일정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사업은 전력화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대물타격무인항공기와 연계 운용이 계획[40]되어 있는 정찰무인항공기의 전력화 지연은 당초 기대한 전력보강 및 임무 수행능력 향상 계획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38) 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특수부대임.

39) 일반회계-특임여단전력보강-Ⅱ(2232-393)

40) 즉, 방위사업청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으로부터 표적첩보를 획득하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를 목표지역으로 발사 후 표적 식별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계 운용이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함.

④ 특수작전용정찰로봇 사업(방위사업청)

특수작전용정찰로봇 사업은 적기에 전력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수작전용정찰로봇’ 사업은 특수임무여단의 특수타격작전 간 정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찰로봇을 국외 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억 8,500만원(6,685.0%) 증액된 6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41)]

방위사업청은 정찰로봇 구매를 위한 최초 공모를 2025년 6월에 시행하였으나 단수 업체만 입찰함에 따라 공모가 유찰되었다고 함. 이후 방위사업청은 2차 공모를 2025년 8월에 시행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적격장비가 없어 또다시 공모가 유찰되었다고 설명함.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2025년 8월 제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6년 2월에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2026년 12월에 전력화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변경함.

[방위사업청 제출 향후 일정계획 비교표]

구분	방위사업청 제출(2024.9월) 향후 일정계획	방위사업청 제출(2025.8월) 향후 일정계획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25.2월~10월	(최초) 2025.6월~7월 (2차공모) 2025.8월 (3차공모) 2025.9월~10월
제안서 평가 및 대상 장비 선정		2025.10월
구매시험평가 및 협상		2025.10월~2026.1월
기종결정 및 계약		**2026.2월**
생산 및 전력화(예정)	2025.10월~2026.12월	**~2026.12월**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변경된 일정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사업은 전력화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가 적기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즉, 이 사업은 무인기의 운용이 제한되는 좁은 통로 지역 및 조명이 없는 지역에서 적의 위협을 식별하고자 정찰로봇을 최초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정찰로봇의 전력화 지연은 당초 기대한 전력보강 및 임무 수행능력 향상 계획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1) 일반회계-특임여단전력보강-Ⅱ(2232-393)